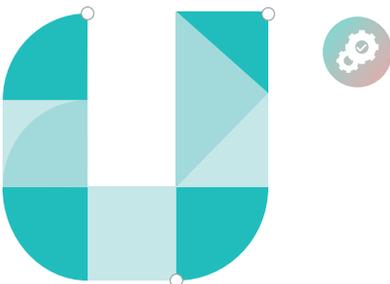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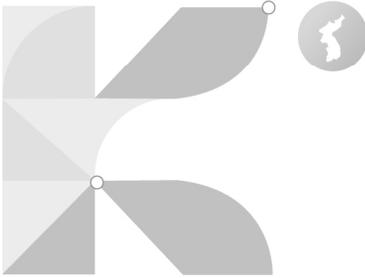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 강혜석 | Steven Sloman | Eran Halperin
Babak Hemmatian | Nimrod Nir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연구책임자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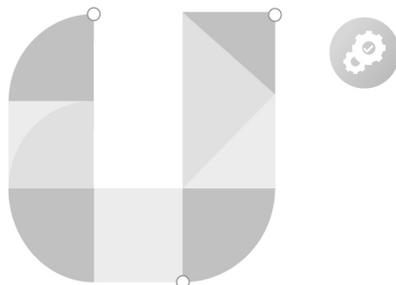
강혜석 (송실대학교 연구중점교수)

Steven Sloman (미국 브라운대학교 교수)

Eran Halperin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교수)

Babak Hemmatian (미국 브라운대학교 인지과학 박사)

Nimrod Nir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심리학 박사과정)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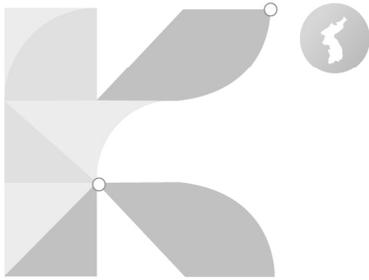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 사업(3/4년차)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KINU 연구총서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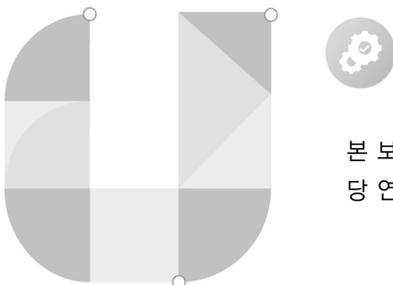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저자	박주화, 강혜석, Steven Sloman, Eran Halperin, Babak Hemmatian, Nimrod Nir
발행인	고유환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인쇄처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I S B N	979-11-6589-032-2 94340 979-11-6589-031-5 (세트)
가격	14,500원

© 통일연구원, 202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례

요약	13
I. 서론	23
II. 기초분석	33
1. 준거변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	35
2. 가치관이 평화인식 및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	48
3. 사회적 신념이 평화인식 및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	109
4. 분단의 마음이 평화인식 및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	140
5. 화해의 마음이 평화인식 및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	166
6. 통일에 대한 태도	182
III. 심층분석	193
1. COVID-19가 한반도 갈등에서 집단 간 정서 및 태도에 미치는 이중적 영향	195
2. I think they know, therefore I know: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태도에 대한 집단적 착각의 형성과정	233

IV. 요약 및 정책적 함의	275
참고문헌	297
최근 발간자료 안내	325

표 차례

〈표 II-1〉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의 평균과 표준오차	37
〈표 II-2〉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39
〈표 II-3〉 통일지향성과 분단지향성의 평균과 표준오차	40
〈표 II-4〉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2
〈표 II-5〉 관여정책과 압박정책의 평균과 표준오차	43
〈표 II-6〉 6개 준거변수 간 상관	45
〈표 II-7〉 평화에 대한 사회적 표상 1순위 단어 중 상위 10개 단어의 비율	51
〈표 II-8〉 전쟁에 대한 사회적 표상 1순위 단어 중 상위 10개 단어의 비율	53
〈표 II-9〉 통일에 대한 사회적 표상 1순위 단어 중 상위 10개 단어의 비율	57
〈표 II-10〉 우익권위주의의 평균과 표준오차	61
〈표 II-11〉 우익권위주의와 준거변수 간 상관	62
〈표 II-12〉 사회지배성향과 준거변수 간 상관	65
〈표 II-13〉 사회지배성향의 평균과 표준오차	66
〈표 II-14〉 10개 가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73
〈표 II-15〉 3개 상위가치의 평균과 표준오차	74
〈표 II-16〉 3개 상위가치와 준거변수 간 상관	76
〈표 II-17〉 인지종결욕구와 불확실성회피경향의 평균과 표준오차	82
〈표 II-18〉 인지종결욕구 및 불확실성회피경향과 준거변수 간 상관	83
〈표 II-19〉 미래지향 및 현재지향과 준거변수 간 상관	86
〈표 II-20〉 현재지향성과 미래지향성의 평균과 표준오차	87

〈표 II-21〉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평균과 표준오차	91
〈표 II-22〉 집단주의-개인주의와 준거변수 간 상관	92
〈표 II-23〉 5개 도덕기반의 도덕관련성과 준거변수 간 상관	98
〈표 II-24〉 5개 도덕기반의 도덕판단과 준거변수 간 상관	98
〈표 II-25〉 5개 도덕기반과 준거변수 간 상관	98
〈표 II-26〉 도덕관련성의 평균과 표준오차	99
〈표 II-27〉 도덕판단의 평균과 표준오차	100
〈표 II-28〉 도덕기반의 평균과 표준오차	101
〈표 II-29〉 가치관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108
〈표 II-30〉 주관적 안녕과 준거변수 간 상관	110
〈표 II-31〉 주관적 안녕의 평균과 표준오차	111
〈표 II-32〉 정치적 효능감 평균과 표준오차	112
〈표 II-33〉 정치효능감과 준거변수 간 상관	113
〈표 II-34〉 한국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과 표준오차	114
〈표 II-35〉 불평등인식과 준거변수 간 상관	115
〈표 II-36〉 갈등과 집단의 본질에 대한 믿음의 평균과 표준오차	117
〈표 II-37〉 집단·갈등의 본질 변화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준거변수 간 상관 ..	118
〈표 II-38〉 이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21
〈표 II-39〉 이념의 평균과 표준오차	121

〈표 II-40〉 이념과 준거변수 간 상관	122
〈표 II-41〉 정치경제이념 및 사회이념과 자기명명식 이념 간 상관	124
〈표 II-42〉 이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24
〈표 II-43〉 정체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28
〈표 II-44〉 정체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130
〈표 II-45〉 정체감과 준거변수 간 상관	132
〈표 II-46〉 자기검열의 평균과 표준오차	132
〈표 II-47〉 자기검열과 준거변수 간 상관	134
〈표 II-48〉 사회적 신념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139
〈표 II-49〉 평화, 전쟁에 대한 태도의 평균과 표준오차	141
〈표 II-50〉 평화 및 전쟁에 대한 태도와 준거변수 간 상관	142
〈표 II-51〉 제로섬 인식과 경쟁적 희생자 인식의 평균과 표준오차	144
〈표 II-52〉 제로섬 인식 및 경쟁적 희생자 인식과 준거변수 간 상관	145
〈표 II-53〉 북한 악마화의 평균과 표준오차	147
〈표 II-54〉 북한에 대한 이미지	148
〈표 II-55〉 북한 악마화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준거변수 간 상관	149
〈표 II-56〉 우리에게 대한 인식과 준거변수 간 상관	151
〈표 II-57〉 남한에 대한 인식의 평균과 표준오차	151
〈표 II-58〉 분단중심성의 평균과 표준오차	153
〈표 II-59〉 분단중심성과 준거변수 간 상관	153

〈표 II-60〉 정서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57
〈표 II-61〉 북한에 대한 정서의 평균과 표준오차	158
〈표 II-62〉 북한에 대한 정서와 준거변수 간 상관	159
〈표 II-63〉 분단의 심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165
〈표 II-64〉 분단책임의 평균과 표준오차	168
〈표 II-65〉 분단의 책임과 준거변수 간 상관	169
〈표 II-66〉 화해에 대한 기대의 평균과 표준오차	172
〈표 II-67〉 화해에 대한 기대와 준거변수 간 상관	173
〈표 II-68〉 화해의도의 평균과 표준오차	176
〈표 II-69〉 화해의도와 준거변수 간 상관	177
〈표 II-70〉 화해의 심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181
〈표 II-71〉 통일상의 평균과 표준오차	183
〈표 II-72〉 통일 필요성의 평균과 표준오차	186
〈표 II-73〉 북한지식의 평균과 표준오차	188
〈표 II-74〉 자신의 정답 수 예측 비율	190
〈표 II-75〉 실제 정답 수 비율	190
〈표 III-1〉 두 표본의 측정된 변인 간의 중간값, SD 및 영차 상관 (zero-order correlation)	223

〈표 III-2〉 COVID-19 발생 전후 진행된 조사의 변수 평균 및 평균차이	224
〈표 III-3〉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236
〈표 III-4〉 통일에 동의하는 한국인의 비중에 대한 추정의 오류값	246
〈표 III-5〉 통일반대집단의 북한지식과 북한지식에 대한 자기 평가의 상관	247
〈표 III-6〉 통일찬성집단의 북한지식과 북한지식에 대한 자기 평가의 상관	248
〈표 III-7〉 이념에 따른 북한지식 정답수, 예상 정답수, 통일찬반의 평균	255
〈표 III-8〉 보수집단의 북한지식과 북한지식에 대한 자기 평가의 상관	256
〈표 III-9〉 중도집단의 북한지식과 북한지식에 대한 자기 평가의 상관	256
〈표 III-10〉 진보집단의 북한지식과 북한지식에 대한 자기 평가의 상관	256
〈표 III-11〉 이념에 따른 지식커뮤니티의 북한 지식 정답수, 예상 정답수, 통일찬반의 평균	258
〈표 III-12〉 통일찬반에 따른 북한지식획득의도와 통일의 이유	263
〈표 IV-1〉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281
〈표 IV-2〉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282
〈표 IV-3〉 통일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283
〈표 IV-4〉 분단지향성 영향을 미치는 변수	285
〈표 IV-5〉 관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286
〈표 IV-6〉 압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287

그림 차례

〈그림 I-1〉 설문문의 기본 구성	31
〈그림 II-1〉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과 통일·대북정책의 상관	46
〈그림 II-2〉 “평화”의 사회적 표상(1순위)	50
〈그림 II-3〉 “전쟁”의 사회적 표상(1순위)	51
〈그림 II-4〉 “통일”의 사회적 표상(1순위)	54
〈그림 II-5〉 보편적 가치의 평균	71
〈그림 II-6〉 Schwartz의 4개 상위 가치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가치 선호도 ..	72
〈그림 II-7〉 가치지향성 문항에서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 성향의 비율 ..	89
〈그림 II-8〉 자기개념 문항에서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 성향의 비율	90
〈그림 II-9〉 2019년과 2020년 북한에 대한 개별 정서의 평균	155
〈그림 II-10〉 한국인에 대한 상위 10개 고정관념과 선택된 비율	160
〈그림 II-11〉 북한주민에 대한 상위 10개 고정관념과 선택된 비율 ..	160
〈그림 III-1〉 COVID-19의 파괴적 경로	225
〈그림 III-2〉 COVID-19의 건설적 경로(협력인식)	226
〈그림 III-3〉 COVID-19의 건설적 경로(지원인식)	227
〈그림 III-4〉 통일의 정의에 대한 상이한 응답 비율	235
〈그림 III-5〉 10개 문항에 대한 정답을 맞힌 응답자 빈도분포	243
〈그림 III-6〉 정치 성향에 따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의 정도	250
〈그림 III-7〉 통일에 동의하는 한국인의 비중에 대한 추정의 오류값 ..	252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보건 등 개인과 사회의 모든 영역과 영역 내 모든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개인의 삶과 사회, 국가의 역할에 대한 성찰과 근원적 질문에 대한 해답인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남북관계 미래를 위한 질문은 무엇인가? 더 안전한 남북관계, 다 같이 잘사는 남북관계, 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한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의 적대적 남북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개인의 인식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구조는 어떻게 재조직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의 시작은 우리 자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평화와 전쟁, 그리고 통일의 사회적 표상을 단어 연상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상어는 ‘북한’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1,600명 중 20.8%가 ‘통일’이라는 단어를 보고 ‘북한’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응답하였다. ‘평화’, ‘분단’, ‘통합/화합’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이 ‘통일’을 ‘북한’, ‘평화’, ‘분단’, ‘통합/화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성, 분단지향성, 압박정책, 그리고 관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관, 사회적 신념, 분단의 심리 및 화해의 심리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영향력이 가장 큰 가치관은 사회지배경향, 사회적 신념은 남한과 북한이 단일민족이라는 믿음, 분단의

심리는 북한에 대한 긍정이미지, 화해의 심리는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이었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가장 영향력이 큰 가치관 역시 사회지배 경향이었다. 사회적 신념 중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정치경제이념, 분단의 심리에서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및 남한의 정당성, 화해의 심리에서는 분단이 북한의 책임이었다.

통일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은 충성의 도덕기반이었다. 북한주민에 대한 애정, 즉 정체감이 다양한 사회적 신념 중 통일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북한에 대한 긍정이미지는 분단의 심리 중 통일지향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였다. 북한과 분단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의도 및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화해의 심리 중 통일지향성에 가장 영향력이 깊은 변수였다. 분단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은 공정의 도덕기반이었다. 사회적 신념 중에서는 정치경제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분단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분단의 심리 중 분단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보인 변수는 분단 중심성이었다. 분단에 대해 성찰하는 정도, 분단을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화해의 심리 중 분단지향성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분단이 북한의 책임이라는 인식이었다.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은 사회지배 경향의 평등주의였으며,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믿음은 사회적 신념에서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분단의 심리 중에서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화해의 심리 중에서는 남북관계 미래에 대한 희망이 관여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과 권위에 대한 존중을 증시하는 권위 도덕기반은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념 중에

서는 정치경제이념, 즉 정치경제적 보수일수록 압박정책을 지지하였다. 분단의 심리에서는 북한에 대한 악마화, 화해의 심리에서는 북한의 책임이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분석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에서의 심리적 변화를 추적 가능하게 해주는 2차 웨이브 중단면 연구(two-wave cross sectional design)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표본 수집에 참여한 한국 참가자들의 북한 주민에 대한 공포의 강도가 높아졌으며 그 결과 외집단에 대한 적대적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증가했음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참가자들이 북한에 대한 높은 공감을 보임으로써 외집단에 대한 협력과 지원에 대한 의지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염질환의 대유행이 고질적인 갈등 상황에 처한 집단 간 감정에 미치는 이중적인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한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협이 집단 간 관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사회가 제한하고, 갈등에 처한 집단 간 관계를 개선하는 건설적인 결과를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경로를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북한에 대한 지식 수준이 통일에 대한 태도와 무관함을 보였다. 반면 북한의 지식 수준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가 통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었다. 객관적 지식수준이 아닌 자신의 지식 수준에 대한 주관적 기대에 의해 통일태도가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제 지식수준과 주관적 기대간 관계에 대해 본 연구는 적어도 두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고하였다. 첫째,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지식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지식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둘째, 실제 지식수준과 자신의 지식수준에 대한 차이가 클수록, 즉 자신의 지식에 대한 착각이 클수록 통일에 대한 태도는 더 극단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식이

합리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필수적 요소라는 전통적 견해와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상의 논의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분단의 심리, 화해, 고착화된 갈등, 분단중심성, 전쟁, 평화, 평화공감대, 통일

2020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The impact of COVID-19 is pervasive at all levels of social and individual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foreign affairs, society, culture, and public health. We as a whole need to pursue and provides an answer to fundamental questions what the future will look like post COVID-19. What will the future of Korean Peninsula look like post COVID-19? What questions should be asked to build the better, safer, and more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hip? To answer the question, we need to identify what is really important in inter-Korean relationship.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way how perception toward each other in Korean Peninsula should change and how the social structure should be reorganized to support the change. The answers to all these questions about the future start from the present. Based on the conjecture, this study examined how South Koreans think of peace and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irst, The word association method was employed to perform a survey on the essence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 peace, war, and unification. For example, when “unification” was given to survey participants as a target word, the first word that comes to mind was “North Korea.” Out of 1,600 respondents, 20.8% said “North Korea” was the thing that first occurred to them, which was followed by “peace,” “division,” and “unity/reconciliation.”

Next, the factors affecting peace through cooperation, peace through military force, unification orientation, division orientation, pressure policy, and engagement policy were analyzed with the four dimensions of values, social beliefs, ethos of Division, and reconciliation intention. When it comes to realizing peace via cooperation, the most significant value turned out to be the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 most influential social belief was tha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are the same ethnicity. The most significant part of the ethos of Division was a positive image towards North Korea, and the essential factor in the reconciliation intention was the hope towards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Regarding peace using military force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mong all values was also the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 most compelling social belief turned out to be a political and economic ideology. The most potent factor in the ethos of Division was the negative image of North Korea and the justification of South Korea, and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the reconciliation intention was the responsibility of North Korea on the hostile relation.

When it comes to unification orientation, the moral base for loyalty was proved to be most influential among the values. Among social beliefs, affections towards North Koreans, in other words, the degree of identification with North Koreans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the unification orientation. A positive image towards North Korea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mong the ethos of Division. Willingness to obtain new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and unification and the guilt about using inter-Korean issues for political interests were most influential to unification orientation among the reconciliation intention.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division orientation came from the moral base of impartiality of all values.

In terms of social belief, those who had more conservative political and economic ideology were more favorable to division. The ethos of Division having a crucial influence on division orientation was the division centrality. Those who had more profound reflections on national division and made closer connections between their own identity and national division showed a stronger willingness to overcome division. The reconciliation intention most influential to division orientation was the perception that North Korea is accountable for the division.

The most significant value in supporting the engagement policy was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 belief that South and North Korea are homogeneous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support for the engagement policy. A positive image towards North Korea in the ethos of Division dimension and hopes for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n the reconciliation intention dimension proved to be most influential in the engagement policy. The pressure policy had the most significant support from the authoritative moral base which respects tradition and authority. Among social beliefs, those who were more conservative about the political and economic ideology had more robust support for the pressure policy. The demonization of North Korea in the ethos of Division and accountability of North Korea in the reconciliation intention dimension were most influential in the pressure policy.

For the in-depth analysis, the two-wave cross-sectional design was conducted to trace psychological changes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analysis showed that South Korean respondents who participate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held stronger fear towards North Koreans. As a result, support for the hostile policy towards the outgroup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same participants also demonstrated a high level of empathy towards North Korea, showing a heightened commitment to cooperation and support for the outgroup. Suppose a more profound understanding can 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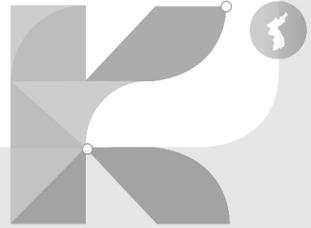
made about the pandemic having contradictory effects on the sentiment towards the outgroup. In that case, a new way to produce constructive results can be identified, which will allow society to limit the destructive impact of COVID-19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groups and improve the relations of the conflicting groups.

Lastly,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degree of knowledge about North Korea has nothing to do with the unification orientation. However,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their knowledge level is the key determinant of unification orientation. In other words, the strength of people's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was not in line with their actual knowledge but with the expectation of their knowledge. This study reported two interesting results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mis)calibration. First we observed Dunning-Kruger effect where the more knowledgeable participants were, the more they "under"-estimated their own knowledge while the less knowledgeable participants were, the more they "over"-estimated their own knowledge. Second, as the misestimation increased, the attitude toward unification became polarized. These results contrast with the traditional view that knowledge is necessary to reach a rational decision and a social consensus(the deficit model).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and analysis, the policy implications have been suggested.

Keywords: Psychology of Division, Reconciliation, Intractable Conflict, Division–centrality, War, Peace, Consensus for Peace, Unification

1. 서론

박주화 통일연구원



코로나19의 시대이다. 코로나19가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최악의 위기이지만 극복 불가능한 위기는 아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 바이러스의 위협은 막아내겠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코로나19 이전의 삶과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인류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기존 관성과 트렌드에 의존한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보건 등 개인과 사회의 모든 영역과 영역 내 모든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장하준은 코로나19를 수요, 공급, 소비를 붕괴시킨 미증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¹⁾ 사회 구조 전체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사회의 미래는 개인과 정부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²⁾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우리 자신, 사회,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한다.³⁾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개인의 삶과 사회, 국가의 역할에 대한 성찰과 근원적 질문에 대한 해답인 셈이다.

남북관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보건, 방역, 의료 등 당면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 속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남북관계 미래를 위한 질문은 무엇인가? 더 안전한 남북관계, 다 같이 잘사는 남북관계, 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한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의 적대적 남북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개인의 인식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구조

1) 최재천 외, 『코로나 사피엔스』 (서울: 인플루엔셜, 2020), p. 51.

2) 위의 책, pp. 115~116; Yuval Noah Harari, "The world after coronavirus," *Financial Times*, March 20, 2020, <<https://www.f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 (Accessed May 21, 2020).

3) 최재천 외, 『코로나 사피엔스』, pp. 66~67.

는 어떻게 재조직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의 시작은 우리 자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70년 이상 분단이 지속되면서 분단에 익숙해져버린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성찰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제3자의 시각에서 다소 불편해 보일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일상화된 적대성,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 타인의 슬픔은 나의 기쁨) 그리고 한국의 우월감은 분단의 체제 속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규범적인 사고방식이다. 어떠한 세상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인 이념(ideology)은 분단의 체제 속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성 여부로 치환되어 있다. 분단의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과 성찰은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치환되기도 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에 대한 민감성 자체가 둔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과제의 1년차 및 2년차에서 우리 국민은 평화를 비둘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평화를 생각할 때 비둘기를 떠올리는 사람이 다수인 사회에서 비둘기의 평화가 아닌 번영과 공존의 평화는 오히려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고착화된 분단체제 속에서 코로나19는 분단체제 속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코로나19는 폭력적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3천 5백만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⁴⁾ 코로나19는 총체적(total)이다. 코로나19의 극복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목표가 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는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종교 등 개인과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는 개인과 사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항상

4)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 <<https://coronaboard.kr/>> (검색일: 2020.10.6.).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는 개인과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항상 고려되는 요소이며 가장 중요한 공동의 의제이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의 물리적, 심리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코로나19 시대 속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 6.25 전쟁, 분단이 본격화된 70여 년 전 한국의 사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⁵⁾ 비슷한 맥락에서 미래학자 제이슨 쉐커(Jason Schenker)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2001년 9.11 테러사건을 떠올렸다.⁶⁾ 전쟁과 분단은 폭력적이었으며, 한반도 구성원의 삶을 지배해왔다. 분단은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했고 개인과 사회의 핵심적 어젠다였다. 남과 북은 전쟁과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방대한 규모의 물리적, 심리적 자원을 투입해 왔다. 남과 북은 승리를 목표로 삼았지만, 최소한 상대에게 지지 않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다. 분단 초기 가지적이었던 분단의 영향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사회에 녹아들어 체제화되었다.⁷⁾

6.25 전쟁, 9.11 테러, 그리고 코로나19의 공통점은 사회구성원들이 죽음이라는 실존적 위협을 집단적으로 경험한다는 점이다. 본 과제의 1년차 및 2년차에서 소개한 고착화된 갈등(intractable conflict) 이론은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폭력, 죽을 수 있다는 실존적 두려움에 직면한 개인과 사회의 심리·사회적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다.⁸⁾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지 않다는 위협을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은 인간의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리

5) 박주화 외,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p. 38~41.

6) 제이슨 쉐커 지음, 박성현 옮김, 『코로나 이후의 세계』 (고양: 다빈치하우스-미디어숲, 2020), p. 17.

7)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 비평, 1998), pp. 17~18.

8) 박주화 외,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pp. 41~57.

고 사회적 욕구 등 기본적인 욕구를 박탈한다. 개인은 욕구박탈 및 위협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놓이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무기력증 등을 통칭하는 코로나블루의 원인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박탈과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요컨대 코로나19와 같은 폭력에 집단적으로 노출된 개인과 사회는 스트레스와 기본적 욕구 충족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된다. 70여 년 전 6.25 전쟁 직후, 폐허 속의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죽음의 공포가 드리운 사회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스트레스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나갈 것인가? 고착화된 갈등 이론은 스트레스와 욕구박탈의 “원인”을 찾아 서사를 구성하는 것이 그 시작으로 보고 있다. ‘6.25 전쟁은 왜 발발했는가?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확산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는 갑론을박을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원인이 박쥐라는 주장, 코로나19의 원인은 인간에 의해 생태계가 교란되었다는 주장,⁹⁾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연구소에서 제작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¹⁰⁾

코로나19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집단적 위협에 처한 사람들은 위협의 원인을 탐색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위협의 원인에 따라 이후 세계관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분단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북한, 한반도,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것이다. 코로나

9) 최재천 외, 『코로나 사피엔스』, pp. 27~28.

10) “[팩트체크] 꾸준히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연구소 제작 유포설,” 『YTN』, 2020.9.28., <https://www.ytn.co.kr/_ln/0105_202009280847523152> (검색일: 2020.10.6.).

19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가 코로나19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의 원인이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과 행동을 할지는 명확하다.

이런 점에서 분단의 영향력이 내재화·체제화되어 있는 2020년, 코로나19는 분단 초기 한국 사회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19와 분단은 갈등의 외피는 다르지만, 갈등의 구조는 유사한 동형문제(problem isomorphs)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분단체제를 살펴볼 수 있고, 분단체제를 통해 코로나19의 사회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위기와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 역시 유사한 구조를 가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의 극복, 코로나19 이후 미래의 청사진이 분단체제의 해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한국은 모범국가이다. 코로나19 방역의 성공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투명성에 기초한 방역과 공감에 바탕을 둔 국민의 참여가 핵심이다. 한국은 코로나19 감염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공포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은 확진자의 동선 공개를 통해 갈 수 있는 곳, 갈 수 없는 곳을 구분하면서 감염의 공포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방역당국, 의료진, 소방, 군, 자원봉사자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공감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이 없는 이유 중 하나도 자신의 보호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타인이 전염될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에 핵심인 투명성과 공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분단에 대한 인식과 화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3년차 연구에서는 설문문의 주요결과를 6개 주

요 준거변수 -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성’, ‘분단지향성’,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 - 에 따라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준거변수의 수준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상관분석을 통해 개별 구성개념이 평화, 화해, 통일에 대한 태도들과의 관계를 일차적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각 구성개념(構成概念, construct)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심층 분석에서는 전술한 코로나19의 경험 이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는지 국민의 인식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 통일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분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이 분단, 특히 북한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이 통일에 대한 인식과 분단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실제 지식수준은 통일인식과 큰 관련성이 없었으며 지식수준에 대한 착각이 통일인식과 관련이 있었다. 분단의 극복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착각, 인식의 문제일 수 있으며 지식의 제공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본 연구의 설문은 크게 다섯 개의 영역, 가치관, 사회관, 분단의 문화, 평화의 문화, 그리고 통일·대북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I-1〉). 본 장에서는 먼저 각각의 영역에서 사용된 구성개념을 간략히 제시한 후 구성개념의 평균을 성별, 연령, 연령×성별, 월 소득, 이념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설명하였다.¹¹⁾ 개별 문화에 대한 설명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원점수는 별도의 자료집에 제시할 예정이다.

11) 구성개념은 ‘과학적 연구방법이나 논리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추상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조작적으로 만들어 낸 개념’을 의미한다. 추상적 개념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개념이라는 대리적인 방법(proxy)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협력을 통한 평화’라는 구성개념은 협력을 통한 평화를 측정할 4개 문화의 평균점수로 측정된다.

<그림 1-1> 설문지의 기본 구성¹²⁾



설문조사는 2020년 3~4월 진행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할당되는 표본의 수가 통계적 분석에 유의미한 수준이 못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충청남도에 포함시켰다. 표본의 수는 1,000명이며 2020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되었다.

현장실사는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하여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조사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을 이용하였다. 현장실사에 앞서 닐슨컴퍼니코리아에서 조사원 교육을 이틀 동안 진행하였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는 현장 면접원에 의한 검증, 지역 감독원에 의한 검증, 본사 감독원에 의한 검증, 전산검증 등 총 4단계로 이루어졌다. 각 단계마다 검증의 필요성이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응답자들 중 30%를 무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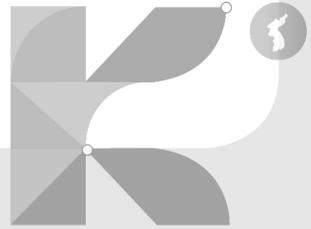
12) 본 보고서에 포함된 그림 및 표의 작성자는 별도의 언급과 출처 표기가 없는 한 본 보고서의 저자들이다.

위로 추출하여 실제 조사 참가 여부와 면접 내용을 검증하였다. 원 자료는 편집, 코딩, 입력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 21.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전산자료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전산자료의 공개는 통일연구원의 심의절차를 통해 공개될 것이다.

II. 기초분석

박주화 통일연구원

강혜석 송실대학교



1. 준거변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

가.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은 힘을 통한 평화, 정의를 통한 평화, 전환을 통한 평화, 협력(정치)을 통한 평화, 지속가능성을 통한 평화, 평화교육 등 크게 6가지로 범주화해 볼 수 있다.¹³⁾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이 힘을 통한 평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협력 또는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각 4개 문항을 구성하였다(9점 척도, 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9점: 전적으로 동의한다).¹⁴⁾ 협력을 통한 평화의 문항 간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6, 협력을 통한 평화의 문항 간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5였다.

[협력을 통한 평화]

- 1)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남북 간 비군사적 수단과 협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13) 해리스 M, 이언·메리 L, 모리슨 지음, 박정원 옮김, 『평화교육(미래를 위한 교육, 세계를 위한 비전)』 (서울: 오름, 2011), pp. 35~51.

14) Christopher J. Cohrs et al., "Personal Values and Attitudes toward War,"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1, no. 3 (2005), p. 311; Melissa Jean Johnson, "Attitudes toward Achieving Peace: A Measure of "Peace through Strength" and "Peace through Cooperation" and the Relationship of These Attitudes with Affective, Coping, Personality, and Gender Correlat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90, pp. 136~137; Kenneth E. Vail and Matt Motyl, "Support for Diplomacy: Peacemaking and Militarism as a Unidimensional Correlate of Social, Environmental, and Political Attitudes," *Peace and Conflict*, vol. 16, no. 1 (2010), p. 36.

- 2)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3)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간 평화는 실현될 수 있다.
- 4) 남북 간 평화는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

- 1) 강력한 군사력만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다.
- 2)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 3)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4)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만 한반도 평화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네 문항의 평균을 계산한 후 점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협력을 통한 평화의 경우 저(底)집단은 1.0점에서 5.0점까지의 407명, 중(中)집단은 5.25점에서 7.25점까지의 803명, 고(高)집단은 7.5점에서 9점까지의 390명으로 범주화하였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의 경우 저집단은 1점에서 4점까지의 388명, 중집단은 4.25점에서 6.25점까지의 826명, 고집단은 6.5점에서 9점까지의 286명으로 구분하였다.

평화를 실현하는 두 방식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II-1>에 제시하였다. 먼저 협력을 통한 평화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¹⁵⁾ 이념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었다.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중도 또는 보수라고 생

15) 본 보고서에서 ‘유의하다’는 의미는 통계적 검증 결과 유의도가 $p < .05$ 이하임을 의미한다.

각하는 사람보다 협력을 통한 평화에 긍정적이었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긍정적이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가운데, 성·연령 교차 분석 결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가장 긍정적인 집단은 20대 남성, 가장 부정적인 집단은 2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선호하였다.

<표 II-1>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구분	사례 수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2019년	1,000	6.28(0.05)	5.24(0.06)	이념	보수	316	5.88(0.10)	5.74(0.10)
전체(2020년)	1,600	6.20(0.04)	5.13(0.05)		중도	743	5.93(0.05)	5.15(0.06)
남성	796	6.26(0.06)	5.34(0.06)		진보	541	6.76(0.06)	4.76(0.09)
여성	804	6.14(0.05)	4.93(0.07)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4.31(0.05)	5.39(0.08)
20대	278	5.99(0.09)	5.06(0.11)		중간	803	6.19(0.02)	5.17(0.06)
30대	253	6.08(0.09)	5.01(0.12)		높음	390	8.20(0.03)	4.79(0.12)
40대	314	6.30(0.08)	5.06(0.10)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388	6.80(0.08)	2.62(0.05)
50대	323	6.37(0.09)	5.13(0.10)		중간	826	5.88(0.04)	5.24(0.02)
60세+	432	6.21(0.08)	5.31(0.09)		높음	386	6.29(0.10)	7.44(0.04)
남성 20대	146	5.97(0.12)	5.60(0.13)	통일지향	낮음	335	5.50(0.10)	5.11(0.11)
여성 20대	132	6.00(0.13)	4.46(0.17)		중간	936	6.06(0.04)	5.09(0.05)
남성 30대	129	6.16(0.13)	5.34(0.15)		높음	329	7.31(0.08)	5.27(0.12)
여성 30대	124	5.99(0.13)	4.68(0.18)	분단지향	낮음	306	6.25(0.11)	4.75(0.11)
남성 40대	158	6.29(0.12)	5.26(0.14)		중간	869	6.09(0.05)	5.19(0.06)
여성 40대	156	6.30(0.12)	4.86(0.14)		높음	425	6.39(0.08)	5.29(0.10)
남성 50대	165	6.41(0.14)	5.21(0.15)	관여정책	낮음	369	5.07(0.09)	5.50(0.09)
여성 50대	158	6.33(0.12)	5.04(0.14)		중간	858	6.22(0.04)	4.92(0.05)
남성60대+	198	6.38(0.12)	5.32(0.14)		높음	373	7.26(0.07)	5.27(0.12)
여성60대+	234	6.07(0.11)	5.30(0.12)	압박정책	낮음	334	6.53(0.10)	4.18(0.10)
~300만 원	375	5.94(0.08)	5.01(0.09)		중간	908	6.18(0.04)	4.99(0.05)
300-500만 원	567	6.22(0.06)	5.13(0.08)		높음	358	5.94(0.10)	6.39(0.09)
500만 원~	658	6.33(0.06)	5.21(0.07)					

나.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는 9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과제에 서는 통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통일’이라는 표현보다는 ‘단일 국가 형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해 왔다. 9개 문항에 대해서 주 성분해법, 사각회전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추출은 아이겐값이 1.0을 넘는 요인을 기준으로 하였다.¹⁶⁾ 요인분석 결과 2019년 결과와 같이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각 통일지향성과 분단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II-2>에 제시하였으며 통일지향성과 분단지향성의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II-3>에 제시하였다.

통일지향성의 평균은 요인 1의 6개 문항의 평균, 분단지향성의 평균은 요인 2의 3개 문항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통일지향성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90, 분단지향성의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75였다. 통일지향성의 2020년 평균은 3.19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2019년: 3.17). 분단지향성의 평균은 3.36점으로 2019년 대비 0.13점 감소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분단지향성이 통일지향성보다 높았다.

통일지향성과 분단지향성 역시 3개 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통일지향성이 낮은 집단은 1.0점부터 2.67점까지의 335명, 중간인 집단은 2.83점에서 3.67점까지의 936명,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은 3.83점에서 5.0점까지의 329명으로 구분하였다. 분단지향성의 경우 저집단은 1점에서 2.67점까지의 306명, 중집단은 3.0점에서 3.67점까지의 869명, 고집단은 4.0점에서 5.0점까지의 425명까지로 구분하였다.

16) 본 연구보고서에서 보고된 모든 요인분석은 같은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표 11-2〉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공동성
3)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0.82	-0.10	0.68
1)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0.81	-0.16	0.69
2)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0.80	-0.19	0.67
7) 남북한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단일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0.76	-0.18	0.62
9)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	0.76	-0.11	0.59
8)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남한에게 이익이 된다.	0.70	-0.08	0.49
4)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해도 상관없다.	-0.14	0.75	0.57
5)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굳이 단일국가를 만들 필요는 없다.	-0.24	0.70	0.55
6) 한국국민과 북한주민들이 두 개의 국가 상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0.02	0.69	0.47
아이겐값	3.73	1.44	
설명변량	45.83	21.34	
누적변량	45.80	67.17	
요인명	통일 지향성	분단 지향성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통일지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통일지향성이 강했다. 연령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통일의 필요성에 있어 2030세대의 공감도가 약하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통일이라는 규범화, 추상화되어 있는 단어보다 “단일국가 형성”이라는 구체적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과제에서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대한 정서, 통일에 대한 편익기대 등 통일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종합한 통일지향성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연령·성별 교차분석 결과 통일 지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었다. 보수와 중도에 비해 진보가 통일지향성이 높았다.

분단지향성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분단지향성이 다소 강했다. 연령, 이념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월 소득 300만 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분단지향성이 높았다. 분단지향성에 연령대 차이는 작년에도 관찰되지 않았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분단 상황이 그리 불편하지 않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표 11-3〉 통일지향성과 분단지향성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통일지향성	분단지향성	구분	사례 수	통일지향성	분단지향성	
2019년	1,000	3.17(0.03)	3.49(0.03)	이념	보수	316	3.05(0.05)	3.40(0.05)
전체(2020년)	1,600	3.19(0.02)	3.36(0.02)		중도	743	3.08(0.03)	3.33(0.03)
					진보	541	3.42(0.03)	3.36(0.03)
남성	796	3.32(0.03)	3.29(0.03)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2.79(0.04)	3.25(0.04)
여성	804	3.05(0.03)	3.42(0.03)		중간	803	3.18(0.02)	3.38(0.02)
20대	278	3.12(0.05)	3.37(0.05)		높음	390	3.61(0.04)	3.42(0.04)
30대	253	3.11(0.05)	3.40(0.05)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388	3.21(0.04)	3.32(0.04)
40대	314	3.24(0.04)	3.30(0.04)		중간	826	3.14(0.02)	3.27(0.02)
50대	323	3.27(0.04)	3.32(0.04)		높음	386	3.27(0.05)	3.57(0.04)
60세+	432	3.17(0.04)	3.38(0.04)	통일지향	낮음	335	2.07(0.03)	3.62(0.05)
남성 20대	146	3.21(0.06)	3.31(0.07)		중간	936	3.22(0.01)	3.32(0.02)
여성 20대	132	3.02(0.07)	3.44(0.07)		높음	329	4.23(0.02)	3.20(0.05)
남성 30대	129	3.26(0.06)	3.31(0.06)	분단지향	낮음	306	3.38(0.05)	2.25(0.03)
여성 30대	124	2.95(0.07)	3.50(0.06)		중간	869	3.22(0.02)	3.29(0.01)
남성 40대	158	3.40(0.06)	3.24(0.06)		높음	425	2.99(0.05)	4.28(0.02)
여성 40대	156	3.07(0.06)	3.35(0.06)					

구분	사례 수	통일지향성	분단지향성	구분	사례 수	통일지향성	분단지향성	
남성 50대	165	3.41(0.06)	3.26(0.06)	관여정책	낮음	369	2.61(0.05)	3.31(0.05)
여성 50대	158	3.13(0.06)	3.39(0.05)		중간	858	3.16(0.02)	3.31(0.02)
남성 60대+	198	3.30(0.06)	3.34(0.05)		높음	373	3.74(0.04)	3.50(0.04)
여성 60대+	234	3.06(0.05)	3.42(0.05)	압박정책	낮음	334	3.20(0.03)	3.17(0.03)
~300만 원	375	3.09(0.04)	3.24(0.04)		중간	908	3.25(0.03)	3.39(0.03)
300~500만 원	567	3.20(0.03)	3.39(0.03)		높음	358	3.07(0.06)	3.70(0.04)
500만 원~	658	3.24(0.03)	3.38(0.03)					

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태도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태도는 14개 문항,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4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4>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관여정책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압박정책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요인은 관여정책과 압박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하나의 문항으로 독립정책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정책을 제외한 관여정책과 압박정책을 준거변수로 사용하였다.

관여정책의 문항 간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0.83, 압박정책의 문항 간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0.75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여정책과 압박정책의 평균을 계산한 후 점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각각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관여정책은 1.0점부터 3.22점까지 306명(저집단), 3.33점부터 4.22점까지 921명(중집단), 4.33점부터 6.0점까지 373명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압박정책의 경우 저집단은 1.0점부터 3.75점까지의 736명, 중집단은 4.0점에서 4.5점까지의 506명, 고집단은 4.75점부터 6.0점까지의 358명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II-4〉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2	공통성
9) 신종 코로나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0.74	-0.13	-0.10	0.57
1)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북한의 취약계층(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0.69	-0.06	-0.17	0.51
2) 금강산을 개인자격으로 방문하는 개별 관광을 추진해야 한다.	0.68	-0.17	0.11	0.50
8)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깨지지 않는 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잠정적으로 연기되어야 한다.	0.63	-0.15	0.38	0.56
12)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의 개입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에 장애물이다.	0.62	0.01	0.26	0.45
3) 남북관계 개선은 북미관계 개선을 촉진한다.	0.60	0.21	-0.04	0.40
14) 국제사회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0.51	0.33	-0.27	0.44
10) 오직 남한과 북한에 의해서만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는 이루어질 수 있다.	0.50	0.09	0.18	0.30
11) 일반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의 개입은 득보다 실이 많다.	0.48	0.33	0.03	0.34
5)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활용될 것이다.	-0.07	0.75	0.15	0.59
6)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0.05	0.72	0.10	0.53
13)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개입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에 장애물이다.	0.19	0.60	-0.15	0.42
4)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 위반이다.	-0.09	0.58	0.50	0.59
7) 북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에 맡겨야 한다.	0.19	0.13	0.54	0.34
아이겐값	3.98	2.65	1.44	
설명변량	28.45	18.97	10.31	
누적변량	28.45	47.22	57.74	
요인명	관여정책	압박정책	고립정책	

관여정책의 평균은 3.80, 압박정책의 평균은 4.01로 압박정책을 지지하는 정도가 관여정책을 지지하는 정도보다 강했다. 관여정책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지지도가 높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집단의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300~500만 원 미만 집단, 500만 원 이상 집단의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보다 낮았다. 스스로를 진보로 생각하는 집단의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스스로를 보수, 중도로 생각하는 집단의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보다 강했다. 보수와 중도의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차이가 없었다. 압박정책의 경우 성별, 연령, 월 소득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념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는데, 보수는 중도에 비해서, 중도는 진보에 비해서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표 II-5〉 관여정책과 압박정책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관여정책	압박정책	구분	사례 수	관여정책	압박정책
전체(2020년)	1,600	3.80(0.02)	4.01(0.02)	이념	보수	316	3.57(0.04) 4.33(0.05)
남성	796	3.82(0.03)	4.01(0.03)		중도	743	3.69(0.03) 4.00(0.03)
여성	804	3.77(0.03)	4.01(0.03)		진보	541	4.07(0.03) 3.83(0.04)
20대	278	3.83(0.05)	4.06(0.05)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3.30(0.04) 4.08(0.05)
30대	253	3.80(0.05)	4.04(0.05)		중간	803	3.80(0.02) 4.05(0.03)
40대	314	3.79(0.04)	3.97(0.05)		높음	390	4.30(0.04) 3.86(0.05)
50대	323	3.85(0.04)	3.90(0.05)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388	3.93(0.04) 3.62(0.04)
60세+	432	3.74(0.04)	4.06(0.04)		중간	826	3.70(0.02) 3.92(0.03)
남성 20대	146	3.81(0.06)	4.21(0.08)		높음	386	3.87(0.05) 4.60(0.04)
여성 20대	132	3.85(0.07)	3.88(0.07)	통일지향	낮음	335	3.25(0.04) 4.17(0.06)
남성 30대	129	3.82(0.06)	4.07(0.07)		중간	936	3.80(0.02) 3.94(0.02)
여성 30대	124	3.78(0.07)	4.01(0.08)		높음	329	4.34(0.04) 4.05(0.05)

구분	사례수	관여정책	압박정책	구분	사례수	관여정책	압박정책
남성 40대	158	3.82(0.05)	3.95(0.06)	분단지향	낮음	306	3.66(0.05)3.69(0.06)
여성 40대	156	3.76(0.05)	4.00(0.06)		중간	869	3.81(0.02)3.96(0.02)
남성 50대	165	3.91(0.07)	3.85(0.07)		높음	425	3.87(0.04)4.35(0.05)
여성 50대	158	3.80(0.05)	3.96(0.07)	관여정책	낮음	369	2.72(0.03)4.15(0.07)
남성 60대+	198	3.76(0.06)	4.01(0.07)		중간	858	3.78(0.01)3.93(0.02)
여성 60대+	234	3.71(0.05)	4.11(0.06)		높음	373	4.73(0.02)4.09(0.05)
~300만 원	375	3.69(0.04)	4.00(0.05)	압박정책	낮음	334	3.74(0.03)3.28(0.02)
300~500만 원	567	3.83(0.03)	4.02(0.04)		중간	908	3.95(0.02)4.22(0.01)
500만 원~	658	3.83(0.03)	3.99(0.04)		높음	358	3.69(0.05)5.21(0.02)

라. 준거변수 간 관계

지금까지 여섯 개의 준거변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준거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6>에 제시하였다. 먼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성, 그리고 관여정책 간 뚜렷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협력을 통한 평화와 통일지향성의 상관은 0.42, 협력을 통한 평화와 관여정책의 상관은 0.55, 관여정책과 통일지향성의 상관 역시 0.55였다. 세 준거변수가 정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¹⁷⁾ 반면 군사력을 통한 평화는 압박정책과 정적으로 뚜렷한 상관관계($r=0.43$), 분단지향성과는 약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r=0.12$).

17) 부적 관계란 한 변수의 수준 변화와 다른 변수의 수준 변화가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통일지향성과 분단지향성이 부적인 관계라는 의미는 통일지향성의 수준이 상승하면 분단지향성의 수준은 하락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정적 관계란 두 변수의 수준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협력을 통한 평화와 통일지향성이 정적 관계라는 의미는 협력을 통한 평화의 수준이 상승하면 통일지향성의 수준 역시 상승한다는 의미이다.

〈표 II-6〉 6개 준거변수 간 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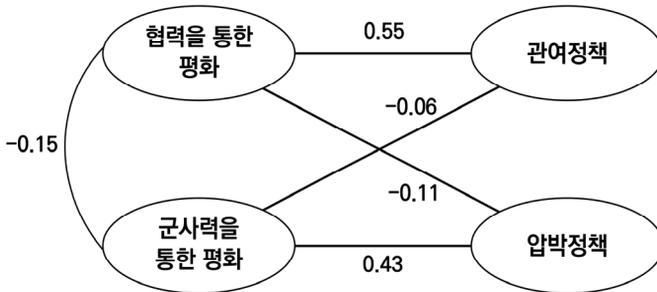
	2.	3.	4.	5.	6.
1. 협력을 통한 평화	-0.15**	0.55**	-0.11**	0.42**	0.08**
2. 군사력을 통한 평화		-0.06*	0.43**	0.02	0.12**
3. 관여정책			0.00	0.55**	0.12**
4. 압박정책				-0.04	0.30**
5. 통일지향					-0.16**
6. 분단지향					

주: * $p < .05$, ** $p < .01$, *** $p < .001$ ¹⁸⁾

관여정책과 압박정책은 상관이 0에 가깝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이는 관여정책과 압박정책 각각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는 협력을 통한 평화와 군사력을 통한 평화 및 통일지향성과 분단지향성의 관계와 대조적이다. 구체적으로 협력을 통한 평화와 군사력을 통한 평화 그리고 통일지향성과 분단지향성의 관계는 약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각각 $r = -0.15$, $r = -0.16$). 협력을 통한 평화를 선호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부정적이며, 통일지향성이 강할수록 분단지향성은 약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 수준과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 수준은 아무 관련이 없었다(〈그림 II-1〉).

18) 본 보고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이 기준을 따른다.

〈그림 II-1〉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과 통일·대북정책의 상관



첫 번째 가능성은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과 같이 추상성이 높은 수준의 인식이 북한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와 같은 구체적 태도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상과 목표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수단에 대한 인식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통일·대북정책이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 외에 다른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절에서 살펴볼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정서와 태도,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민족 정체성 등이 통일·대북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이 참이더라도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이 다른 변수를 고려했을 때 통일·대북정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감소될 수는 있다. 하지만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이 통일·대북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결과는 통일지향성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의 상관, 통일지향성과 압박정책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이다. 범주 구분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지지가 낮은 집단 및 높은 집단의 통일지향성이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지지

가 중간인 집단에 비해 통일지향성이 높았다. 즉 U자형 패턴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선형성이 가정되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이다. 통일지향성과 압박정책의 관계에서도 U자형 패턴이 관찰되었다.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 및 낮은 집단이 중간인 집단에 대해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했다. 이는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해 찬성이건 반대이건 뚜렷한 신념을 가진 집단이 통일에 긍정적이며, 통일에 대해 뚜렷한 신념을 가진 집단이 압박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이 중간인 집단과 낮은 집단보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긍정적이었으며, 통일지향성이 중간인 집단이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과 통일지향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았다. 이는 통일에 대한 뚜렷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호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보다 압박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준거변수들 간 상관관계에 대한 간략한 분석은 본 연구가 왜 필요한지 알려주고 있다. 한반도 화해와 통일에 대한 간접적 지표로 볼 수 있는 6개 준거변수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으며 상관분석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장은 화해와 통일의지와 관련된 6개 준거변수에 대해 가치관, 사회관, 분단 심리, 평화의 심리의 영향력을 기초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가치관이 평화인식 및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

가. 평화, 전쟁, 통일에 대한 사회적 표상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일상적 의사소통을 통해 특정문화권 또는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태도, 행동을 망라하는 포괄적 지식을 의미한다.¹⁹⁾ Durkheim의 집합적 표상 개념에 출발한 사회적 표상 이론은 모든 사회심리적 현상과 과정은 그것이 발생하는 역사적, 문화적, 거시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사회적 표상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환경과 대상을 객관적,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 (1)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대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표현해야 할지에 대한 일종의 공유된 규범의 역할을 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 (2)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자신의 집단 규범이나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재구조화하고,
- (3) 사회적 표상을 공유함으로써 집단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 (4) 표상 공유 여부로 집단 구분에 기여하며,
- (5)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형성하는 기대와 예측에 영향, 개인의 행동을 안내한다.²⁰⁾

19) Serge Moscovici, "The Phenomenon of Social Representations," in *Social Representations*, eds. Robert M. Farr and Serge Moscovici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 16~19.

20) 최훈석·용정순, "한국 청소년과 성인의 게임에 관한 사회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2호 (2010), pp. 199~200.

즉 사람들은 현실을 통해 사회적 표상을 생성하고, 이 표상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이 생각하는 평화, 전쟁, 통일의 사회적 표상은 70년 분단의 환경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구성된 사회적 표상을 통해 환경, 사건 등을 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구성한다. 특히 사회적 표상은 사회집단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논쟁의 대상,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전쟁, 인권, 성적 지향성, 이념, 정치체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²¹⁾ 분단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평화, 전쟁, 통일에 대해 비교적 뚜렷한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평화와 전쟁, 그리고 통일의 사회적 표상을 단어 연상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단어 연상법은 사회적 표상 연구에서 가장 흔히 쓰는 조사법으로 ‘평화’, ‘전쟁’과 같은 주제어를 보거나 듣고 떠오르는 단어를 통해 사회적 표상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화, 전쟁, 통일이라는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세 단어(1순위, 2순위, 3순위)를 물어보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단어인 1순위 단어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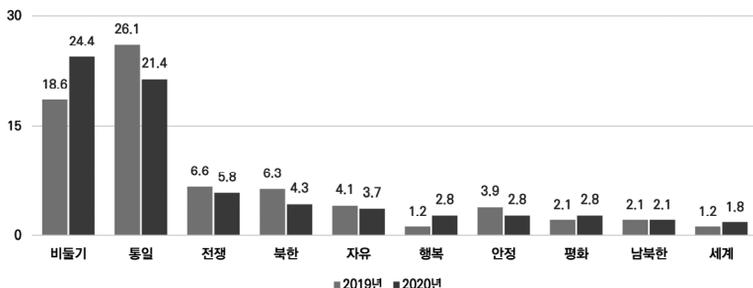
“평화”라는 단어를 듣고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는 ‘비둘기(24.4%)’이었으며, 이어서 ‘통일(21.4%)’, ‘전쟁(6.6%)’, ‘북한(4.3%)’, ‘자유(3.7%)’, ‘행복(2.8%)’의 순이었다(〈그림 II-2〉). 2019년과 비교한다면 비둘기와 통일이 평화와 관련된 지배적 연상어라는 점은 변함이 없었지만 비둘기와 통일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1순위 단어는 〈표 II-7〉에 제시하였다. 남성은 평화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상어로 비둘기와 통일의 비

21) 위의 글, p.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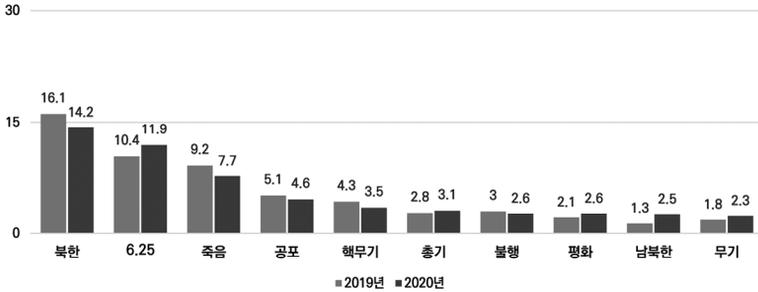
율이 비슷했지만 여성은 비둘기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둘기의 비중은 작아지고 통일의 비중이 커지며 60대 이상에서는 평화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로 통일을 꼽은 비율이 비둘기를 꼽은 비율을 상회하였다. 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비둘기의 비중은 줄어들고 통일의 비중이 늘어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진보는 평화의 연상어로 비둘기와 통일의 비중이 비슷한 반면 중도와 보수는 비둘기의 비중이 높았다.

〈그림 11-2〉 “평화”의 사회적 표상(1순위)



준거변수별로 살펴보면 협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지지도가 강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공감도가 낮을수록, 통일지향성이 높을수록, 분단지향성이 낮을수록,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을수록,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통일을 평화의 연상어로 꼽은 비율이 높았다. 비둘기와 같은 유토피아적 평화상(像)은 갈등이 고착화된 사회의 특징이다. 하지만 적어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인식, 특히 소위 교류협력을 통한 체제통합의 과정을 선호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유토피아적 평화상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I-3〉 “전쟁”의 사회적 표상(1순위)



“전쟁”이라는 단어를 듣고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는 ‘북한(14.2%)’이었으며, 이어서 ‘6.25 전쟁(11.9%)’, ‘사망/죽음(7.7%)’, ‘공포(4.6%)’, ‘핵무기/핵개발(3.5%)’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I-3〉). 대부분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서 연상어 비중은 전쟁-6.25-사망-공포의 순이었지만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I-8〉).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진보적일수록 6.25 전쟁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II-7〉 평화에 대한 사회적 표상 1순위 단어 중 상위 10개 단어의 비율

구분(단위: 명, %, 점)	사예 수	비율	통일	전쟁	북한	자유	행복	안정	평화	남북한	세계	그 외	
2019년	1,000	4.1	9.4	14.8	30.0	21.4	9.4	14.8	30.0	21.4	14.0	14.0	
전체(2020년)	1,600	24.4	21.4	5.8	4.3	3.7	2.8	2.8	2.8	2.1	1.8	28.2	
성별	남성	796	22.9	22.9	6.9	4.0	3.4	2.1	2.3	2.9	2.0	1.5	29.2
	여성	804	26.0	19.9	4.7	4.6	4.0	3.5	3.4	2.6	2.2	2.0	27.1
연령	20대	278	30.6	16.5	3.2	3.6	2.9	2.5	2.2	5.4	2.2	1.8	29.2
	30대	253	29.2	23.3	3.6	5.1	1.6	1.6	2.0	4.3	1.2	1.6	26.5
	40대	314	25.5	21.0	5.4	4.5	3.5	1.3	3.2	2.5	1.9	2.9	28.4
	50대	323	26.0	21.1	6.8	3.7	4.3	3.7	2.8	1.2	3.1	1.5	25.7
	60세+	432	15.7	23.8	8.3	4.6	5.1	4.2	3.5	1.4	2.1	1.2	30.2

구분(단위: 명, %, 점)		사례 수	비율기	통일	전쟁	북한	자유	행복	안정	평화	남북한	세계	그 외
연령 by 성별	남성 20대	146	21.9	17.8	5.5	4.1	2.7	2.7	3.4	6.2	2.1	2.1	31.5
	여성 20대	132	40.2	15.2	.8	3.0	3.0	2.3	.8	4.5	2.3	1.5	26.5
	남성 30대	129	31.8	24.0	3.9	4.7	2.3	1.6	2.3	4.7	1.6	1.6	21.8
	여성 30대	124	26.6	22.6	3.2	5.6	.8	1.6	1.6	4.0	.8	1.6	31.4
	남성 40대	158	22.8	20.9	5.1	5.7	3.8	1.3	1.9	3.8	2.5	1.9	30.3
	여성 40대	156	28.2	21.2	5.8	3.2	3.2	1.3	4.5	1.3	1.3	3.8	26.3
	남성 50대	165	30.3	23.0	6.1	1.2	1.8	.6	3.0	.6	2.4	2.4	28.5
	여성 50대	158	21.5	19.0	7.6	6.3	7.0	7.0	2.5	1.9	3.8	.6	22.8
	남성 60대+	198	11.6	27.3	12.1	4.5	5.6	4.0	1.0	.5	1.5	.0	31.8
여성 60대+	234	19.2	20.9	5.1	4.7	4.7	4.3	5.6	2.1	2.6	2.1	28.6	
월 소득	~300만 원	344	28.5	17.4	3.8	4.9	5.5	2.0	4.1	4.4	2.0	2.0	25.4
	300~500만 원	535	24.7	21.3	4.5	3.6	2.2	3.0	2.2	2.8	3.2	1.5	31.0
	500만 원~	603	21.6	25.0	7.8	5.1	3.2	3.2	3.0	2.0	1.3	1.8	26.1
이념	보수	316	21.5	17.7	11.4	5.7	3.2	4.1	1.9	.0	1.9	1.6	31.0
	중도	743	26.2	21.1	3.8	3.8	4.2	3.0	3.5	3.2	1.9	1.6	27.6
	진보	541	23.7	23.8	5.4	4.3	3.3	1.8	2.4	3.7	2.6	2.0	27.0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316	27.0	17.2	4.9	5.7	2.9	2.0	2.9	3.7	2.5	2.0	29.2
	중간	743	26.2	21.5	6.0	3.2	3.7	3.0	3.0	2.4	2.5	1.6	26.9
	높음	541	18.2	25.4	6.4	5.1	4.4	3.3	2.3	2.6	1.0	1.8	29.5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24.7	24.2	5.7	4.1	2.8	3.4	2.8	1.5	2.6	2.1	26.1
	중간	803	25.3	20.9	5.8	4.0	3.4	2.5	2.5	2.9	2.5	2.1	27.9
	높음	390	22.3	19.4	6.0	5.2	5.2	2.8	3.4	3.6	.8	.8	30.6
통일 지향	낮음	388	31.6	13.4	5.4	4.5	3.3	4.8	1.2	2.1	2.4	2.4	29.0
	중간	826	23.4	23.3	5.6	4.1	3.8	2.4	3.8	3.0	2.0	1.5	27.2
	높음	386	20.1	24.0	7.0	4.9	3.6	2.1	1.5	2.7	2.1	1.8	30.0
분단 지향	낮음	335	22.9	23.5	6.9	2.6	2.6	2.6	2.9	2.9	3.6	1.3	28.2
	중간	936	25.2	21.3	4.5	4.3	4.3	3.0	3.0	2.6	1.8	2.0	28.2
	높음	329	24.0	20.0	7.8	5.6	3.3	2.6	2.4	2.8	1.6	1.6	28.2
관여 정책	낮음	306	26.5	17.6	6.5	4.9	3.3	2.9	2.6	2.0	2.0	2.9	28.8
	중간	869	24.9	23.6	5.5	3.5	3.5	2.3	3.0	3.1	2.1	1.6	26.9
	높음	425	21.7	19.0	5.9	5.9	4.6	4.0	2.4	2.4	2.4	1.1	30.5
입박 정책	낮음	306	23.0	23.9	5.3	4.3	2.9	2.9	3.3	2.6	2.4	1.6	27.9
	중간	921	24.9	21.3	6.5	3.8	4.7	3.2	2.2	3.2	2.0	1.6	26.7
	높음	373	26.8	16.2	5.9	5.0	3.9	2.2	2.8	2.5	1.7	2.2	30.8

〈표 II-8〉 전쟁에 대한 사회적 표상 1순위 단어 중 상위 10개 단어의 비율

구분(단위: 명, %, 점)	사례 수	복한	6.25	사망	공포	핵무기	총기	비극	평화	남북한	무기	그 외	
2019년	1,000	16.1	10.4	9.2	5.1	4.3	2.8	3	2.1	1.3	1.8	27.8	
전체(2020년)	1,600	14.2	11.9	7.7	4.6	3.5	3.1	2.6	2.6	2.5	2.3	45.0	
성별	남성	796	14.1	12.7	9.2	2.9	2.9	3.8	2.5	3.4	2.0	2.5	44.1
	여성	804	14.4	11.2	6.2	6.2	4.1	2.5	2.6	1.7	3.0	2.1	45.9
연령	20대	278	15.8	10.8	4.0	2.5	3.6	5.8	1.1	1.1	4.3	2.2	48.9
	30대	253	19.0	12.3	5.9	2.0	5.5	4.7	4.3	2.0	2.4	1.2	40.7
	40대	314	13.4	13.4	8.6	4.1	3.2	3.5	1.6	1.6	3.2	3.2	44.3
	50대	323	14.2	12.4	7.4	5.9	4.0	1.2	3.1	3.1	1.5	2.2	44.9
	60세+	432	11.1	11.1	10.6	6.7	2.1	1.6	2.8	4.2	1.6	2.5	45.6
연령 by 성별	남성 20대	146	14.4	11.6	4.8	1.4	2.1	7.5	.7	1.4	2.7	3.4	50.0
	여성 20대	132	17.4	9.8	3.0	3.8	5.3	3.8	1.5	.8	6.1	.8	47.7
	남성 30대	129	19.4	13.2	5.4	1.6	2.3	5.4	3.1	1.6	3.1	1.6	43.4
	여성 30대	124	18.5	11.3	6.5	2.4	8.9	4.0	5.6	2.4	1.6	.8	37.9
	남성 40대	158	13.9	13.9	12.0	1.3	3.2	3.8	2.5	1.9	1.9	3.2	42.4
	여성 40대	156	12.8	12.8	5.1	7.1	3.2	3.2	.6	1.3	4.5	3.2	46.2
	남성 50대	165	12.7	13.9	11.5	4.2	5.5	1.2	1.8	3.6	1.8	.6	43.0
	여성 50대	158	15.8	10.8	3.2	7.6	2.5	1.3	4.4	2.5	1.3	3.8	46.8
남성 60대+	198	11.6	11.1	10.6	5.1	1.5	2.0	4.0	7.1	1.0	3.5	42.4	
	여성 60대+	234	10.7	11.1	10.7	8.1	2.6	1.3	1.7	1.7	2.1	1.7	48.3
월 소득	~300만 원	344	11.6	11.6	6.7	5.2	3.8	2.9	3.5	1.5	1.2	2.9	49.1
	300~500만 원	535	15.9	11.2	8.0	4.5	3.2	3.4	2.6	3.6	3.2	2.1	42.4
	500만 원~	603	15.1	13.1	8.6	4.1	3.8	2.7	2.3	2.5	2.8	1.5	43.4
이념	보수	316	15.5	11.7	8.2	4.7	4.7	1.6	1.9	6.0	1.9	3.2	40.5
	중도	743	14.8	10.5	7.3	5.1	3.4	3.2	2.7	2.2	2.4	2.8	45.6
	진보	541	12.8	14.0	7.9	3.7	3.0	3.9	2.8	1.1	3.0	1.1	46.8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316	18.2	10.3	8.6	3.9	3.4	2.7	2.2	2.5	2.9	2.2	43.0
	중간	743	13.2	12.5	6.0	4.9	3.5	3.5	2.4	2.5	2.1	2.6	46.9
	높음	541	12.3	12.6	10.3	4.6	3.6	2.8	3.3	2.8	2.8	1.8	43.1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13.1	12.9	6.7	5.2	3.4	3.6	3.9	2.3	3.1	1.0	44.8
	중간	803	15.5	11.9	7.1	4.1	4.0	3.0	2.1	2.4	2.8	2.8	44.3
	높음	390	12.7	11.1	9.8	4.9	2.6	2.8	2.3	3.1	1.3	2.6	46.6
통일 지향	낮음	388	15.2	9.6	7.8	6.0	4.5	3.0	1.2	4.5	2.4	3.3	42.7
	중간	826	13.7	12.3	7.4	4.3	3.2	3.6	2.7	2.0	2.7	2.1	46.0
	높음	386	14.9	13.4	8.5	4.0	3.3	1.8	3.6	2.1	2.1	1.8	44.4
분단 지향	낮음	335	9.5	12.4	7.8	5.2	2.9	3.3	3.6	2.6	2.6	2.0	48.0
	중간	936	15.2	11.2	7.6	4.7	3.3	3.5	2.9	1.5	3.1	2.1	45.0
	높음	329	15.8	13.2	7.8	3.8	4.2	2.4	1.2	4.7	1.2	3.1	42.8
관여 정책	낮음	306	15.0	10.1	7.2	4.6	4.6	2.6	2.3	4.6	2.0	3.6	43.5
	중간	869	14.5	12.6	6.9	5.2	3.1	3.6	2.5	2.0	2.7	2.2	44.6
	높음	425	12.9	11.8	9.9	2.9	3.5	2.4	2.9	2.4	2.4	1.6	47.2
입박 정책	낮음	306	13.9	12.1	8.4	4.5	3.8	2.6	2.0	2.7	2.4	2.3	45.2
	중간	921	15.0	11.3	7.3	4.9	3.2	4.3	3.4	1.8	3.6	1.2	44.1
	높음	373	14.0	12.6	6.7	4.2	3.4	2.5	2.5	3.4	1.1	3.9	45.8

협력을 통한 평화를 선호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선호할수록 죽음의 비율의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해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더 느끼고 있다는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회적 표상이론에 따르면 표상에 따라 행동경향성이 달라진다. 사망이라는 표상이 사망을 방지하는 방식에 대한 행동경향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할수록,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가 약할수록 사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특징적이다. 공포가 유화적 행동경향성을 유도한다는 선행연구와 부합하는 결과이다.²²⁾

“통일”이라는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이하 연상어)는 ‘북한’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1,600명 중 20.8%가 ‘통일’이라는 단어를 보고 ‘북한’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응답하였다. ‘평화’, ‘분단’, ‘통합/화합’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이 ‘통일’을 ‘북한’, ‘평화’, ‘분단’, ‘통합/화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I-4〉 “통일”의 사회적 표상(1순위)



22) Jennifer S. Lerner et al., “Effects of Fear and Anger on Perceived Risks of Terrorism: A National Field Experiment,” *Psychological Science*, vol. 14, no. 2 (2003), pp. 144~150.

‘통일’의 사회적 표상이 북한, 평화, 분단, 통합/화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성별, 연령, 이념에 따라 4개 주요 연상어의 상대적 중요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머릿속에 연상된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통일을 북한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높았다.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관한 사회적 표상의 차이도 관찰되었다. 20대와 40대의 경우 통일과 연상된 단어의 중요성, 즉 각 연상어를 언급한 조사 참여자의 비율은 ‘북한>분단>평화>통합/화합’ 순이었다. 30대와 50대의 경우 연상어의 중요성은 ‘북한>평화>분단>통합/화합’의 순이었으며, 60대 이상은 ‘평화=북한>분단>통합/화합’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념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중도는 ‘북한’, 진보는 ‘평화’, 보수는 ‘민족’을 다른 이념집단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에 대한 표상은 “나” 또는 “우리”가 아닌 “상대”, 북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통일이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업이라는 점에서 통일을 생각할 때 북한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통일과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북한이며, 북한을 언급한 응답자의 비율이 통일의 또 다른 주체인 남한을 언급한 응답자의 비율보다 5배 이상이라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우리 국민이 통일을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아닌 북한의 현재와 북한의 미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9년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통일인식조사에서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내 생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한 비율이 56.2%였다. 통일이 우리 국민의 삶과 괴리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통일을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둘째, 통일에 대한 표상은 과정과 비전, 가치가 아닌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순위 연상어와 전체 연상어를 모두 고려했을 때 가치지향적인 연상어는 ‘평화’, ‘통합/화합’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구체적 사건이 추상적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연상이 된다. 또한 통일이 미래에 발생할 가상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치나 과정, 비전보다 사건 중심으로 통일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존 통일 담론이 공통적으로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가치, 통일의 편익, 통일의 과정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사건 중심의 통일 표상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셋째, 통일에 대한 표상은 중립적이다. 통일과 관련된 연상어들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통일에 대한 표상이 반드시 긍정적일 필요도 없으며 부정적이라고 해서 우려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통일과 관련된 표상,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먼저 통일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이 통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첫 번째 해석과 맥을 같이 한다. 통일을 제 삼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통일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약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호불호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통일 문제, 북한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영역에서 정치적 올바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북한, 평화, 통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일에 대한 호불호를 드러내었을 수도 있다.

〈표 II-9〉 통일에 대한 사회적 표상 1순위 단어 중 상위 10개 단어의 비율

구분(단위: 명, %, 점)	사례 수	북한	평화	분단	통합	남한	남북 통일	소원	한반도	독일	민족	그 외	
전체(2020년)	1,600	20.8	13.1	12.6	6.6	3.4	3.4	2.9	2.4	2.0	2.0	30.8	
성별	남성	796	18.3	14.1	12.4	7.7	3.5	3.5	2.9	3.1	2.4	2.5	29.5
	여성	804	23.1	12.1	12.8	5.6	3.4	3.2	2.9	1.7	1.6	1.5	32.1
연령	20대	278	29.9	9.0	12.6	5.8	5.0	1.8	1.8	3.2	.7	1.4	28.8
	30대	253	27.7	11.5	10.3	6.3	3.2	3.6	2.4	3.2	1.2	2.4	28.5
	40대	314	19.7	13.1	15.9	6.1	3.5	4.1	3.2	2.2	2.2	1.6	28.3
	50대	323	16.1	14.9	13.0	5.3	2.8	3.7	3.7	2.2	4.0	2.5	31.9
	60세+	432	15.0	15.3	11.3	8.8	3.0	3.5	3.0	1.9	1.6	2.1	34.5
연령 by 성별	남성 20대	146	26.0	8.2	13.0	9.6	3.4	2.1	2.1	4.1	.0	2.7	28.8
	여성 20대	132	34.1	9.8	12.1	1.5	6.8	1.5	1.5	2.3	1.5	.0	28.8
	남성 30대	129	24.8	16.3	10.1	7.8	3.1	4.7	.8	3.9	1.6	3.9	23.3
	여성 30대	124	30.6	6.5	10.5	4.8	3.2	2.4	4.0	2.4	.8	.8	33.9
	남성 40대	158	16.5	11.4	13.9	5.7	5.7	3.8	3.8	2.5	3.2	1.9	31.6
	여성 40대	156	23.1	14.7	17.9	6.4	1.3	4.5	2.6	1.9	1.3	1.3	25.0
	남성 50대	165	13.9	15.2	13.9	4.2	2.4	3.0	3.6	3.0	5.5	3.0	32.1
	여성 50대	158	18.4	14.6	12.0	6.3	3.2	4.4	3.8	1.3	2.5	1.9	31.6
	남성 60대+	198	13.6	18.2	11.1	10.6	3.0	4.0	3.5	2.5	1.5	1.5	30.3
여성 60대+	234	16.2	12.8	11.5	7.3	3.0	3.0	2.6	1.3	1.7	2.6	38.0	
월 소득	~300만 원	344	18.9	11.9	12.2	7.0	3.8	4.4	3.8	1.2	2.0	2.0	32.8
	300~500만 원	535	22.2	12.3	12.7	6.5	3.9	3.2	3.7	3.0	1.1	1.3	29.9
	500만 원~	603	19.7	14.8	12.4	5.8	3.3	2.8	2.0	2.3	2.8	2.7	31.3
이념	보수	316	18.4	12.7	11.7	7.6	2.2	4.4	1.9	2.5	2.2	3.8	32.6
	중도	743	23.6	11.3	12.8	7.1	3.6	2.4	2.4	2.3	1.9	1.9	30.7
	진보	541	18.3	15.7	12.9	5.4	3.9	4.1	4.1	2.6	2.0	1.1	29.9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316	22.9	9.3	14.3	4.4	2.9	2.0	1.2	2.2	.7	3.4	36.6
	중간	743	21.9	13.6	11.8	6.8	3.2	3.9	3.6	2.2	2.5	2.2	28.1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20.1	14.7	13.9	6.7	3.4	5.7	2.1	2.8	1.3	1.3	28.1
	중간	803	23.7	12.3	12.7	5.9	3.4	2.5	3.5	2.3	2.2	2.7	28.7
	높음	390	15.0	13.0	11.1	8.0	3.6	2.8	2.3	2.3	2.3	1.3	38.1
통일 지향	낮음	388	22.4	6.6	13.4	5.7	2.4	5.1	2.7	2.4	.9	2.4	36.1
	중간	826	22.5	14.1	12.0	6.0	3.7	2.2	2.9	1.9	2.2	2.4	30.0
	높음	386	14.0	16.7	13.7	9.4	3.6	4.9	3.0	4.0	2.4	.6	27.7
분단 지향	낮음	335	18.0	16.3	12.7	5.6	3.6	2.9	2.6	4.6	1.3	2.3	30.1
	중간	936	21.9	12.0	13.3	6.9	3.7	3.3	2.6	1.8	2.4	2.1	29.9
	높음	329	20.5	12.9	11.1	6.8	2.8	3.8	3.5	2.1	1.6	1.6	33.2
관여 정책	낮음	306	18.6	8.8	14.1	3.9	2.9	3.3	2.3	2.3	1.6	3.6	38.6
	중간	869	23.9	14.1	12.1	6.4	3.6	3.1	2.6	2.2	1.6	2.0	28.4
	높음	425	14.7	13.9	12.9	9.4	3.5	4.0	4.0	3.2	3.2	.8	30.3
압박 정책	낮음	306	20.9	15.4	12.4	5.7	3.3	3.5	2.9	1.5	1.8	2.4	30.3
	중간	921	22.1	12.5	12.8	8.1	4.2	2.8	3.4	3.8	2.0	2.0	26.5
	높음	373	18.4	9.2	12.8	6.4	2.8	3.9	2.2	2.5	2.5	1.1	38.0

나. 우익권위주의

우익권위주의 척도는 독일 제3제국, 나치 정권의 잔혹함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제3제국의 만행을 보면서 전쟁이 인간의 본성에서 시작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인간이 어디까지 극단적·공격적일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대량학살과 관련한 9개의 권위주의적 성격 특성으로 연결되었으며, 경험적 연구를 통해 권위에 대한 무비판적 복종, 전통적 가치의 고수, 전통적 가치 위반자에 대한 공격성이 인간의 잔혹함과 관련 있는 변수임을 밝혔다.²³⁾

우익권위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세상을 위협적이고 위협이 도사린 곳으로 인식한다. 우익권위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안전(safe)과 안보(security)를 위해 정부, 군대, 종교적 지도자와 같이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응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 또한 우익권위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비판과 다양성을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시도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들은 권력이 현상유지(status quo)를 명분으로 사회적 질서와 다양성을 억압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우익권위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권력이 승인한다고 믿을 때 사회적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되는 이들에게 대해 높은 수준의 적대감을 표출하고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우익권위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애국심, 결혼 등 전통적인 사회, 종교, 도덕적 규범에 순응하면서 불확실성과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강하다.

선행연구는 이념을 구성하는 심리적 변인을 크게 두 가지, ‘변화에 대한 저항’과 ‘불평등에 대한 태도’로 제시하고 있다. 스스로를 보수

23) Shelley McKeown and Daniel J. Christie, "Social Psychology and Peace," in *The Palgrave Handbook of Disciplinary and Regional Approaches to Peace*, eds. Oliver Richmond, Sandra Pogodda, and Jasmin Ramovic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6), p. 222.

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선호하고 개인적·사회적 불평등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²⁴⁾ 우익권위주의 척도는 이 중 ‘변화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는 대표적 척도로 간주되고 있다.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척도는 곧 살펴볼 ‘사회지배 경향성 척도’이다.

우익권위주의가 자기명명식 이념의 주요 구성요소이며, 특히 보수적 이념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서양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는 엇갈린다. 우익권위주의와 자기명명식 이념과 상관이 없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²⁵⁾ 우익권위주의가 보수성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²⁶⁾ 또한 북한에 대한 태도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지만,²⁷⁾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었다.²⁸⁾

본 연구에서는 우익권위주의 단축판 척도 15개 문항 중 8개 문항을 선택하여 7점 척도(1점: 전적으로 반대, 7점: 전적으로 찬성)로 측정해 왔다.²⁹⁾ 8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었다.

-
- 24) John T. Jost, Christopher M. Federico, and Jaime L. Napier,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0 (2009), pp. 311~312.
- 25) 이진안·최승혁·허태균, "정치적 판단에서 심리적 요인의 역할-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6권 2호 (2012), p. 80; 하상웅·이보미,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의 심리적 결정 요인들," 『한국정당학회보』, 제16권 1호 (2017), p. 30.
- 26) 홍기원·이종택, "한국 성인의 이념적 지형과 심리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4권 2호 (2010), p. 1.
- 27) 위의 글, p. 20.
- 28) 이상신,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결정요인 연구: 우파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사회연구』, 제8권 2호 (2015), pp. 55~56.
- 29) Ingrid Zakrisson, "Construc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Individual Differences*, vol. 39, no. 5 (2005), pp. 863~872.

- 1)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많은 선동가들의 말을 무시해야 한다. 국가의 정당한 권위자들에 따른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언제나 낫다.
- 2) 우리 사회는 더 늦기 전에 낙태, 포르노그래피, 결혼에 대한 신성한 도덕적 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 3)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것들을 파괴하려는 급진주의자,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많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막아야 한다.
- 4) 최근의 범죄, 성(性)적 부도덕과 사회 무질서를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과 인물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5) 정부는 질 낮고 역겨우며 혐오스러운 내용을 포함한 언론이나 인터넷을 검열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 6)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민적 권리가 아니라 강력한 법과 질서이다.
- 7) 전통적 가치와 전통적 방식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최선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 8)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악함을 제거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고한 지도자이다.

우익권위주의의 평균은 4.90으로 전년대비 0.12점 상승하였다. 성별에 따른 우익권위주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20대, 30대, 40대의 우익권위주의에 비해 50대와 60대의 우익권위주의가 높았다. 스스로를 보수로 생각하는 사람의 우익권위주의가 스스로를 중도로 생각하는 사람의 우익권위주의, 스스로를 진보로 생각하는 사람의 우익권위주의보다 높았다. 중도와 진보의 우익권위주의의 차이가 없었다.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II-10〉).

우익권위주의와 준거변수들 간 관계는 〈표 II-11〉에 제시되었다.

우익권위주의는 모든 준거변수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우익권위주의가 높을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은 동시에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지지수준이 동시에 높아진다는 다소 모순적인 결과가 관찰된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관계는 통일지향성과 분단지향성, 그리고 압박정책과 관여정책에서도 관찰되었다. 우익권위주의가 본 연구의 관심인 평화, 통일, 화해에 대한 태도에 대해 차별성 있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익권위주의가 준거변수에 대한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

〈표 II-10〉 우익권위주의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우익권위주의	구분			사례 수	우익권위주의
2019년			1,000	4.78(0.03)	이념	보수	316	5.06(0.05)	
전체(2020년)			1,600	4.90(0.02)		중도	743	4.83(0.03)	
						진보	541	4.90(0.04)	
성별	남성	796	4.88(0.03)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4.68(0.05)		
	여성	804	4.92(0.03)		중간	803	4.88(0.03)		
연령	20대	278	4.65(0.06)		높음	390	5.17(0.05)		
	30대	253	4.70(0.05)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388	4.79(0.05)		
	40대	314	4.83(0.05)		중간	826	4.79(0.03)		
	50대	323	5.09(0.05)		높음	386	5.24(0.05)		
	60세+	432	5.08(0.04)	통일지향	낮음	335	4.80(0.05)		
연령 by 성별	남성 20대	146	4.72(0.08)		중간	936	4.82(0.03)		
	여성 20대	132	4.58(0.08)		높음	329	5.21(0.05)		
	남성 30대	129	4.55(0.08)	분단지향	낮음	306	4.91(0.06)		
	여성 30대	124	4.85(0.08)		중간	869	4.85(0.03)		
	남성 40대	158	4.77(0.07)		높음	425	5.00(0.05)		
	여성 40대	156	4.89(0.07)	관여정책	낮음	369	4.80(0.05)		
	남성 50대	165	5.03(0.07)		중간	858	4.84(0.03)		
	여성 50대	158	5.15(0.07)		높음	373	5.12(0.05)		
	남성 60대+	198	5.17(0.06)	압박정책	낮음	334	4.63(0.05)		
	여성 60대+	234	5.00(0.06)		중간	908	4.89(0.03)		
남성 60대+	234	5.00(0.06)	높음		358	5.17(0.05)			
월 소득	~300만 원	375	4.79(0.05)						
	300~500만 원	567	4.92(0.04)						
	500만 원~	658	4.93(0.04)						

〈표 II-11〉 우익권위주의와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우익권위주의	0.19**	0.18**	0.15**	0.06*	0.14**	0.20**

다. 사회지배경향성

사회지배지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은 ‘집단 간 관계를 평등 또는 위계적으로 보기를 선호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집단 간 관계에 관한 일반적 태도지향성’ 그리고 ‘자신의 내집단이 외집단을 지배하고 외집단보다 우월하기를 바라는 정도’로 정의된다.³⁰⁾ 즉, 자신이 소속된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우월하며 외집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경향성을 뜻한다. 우익권위주의는 세상이 위험과 위협이 가득한 곳(dangerous-world beliefs)이라는 세계관에서 출발하는 반면, 사회지배경향은 세계가 약육강식의 세계, 즉 경쟁을 통해서만 살아남는 곳이라는 세계관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우익권위주의는 자신을 위협하는 집단으로부터 자신과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권위에 순응해야 한다는 동기를 반영한다. 반면 사회지배경향은 자신보다 열등한 집단으로 자신과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권위에 순응해야 한다는 동기를 매개한다.

사회지배경향이 높은 사람은 우월한 집단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열등한 집단이 열등한 지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념과 정책을 선호한다. 사회지배경향은 여성, 빈민, 인종적 소수자, 성적소수자, 이민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예측과 관련이 깊다. 또한 사회

30) Gordon Hodson and Mark R. Hoffarth,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in *Encyclopedia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eds, Virgil Zeigler-Hill and Todd K. Shackelford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7), pp. 1~7.

지배경향은 정치적 보수주의, 국수주의, 군사주의, 성차별주의 등과 관련이 있다. 사회지배경향이 높은 사람은 업보, 노블리스 오블리제, 갭간통념 등 사회적 위계를 합법화하는 신념을 지지한다.³¹⁾

우익권위주의는 전쟁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세계관이라면 사회지배경향은 평화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세계관으로 보고 되고 있다.³²⁾ 사회지배경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극소수이다. 이론적으로 우익권위주의 높은 사람들은 북한을 한국사회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사회지배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남한이 북한을 지배해야 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른 우익권위주의는 북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사회지배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³³⁾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배경향을 지배성향(dominance) 8개 문항과 반평등주의(egalitarianism) 8개 문항의 하위차원을 구분하여 새롭게 구성한 척도 중 4개 문항을 선별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해왔다. 지배성향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1, 반평등주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4였다. 반평등주의 경우 문항을 역채점한 점수를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하지 않고 평등주의로 제시하였다.

31) Felicia Pratto et al.,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4 (1994), pp. 741~763.

32) Boris Bizumic et al., "On the (In)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5 (2013), p. 675.

33) 홍기원·이종택, "한국 성인의 이념적 지형과 심리적 요인," p. 16.

[지배경향]

- 1) 열등한 개인, 집단과 계층은 자신들의 주제에 맞게 주어진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 2) 우월한 계층 또는 집단이 상위에 있고 열등한 계층과 집단은 하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 간 위계가 분명해야 한다. 어떤 계층은 상위에, 다른 계층은 하위에 있어야 한다.
- 4) 세상에는 남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이 있다.

[반평등주의]

- 5)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개인과 계층에게 동일하게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6) 우리는 모든 사람과 계층에게 동일한 삶의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7)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살면서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8) 사람 간, 계층 간 평등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지배경향, 평등주의, 사회지배경향의 평균은 <표 II-13>에 제시하였다. 2020년 한국인의 사회지배경향은 3.13점으로 2019년 대비 0.44점 상승하였다. 성별과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20대의 사회지배경향이 가장 강했다. 20대는 40대, 50대, 60대 이상 집단에 비해 사회지배경향이 강했다. 30대의 사회지배성향은 2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사회지배성향과 차이가 없었다. 스스로를 보수, 중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회지배성향이 스스로를 진보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회지배성향보다 높았다.

사회지배경향의 두 하위요소인 지배경향과 평등주의를 살펴보았다.

지배경향의 평균은 3.59로 전년대비 0.26점이 증가하였다. 성별과 월 소득에 따른 지배경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대별 차이는 유의하였다. 20대와 50대의 지배경향이 가장 약한 가운데 20대와 50대의 지배경향 차이만 유의하였고 다른 연령대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스스로를 보수로 생각하는 집단의 지배경향이 가장 강했고 스스로를 진보로 생각하는 집단의 지배경향이 가장 약했다.

평등주의의 평균은 5.34점으로 2019년 대비 0.26점 감소하였다. 성별과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연령과 이념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등주의가 강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평등주의가 가장 강한 집단은 50대, 가장 약한 집단은 20대였다. 성·연령 교차 분석 결과, 평등주의가 가장 강한 집단은 60세 이상 남성과 50대 남성, 가장 약한 집단은 남녀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었다. 진보집단의 평등주의가 보수집단, 중도집단의 평등주의보다 강했으며 보수집단과 중도집단의 평등주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표 II-12〉 사회지배성향과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지배경향	-0.17**	0.36**	-0.02	0.07**	0.01	0.18**
평등주의	0.42**	-0.12**	0.24**	0.07**	0.25**	0.02
사회지배성향	-0.36**	0.32**	-0.15**	0.01	-0.14**	0.12**

집단 간 위계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할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통일지향성 및 관여정책에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및 압박정책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지배성향과 분단

지향성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지배경향의 하위 구성요소인 지배경향과 평등주의와 6개 준거변수의 상관은 두 요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지배성향과 협력을 통한 평화 및 군사력을 통한 평화의 상관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각각 $r=-0.36$, $r=0.32$), 압박정책과 관여정책과의 상관 역시 비슷했다(각각 $r=0.12$, $r=-0.14$). 하지만 사회지배성향을 하위 요인별로 보면 지배경향은 군사력을 통한 평화 및 압박정책, 평등주의는 협력을 통한 평화 및 관여정책과 더 강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배성향은 통일지향성 및 관여정책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평등주의는 통일지향성 및 관여정책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각각 $r=0.24$, $r=0.25$). 적어도 통일과 관여정책에 영향을 주는 가치관 중 하나가 평등의 가치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표 II-13〉 사회지배성향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지배경향	평등주의	사회지배성향	구분	사례 수	지배경향	평등주의	사회지배성향	
2019년	1,000	3.33(0.04)	5.60(0.03)	2.87(0.03)	이념	보수	316	3.69(0.07)	5.23(0.06)	3.23(0.05)
전체(2020년)	1,600	3.59(0.03)	5.34(0.03)	3.13(0.02)		중도	743	3.63(0.04)	5.23(0.04)	3.20(0.03)
						진보	541	3.48(0.06)	5.55(0.04)	2.96(0.04)
남성	796	3.66(0.05)	5.35(0.04)	3.16(0.03)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3.79(0.06)	4.82(0.05)	3.48(0.04)
여성	804	3.52(0.05)	5.33(0.04)	3.09(0.03)		중간	803	3.67(0.04)	5.30(0.03)	3.19(0.03)
20대	278	3.87(0.08)	5.06(0.06)	3.40(0.05)		높음	390	3.22(0.08)	5.97(0.05)	2.62(0.05)
30대	253	3.63(0.09)	5.21(0.07)	3.21(0.06)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388	2.87(0.06)	5.75(0.05)	2.56(0.04)
40대	314	3.54(0.07)	5.38(0.06)	3.08(0.05)		중간	826	3.70(0.04)	5.10(0.04)	3.30(0.03)
50대	323	3.48(0.07)	5.49(0.06)	3.00(0.05)		높음	386	4.08(0.07)	5.44(0.05)	3.32(0.05)
60세+	432	3.51(0.06)	5.46(0.05)	3.03(0.04)	통일지향	낮음	335	3.54(0.07)	5.18(0.06)	3.18(0.05)
남성 20대	146	4.22(0.10)	4.97(0.09)	3.62(0.07)		중간	936	3.64(0.04)	5.20(0.03)	3.22(0.03)
여성 20대	132	3.48(0.11)	5.17(0.09)	3.16(0.07)		높음	329	3.52(0.09)	5.91(0.05)	2.80(0.05)
남성 30대	129	3.71(0.11)	5.07(0.10)	3.32(0.08)	분단지향	낮음	306	3.29(0.08)	5.43(0.06)	2.93(0.06)
여성 30대	124	3.55(0.14)	5.36(0.09)	3.10(0.09)		중간	869	3.69(0.04)	5.22(0.04)	3.24(0.03)
남성 40대	158	3.62(0.10)	5.26(0.09)	3.18(0.08)		높음	425	3.60(0.07)	5.52(0.05)	3.04(0.04)
여성 40대	156	3.47(0.11)	5.50(0.08)	2.98(0.07)						

구분	사례 수	지배경향	평등주의	사회지배 성향	구분	사례 수	지배경향	평등주의	사회지배 성향	
남성 50대	165	3.43(0.10)	5.61(0.08)	2.91(0.08)	관여정책	낮음	369	3.70(0.07)	4.99(0.06)	3.36(0.05)
여성 50대	158	3.54(0.10)	5.35(0.09)	3.09(0.07)		중간	858	3.52(0.04)	5.29(0.03)	3.11(0.03)
남성 60대+	198	3.46(0.09)	5.66(0.07)	2.90(0.07)		높음	373	3.69(0.09)	5.75(0.05)	2.97(0.05)
여성 60대+	234	3.55(0.08)	5.29(0.07)	3.13(0.06)		압박정책	낮음	334	3.36(0.05)	5.32(0.04)
~300만 원	375	3.48(0.07)	5.27(0.06)	3.11(0.05)	중간		908	3.68(0.05)	5.33(0.05)	3.18(0.04)
300~500만 원	567	3.61(0.06)	5.35(0.04)	3.13(0.04)	높음		358	3.94(0.07)	5.41(0.06)	3.27(0.05)
500만 원~	658	3.60(0.06)	5.39(0.04)	3.10(0.04)						

라. 보편적 가치

가치는 일반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삶을 이끄는 목표로 정의된다. Schwartz는 개인과 집단에서 따라 추구하는 가치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지만, 개인이 형편과 상황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trans-situational)고 주장하였다.³⁴⁾ 간단히 말해 가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결정하는, 그리고 타인의 사고와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의 역할을 수행한다.³⁵⁾

Schwartz는 권력(power), 성취(achievement), 쾌락주의(hedonism), 자극(stimulation), 자율(self-direction), 보편주의(universalism), 박애(benevolence), 전통(tradition), 동조(conformity), 안전(security) 등의 10개 가치들로 이루어진 가치구조를 제안하였으며(〈그림 II-6〉), 이후 70개 이상 국가에서 10개 가치구조가 확인되었다. 10개 가치들은 다시 변화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change), 보수주의(conservation),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그리고 자기고양(self-enhancement)의 4개 상위 가치로 재범주화된다. Schwartz는 상위 4개 가치와 상호

34) Shalom H. Schwartz et al., "Refining the Theory of Basic Individu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vol. 103, no. 4 (2012), p. 664.

35) 김연신·최한나,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1호 (2009), pp. 1~2.

연관성을 <그림 II-6>과 같이 개념화하였다. <그림 II-5>에서 인접한 가치들은 양의 상관, 반대 분면에 위치한 가치들은 음의 상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변화에 대한 개방성은 보수주의와 음의 상관, 자기초월 가치 및 자기고양 가치와는 양의 상관을 가진다. 한국의 대학생의 가치 구조 역시 Schwartz의 10개 가치구조가 적용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³⁶⁾

사람들이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태도(attitude)와 가치는 유사하다. 하지만 태도는 특정 상황, 사람, 행동, 즉 평가의 맥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 반면 가치는 다양한 평가의 맥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믿음이다. 즉 가치는 태도에 비해 중심적(central)이고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치는 상황-특정적(situation-specific)인 태도에 비해 그 수가 작지만 일차원적인 이념(예: 좌-우, 진보-보수)보다 그 수가 많다는 점에서 인지적 경제성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선호의 구조에 대한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가치의 중요성, 상대적 선호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하지만 가치의 변화 속도는 일관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안정성을 해치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³⁷⁾

가치는 정치적 이념, 정치적 활동, 사회적 정의 등의 다양한 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결정요소로 인정받고 있다.³⁸⁾ 가치와 정치적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평등, 도덕적 전통주의, 권력, 안보, 박애, 상호의존, Schwartz가 제시한 기본가치(basic value)

36) 위의 글, pp. 23~24.

37) Shalom H. Schwartz and Wolfgang Bilsky,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3, no. 3 (1987), p. 551.

38) 최정원·이영호, "개정된 가치묘사질문지(Pvq-R) 한국판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3권 3호 (2014), p. 554.

등 다양한 가치가 투표행동과 정부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저관여층에서는 가치가 일차원적인 이념보다 정치적 행동을 예측하는 데 설명력이 더 컸다.

구체적으로 가치-태도-행동(value-attitude-behavior) 모형은 가치가 어떻게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사람들은 인지적인 한계 또는 정보의 불충분함 때문에 가치에서 구체적 정책 선호를 직접적으로 도출하지 못한다. 대신 가치는 구체적 맥락에서 사회적 규범과 태도를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가치는 직접적으로 정치적 맥락과 연결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중시하는 가치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을까? 대학생을 대상으로 Schwartz의 10개 보편적 가치와 북한문제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결과 보편주의 가치관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와 가장 관련이 높았다. 보편주의 가치지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북한 사람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정책 및 통일 준비 정책에 긍정적이었다. 반면 권력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교류협력에 부정적이었다.³⁹⁾ 가치-태도-행동(value-attitude-behavior) 모형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한 연구에서는 안전, 동조, 박애, 보편주의, 성취, 권력의 가치가 북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에 대한 태도가 선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또한 상위범주화한 자기초월가치, 자기고양가치는 대북압박정책, 대북유화정책,

39) 김혜숙,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6권 1호 (2002), p. 43.

40) 김현정·박상희·박영옥, “유권자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에 관한 경로모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9권 4호 (2015), p. 124.

통일지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도 보고되었다.⁴¹⁾

본 연구에서는 Schwartz의 기본가치 단축판 척도를 사용하여 10개 가치가 인생의 지침, 삶의 원칙으로서 중요성을 9점 척도(-1점: 나의 지침과 원칙에 반대, 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3점: 중요함, 7점: 전적으로 중요함)상에서 측정하였다.⁴²⁾

- 1) 권력(사회적 힘, 권위, 경제적 부)
- 2) 성취(성공, 유능, 야심, 사람과 사건(일)에 대한 영향력)
- 3) 쾌락(욕구의 만족, 즐거운 삶을 추구, 방종)
- 4) 자극(대범함, 다양한 삶, 도전하는 사람, 흥분되는 삶)
- 5) 자율(창의성, 자유, 호기심, 독립심,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결정)
- 6) 보편주의(편견이 없는, 자연과 예술의 존중, 사회적 정의, 평화로운 세상, 평등, 지혜, 자연과의 조화, 환경보호)
- 7) 박애(도움이 되는, 정직함, 용서, 충실함, 책임감)
- 8) 전통(전통에 대한 존중, 겸손함, 헌신, 겸양, 자신의 지위에 만족(안분지족))
- 9) 동조(복종, 부모와 연장자에 대한 존경, 자기수양, 공손함과 정중함)
- 10) 안전(국가안보, 가정의 안전, 사회적 질서, 단정함, 호의에 대한 보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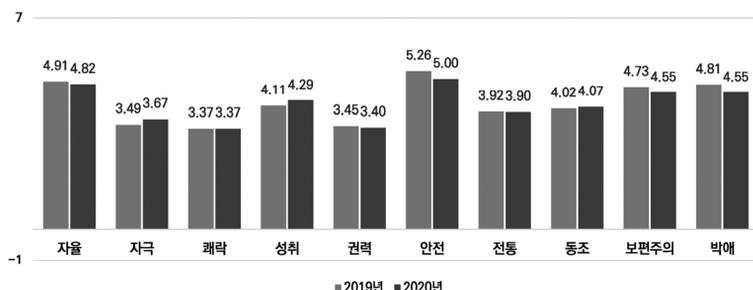
우리 국민은 10개 가치 중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7.5%, 평균은 5.0이었다. 반면 ‘쾌락’과 ‘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각각 43.9%,

41) 윤광일,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의 개인 성향과 가치 기반,” 『국방연구』, 제62권 4호 (2019), p. 54.

42) Marjaana Lindeman and Markku Verkasalo, “Measuring Values with the Short Schwartz’s Value Surve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85, no. 2 (2005), p.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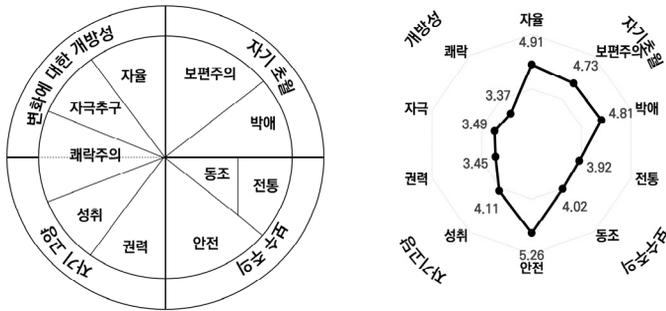
44.6%로 가장 적었다. 전반적으로 2019년의 결과가 유사한 가운데 전년 대비 평균 증가폭이 가장 높은 가치 문항은 ‘자극(대범함, 다양한 삶, 도전하는 사람, 흥분하는 삶)’으로 0.19점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평균 감소폭이 가장 높은 가치 문항은 ‘박애(도움이 되는, 정직함, 용서, 충실함, 책임감)’와 ‘안전(국가안보, 가정의 안전, 사회적 질서, 단정함,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0.26점 감소하였다.

〈그림 II-5〉 보편적 가치의 평균



Schwartz는 10개 가치가 4개 상위 가치로 범주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설명의 간명성을 위해 10개 가치를 범주화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Schwartz의 4개 상위가치의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조망한다면 한국인들은 자기초월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변화에 대한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림 II-6〉 Schwartz의 4개 상위 가치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가치 선호도⁴³⁾



하지만 Schwartz의 4개 상위가치로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0개 가치가 4개 가치로 범주화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지만 본 연구의 10개 가치 조사 결과는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2개 요인에 명백하게 포함되지 않는 가치들이 많아 요인수를 3개, 4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 요인이 가장 적합한 요인구조로 분석되었다. ‘안전’은 ‘자율’, ‘보편주의’, ‘박애’와 범주화되어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14〉에 제시하였다. 한국인의 경우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초월가치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Shalom H. Schwartz,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d. Mark P. Zanna (Orlando, F.L.: Academic Press, 1992), p. 45를 필자가 재구성하였다.

〈표 II-14〉 10개 가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2	공통성
7) 박애(도움이 되는, 정직함, 용서, 충실함, 책임감)	0.79	0.26	-0.60	1.05
5) 자율(창의성, 자유, 호기심, 독립심,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결정)	0.79	0.29	-0.45	0.91
6) 보편주의(편견이 없는, 자연과 예술의 존중, 사회적 정의, 평화로운 세상, 평등, 지혜, 자연과의 조화, 환경보호)	0.73	0.25	-0.50	0.84
3) 쾌락(육구의 만족, 즐거운 삶을 추구, 방종)	0.18	0.72	-0.31	0.65
1) 권력(사회적 힘, 권위, 경제적 부)	0.20	0.70	-0.39	0.68
4) 자극(대범함, 다양한 삶, 도전하는 사람, 흥분되는 삶)	0.44	0.63	-0.44	0.78
2) 성취(성공, 유능, 야심, 사람과 사건에 대한 영향력)	0.54	0.58	-0.55	0.93
9) 동조(복종, 부모와 연장자에 대한 존경, 자기수양, 공손함과 정중함)	0.52	0.40	-0.78	1.03
8) 전통(전통에 대한 존중, 겸손함, 헌신, 겸양, 자신의 지위에 만족(안분지족))	0.45	0.41	-0.73	0.90
아이겐값	3.98	1.44	0.83	
설명변량	44.20	15.00	9.20	
누적변량	44.20	60.20	69.40	
요인명	자기 초월	자기 고양	보수 주의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초월가치, 자기고양가치, 보수주의가치의 평균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15〉에 제시하였다. 자기초월가치, 자기고양가치, 보수주의가치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각각 .81, .76, .73이었다.

박애, 자율, 보편주의로 구성된 자기초월가치의 평균은 4.64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생의 지침, 삶의 원칙으로서 자기초월가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50대와 60대의 자기초월가치지향성이 가장 높았고 20대의 자기초월가치가 가장 낮았다. 50대와 60대의 자기초월가치 평균은 20대의 자기초월가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20대, 30대 남성의 자기

초월가치 중요성이 가장 낮았다. 인생의 지킴, 삶의 원칙으로서 정의, 공정과 관련이 깊은 자기초월가치의 중요성을 20대가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결과는 2030세대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자기초월가치 중요성이 월 소득 300만 원 미만인 집단의 자기초월가치의 중요성보다 높았다. 또한 중도와 보수에 비해 진보의 자기초월가치가 인생의 지킴, 삶의 원칙으로서 자기초월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15〉 3개 상위가치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자기초월	자기고양	보수주의	구분	사례 수	자기초월	자기고양	보수주의	
전체(2020년)	1,600	4.64(0.03)	3.68(0.03)	3.90(0.04)	이념	보수	316	4.60(0.07)	3.75(0.07)	4.00(0.09)
남성	796	4.57(0.05)	3.69(0.04)	3.94(0.06)		중도	743	4.49(0.05)	3.58(0.05)	3.87(0.06)
여성	804	4.70(0.05)	3.68(0.04)	3.85(0.06)		진보	541	4.86(0.05)	3.78(0.06)	3.88(0.08)
20대	278	4.35(0.08)	3.84(0.08)	3.48(0.11)	협력을 통한평화	낮음	407	4.12(0.07)	3.48(0.06)	3.54(0.07)
30대	253	4.53(0.09)	3.79(0.08)	3.70(0.10)		중간	803	4.53(0.04)	3.67(0.04)	3.84(0.06)
40대	314	4.64(0.07)	3.76(0.07)	3.88(0.09)		높음	390	5.39(0.06)	3.93(0.07)	4.39(0.09)
50대	323	4.82(0.07)	3.63(0.07)	4.22(0.08)	군사력을 통한평화	낮음	388	5.04(0.06)	3.43(0.07)	3.60(0.09)
60세+	432	4.75(0.06)	3.50(0.06)	4.05(0.07)		중간	826	4.31(0.04)	3.58(0.04)	3.76(0.05)
남성 20대	146	4.23(0.12)	3.91(0.11)	3.70(0.16)		높음	386	4.92(0.07)	4.15(0.07)	4.50(0.08)
여성 20대	132	4.47(0.12)	3.77(0.12)	3.24(0.16)	통일지향	낮음	335	4.49(0.07)	3.50(0.07)	3.38(0.09)
남성 30대	129	4.27(0.12)	3.78(0.11)	3.53(0.14)		중간	936	4.45(0.04)	3.60(0.04)	3.83(0.05)
여성 30대	124	4.80(0.12)	3.79(0.12)	3.87(0.15)		높음	329	5.33(0.06)	4.10(0.08)	4.61(0.09)
남성 40대	158	4.51(0.11)	3.74(0.09)	3.96(0.12)	분단지향	낮음	306	4.73(0.08)	3.55(0.07)	3.82(0.10)
여성 40대	156	4.78(0.10)	3.77(0.10)	3.81(0.14)		중간	869	4.45(0.04)	3.66(0.04)	3.88(0.05)
남성 50대	165	4.87(0.09)	3.61(0.09)	4.24(0.11)		높음	425	4.94(0.06)	3.81(0.07)	3.98(0.08)
여성 50대	158	4.76(0.11)	3.66(0.10)	4.20(0.13)	관여정책	낮음	369	4.43(0.08)	3.63(0.08)	3.66(0.10)
남성 60대+	198	4.82(0.09)	3.49(0.08)	4.13(0.11)		중간	858	4.47(0.04)	3.52(0.04)	3.74(0.05)
여성 60대+	234	4.68(0.08)	3.51(0.08)	3.99(0.10)		높음	373	5.22(0.06)	4.13(0.07)	4.49(0.09)
~300만 원	375	4.46(0.08)	3.48(0.07)	3.67(0.09)	압박정책	낮음	334	4.54(0.05)	3.48(0.04)	3.68(0.06)
300~500만 원	567	4.60(0.06)	3.65(0.06)	3.83(0.07)		중간	908	4.55(0.06)	3.69(0.05)	3.94(0.07)
500만 원~	658	4.77(0.05)	3.84(0.05)	4.03(0.07)		높음	358	4.95(0.07)	4.08(0.07)	4.27(0.09)

쾌락, 자극, 성취, 권력으로 구성된 자기고양가치의 경우 성별, 연령, 이념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초월가치와 같이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자기고양가치 중요성이 월 소득 300만 원 미만인 집단의 자기고양가치의 중요성보다 높았다.

동조, 전통으로 구성된 보수주의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수주의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강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념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사회적 질서를 중시하고 전통을 존중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치의 측면에서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이념이 가치의 측면보다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일 수 있다.

〈표 II-16〉에 3개 상위가치와 준거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기고양가치와 모든 준거변수들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군사력을 통한 평화($r=0.20$) 및 압박정책($r=0.17$)과의 상관이 다른 준거변수들과의 상관보다 다소 강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자기초월가치의 경우 협력을 통한 평화($r=0.34$)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관여정책 및 통일지향성(각각 $r=0.22$)과 상관이 군사력을 통한 평화, 분단지향성, 압박정책과의 상관보다 다소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수주의 경우 분단지향성($r=0.05$) 외 5개 준거변수와 상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보수주의보다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가 6개 준거변수들에 대해 차별적인 예측이 가능한 가치변수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6〉 3개 상위가치와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자기고양가치	0.14**	0.20**	0.15**	0.10**	0.15**	0.17**
자기초월가치	0.34**	-0.05**	0.22**	0.09**	0.22**	0.10**
보수주의	0.20**	0.18**	0.23**	0.05**	0.19**	0.14**

마.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향성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문화심리학자인 Hofstede는 개인의 불확실성 회피 경향성을 국가 수준의 문화적 차원(cultural dimension) 중 하나로 설명하면서, 어떤 사회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실제 수치로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불확실성 회피 경향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와 불확실한 상황들에 대하여 더 위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고, 낯선 대상이나 남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들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불확실성을 더 참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명확한 구조와 규칙을 선호하며, 권위에 대해 쉽게 수용하는 특성을 보인다.⁴⁴⁾ Hofstede는 불확실성 회피 경향성을 국가 및 사회적 수준의 문화적 특성으로 설명한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피하려는 경향성을 개인의 성격 특질(personality trait)로 설명하였다.⁴⁵⁾ 불확실성 회

44) Geert Hofstede,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1), pp. 145~198.

피경향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들이 제안되고 있으며,⁴⁶⁾ 국내에서는 해외연구자들의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거나 해외 연구자들의 척도를 타당화하는 노력들이 있었다.⁴⁷⁾

불확실성 회피 경향성은 국내 연구에서는 개인의 불확실성 회피 경향성과 정치적 태도 및 지향성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희박하지만,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미 이 관계가 여러 차례 검증되어 왔다. 고전적 연구에 따르면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 부족(identified the intolerance of ambiguity)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격 특성이며,⁴⁸⁾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신에 대한 믿음, 보수주의, 검열에 대한 찬성 등 보수적인 가치의 지지와 관련이 있다.⁴⁹⁾ Jost 등은 메타분석을 통해 불확실성 회피와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정치적 보수주의를 예측하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변화에 대한 저항이 불확실성회

45) Glenn D. Wilson, "A Dynamic Theory of Conservatism," in *The Psychology of Conservatism*, ed. Glenn D. Wilson (London: Academic Press, 1973), pp. 257~265; Gordon Hodson and Richard M. Sorrentino, "Uncertainty Orientation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Structu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33, no. 2 (1999), pp. 253~261.

46) Kristine Buhr and Michael J. Dugas,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glish Ver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vol. 40, no. 8 (2002), pp. 931~945; Nicholas R. Carleton, M. A. Peter J. Norton, and Gordon J. G. Asmundson, "Fearing the Unknown: A Short Version of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vol. 21, no. 1 (2007), pp. 105~117.

47) 이슬, "한국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pp. 63~64; 김순희,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불안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p. 64.

48) Else Frenkel-Brunswik,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n Emotional and Perceptual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vol. 18 (1949), pp. 108~143; Else Frenkel-Brunswik, "Social Tensions and the Inhibition of Thought," *Social Problems*, vol. 2 (1954), pp. 75~81.

49) Stanley Budner, "Intolerance of a Ambiguity as a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vol. 30, no. 1 (1962), pp. 29~50.

피와 보수주의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⁵⁰⁾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성 회피와 성격 5요인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의 부적(-) 관계와도 일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불확실성 회피 경향성은 이민자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도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⁵¹⁾

Kruglanski는 인지적 종결 욕구(Need for cognitive closure)는 일반적으로 “질문에 대해 혼란스럽거나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 욕구”로 정의된다.⁵²⁾ 인지적 종결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 빨리 지식을 습득하고 확실한 의견을 정하기 위해 가장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포착(seizing)’하고, 일단 한 번 의견을 정하면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 동기화된다. 다시 말해, 인지적 종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모호하게 느끼는 상황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답’을 얻고자 동기화되고 이 동기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인지적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답’이란 객관적인 ‘정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가 그 대상/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다. 인지적 종결 욕구는 보통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인차 변인으로 간주되지만, 본연적으로 ‘동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적 압박, 피

50) John T. Jost et al.,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9, no. 3 (2003), pp. 339~375; John T. Jost et al., “Are Needs to Manage Uncertainty and Threat Associated with Political Conservatism or Ideological Extrem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3, no. 7 (2007), pp. 989~1007.

51) Chan-Hoong Leong and Colleen Ward, “Cultural Values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Multiculturalism: The Case of the Eurobarometer Survey on Racism and Xenophob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30, no. 6 (2006), pp. 799~810.

52) Donna M. Webster and Arie W. Kruglanski, “Individual Differences in Need for Cognitive 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6 (1994), p. 1049.

로,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 등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욕구가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도 있다.⁵³⁾ Webster와 Kruglanski 이 처음 제안한 개인의 인지적 종결 욕구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Need for Closure Scale: NFCS)는 다섯 가지의 하위 척도 - 질서와 구조에 대한 선호, 모호함에 대한 정서적 불편함, 의사결정에서의 성급함과 충동성, 안전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욕구, 폐쇄적 사고 (closed-mindedness) - 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4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⁵⁴⁾

인지적 종결욕구 척도를 구성하는 5개 하위 요인들은 모두 정치적 보수성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으며,⁵⁵⁾ 개인의 정치적 보수성과 인지적 종결 욕구 간의 상호작용이 집단 간 갈등과 외집단에 대한 공격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수주의자들은 인지적 종결 욕구가 높을수록 외집단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보주의자들에게서는 인지적 종결 욕구에 따른 외집단에 대한 공격적 행동 선호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⁵⁶⁾ 요컨대 선행 연구들에

53) Arie W. Kruglanski and Donna M. Webster, "Motivated Closing of the Mind: "Seizing" and "Freezing"," *Psychological Review*, vol. 103, no. 2 (1996), pp. 263~283.

54) Arie W. Kruglanski, Donna M. Webster, and Adena Klem, "Motivated Resistance and Openness to Persuasion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ior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5, no. 5 (1993), p. 876; 문항의 수를 줄인 단축형 척도는 David C. Houghton and Rajdeep Grewal, "Please, let's get an answer - any answer: Need for consumer cognitive closure," *Psychology & Marketing*, vol. 17, no. 11 (2000), p. 931; Arne Roets and Alain Van Hiel, "Item Selection and Validation of a Brief, 15-Item Version of the Need for Closure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50, no. 1 (2011), pp. 90~94를 참고하면 된다.

55) John T. Jost et al.,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p. 339~375.

56) Agnieszka Golec de Zavala and Agnieszka Van Bergh, "Need for Cognitive Closure and Conservative Political Beliefs: Differential Mediation by Personal Worldviews," *Political Psychology*, vol. 28, no. 5 (2007), pp. 587~608.

서 보인 것처럼 인지적 종결 욕구와 정치적 보수성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고, 그에 더해 인지적 종결 욕구가 미치는 효과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치적 이념과 인지적인 정보 처리 과정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자극(정보)들을 습득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과제 장면에서, 진보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더 적은 정보를 탐색한 후 의사결정을 내렸고, 긍정적인 자극보다는 부정적인 자극을 더 빨리 습득하는 모습을 보였다.⁵⁷⁾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제로 정치적 지향성과 인지적 종결 욕구 간에 관계가 있으며, 인지적 종결 욕구 수준에 따라 실제로 정보 처리하는 양이나 속도,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인지종결욕구는 6개 문항, 불확실성 회피경향은 4개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⁵⁸⁾ 인지종결욕구는 6점 척도, 불확실성 회피경향은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각각 .77, .78이었다.

[인지종결욕구]

- 1) 나는 불확실한 상황을 싫어한다.
- 2) 나는 행동이 예측 가능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57) Natalie J. Shook and Russell H. Fazio, "Political Ideology, Exploration of Novel Stimuli, and Attitude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5, no. 4 (2009), pp. 995~998.

58) David C. Houghton and Rajdeep Grewal, "Please, let's get an answer - any answer: Need for consumer cognitive closure," p. 931; Jae Min Jung and James J. Kellaris,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Proneness to Scarcity Effects: The Moderating Roles of Familiarity, Uncertainty Avoidance, and Need for Cognitive Closure," *Psychology & Marketing*, vol. 21, no. 9 (2004), p. 747.

- 3) 나는 보통 중요한 결정을 빠르고 확신 있게 내린다.
- 4) 나는 어떤 사람의 말이 여러 가지의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싫어한다.
- 5) 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 즉시 알고 싶다.
- 6) 나는 어떤 일에 대해 일단 결정을 하면 내 의견을 고수하는 편이다.

[불확실성회피경향]

- 1) 나는 결과를 모를 때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 2) 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 3) 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을 때 무리한 수를 두지 않는다.
- 4) 나는 일을 할 때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일을 잘 하지 못한다.

인지종결욕구의 평균은 4.22, 불확실성회피성향의 평균은 4.89로 각 척도의 중앙치 3.5점, 4점보다 높았다. 한국인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지종결욕구를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월 소득이 증가할수록 인지종결욕구가 강했으며 중도에 비해 보수가 인지종결욕구가 강했다. 진보와 중도, 진보와 보수의 인지종결욕구는 차이가 없었다. 불확실성 회피경향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불확실성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이념,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인지종결욕구와 및 불확실성 회피경향 모두 6개 변수들과 정적 상관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상대적으로 인지종결욕구와 6개 준거변수의 상관성이 불확실성 회피경향과 6개 준거변수와 상관보다 더 강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인지종결욕구 및 불확실성 회피

경향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준거변수는 압박정책이었다(인지종결욕구: $r=0.23$, 불확실성 회피경향: $r=0.20$). 확실한 상황을 선호하는 개인이 북한에 대해 공격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결과는 인지종결욕구가 강한 사람이 외집단에 대해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부합한다. 하지만 인지종결욕구가 강한 개인이 협력을 통한 평화를 원하면서 압박정책을 지지한다는 점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표 II-17〉 인지종결욕구와 불확실성회피경향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인지종결욕구	불확실성 회피경향	구분	사례 수	인지종결욕구	불확실성 회피경향	
전체(2020년)	1,600	4.22(0.02)	4.89(0.02)	이념	보수	316	4.31(0.04)	4.96(0.05)
남성	796	4.23(0.02)	4.77(0.03)		중도	743	4.15(0.02)	4.85(0.03)
여성	804	4.21(0.02)	5.01(0.03)		진보	541	4.26(0.03)	4.91(0.04)
20대	278	4.12(0.05)	4.89(0.06)	협력을 통한평화	낮음	407	4.07(0.04)	4.73(0.05)
30대	253	4.18(0.04)	4.93(0.06)		중간	803	4.18(0.02)	4.88(0.03)
40대	314	4.18(0.03)	4.95(0.05)		높음	390	4.46(0.04)	5.09(0.05)
50대	323	4.33(0.04)	4.91(0.05)	군사력을 통한평화	낮음	388	4.17(0.03)	4.86(0.05)
60세+	432	4.25(0.03)	4.82(0.04)		중간	826	4.11(0.02)	4.79(0.03)
남성 20대	146	4.17(0.06)	4.82(0.09)		높음	386	4.49(0.04)	5.15(0.05)
여성 20대	132	4.13(0.06)	4.79(0.09)	통일지향	낮음	335	4.21(0.04)	4.91(0.06)
남성 30대	129	4.16(0.05)	4.82(0.06)		중간	936	4.13(0.02)	4.81(0.03)
여성 30대	124	4.32(0.05)	4.75(0.07)		높음	329	4.48(0.04)	5.11(0.05)
남성 40대	158	4.33(0.05)	4.71(0.06)	분단지향	낮음	306	4.19(0.04)	4.80(0.06)
여성 40대	156	4.07(0.07)	4.96(0.09)		중간	869	4.16(0.02)	4.84(0.03)
남성 50대	165	4.22(0.07)	5.08(0.08)		높음	425	4.36(0.03)	5.06(0.05)
여성 50대	158	4.20(0.04)	5.08(0.07)	관여정책	낮음	369	4.15(0.04)	4.81(0.05)
남성 60대+	198	4.33(0.05)	5.06(0.07)		중간	858	4.15(0.02)	4.84(0.03)
여성 60대+	234	4.19(0.04)	4.91(0.05)		높음	373	4.45(0.04)	5.08(0.05)
~300만 원	375	4.06(0.04)	4.80(0.05)	압박정책	낮음	334	4.08(0.04)	4.68(0.05)
300~500만 원	567	4.21(0.03)	4.88(0.04)		중간	908	4.16(0.02)	4.87(0.03)
500만 원~	658	4.32(0.03)	4.96(0.04)		높음	358	4.50(0.04)	5.16(0.05)

〈표 II-18〉 인지종결욕구 및 불확실성회피경향과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인지종결욕구	0.21**	0.16**	0.11**	0.09**	0.15**	0.23**
불확실성회피	0.14**	0.10**	0.06**	0.11**	0.11**	0.20**

바. 현재지향성과 미래지향성

시간 조망(time perspective)은 개인이 특정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시간적 틀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⁵⁹⁾ 시간 조망은 상황적으로도 유발이 가능하지만(예를 들어, 과거의 한 시점에 대해 생각하게 하거나 미래의 시점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개인차 변수로서 취급할 때에는 특정한 시간 조망에 대한 개인의 선호 및 지향성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미래지향성은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인지),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선호하고(태도), 장기적인 목표에 의해 더 강한 동기가 유발되는(동기) 개인의 특성을 의미한다.

미래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위험 감수 행동을 덜 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미래지향성이 높을수록 학업에 더 열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⁶⁰⁾ 이와 일관된 맥락에서, 현재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미래지향성인 사람들에 비해 위

59) Philip G. Zimbardo and John N. Boyd,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Differences Metr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7, no. 6 (1999), pp. 1271~1288.

60) Louise Horstmanshof and Craig Zimitat, "Future Time Orientation Predicts Academic Engagement among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7, no. 3 (2007), pp. 703~718.

험 운전과 같은 위험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¹⁾ 이 연구에서는 시간 조망과 성별의 관계도 나타났는데,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더 현재지향성이 높은 반면, 여성들은 미래지향성이 높았다. 또한 연령에 따라 시간 조망이 다르며 청소년들에 비해 나이가 더 많은 참가자들은 미래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은 미래에 얻게 될 큰 보상보다는 당장 얻을 수 있는 작은 보상을 더 선호하는 반응을 보였다.⁶²⁾

미래지향성과 정치적 태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는 없으나, 미래지향성이 조절초점을 매개로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⁶³⁾ 현재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예방 초점이 강한 반면, 미래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향상초점을 더 강하게 갖고, 그 결과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운동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거와 함께 조절초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하면, 미래지향성과 정치적 태도 역시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미래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향상초점이 더 높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성 척도 14(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14) 중 현재지향성을 측정하는 4개 문항, 미래지향성을 측정하는 4개 문항을 선택, 7점 척도(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7점: 전적으로 동의함)로 측정하였다.⁶⁴⁾

61) Philip G. Zimbardo, Kelli A. Keough and John N. Boyd, "Present Time Perspective as a Predictor of Risky Driving," *Personality Individual Differences*, vol. 23, no. 6 (1997), pp. 1007~1023.

62) Laurence Steinberg et al., "Age Differences in Future Orientation and Delay Discounting," *Child Development*, vol. 80, no. 1 (2009), pp. 28~44.

63) Jeff Joireman et al., "Promotion Orientation Explains Why Future-Oriented People Exercise and Eat Healthy: Evidence from the Two-Factor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14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8, no. 10 (2012), pp. 1272~1287.

[현재지향성]

- 1) 나는 미래의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면한 현재의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행동한다.
- 2) 나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문제들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다.
- 3) 미래의 결과들은 나중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4) 미래의 문제들은 나중에 수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의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행동한다.

[미래지향성]

- 5) 나는 보통 달성하는 데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미래의 성과를 얻기 위해 행동에 착수한다.
- 6) 나는 미래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행복이나 웰빙을 기꺼이 희생할 의향이 있다.
- 7) 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몇 년 동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경고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8)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이 결정이 미래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한다.

미래지향성의 평균은 4.78점으로 2019년(4.80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현재지향성의 평균은 3.98로 2018년 대비 0.28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같이 한국인들은 현재지향성보다 미래지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래지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에 따른 미래지향성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월소득이 높을수록 미래지향성은 강했고, 보수와 진보가 중도에 비해

64) *Ibid.*, p. 1284.

미래지향성이 강했다. 현재지향성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현재지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월 소득, 이념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미래지향성 및 현재지향성과 준거변수들 간 상관은 <표 II-19>에 제시하였다. 미래지향성은 모든 준거변수들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협력을 통한 평화($r=0.29$), 통일지향성($r=0.23$) 및 관여정책($r=0.21$)과 상관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현재지향성 역시 협력을 통한 평화를 제외한 5개 준거변수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가운데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과 상대적으로 강한 상관관계($r=0.27$)를 보이고 있다. 미래지향성이 협력을 통한 평화와 정적인 관계, 현재지향성이 군사력을 통한 평화와 정적인 관계인 점은 미래지향성과 현재지향성의 차이와 6개 준거변수들 간의 상관에서 명확해진다. 미래지향성이 강할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와 정적인 상관($r=0.16$), 미래지향성이 약할수록, 다시 말해 현재지향성이 강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선호는 증가하였다(미래지향성-현재지향성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의 상관: -0.12).

<표 II-19> 미래지향 및 현재지향과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입박정책
미래지향	0.29**	0.18**	0.23**	0.09**	0.21**	0.15**
현재지향	0.03	0.27**	0.14**	0.09**	0.17**	0.06**
미래지향-현재지향	0.16**	-0.12**	0.03*	-0.03*	-0.01**	0.05*

〈표 II-20〉 현재지향성과 미래지향성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현재지향성	미래지향성	구분	사례 수	현재지향성	미래지향성	
2019년	1,000	3.70(0.04)	4.80(0.04)	이념	보수	316	3.85(0.07)	4.83(0.05)
전체(2020년)	1,600	3.98(0.03)	4.78(0.02)		중도	743	4.02(0.04)	4.70(0.03)
남성	796	4.03(0.04)	4.78(0.03)		진보	541	4.00(0.05)	4.88(0.03)
여성	804	3.93(0.04)	4.79(0.03)	협력을 통한평화	낮음	407	3.91(0.05)	4.55(0.04)
20대	278	4.17(0.07)	4.73(0.06)		중간	803	4.04(0.04)	4.69(0.02)
30대	253	3.99(0.07)	4.72(0.05)		높음	390	3.93(0.07)	5.22(0.04)
40대	314	3.95(0.06)	4.74(0.04)	군사력을 통한평화	낮음	388	3.49(0.05)	4.72(0.04)
50대	323	3.97(0.06)	4.84(0.04)		중간	826	4.04(0.03)	4.65(0.02)
60세+	432	3.88(0.05)	4.85(0.04)		높음	386	4.34(0.07)	5.13(0.04)
남성 20대	146	4.39(0.10)	4.73(0.08)	통일지향	낮음	335	3.71(0.06)	4.64(0.04)
여성 20대	132	4.04(0.09)	4.70(0.06)		중간	936	4.00(0.03)	4.69(0.02)
남성 30대	129	3.98(0.08)	4.71(0.06)		높음	329	4.19(0.08)	5.18(0.05)
여성 30대	124	3.92(0.08)	4.83(0.05)	분단지향	낮음	306	3.67(0.06)	4.77(0.05)
남성 40대	158	3.9(0.08)	4.86(0.06)		중간	869	4.07(0.03)	4.72(0.02)
여성 40대	156	3.92(0.10)	4.72(0.08)		높음	425	4.01(0.06)	4.93(0.04)
남성 50대	165	3.93(0.10)	4.73(0.08)	관여정책	낮음	369	3.81(0.06)	4.64(0.04)
여성 50대	158	3.91(0.09)	4.77(0.06)		중간	858	3.89(0.03)	4.70(0.02)
남성 60대+	198	4.02(0.09)	4.84(0.07)		높음	373	4.35(0.07)	5.12(0.04)
여성 60대+	234	3.87(0.07)	4.85(0.05)	입박정책	낮음	334	3.82(0.06)	4.74(0.04)
~300만 원	375	3.87(0.05)	4.62(0.04)		중간	908	4.01(0.03)	4.70(0.02)
300~500만 원	567	4.00(0.05)	4.76(0.03)		높음	358	4.05(0.07)	5.04(0.05)
500만 원~	658	4.02(0.05)	4.90(0.03)					

사. 개인주의-집단주의

개인주의-집단주의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문화적 지향성으로 정의된다. 개인주의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의 관계가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개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집단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둔 세계관으로 개인주의적 개인의 행복, 개인의 목표, 개인의 독특성, 개인의 통제력을 집단의 행복, 집단의 목표, 집단의 독특성, 집단의 통제력보다 우선한다. 반면 집단주의는 개인과

집단은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각각 상호 의존적인 의무가 있다고 가정한다. 집단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집단의 행복보다 목표를 우선하며, 특히 개인의 가치관보다 집단의 규범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⁶⁵⁾ 한반도 문제는 한국과 북한, 민족 등 공동체, 즉 집단 수준의 담론이 우세하였다. 예를 들어 통일의 명분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일민족 담론은 집단주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단일민족 통일담론이 유효한지, 특히 젊은 세대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논거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개인주의 세계관과의 충돌에 근거하고 있다. 과연 개인주의 세계관이 우세한 국민과 집단주의 세계관이 우세한 국민이 한반도 문제의 인식에 차이를 보일 것인가?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지향성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치지향성(value orientation)과 자기개념(self-concept)을 측정하였다. 가치지향성은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이익을 중시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본 조사에서 가치지향성은 개인목표 대 집단목표 우선성과 경쟁 대 협동지향성을 측정하는 두 문항(3점 척도, 1점: 다소 동의, 3점: 매우 동의)으로 측정하였다. 두 문항에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은 <그림 II-7>에 제시하였다.

<가치지향성>

1) 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상충하면

집단주의: 집단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개인주의: 개인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65) Daphna Oyserman, Heather M. Coon, and Markus Kimmelmeier,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8, no. 1 (2002), pp.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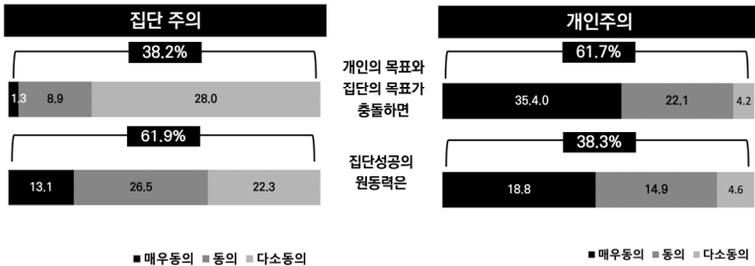
2) 집단 성공의 원동력은

집단주의: 구성원 간 협동이다.

개인주의: 구성원 간 경쟁이다.

가치지향성을 묻는 두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응답자의 61.7%는 개인의 목표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개인주의적 가치지향성을 보인 것이다. 반면 집단 성공 원동력을 묻는 질문에는 집단주의적 가치지향성을 보였다. 응답자의 61.9%가 집단 성공의 원동력으로 협동을 꼽은 것이다.

<그림 II-7> 가치지향성 문항에서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 성향의 비율



자기개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할 때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중시하는지, 주변 맥락에 관계없이 자신을 일관되게 나타내는데 대한 것이다. 본 조사에서 자기개념은 아래 두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기개념을 측정하는 두 문항에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은 <그림 II-8>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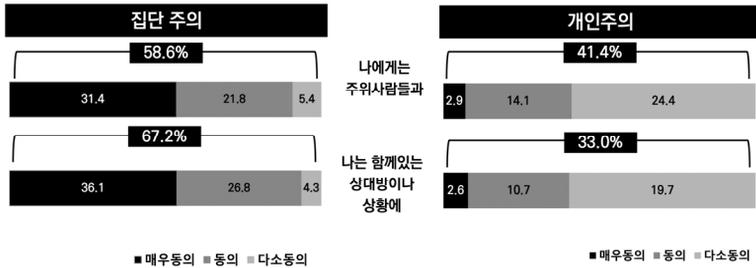
1) 나에게는 주위사람들과

집단주의: 공유하는 특질이 중요하다.

개인주의: 구별되는 나만의 특질이 중요하다.

- 2) 나는 함께 있는 상대방이나 상황에
 집단주의: 따라 종종 다르게 행동한다.
 개인주의: 상관없이 일관되게 행동한다.

〈그림 11-8〉 자기개념 문항에서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 성향의 비율



자기개념의 경우 응답자들은 집단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응답자의 58.6%가 주위사람들과 공유되는 특질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67.2%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생각할 때, 즉 자기개념에 있어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반면, 가치에 있어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혼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가치지향성을 측정하는 두 문항의 평균과 자기개념을 측정하는 두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표 11-21>에 제시하였다. 음수는 집단주의 성향, 양수는 개인주의 성향을 의미한다. 집단주의 성향의 범위는 -3에서 0으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며 개인주의 성향의 범위는 0에서 3이다. 역시 절대 값이 커질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지향성의 평균은 -0.05, 자기개념의 평균은 -0.42로 자기개념을 생각할 때 가치지향성을 생각할 때보다 집단주의적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집단주의적 자기 개념이 강했다. 연령,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자기개념의 경우 성별, 연령,

월 소득, 이념의 차이는 없었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의 집단주의는 인구 통계적 변수의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가치지향성	자기개념	구분	사례 수	가치지향성	자기개념	
2019년	1,000	-0.54(0.04)	-0.33(0.04)	이념	보수	316	-0.10(0.08)	-0.36(0.07)
전체(2020년)	1,600	-0.05(0.03)	-0.42(0.03)		중도	743	-0.02(0.05)	-0.37(0.04)
남성	796	0.00(0.05)	-0.37(0.04)		진보	541	-0.05(0.06)	-0.51(0.05)
여성	804	-0.10(0.05)	-0.47(0.04)	협력을 통한평화	낮음	407	0.08(0.06)	-0.29(0.05)
20대	278	0.15(0.09)	-0.45(0.07)		중간	803	0.00(0.05)	-0.48(0.04)
30대	253	-0.13(0.09)	-0.43(0.08)		높음	390	-0.28(0.08)	-0.44(0.07)
40대	314	-0.02(0.07)	-0.39(0.07)	군사력을 통한평화	낮음	388	-0.60(0.06)	-0.27(0.06)
50대	323	0.00(0.08)	-0.50(0.06)		중간	826	0.04(0.05)	-0.39(0.04)
60세+	432	-0.18(0.07)	-0.35(0.06)		높음	386	0.31(0.08)	-0.63(0.07)
남성 20대	146	0.37(0.11)	-0.48(0.10)	통일지향	낮음	335	-0.25(0.07)	-0.31(0.06)
여성 20대	132	-0.10(0.12)	-0.42(0.11)		중간	936	0.02(0.04)	-0.39(0.04)
남성 30대	129	-0.10(0.12)	-0.24(0.10)		높음	329	-0.04(0.09)	-0.59(0.07)
여성 30대	124	-0.17(0.13)	-0.62(0.12)	분단지향	낮음	306	-0.34(0.08)	-0.39(0.07)
남성 40대	158	0.06(0.11)	-0.33(0.10)		중간	869	0.05(0.04)	-0.39(0.04)
여성 40대	156	-0.10(0.10)	-0.46(0.09)		높음	425	-0.05(0.07)	-0.49(0.06)
남성 50대	165	-0.04(0.11)	-0.45(0.09)	관여정책	낮음	369	-0.16(0.08)	-0.21(0.07)
여성 50대	158	0.04(0.12)	-0.56(0.09)		중간	858	-0.08(0.04)	-0.39(0.04)
남성 60대+	198	-0.21(0.11)	-0.34(0.09)		높음	373	0.13(0.08)	-0.67(0.07)
여성 60대+	234	-0.16(0.09)	-0.35(0.07)	압박정책	낮음	334	-0.07(0.05)	-0.35(0.04)
~300만 원	375	-0.13(0.07)	-0.46(0.06)		중간	908	-0.06(0.06)	-0.49(0.05)
300~500만 원	567	-0.01(0.06)	-0.39(0.05)		높음	358	0.02(0.09)	-0.45(0.07)
500만 원~	658	-0.02(0.06)	-0.44(0.05)					

전반적으로 집단주의-개인주의와 준거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II-22〉). 가치의 측면에 개인주의적일수록, 그리고 자기 개념의 측면에서 개인주의적일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지지가 약해지는 결과(상관은 각각 $r=-0.09$, $r=-0.05$), 그리고 두 가치관이 압박정책과 상관이 없다는 결과는 공통적이었다.

나머지 4개 변수에 대해서는 두 가치관과 준거변수의 상관의 방향이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가치관의 측면에서 개인주의적일수록 분단지향성과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는 반면(상관은 각각 $r=0.05$, $r=0.09$), 자기 개념의 측면에서 개인주의적일수록 분단지향성과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는 관계(상관은 각각 $r=-0.06$, $r=-0.13$)가 관찰되었다. 비록 상관의 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집단의 이익의 관점에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자신을 규정하는 관점에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표 II-22〉 집단주의-개인주의와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개인주의_가치	-0.09**	0.22**	0.05*	0.05**	0.09**	0.03**
개인주의_자기	-0.05**	-0.09**	-0.09**	-0.06**	-0.13**	-0.04**

아. 도덕기반

최근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갈등을 이념의 문제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옳음과 그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⁶⁶⁾ 개인은 개인과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도덕적인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Haidt는 도덕을 개인의 이기심을 통제하고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가치, 관습,

66) Nicholas Emler, "Morality and Political Orientations: An Analysis of Their Relationship,"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3, no. 1 (2003), pp. 259~291; 이 관점에 대한 개관은 조지 레이코프 지음, 유나영 옮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서울: 삼인, 2006); 토마스 프랭크 지음, 김병순 옮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서울: 갈라파고스, 2012)를 참고하면 된다.

제도 및 심리적 기제의 집합으로 정의했다. Haidt는 도덕적 체계는 생득적이며 문화 보편적인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도덕기반 이론(moral foundation theory)을 제안하였다. Haidt는 도덕체계를 구성하는 5가지 도덕기반으로 (가) 돌봄과 위해(care/harm, 이하 ‘돌봄’), (나) 공정과 부정(fairness/cheating, 이하 ‘공정’), (다) 충성과 배신(loyalty/betrayal, 이하 ‘충성’), (라) 권위와 전복(authority/subversion, 이하 ‘권위’), (마) 순수함과 비속함(sanctity/degradation, 이하 ‘순수’)을 제시하였다.⁶⁷⁾

Haidt는 도덕성의 근간인 이기심을 억제하는 두 유형의 문화보편적인 방식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개인의 인식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타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이기심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기심을 억제하는 또 다른 문화공통적인 방식은 개인을 공동체로 묶는 방식으로 개인에게 공동체의 다양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불완전한 본성(이기심)을 통제하는 것이다. Haidt는 돌봄과 공정은 도덕성의 통제기반이 개인에게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 중시 도덕기반이라 부르고, 나머지 3가지 도덕기반인 충성, 권위, 순수는 도덕성의 통제기반이 집단에게 있다는 측면에서 결속 중시 도덕기반으로 분류하였다.⁶⁸⁾

Haidt는 소위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 도덕판단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진보주의자는 돌봄과 공정의 도덕

67) Jesse Graham, Jonathan Haidt, and Brian A. Nosek,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6, no. 5 (2009), pp. 1029~1046; Jonathan Haidt and Jesse Graham, “When Morality Opposes Justice: Conservatives Have Moral Intuitions That Liberals May Not Recognize,” *Social Justice Research*, vol. 20, no. 1 (2007), pp. 98~116.

68) Jesse Graham, Jonathan Haidt, and Brian A. Nosek, *Ibid.*, pp. 1030~1031.

적 기반을 주로 활용하는 반면 보수주의자는 5가지 도덕기반을 모두 활용한다는 것이다.⁶⁹⁾ 이 관점에서 보면, 최근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갈등, 특히 남남갈등은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피상적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이념이속에 내재되어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 차이, 즉 도덕적 가치와 신념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도덕기반이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도덕가치가 중요한지 살펴보았다. 도덕기반을 측정하는 문항은 크게 도덕 관련성과 도덕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단축판 척도를 사용하여 도덕기반을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⁷⁰⁾

[도덕관련성]

돌봄

- 1) 그 일(생각, 행동, 사람)과 관련해 어떤 사람이 감정적·정서적으로 상처받았는지 여부
- 6) 그 일(생각, 행동, 사람)이 약하거나 다치기 쉬운 사회적 약자를 돌보았는지 여부

공정

- 2) 그 일(생각, 행동, 사람)과 관련해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는지(차별받았는지) 여부
- 7) 그 일(생각, 행동, 사람)이 불공정하게 행동했는지 여부

충성

- 3) 그 일(생각, 행동, 사람)이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보였는지 여부
- 8) 그 일(생각, 행동, 사람)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배신하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

69) *Ibid.*, p. 1033.

70) Jesse Graham et al., "Mapping the Mor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1, no. 2 (2011), p. 385.

권위

- 4) 그 일(생각, 행동, 사람)이 권위를 존중했는지 여부
- 9) 그 일(생각, 행동, 사람)이 사회의 전통을 준수했는지 여부

순수

- 5) 그 일(생각, 행동, 사람)이 순수성(순결)과 점잖음(품위)의 규범을 위반했는지 여부
- 10) 그 일(생각, 행동, 사람)이 역겨운 행동, 생각을 했는지 여부

[도덕판단]

들봄

- 1)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 6) 방어능력이 없는 동물을 해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위 중 하나이다.

공정

- 2) 정부가 법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원칙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 7) 정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이다.

충성

- 3)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자랑스롭다.
- 8) 비록 가족들이 나쁜 짓을 했더라도 사람들은 자기 가족에게 충실해야 한다.

권위

- 4) 모든 어린이는 권위에 대한 존중을 배워야 한다.
- 9) 남자와 여자는 사회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

순수

- 5) 비록 피해를 입는 사람이 전혀 없을지라도 사람은 역겨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 10) 어떤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고 비정상적이라면, 나는 그것을 잘못된 행위라고 부를 수 있다.

도덕관련성의 평균은 <표 II-26>에, 도덕판단의 평균은 <표 II-27>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관련성과 도덕판단을 종합한 도덕기반 점수(<표 II-28>)를 토대로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5개 도덕기반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5개 도덕기반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5개 도덕기반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 그리고 준거변수와의 관계 중에서 특징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돌봄의 평균은 4.40, 공정의 평균은 4.68, 충성의 평균은 3.94, 권위의 평균은 3.90, 순수의 평균은 4.42였다. 한국인들은 5개 도덕기반 중 공정을 가장 중시하였고, 돌봄과 순수, 충성과 권위의 순으로 중시하였다.

돌봄과 순수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이 높았다. 반면 권위는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이 높았다. 공정과 충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돌봄과 충성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공정, 권위, 순수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해당 도덕기반의 중요성도 상승하였다. 기성세대가 20대에 비해 공정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결과는 자기초월가치에 대한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5개 도덕기반 전체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충성의 도덕기반에 있어 이념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충성은 보수가 진보와 중도에 비해 중시하는 도덕가치였으며 돌봄은 진보가 보수와 중도에 비해 중시하는 가치였다. 순수는 진보, 보수가 모두 중시하는 가치로 분석되었다.

도덕관련성 및 도덕판단과 준거변수들 간 상관의 패턴은 도덕관련성과 도덕판단을 합친 도덕기반과 준거변수들 간 상관의 패턴과 유사하기 때문에 도덕기반과 준거변수들 간 상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도 무방할 것이다. 먼저 돌봄의 도덕기반과 공정의 도덕기반은

협력을 통한 평화 및 관여정책과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집단의 가치와 이익보다는 개인의 권리 및 안녕을 중시하는 개인 중시 도덕기반인 돌봄과 공정의 도덕기반이 협력을 통한 평화와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중시 도덕기반을 중시하는 것이 진보집단의 특징이라는 점에서는 협력을 통한 평화 및 관여정책과의 뚜렷한 상관성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개인주의가 강할수록 북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며 압박정책을 선호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는 배치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술한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선호하는 개인주의 가치가 높을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선호한다는 결과와도 충돌된다.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 지향성과 옹고그름에 대한 도덕적 지향성이 외교정책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결속중시 도덕기반을 살펴보면 충성의 도덕기반은 6개 준거변수 중 통일지향성과 가장 강한 상관을 보였으며, 권위의 도덕기반은 6개 준거변수 중 군사력을 통한 평화 및 압박정책, 순수의 도덕기반은 6개 준거변수 중 협력을 통한 평화와 상대적으로 강한 상관을 보였다. 보수집단이 진보집단에 비해 결속중시 도덕기반을 더 많이 활용한다는 해외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간접적 지표인 6개 준거변수들에 대해 5개 도덕기반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서구의 연구들이 예측하는 도덕기반의 영향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표 II-23〉 5개 도덕기반의 도덕관련성과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도덕관련성_돌봄	0.28**	0.01**	0.19**	0.09**	0.25**	0.10**
도덕관련성_공정	0.27**	-0.03**	0.11**	0.10**	0.20**	0.15**
도덕관련성_총성	0.21**	0.18**	0.24**	0.06*	0.21**	0.18**
도덕관련성_권위	0.09**	0.23**	0.18**	0.04*	0.17**	0.13**
도덕관련성_순수	0.19**	0.10**	0.15**	0.07**	0.19**	0.15**

〈표 II-24〉 5개 도덕기반의 도덕판단과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도덕판단성_돌봄	0.33**	0.04	0.16**	0.10**	0.22**	0.10**
도덕판단성_공정	0.35**	-0.09**	0.16**	0.12**	0.18**	0.14**
도덕판단성_총성	0.21**	0.19**	0.23**	0.00	0.20**	0.09**
도덕판단성_권위	0.03	0.30**	0.10**	0.06**	0.10**	0.25**
도덕판단성_순수	0.27**	0.03	0.12**	0.08**	0.18**	0.16**

〈표 II-25〉 5개 도덕기반과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도덕기반_돌봄	0.33**	-0.04*	0.16**	0.10**	0.22**	0.10**
도덕기반_공정	0.35**	-0.09**	0.16**	0.12**	0.18**	0.14**
도덕기반_총성	0.21**	0.19**	0.23**	0.00	0.20**	0.09**
도덕기반_권위	0.03*	0.30**	0.10**	0.06*	0.10**	0.25**
도덕기반_순수	0.27**	0.03*	0.12**	0.08**	0.18**	0.16**

〈표 11-26〉 도덕관련성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단위: 명, %, 점)		사례 수	돌봄	공정	충성	권위	순수
전체(2020년)		1,600	4.19(0.02)	4.29(0.02)	4.02(0.02)	3.75(0.02)	4.09(0.02)
성별	남성	796	4.12(0.03)	4.23(0.03)	4.02(0.03)	3.74(0.03)	4.02(0.03)
	여성	804	4.26(0.03)	4.35(0.03)	4.02(0.03)	3.76(0.03)	4.15(0.03)
연령	20대	278	4.16(0.06)	4.27(0.05)	3.84(0.06)	3.74(0.06)	4.07(0.06)
	30대	253	4.07(0.05)	4.19(0.05)	3.89(0.05)	3.72(0.06)	3.99(0.05)
	40대	314	4.14(0.04)	4.29(0.04)	4.00(0.05)	3.67(0.05)	4.06(0.04)
	50대	323	4.26(0.04)	4.35(0.04)	4.15(0.04)	3.84(0.05)	4.21(0.05)
	60세+	432	4.27(0.04)	4.30(0.04)	4.12(0.04)	3.77(0.04)	4.08(0.04)
연령 by 성별	남성 20대	146	4.06(0.08)	4.11(0.08)	3.87(0.08)	3.81(0.09)	3.98(0.08)
	여성 20대	132	4.28(0.08)	4.44(0.07)	3.81(0.08)	3.66(0.09)	4.18(0.08)
	남성 30대	129	3.94(0.07)	4.07(0.07)	3.78(0.08)	3.65(0.08)	3.89(0.07)
	여성 30대	124	4.19(0.08)	4.32(0.07)	4.00(0.07)	3.80(0.09)	4.09(0.08)
	남성 40대	158	4.09(0.06)	4.28(0.06)	4.04(0.06)	3.69(0.07)	4.03(0.06)
	여성 40대	156	4.18(0.06)	4.30(0.05)	3.96(0.07)	3.64(0.08)	4.10(0.06)
	남성 50대	165	4.20(0.05)	4.29(0.06)	4.15(0.06)	3.78(0.07)	4.11(0.06)
	여성 50대	158	4.31(0.07)	4.41(0.07)	4.15(0.06)	3.91(0.07)	4.31(0.06)
월 소득	남성 60대+	198	4.22(0.06)	4.31(0.06)	4.15(0.06)	3.75(0.06)	4.04(0.06)
	여성 60대+	234	4.32(0.05)	4.30(0.05)	4.10(0.05)	3.78(0.06)	4.11(0.05)
이념	~300만 원	375	4.10(0.05)	4.15(0.05)	3.85(0.05)	3.64(0.05)	3.96(0.05)
	300~500만 원	567	4.15(0.03)	4.26(0.03)	4.00(0.04)	3.69(0.04)	4.07(0.04)
	500만 원~	658	4.28(0.03)	4.39(0.03)	4.13(0.03)	3.86(0.04)	4.18(0.03)
이념	보수	316	4.14(0.05)	4.27(0.04)	4.07(0.05)	3.75(0.05)	4.07(0.05)
	중도	743	4.14(0.03)	4.24(0.03)	3.97(0.03)	3.75(0.03)	4.06(0.03)
	진보	541	4.29(0.04)	4.36(0.03)	4.05(0.04)	3.75(0.04)	4.13(0.04)
협력 통한 평화	낮음	407	3.92(0.04)	4.06(0.04)	3.81(0.04)	3.69(0.04)	3.94(0.04)
	중간	803	4.15(0.03)	4.23(0.03)	3.98(0.03)	3.72(0.03)	4.03(0.03)
	높음	390	4.56(0.04)	4.64(0.04)	4.31(0.05)	3.88(0.06)	4.36(0.04)
군사력 통한 평화	낮음	388	4.32(0.04)	4.47(0.04)	3.88(0.04)	3.47(0.05)	4.07(0.05)
	중간	826	4.03(0.03)	4.12(0.03)	3.92(0.03)	3.71(0.03)	3.97(0.03)
	높음	386	4.40(0.04)	4.47(0.04)	4.37(0.05)	4.13(0.05)	4.36(0.04)
통일지향	낮음	335	4.08(0.05)	4.33(0.05)	3.82(0.05)	3.50(0.05)	3.99(0.05)
	중간	936	4.11(0.02)	4.17(0.02)	3.97(0.02)	3.75(0.03)	4.01(0.02)
	높음	329	4.53(0.04)	4.59(0.04)	4.37(0.05)	4.01(0.06)	4.41(0.05)
분단지향	낮음	306	4.17(0.05)	4.29(0.05)	3.98(0.05)	3.66(0.05)	4.06(0.05)
	중간	869	4.13(0.03)	4.21(0.03)	3.99(0.03)	3.78(0.03)	4.03(0.03)
	높음	425	4.33(0.04)	4.45(0.04)	4.11(0.05)	3.76(0.05)	4.22(0.04)
관여정책	낮음	369	3.98(0.05)	4.15(0.05)	3.86(0.05)	3.63(0.05)	3.97(0.05)
	중간	858	4.13(0.03)	4.21(0.02)	3.93(0.03)	3.68(0.03)	4.01(0.02)
	높음	373	4.52(0.04)	4.58(0.04)	4.37(0.05)	4.03(0.06)	4.37(0.05)
압박정책	낮음	334	4.09(0.03)	4.15(0.03)	3.84(0.03)	3.60(0.03)	3.95(0.03)
	중간	908	4.23(0.03)	4.33(0.03)	4.14(0.03)	3.84(0.04)	4.12(0.03)
	높음	358	4.34(0.05)	4.50(0.05)	4.23(0.05)	3.92(0.06)	4.32(0.05)

〈표 II-27〉 도덕판단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단위: 명, %, 점)		사례 수	돌봄	공정	충성	권위	순수
전체(2020년)		1,600	4.19(0.02)	4.29(0.02)	4.02(0.02)	3.75(0.02)	4.09(0.02)
성별	남성	796	4.12(0.03)	4.23(0.03)	4.02(0.03)	3.74(0.03)	4.02(0.03)
	여성	804	4.26(0.03)	4.35(0.03)	4.02(0.03)	3.76(0.03)	4.15(0.03)
연령	20대	278	4.16(0.06)	4.27(0.05)	3.84(0.06)	3.74(0.06)	4.07(0.06)
	30대	253	4.07(0.05)	4.19(0.05)	3.89(0.05)	3.72(0.06)	3.99(0.05)
	40대	314	4.14(0.04)	4.29(0.04)	4.00(0.05)	3.67(0.05)	4.06(0.04)
	50대	323	4.26(0.04)	4.35(0.04)	4.15(0.04)	3.84(0.05)	4.21(0.05)
	60세+	432	4.27(0.04)	4.30(0.04)	4.12(0.04)	3.77(0.04)	4.08(0.04)
연령 by 성별	남성 20대	146	4.06(0.08)	4.11(0.08)	3.87(0.08)	3.81(0.09)	3.98(0.08)
	여성 20대	132	4.28(0.08)	4.44(0.07)	3.81(0.08)	3.66(0.09)	4.18(0.08)
	남성 30대	129	3.94(0.07)	4.07(0.07)	3.78(0.08)	3.65(0.08)	3.89(0.07)
	여성 30대	124	4.19(0.08)	4.32(0.07)	4.00(0.07)	3.80(0.09)	4.09(0.08)
	남성 40대	158	4.09(0.06)	4.28(0.06)	4.04(0.06)	3.69(0.07)	4.03(0.06)
	여성 40대	156	4.18(0.06)	4.30(0.05)	3.96(0.07)	3.64(0.08)	4.10(0.06)
	남성 50대	165	4.20(0.05)	4.29(0.06)	4.15(0.06)	3.78(0.07)	4.11(0.06)
	여성 50대	158	4.31(0.07)	4.41(0.07)	4.15(0.06)	3.91(0.07)	4.31(0.06)
	남성 60대+ 여성 60대+	198 234	4.22(0.06) 4.32(0.05)	4.31(0.06) 4.30(0.05)	4.15(0.06) 4.10(0.05)	3.75(0.06) 3.78(0.06)	4.04(0.06) 4.11(0.05)
월 소득	~300만 원	375	4.10(0.05)	4.15(0.05)	3.85(0.05)	3.64(0.05)	3.96(0.05)
	300~500만 원	567	4.15(0.03)	4.26(0.03)	4.00(0.04)	3.69(0.04)	4.07(0.04)
	500만 원~	658	4.28(0.03)	4.39(0.03)	4.13(0.03)	3.86(0.04)	4.18(0.03)
이념	보수	316	4.14(0.05)	4.27(0.04)	4.07(0.05)	3.75(0.05)	4.07(0.05)
	중도	743	4.14(0.03)	4.24(0.03)	3.97(0.03)	3.75(0.03)	4.06(0.03)
	진보	541	4.29(0.04)	4.36(0.03)	4.05(0.04)	3.75(0.04)	4.13(0.04)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3.92(0.04)	4.06(0.04)	3.81(0.04)	3.69(0.04)	3.94(0.04)
	중간	803	4.15(0.03)	4.23(0.03)	3.98(0.03)	3.72(0.03)	4.03(0.03)
	높음	390	4.56(0.04)	4.64(0.04)	4.31(0.05)	3.88(0.06)	4.36(0.04)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388	4.32(0.04)	4.47(0.04)	3.88(0.04)	3.47(0.05)	4.07(0.05)
	중간	826	4.03(0.03)	4.12(0.03)	3.92(0.03)	3.71(0.03)	3.97(0.03)
	높음	386	4.40(0.04)	4.47(0.04)	4.37(0.05)	4.13(0.05)	4.36(0.04)
통일지향	낮음	335	4.08(0.05)	4.33(0.05)	3.82(0.05)	3.50(0.05)	3.99(0.05)
	중간	936	4.11(0.02)	4.17(0.02)	3.97(0.02)	3.75(0.03)	4.01(0.02)
	높음	329	4.53(0.04)	4.59(0.04)	4.37(0.05)	4.01(0.06)	4.41(0.05)
분단지향	낮음	306	4.17(0.05)	4.29(0.05)	3.98(0.05)	3.66(0.05)	4.06(0.05)
	중간	869	4.13(0.03)	4.21(0.03)	3.99(0.03)	3.78(0.03)	4.03(0.03)
	높음	425	4.33(0.04)	4.45(0.04)	4.11(0.05)	3.76(0.05)	4.22(0.04)
관여정책	낮음	369	3.98(0.05)	4.15(0.05)	3.86(0.05)	3.63(0.05)	3.97(0.05)
	중간	858	4.13(0.03)	4.21(0.02)	3.93(0.03)	3.68(0.03)	4.01(0.02)
	높음	373	4.52(0.04)	4.58(0.04)	4.37(0.05)	4.03(0.06)	4.37(0.05)
압박정책	낮음	334	4.09(0.03)	4.15(0.03)	3.84(0.03)	3.60(0.03)	3.95(0.03)
	중간	908	4.23(0.03)	4.33(0.03)	4.14(0.03)	3.84(0.04)	4.12(0.03)
	높음	358	4.34(0.05)	4.50(0.05)	4.23(0.05)	3.92(0.06)	4.32(0.05)

〈표 II-28〉 도덕기반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단위: 명, %, 점)	사례 수	돌봄	공정	총성	권위	순수	
전체(2020년)	1,600	4.40(0.02)	4.68(0.02)	3.94(0.02)	3.90(0.02)	4.42(0.02)	
성별	남성	796	4.27(0.03)	4.62(0.03)	3.95(0.03)	3.96(0.03)	4.34(0.03)
	여성	804	4.53(0.03)	4.73(0.03)	3.93(0.03)	3.85(0.03)	4.50(0.03)
연령	20대	278	4.29(0.06)	4.43(0.06)	3.83(0.06)	3.79(0.06)	4.19(0.06)
	30대	253	4.37(0.06)	4.51(0.06)	3.88(0.05)	3.87(0.06)	4.36(0.05)
	40대	314	4.36(0.05)	4.68(0.05)	3.87(0.05)	3.79(0.06)	4.39(0.05)
	50대	323	4.50(0.05)	4.80(0.05)	4.05(0.05)	3.98(0.05)	4.52(0.05)
	60세+	432	4.45(0.04)	4.85(0.04)	4.00(0.04)	4.02(0.04)	4.54(0.04)
연령 by 성별	남성 20대	146	4.04(0.08)	4.26(0.08)	3.87(0.08)	3.95(0.08)	4.03(0.08)
	여성 20대	132	4.56(0.07)	4.62(0.08)	3.80(0.08)	3.61(0.09)	4.36(0.07)
	남성 30대	129	4.21(0.08)	4.41(0.08)	3.84(0.08)	3.90(0.08)	4.27(0.07)
	여성 30대	124	4.53(0.08)	4.61(0.08)	3.91(0.07)	3.83(0.09)	4.45(0.08)
	남성 40대	158	4.22(0.07)	4.62(0.08)	3.92(0.06)	3.86(0.09)	4.31(0.07)
	여성 40대	156	4.50(0.07)	4.73(0.07)	3.82(0.07)	3.71(0.07)	4.47(0.07)
	남성 50대	165	4.44(0.06)	4.78(0.07)	4.05(0.06)	4.00(0.07)	4.47(0.06)
	여성 50대	158	4.57(0.07)	4.81(0.07)	4.06(0.07)	3.95(0.07)	4.58(0.07)
월 소득	남성 60대+	198	4.38(0.06)	4.90(0.06)	4.02(0.05)	4.04(0.06)	4.53(0.06)
	여성 60대+	234	4.51(0.05)	4.81(0.05)	3.99(0.05)	4.01(0.06)	4.55(0.05)
이념	~300만 원	375	4.30(0.05)	4.63(0.05)	3.89(0.05)	3.82(0.05)	4.35(0.05)
	300~500만 원	567	4.40(0.04)	4.69(0.04)	3.94(0.04)	3.90(0.04)	4.40(0.04)
	500만 원~	658	4.47(0.03)	4.71(0.04)	3.97(0.04)	3.96(0.04)	4.48(0.04)
협력을 통한 평화	보수	316	4.32(0.05)	4.74(0.05)	3.99(0.05)	4.05(0.05)	4.44(0.05)
	중도	743	4.35(0.03)	4.57(0.03)	3.88(0.03)	3.88(0.03)	4.36(0.03)
	진보	541	4.51(0.04)	4.79(0.04)	3.98(0.04)	3.84(0.04)	4.48(0.04)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4.08(0.04)	4.31(0.05)	3.77(0.04)	3.87(0.04)	4.19(0.04)
	중간	803	4.35(0.03)	4.61(0.03)	3.88(0.03)	3.88(0.03)	4.34(0.03)
	높음	390	4.83(0.04)	5.21(0.04)	4.23(0.05)	3.97(0.06)	4.81(0.04)
통일지향	낮음	388	4.63(0.04)	4.98(0.04)	3.74(0.04)	3.54(0.05)	4.54(0.05)
	중간	826	4.21(0.03)	4.48(0.03)	3.90(0.03)	3.87(0.03)	4.26(0.03)
	높음	386	4.59(0.04)	4.79(0.05)	4.22(0.05)	4.33(0.05)	4.64(0.04)
분단지향	낮음	335	4.35(0.05)	4.69(0.05)	3.71(0.05)	3.78(0.05)	4.43(0.05)
	중간	936	4.30(0.03)	4.54(0.03)	3.89(0.02)	3.87(0.03)	4.31(0.03)
	높음	329	4.75(0.05)	5.06(0.05)	4.31(0.05)	4.10(0.06)	4.70(0.05)
관여정책	낮음	306	4.40(0.06)	4.72(0.06)	3.92(0.05)	3.82(0.06)	4.41(0.05)
	중간	869	4.31(0.03)	4.54(0.03)	3.94(0.03)	3.88(0.03)	4.35(0.03)
	높음	425	4.59(0.04)	4.93(0.04)	3.94(0.05)	4.01(0.05)	4.57(0.04)
입박정책	낮음	369	4.21(0.05)	4.52(0.06)	3.78(0.05)	3.86(0.06)	4.28(0.05)
	중간	858	4.33(0.03)	4.62(0.03)	3.86(0.03)	3.83(0.03)	4.36(0.03)
	높음	373	4.72(0.04)	4.94(0.05)	4.25(0.05)	4.12(0.06)	4.67(0.04)
합계	낮음	334	4.29(0.03)	4.55(0.03)	3.85(0.03)	3.68(0.03)	4.28(0.03)
	중간	908	4.45(0.04)	4.70(0.04)	3.99(0.04)	3.97(0.04)	4.45(0.03)
	높음	358	4.56(0.05)	4.91(0.05)	4.05(0.05)	4.26(0.05)	4.66(0.05)

자. 소결

본 장에서는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성, 분단지향성, 관여정책, 압박정책 등 한반도 통일과 화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준거변수)로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경향, Schwartz의 가치(자기초월가치, 자기고양가치, 보수주의), 인지종결욕구, 불확실성회피경향, 미래지향성, 현재지향성, 도덕기반, 개인주의-집단주의 등 한국인이 품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각각의 가치관에 대해 성별, 연령, 이념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로 분석하였고 일차적으로 각각의 가치관과 준거변수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상관분석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준거변수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가치관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상대적 영향력은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 한 후 2단계로 가치관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표 II-29>). 소결에서는 각각의 준거변수별로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먼저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과 가치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분석에서는 현재지향성과 권위 도덕기반을 제외한 모든 가치관이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과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사회지배경향성, 미래-현재 지향성, 그리고 도덕기반이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배경향-평등주의($\beta=0.20$), 지배경향-지배경향($\beta=-0.13$), 미래지향성, 돌봄 도덕기반, 충성 도덕기반, 현재지향성, 공정 도덕기반, 권위 도덕기반(이상 영향력 크기 순)이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우월한 집단과 열등한 집단의 구분은 불필요하며 우월한 집단이 열등한 집단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이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치관으로 분석되었다. 흥미로운 지점은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도덕에 대한 판단이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도덕기반 이론의 5가지 도덕기반 중 순수를 제외한 4개 도덕기반이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어떤 일이나 사람이 도덕적인지 판단할 때 돌봄, 공정, 충성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협력에 대한 평화에 긍정적인 반면 권위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협력에 의한 평화에 부정적이었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의 경우 돌봄 도덕기반과 순수 도덕기반을 제외한 모든 가치관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가치관은 사회지배경향성의 하위 요소인 지배경향성($\beta=0.15$)이었다. 또 다른 하위 요소인 평등주의 역시 유의미한 영향력($\beta=-0.10$)을 보여 사회지배 경향이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위 도덕기반과 미래지향성(각각 $\beta=0.13$)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중 우익권위주의와 Schwartz의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Schwartz의 가치는 6개 준거변수 중 유일하게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만 영향을 미쳤다. 권력, 성취, 쾌락, 자극 등 자기고양가치가 높을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을 지지하는 반면 자율, 보편주의, 박애 등 자기초월가치를 중시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부정적이었다. 자기고양 가치와 자기추월가치가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는 영향을 주지만

협력을 통한 평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평화를 실현하는 두 방식이 제로섬 관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두 가치가 협력과 같은 촉진적 방식의 평화실현과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군사력과 같은 예방적 방식의 평화실현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우익권위주의는 6개 준거변수들 중 군사력을 통한 평화와 압박정책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익권위주의가 외부의 위협을 내집단의 단결, 순응, 전통, 지도자에 의해 방어하고자 하는 동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수긍이 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사회지배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사회지배경향은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영향력의 방향이 차별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치관이다. 즉 사회지배경향이 강할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를 선호하는 반면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는 부정적이었다. 차별적인 영향력의 측면에서 권위 도덕기반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덕판단에 있어 권위를 중시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협력을 통한 평화에는 부정적이었다.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해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부분은 현재지향성과 미래지향성이다. 현재지향성과 미래지향성 모두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다시 말해 현재지향성이 높을수록 협력을 위한 평화실현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성이 높을수록 협력을 위한 평화실현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긍정적이라는 다소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는 패턴인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통일지향성과 관여정책에서도 관찰되었다. 첫째, 두 지향성이 실제로는 현재지향성과 미래지향성으로 구분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요인분석을 통해 두 요인이 구분되기 때문에 첫째 가능성은 기각되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이다. 즉 현재지향성과 미래지향성이 준거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추정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고려되면서 영향력이 변화된 것이다. 억제효과가 관찰된 변수는 해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⁷¹⁾ 미래지향성과 현재지향성이 억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검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표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통일지향성은 지배경향 및 개인주의를 제외한 본 조사의 모든 가치관과 유의미한 상관이 관찰되었으며, 분단지향성은 충성 도덕기반 및 개인주의를 제외한 모든 가치관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통일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가치관은 사회 지배경향이었다. 평등주의가 강할수록($\beta=0.10$), 그리고 지배경향이 약할수록($\beta=-0.09$) 통일지향성이 높았다. 충성의 도덕가치가 강할수록($\beta=0.13$) 통일지향성이 높은 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도덕기반 이론의 충성은 일반적으로 가족, 국가 등 내집단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 민족정체감이 강한 한국에서 국가와 민족은 사실상 구분하기 힘든 개념이기 때문에 도덕기반의 충성이 민족 정체감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실제로 민족정체감과 남한정체감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님을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며, 충성 도덕기반과 민족정체감의 상관이 0.40인 점을 감안한다면 충성의 대상에 민족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일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중 인지종결욕구가 약할수록 통일지향성이 강한 결과($\beta=-0.07$)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불확

71) Delroy L. Paulhus et al., "Two Replicable Suppressor Situations in Personality Resear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39, no. 2 (2004), pp. 303~328.

실성을 인정하고 감내할수록 통일에 대한 지향성이 강해지는 것은 통일에 대한 확실한 미래를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분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는 현재지향성을 제외하고 지배경향, 충성 도덕기반, 공정 도덕기반 3개에 불과하다. 민족에 대한 충성이 강할수록 분단지향성이 약화되는 것($\beta=-0.09$)은 당연해 보인다. 지배경향이 강할수록($\beta=0.07$) 그리고 공정 도덕기반을 중시할수록($\beta=0.13$) 분단지향성이 강해지는 것은 흥미롭다. 북한이 한국보다 열등하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열등한 집단과 통합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단지향성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관여정책 및 압박정책 역시 본 조사에 포함된 대부분의 가치관과 유의미한 1:1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관여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치는 사회지배성향의 평등주의였다($\beta=0.14$). 돌봄 도덕기반($\beta=0.08$), 충성 도덕기반($\beta=0.09$), 관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는 협력력을 통한 평화 및 통일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지향성과 관여정책에 보수주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압박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지배경향이였다. 지배경향성이 강할수록($\beta=0.10$), 평등주의가 약할수록($\beta=-0.11$)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했다. 사회지배경향은 모든 준거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영향력의 크기 역시 강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공정의 도덕기반에 대한 중요도가 강할수록($\beta=0.11$), 권위의 도덕기반이 강할수록($\beta=0.13$)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했다.

이상의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 결론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6개 준거변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은 사회지배경향과 도덕기반판단이라는 점일 것이다. 특히 도덕기반판단은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영역이라는 점에서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표 II-29〉 가치관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1단계	성별	-.04	-.11***	-.18***	.09***	-.04	.00
	연령	.11***	.03	.08***	-.01	.02	-.06*
	학력	.07**	.00	.00	.00	.00	-.04
	이념	.25***	-.18***	.21***	-.02	.25***	-.22***
	소득	.06*	.04	.05	.08**	.06*	.02
2단계	우익권위주의	-.03	.07*	-.01	-.05	-.05	.07*
	지배경향-지배경향	-.13***	.15***	-.09**	.07*	-.05	.10***
	지배경향-평등주의	.20***	-.10***	.10**	.02	.14***	-.11***
	자기고양가치	.02	.06*	.00	.03	.00	.05
	자기초월가치	.02	-.07*	.05	.02	.02	.02
	보수주의	.04	.04	.11***	-.01	.07*	.01
	인지종결욕구	.01	.03	-.07*	.01	-.01	.10**
	불확실성회피	-.03	.00	-.03	.03	-.03	.07*
	미래지향	.11***	.13***	.13***	-.01	.07*	.00
	현재지향	.09***	.06*	.12***	.09**	.16***	-.07*
	도덕기반_돌봄	.10***	-.02	.05	.04	.08**	-.02
	도덕기반_공정	.08*	-.08*	.01	.13***	.00	.11**
	도덕기반_충성	.10***	.04	.13***	-.09**	.09**	-.06*
	도덕기반_권위	-.07**	.13***	.00	.01	-.01	.13***
	도덕기반_순수	.00	.01	-.07*	.00	.02	.06
개인주의	-.04	.05*	.00	.00	.00	-.01	
비교	1단계 설명량(R ²)	.08	.05	.07	.01	.06	.04
	2단계 설명량(R ²)	.28	.23	.18	.04	.16	.16
	Durbin-Watson	2.00	1.97	1.98	2.06	1.98	2.06

3. 사회적 신념이 평화인식 및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

가. 주관적 안녕

주관적 안녕(well-being)의 개념은 그리스의 쾌락주의(hedonism)에서 기원하지만 현대적 개념의 주관적 안녕은 성취에 대한 감정, 삶의 목적, 의미 등을 포함한다.⁷²⁾ 한국인의 주관적 안녕의 수준은 분단 상황, 즉 고착화된 갈등 상황 하에 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감에 대한 간접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기 위해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7점 척도, 1점: 전적으로 만족하지 않음, 7점: 전적으로 만족함).⁷³⁾

- 1) 현재 당신의 삶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 2) 현재 당신의 객관적 생활조건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3) 당신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신의 객관적 생활조건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4) 당신이 바라는 이상과 비교하면 자신의 객관적 생활조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2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평균은 <표 II-31>에 제시하였다. 한국인의 주관적 안녕의 평균은 4.38로 2019년 대비 0.10점 상승하였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성별·연령 교차분석 결과 주관적 안녕이 가장 높은 집단은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었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72) 박주언·심수진·이희길, “주관적 웰빙 측정 방안,” 통계청 통계개발원 연구, 『2012년 상반기 연구결과보고서』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2), p. 147.

73) 한덕용·표승연, “정서 경험에 따른 주관적 안녕, 건강지각 및 신체질병의 예측,”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제7권 3호 (2002), p. 412.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었다. 월 소득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안녕의 수준이 높았으며 진보가 보수와 중도에 비해 주관적 안녕의 수준이 높았다.

〈표 II-30〉 주관적 안녕과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주관적 안녕	0.18**	0.07**	0.13**	0.14**	0.20**	0.02

주관적 안녕수준은 압박정책을 제외한 5개 준거변수들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표 II-30〉). 주관적 안녕수준과 상대적으로 강한 상관을 보이는 준거변수는 관여정책($r=0.20$)과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r=0.18$)이었다.

나.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효능감은 “유권자가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정치 효능감은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을 뜻한다.⁷⁴⁾ 이 개념은 정치적 행위에 있어 자기 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이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개인에 대한 자발적이며 강력한 원동력인 것처럼 정치 효능감 역시 자발적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자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개념이다.⁷⁵⁾ 본 연구에서

74) Angus Campbell, Gerald Gurin, and Warren Edward Miller, *The Voter Decides* (Evanston: Row, Peterson, 1954), p. 187.

75) 강수영, “정치적 자기효능감 척도(Pses) 제작 및 타당화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7권 3호 (2013), pp. 297~305.

는 내적 효능감에 대한 2개 문항, 외적 효능감에 대한 2개 문항을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5점 척도, 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5점: 전적으로 동의함)⁷⁶⁾ 정치적 효능감을 측정하는 4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3이었다.

〈표 II-31〉 주관적 안녕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주관적 안녕	구분		사례 수	주관적 안녕
2019년		1,000	4.28(0.04)	이념	보수	316	4.27(0.07)
전체(2020년)		1,600	4.38(0.03)		중도	743	4.29(0.04)
성별	남성	796	4.36(0.04)		진보	541	4.56(0.05)
	여성	804	4.40(0.04)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4.07(0.05)
연령	20대	278	4.44(0.07)		중간	803	4.39(0.04)
	30대	253	4.35(0.07)		높음	390	4.68(0.06)
	40대	314	4.27(0.06)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388	4.36(0.06)
	50대	323	4.40(0.06)		중간	826	4.28(0.03)
	60세+	432	4.41(0.06)		높음	386	4.59(0.07)
연령 by 성별	남성 20대	146	4.36(0.10)	통일지향	낮음	335	4.20(0.07)
	여성 20대	132	4.35(0.10)		중간	936	4.36(0.03)
	남성 30대	129	4.23(0.09)		높음	329	4.61(0.08)
	여성 30대	124	4.35(0.09)	분단지향	낮음	306	4.18(0.07)
	남성 40대	158	4.46(0.09)		중간	869	4.34(0.03)
	여성 40대	156	4.53(0.10)		높음	425	4.59(0.06)
	남성 50대	165	4.35(0.10)	관여정책	낮음	369	4.20(0.07)
	여성 50대	158	4.32(0.09)		중간	858	4.29(0.03)
	남성 60대+	198	4.46(0.09)		높음	373	4.76(0.06)
	여성 60대+	234	4.37(0.08)		입박정책	낮음	334
월 소득	~300만 원	375	3.98(0.06)	중간		908	4.36(0.03)
	300~500만 원	567	4.34(0.05)	높음		358	4.40(0.08)
	500만 원~	658	4.63(0.04)				

76) 장승진·송진미, “허위합의(False Consensus) 효과와 쟁점투표,” 『한국정당학회보』, 제16권 3호 (2017), pp. 93~94.

- 1) 나 같은 일반시민들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 정부는 나 같은 일반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 3)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 4) 나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보다 정치나 행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평균은 <표 II-32>에 제시하였다. 정치적 효능감 평균은 3.24로 2018년 대비 0.11점 상승하였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높았고, 보수와 중도에 비해 진보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았다.

<표 II-32> 정치적 효능감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정치적효능감	구분		사례 수	정치적효능감
2019년		1,000	3.13(0.02)	이념	보수	316	3.14(0.04)
전체(2020년)		1,600	3.24(0.02)		중도	743	3.13(0.02)
					진보	541	3.47(0.03)
성별	남성	796	3.26(0.02)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2.99(0.03)
	여성	804	3.23(0.02)		중간	803	3.20(0.02)
연령	20대	278	3.25(0.04)		높음	390	3.60(0.04)
	30대	253	3.22(0.04)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388	3.27(0.04)
	40대	314	3.21(0.04)		중간	826	3.15(0.02)
	50대	323	3.26(0.04)		높음	386	3.41(0.04)
	60세+	432	3.27(0.03)	통일지향	낮음	335	3.01(0.04)
연령 by 성별	남성 20대	146	3.24(0.06)		중간	936	3.21(0.02)
	여성 20대	132	3.26(0.06)		높음	329	3.59(0.04)
	남성 30대	129	3.23(0.06)	분단지향	낮음	306	3.21(0.04)
	여성 30대	124	3.21(0.06)		중간	869	3.20(0.02)
	남성 40대	158	3.22(0.05)		높음	425	3.36(0.04)
	여성 40대	156	3.20(0.06)	관여정책	낮음	369	3.05(0.04)
	남성 50대	165	3.28(0.05)		중간	858	3.15(0.02)
	여성 50대	158	3.24(0.06)		높음	373	3.67(0.03)
	남성 60대+	198	3.30(0.05)	압박정책	낮음	334	3.37(0.04)
여성 60대+	234	3.24(0.04)	중간		908	3.19(0.02)	
월 소득	~300만 원	375	3.06(0.03)		높음	358	3.27(0.04)
	300~500만 원	567	3.24(0.03)				
	500만 원~	658	3.36(0.03)				

정치적 효능감과 준거변수들 간 상관은 <표 II-33>에 제시하였다. 정치적 효능감은 협력을 통한 평화($r=0.34$)와 관여정책($r=0.33$)과 뚜렷한 상관을 보였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r=0.07$), 분단지향성($r=0.09$)과는 약한 상관을 보였으며 압박정책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33> 정치효능감과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정치효능감	0.34**	0.07**	0.29**	0.09**	0.33**	-0.03

다. 한국사회 불공정성

한국사회가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해 4개 문항으로 물어보았다. 문항은 한국종합사회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2개 문항,⁷⁷⁾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2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 1) 나의 노력에 비해 내가 처한 현실은 공정하지 않다.
- 2) 한국은 재화와 기회의 분배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공정성 혁명”이 필요하다.
- 3) 한국에서는 개인의 노력보다 성별, 지역, 연령, 사회적 배경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다.
- 4)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내 처지가 더 나아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77)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pp. 809, 904, <http://kgss.skku.edu/wp-content/uploads/2019/05/%EB%B6%80%EB%A1%9D1_03-18-%ED%95%9C%EA%B5%AD%EC%A2%85%ED%95%A9%EC%82%AC%ED%9A%8C%EC%A1%B0%EC%82%AC-%EB%B3%80%EC%88%98%EB%AA%85-%EC%84%A4%EB%AC%B8%EC%A7%80-05142019.pdf> (검색일: 2020.3.5.).

4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68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평균은 <표 II-34>에 제시하였다. 한국사회 공정성을 묻는 4개 문항의 평균은 3.50으로 2019년과 같았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한국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꼈다.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30대의 불평등인식이 가장 낮았고 60대의 불평등인식이 가장 높았다. 두 연령집단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다른 연령대 간 불평등 인식은 차이가 없었다. 30대 남성의 불평등인식(3.40)이 가장 낮았고, 60대 여성(3.61), 50대 여성(3.60)의 불평등 인식이 가장 높았다.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보수와 중도에 비해 진보가 한국사회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 강했다.

<표 II-34> 한국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불공정성 인식	구분	사례 수	불공정성 인식	
2019년		1,000	3.50(0.02)	이념	보수	316	3.49(0.04)
전체(2020년)		1,600	3.50(0.02)		중도	743	3.44(0.02)
					진보	541	3.60(0.03)
성별	남성	796	3.46(0.02)	협력을 통한평화	낮음	407	3.31(0.03)
	여성	804	3.55(0.02)		중간	803	3.49(0.02)
연령	20대	278	3.47(0.04)		높음	390	3.74(0.03)
	30대	253	3.40(0.04)	군사력을 통한평화	낮음	388	3.49(0.03)
	40대	314	3.49(0.03)		중간	826	3.42(0.02)
	50대	323	3.55(0.03)		높음	386	3.70(0.04)
	60세+	432	3.57(0.03)	통일지향	낮음	335	3.43(0.04)
연령 by 성별	남성 20대	146	3.46(0.06)		중간	936	3.44(0.02)
	여성 20대	132	3.48(0.06)	높음	329	3.75(0.03)	
	남성 30대	129	3.32(0.06)	분단지향	낮음	306	3.50(0.04)
	여성 30대	124	3.48(0.05)		중간	869	3.45(0.02)
	남성 40대	158	3.45(0.04)	높음	425	3.61(0.03)	
	여성 40대	156	3.52(0.04)	관여정책	낮음	369	3.32(0.04)
	남성 50대	165	3.50(0.05)		중간	858	3.47(0.02)
	여성 50대	158	3.60(0.05)		높음	373	3.78(0.03)
월 소득	남성 60대+	198	3.53(0.05)	압박정책	낮음	334	3.46(0.03)
	여성 60대+	234	3.61(0.04)		중간	908	3.47(0.02)
	~300만 원	375	3.48(0.03)		높음	358	3.63(0.04)
300~500만 원	567	3.53(0.03)					
500만 원~	658	3.50(0.02)					

〈표 II-35〉 불평등인식과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불평등인식	0.26**	0.11**	0.17**	0.08**	0.26**	0.12**

한국사회의 불평등 인식은 모든 준거변수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특히 협력을 통한 평화($r=0.26$) 및 관여정책($r=0.26$)과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집단·갈등의 본질 변화가능성에 대한 믿음

갈등 해결에 성공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분쟁의 다른 그룹에 대한 각 집단의 강한 부정적 태도이다. 갈등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해결하기 위해서 부정적 태도를 바꾸려는 직접적인 시도는 방어적인 반응을 통한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적대적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는 간접적인 방식의 대표적인 시도가 집단의 본질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⁷⁸⁾

우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자주 들곤 한다. 이는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 특히 사람의 폭력적이거나 이기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개인의 본질이 고정적인지, 아니면 변하는지에 대한 암묵적인 믿음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의 본질이 고정적이라고 믿는 이들은 잘못을 환경의 영향이 아닌 타고난 성정, 즉 고정된 자질의 탓으로 돌리기 쉬우며 변화

78) Eran Halperin et al., “Promoting the Middle East Peace Process by Changing Beliefs About Group Malleability,” *Science*, vol. 333, no. 6050 (2011), pp. 1767~1769; Smadar Cohen-Chen et al., “Hope in the Middle East: Malleability Beliefs, Hope, and the Willingness to Compromise for Peac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vol. 5, no. 1 (2014), pp. 67~75.

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과 보복을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사람들의 본질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잘못된 행동이 환경의 영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덜 권하고, 협상을 권할 가능성이 더 높다. 개인의 본질에 대한 믿음처럼 집단의 본질 역시 가변적인지 아니면 고정적인지에 대한 믿음 역시 집단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집단의 본질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화를 위한 협상과 적대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및 갈등의 본질이 가변적인지 고정적인지 7개 문항을 6점 척도(1: 완전히 가변적, 6: 완전히 고정적)를 통해 살펴보았다.⁷⁹⁾

- 1) 집단 또는 조직의 근본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늙은 개에게는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없다(노인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미국 속담은 맞는 것 같다.
- 2) 집단이나 조직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 3) 폭력적 집단은 그들의 행동 방식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 4) 모든 집단이나 조직, 국가는 바꿀 수 없는 도덕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 5) 설사 분쟁과 갈등에 관련된 모든 쟁점과 환경이 다루어지더라도, 분쟁(갈등)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
- 6) 분쟁(갈등)의 본질은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갈등)의 고유한 측면은 변할 수 없다.
- 7) 분쟁(갈등)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분쟁(갈등)의 핵심과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79) Eran Halperin et al., "Promoting the Middle East Peace Process by Changing Beliefs About Group Malleability," pp. 1767~1769; Smadar Cohen-Chen et al., "Hope in the Middle East: Malleability Beliefs, Hope, and the Willingness to Compromise for Peace," p. 69.

〈표 II-36〉 갈등과 집단의 본질에 대한 믿음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집단변화 신념	갈등변화 신념	집단갈등 변화신념	구분	사례 수	집단변화 신념	갈등변화 신념	집단갈등 변화신념	
2019년	1,000	4.05(0.03)	3.95(0.03)	4.01(0.02)	이념	보수	316	4.10(0.04)	4.03(0.05)	4.07(0.04)
전체(2020년)	1,600	4.02(0.02)	3.97(0.02)	4.00(0.02)		중도	743	3.95(0.03)	3.94(0.03)	3.94(0.02)
남성	796	3.97(0.03)	3.97(0.03)	3.97(0.03)		진보	541	4.06(0.04)	3.99(0.04)	4.03(0.03)
여성	804	4.07(0.03)	3.98(0.03)	4.03(0.02)	협력을 통한평화	낮음	407	3.85(0.04)	3.89(0.04)	3.87(0.04)
20대	278	3.98(0.05)	4.03(0.05)	4.00(0.05)		중간	803	4.02(0.02)	3.97(0.03)	4.00(0.02)
30대	253	4.09(0.05)	4.03(0.05)	4.07(0.04)		높음	390	4.19(0.04)	4.06(0.05)	4.13(0.04)
40대	314	4.07(0.04)	3.96(0.05)	4.02(0.04)	군사력을 통한평화	낮음	388	3.92(0.04)	3.73(0.05)	3.84(0.04)
50대	323	4.01(0.04)	3.94(0.04)	3.98(0.04)		중간	826	3.91(0.02)	3.92(0.02)	3.92(0.02)
60세+	432	3.96(0.04)	3.93(0.04)	3.95(0.04)		높음	386	4.34(0.04)	4.32(0.05)	4.33(0.04)
남성 20대	146	3.99(0.07)	4.12(0.07)	4.05(0.06)	통일지향	낮음	335	4.10(0.05)	4.02(0.05)	4.07(0.04)
여성 20대	132	3.97(0.07)	3.93(0.08)	3.95(0.07)		중간	936	3.92(0.02)	3.92(0.02)	3.92(0.02)
남성 30대	129	3.99(0.06)	3.99(0.07)	3.99(0.06)		높음	329	4.20(0.05)	4.08(0.06)	4.15(0.05)
여성 30대	124	4.20(0.07)	4.08(0.07)	4.15(0.06)	분단지향	낮음	306	3.96(0.05)	3.91(0.05)	3.94(0.04)
남성 40대	158	4.01(0.06)	3.99(0.07)	4.00(0.06)		중간	869	3.94(0.02)	3.93(0.02)	3.94(0.02)
여성 40대	156	4.13(0.05)	3.92(0.06)	4.04(0.05)		높음	425	4.21(0.04)	4.10(0.05)	4.16(0.04)
남성 50대	165	3.98(0.06)	3.93(0.06)	3.96(0.05)	관여정책	낮음	369	3.97(0.05)	3.98(0.05)	3.97(0.05)
여성 50대	158	4.05(0.06)	3.96(0.07)	4.01(0.06)		중간	858	3.96(0.02)	3.92(0.02)	3.94(0.02)
남성 60대+	198	3.89(0.06)	3.84(0.07)	3.87(0.06)		높음	373	4.20(0.05)	4.09(0.05)	4.15(0.04)
여성 60대+	234	4.02(0.05)	4.00(0.05)	4.01(0.04)	압박정책	낮음	334	3.85(0.03)	3.80(0.03)	3.83(0.03)
~300만 원	375	3.96(0.04)	3.91(0.05)	3.94(0.04)		중간	908	4.03(0.03)	3.98(0.03)	4.01(0.03)
300~500만 원	567	4.00(0.03)	3.94(0.04)	3.97(0.03)		높음	358	4.34(0.04)	4.31(0.05)	4.32(0.04)
500만 원~	658	4.08(0.03)	4.04(0.03)	4.07(0.03)						

7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0.84, 집단의 본질에 관한 4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73, 갈등의 본질에 관한 3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84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평균은 〈표 II-36〉에 제시하였다. 집단의 본질에 대한 4개 문항의 평균은 4.02, 갈등의 본질에 대한 3개 문항의 평균은 3.97, 두 유형을 합친 평균은 4.00으로 2019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척도의 중앙치인 3.5점을 모두 상회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은 갈등의 본질과 집단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준거변수에 따른

분석은 7개 문항의 평균인 집단·갈등의 변화가능성을 사용하였다.

집단·갈등의 변화가능성에 있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월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집단에 비해 집단과 갈등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강했다. 또한 진보와 보수가 중도에 비해 집단과 갈등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강했다. 보수와 진보의 집단·갈등의 변화가능성 신념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표 II-37〉 집단·갈등의 본질 변화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갈등변화신념	0.05*	0.26**	0.03	0.08**	0.08**	0.24**
집단변화신념	0.14**	0.19**	0.03	0.13**	0.13**	0.27**
집단갈등변화신념	0.11**	0.25**	0.03	0.12**	0.12**	0.29**

〈표 II-37〉에 집단·갈등의 본질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준거변수 간 상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집단·갈등의 본질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통일지향성을 제외한 5개 준거변수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특징적인 것은 집단·갈등의 본질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강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과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북한의 본질, 그리고 남북관계의 본질은 부정적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본질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마. 이념: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

한국사회의 이념은 북한관으로 집약된다.⁸⁰⁾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평가할 때 북한을 협력과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경계와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는 평등에 대한 관점(사회지배성향), 사회 변화의 방향(우익권위주의)으로 이념이 결정된다는 서구의 연구결과와 배치된다. 이는 한국사회의 이념에 대한 연구들이 서구의 연구결과와 배치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북한 문제를 제외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통해 다차원적 이념을 측정하였다. 문항은 진보와 보수가 잘 구분되는 8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⁸¹⁾ 0점은 매우 진보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10점은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응답자는 아래 문항의 좌측 명제를 10점, 우측문항을 0점으로 놓고 자신의 동의 정도를 평정하였다.

- 1) [소득]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더 나야 한다. vs.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한다.
- 2) [정부역할] 당사자가 각각의 생계·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vs. 정부가 생계·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 3) [보편적 복지] 정부는 보편적 복지보다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vs. 정부는 경제성장보다 보편적 복지수준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 4) [경쟁]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 vs. 경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80) 한정훈,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4호 (2016), pp. 105~126.

81) 문화체육관광부, 『2019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2019), p. 6(부록).

- 5) [사회변화] 우리나라는 점진적 사회변화가 필요하다. vs. 우리나라는 전면적 사회변화가 필요하다.
- 6) [기업규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vs.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 7) [자유] 사회적 질서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vs.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질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 8) [교육기회]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기회가 있어야 한다. vs.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8개 문항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38>에 제시하였다. 8개 영역에 대한 정치적 태도는 크게 두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소득, 생계와 복지에 있어 정부의 역할, 보편적 복지, 경쟁, 기업규제에 관한 것으로 정치경제이념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질서와 교육기회에 관한 것으로 사회이념으로 명명하였다. 사회변화에 대한 문항은 정치경제이념과 사회이념 모두 가능하였지만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사회이념에 포함시켰다. 요인구조를 확인한 후 각각의 요인에 포함된 5개 문항과 3개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정치경제이념의 문항 간 신뢰도는 .79, 사회이념의 문항 간 신뢰도는 .64였다.

〈표 II-38〉 이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공통성
1) 소득	0.70	0.45	0.70
2) 정부의 역할(생계, 복지)	0.65	0.58	0.77
3) 보편적 복지	0.74	0.42	0.74
4) 경쟁	0.49	0.13	0.26
6) 기업규제	0.63	0.38	0.55
5) 사회변화	0.54	0.51	0.55
7) 자유와 사회적 질서	0.24	0.56	0.38
8) 교육기회	0.52	0.70	0.77
아이겐값	3.60	1.05	
설명변량	45.03	13.15	
누적변량	45.03	58.18	
요인명	정치경제이념	사회이념	

〈표 II-39〉 이념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정치경제이념	사회이념	구분	사례 수	정치경제이념	사회이념
전체(2020년)	1,600	5.62(0.04)	4.98(0.05)	이념	보수 316	6.30(0.10)	5.09(0.12)
남성	796	5.75(0.06)	5.02(0.07)		중도 743	5.57(0.06)	5.02(0.07)
여성	804	5.48(0.06)	4.95(0.07)		진보 541	5.28(0.08)	4.87(0.09)
20대	278	5.37(0.11)	5.00(0.11)	협력을 통한평화	낮음 407	5.71(0.09)	5.11(0.09)
30대	253	5.53(0.11)	5.03(0.12)		중간 803	5.63(0.05)	5.07(0.06)
40대	314	5.57(0.10)	4.94(0.11)		높음 390	5.48(0.11)	4.67(0.12)
50대	323	5.73(0.10)	5.04(0.12)	군사력을 통한평화	낮음 388	4.80(0.09)	4.17(0.10)
60세+	432	5.77(0.08)	4.93(0.10)		중간 826	5.53(0.05)	4.97(0.06)
남성 20대	146	5.90(0.13)	5.43(0.16)		높음 386	6.61(0.10)	5.82(0.12)
여성 20대	132	4.80(0.16)	4.53(0.15)	통일지향	낮음 335	5.76(0.10)	4.85(0.12)
남성 30대	129	5.61(0.16)	4.86(0.18)		중간 936	5.54(0.05)	4.98(0.06)
여성 30대	124	5.44(0.15)	5.21(0.16)		높음 329	5.70(0.12)	5.12(0.14)
남성 40대	158	5.61(0.15)	5.01(0.16)	분단지향	낮음 306	5.34(0.11)	4.80(0.11)
여성 40대	156	5.54(0.13)	4.87(0.15)		중간 869	5.55(0.05)	4.99(0.06)
남성 50대	165	5.82(0.15)	5.09(0.16)		높음 425	5.95(0.10)	5.09(0.11)
여성 50대	158	5.64(0.15)	4.98(0.17)	관여정책	낮음 369	6.05(0.11)	5.24(0.12)
남성 60대+	198	5.80(0.13)	4.76(0.17)		중간 858	5.45(0.05)	4.83(0.06)
여성 60대+	234	5.74(0.10)	5.07(0.12)		높음 373	5.68(0.11)	5.13(0.13)
~300만 원	375	5.36(0.10)	4.88(0.11)	압박정책	낮음 334	5.03(0.06)	4.66(0.07)
300~500만 원	567	5.59(0.07)	4.90(0.08)		중간 908	5.75(0.07)	5.00(0.08)
500만 원~	658	5.76(0.08)	5.09(0.09)		높음 358	6.62(0.10)	5.62(0.12)

정치경제이념의 평균은 5.62점, 사회이념의 평균은 4.98이었다. 우리 국민은 정치경제적 이슈에 대해 보수적 견해를 사회이념에 대해서는 중도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정치경제적 이슈에 있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수적이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월 소득이 증가할수록 정치경제이념은 보수적이었다. 자기명명식 이념, 즉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정치경제이념은 일치하였다. 스스로를 진보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치경제이념의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스스로를 보수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치경제이념 평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성별, 연령, 월 소득, 자기명명식 이념에 따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치적 태도는 차이가 없었다.

〈표 II-40〉 이념과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정치경제이념	-0.08**	0.40**	0.0	0.16**	-0.05	0.39**
사회이념	-0.10**	0.32**	0.06*	0.06*	0.0	0.19**
자기명명식 이념	0.24**	-0.18**	0.19**	-0.01	0.25**	-0.21**

정치경제이념, 사회이념, 그리고 자기명명식 이념과 준거변수 간 상관은 〈표 II-40〉에 제시하였다. 정치경제이념과 사회이념은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과 압박정책과 뚜렷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기명명식 이념은 상대적으로 협력을 통한 평화와 관여정책과 강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치경제이념이 보수적일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지지했으며($r=0.40$),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r=0.39$). 사회이념 역시 군사력을 통한 평화($r=0.32$) 및 압박정책($r=0.19$)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관

을 보였다.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통해 추론된 이념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는 이념이 진보일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지지($r=-0.24$) 및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r=-0.25$).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통해 추론된 이념 및 자기명명식 이념과 준거변수의 관계에 있어 방향성은 보수적일수록 북한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할 것이며 진보적일수록 북한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사회의 일반적 통념과 일치한다. 하지만 두 유형의 이념과 준거변수의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정치경제이념 및 사회이념은 적대적 태도와 강한 상관을 보이는 반면 자기명명식 이념은 유화적 태도와 강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통해 추론된 이념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이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통해 추론된 이념과 자기명명식 이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자기명명식 이념은 자신의 전반적 이념에 대한 평가, 정치 분야에 있어 자신의 이념, 그리고 경제 분야에 대한 자신의 이념을 1점(매우 보수)-4점(중도)-7점(매우 진보)상에서 측정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와 약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표 II-40〉).⁸²⁾ 이러한 패턴은 전반적 이념, 정치 분야에 대한 이념, 경제 분야에 대한 이념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다시 말해 이슈를 통해 알 수 있는 이념과 자기명명식 이념이 생각보다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다.

82) 자기명명식 이념은 낮은 점수가 진보, 높은 점수가 보수가 되도록 역채점하여 상관분석하였다.

〈표 II-41〉 정치경제이념 및 사회이념과 자기명명식 이념 간 상관

	1	2	3	4	5
1. 정치경제이념	-	.59**	.21**	.23**	.22**
2. 사회이념		-	.06*	.09**	.10**
3. 자기명명: 전반			-	.87**	.75**
4. 자기명명: 정치분야				-	.77**
5. 자기명명: 경제분야					-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통해 추론된 이념과 자기명명식 이념이 일관되지 않다는 결과는 요인분석에서도 관찰되었다. 8개 이슈와 자기명명식 이념을 함께 요인 분석한 결과 자기명명식 이념은 정치경제이념 및 사회이념과 구분되는 구성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통해 추론된 이념과 자기명명식 이념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명명식 이념은 북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경제, 사회적 이슈와는 별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표 II-42〉 이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성
1) 소득	0.70	-0.22	-0.47	0.51
2) 정부의 역할(생계, 복지)	0.64	-0.18	-0.60	0.52
3) 보편적 복지	0.74	-0.25	-0.45	0.56
4) 경쟁	0.51	-0.11	-0.15	0.27
5) 사회변화	0.53	-0.13	-0.52	0.37
6) 기업규제	0.63	-0.20	-0.40	0.41
7) 자유와 사회적 질서	0.23	0.01	-0.57	0.33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성
8) 교육기회	0.51	-0.14	-0.71	0.54
자기명명식: 전반적 성향	-0.21	0.92	0.01	0.85
자기명명식: 정치적 이슈에 대한 성향	-0.23	0.94	0.05	0.89
자기명명식: 경제적 이슈에 대한 성향	-0.21	0.81	0.07	0.66
아이겐값	3.46	2.04	0.40	
설명변량	35.59	21.08	9.34	
누적변량	35.59	56.67	66.01	
요인명	정치경제 이념	자기명명 이념	사회이념	

바. 정체성

본 연구에서는 민족정체성, 남한정체성, 단일민족신념, 북한주민과의 정체성을 조사하였다. 민족정체성은 한국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당위적 개념이다.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동하는 문항을 보완하기 위해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신념을 조사하는 한편 민족정체감이 가정하는 북한주민정체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였다. 우리 사회가 민족정체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민족정체성이 높으면 북한주민을 한민족에 일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단이 70년 이상 지속되면서 남한만을 한민족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논의하는 민족담론의 이중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편에서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만이 한민족임을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 속에서 논의되는 한민족의 성과,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은 대부분 남한의 경제적·문화적 성과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내집단투사모델(ingroup projection model), 내집단 즉 남한의 전형적 특징을 상위범주인 민족의 특징으로 투사

하면서 내집단과 상위범주를 동일시한다는 이론과 맥락이 닿아있다.⁸³⁾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4개 정체성 문항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정체성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남한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북한주민 정체성은 1년차 연구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⁸⁴⁾ 남북이 하나의 민족인지에 대한 문항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구성하였다.⁸⁵⁾ 측정은 모두 9점 척도에서 이루어졌다.

<민족정체성>

- 1) 전반적으로 귀하는 한민족 구성원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니까?
- 2) 귀하는 한민족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 3) 귀하는 귀하가 한민족 구성원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 4) 스스로 한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남한정체성>

- 1) 전반적으로 귀하는 남한국민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니까?
- 2) 귀하는 남한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 3) 귀하는 귀하가 남한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 4) 스스로 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83) Michael Wenzel, Amélie Mummendey, and Sven Waldzus, "Superordinate Identities and Intergroup Conflict: The Ingroup Projection Model,"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8, no. 1 (2008), pp. 331~372.

84) 박주화 외,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293~294.

85) 양계민,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4호 (2009), pp. 387~422.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신념〉

- 1) 남한과 북한은 단일민족으로서 유사성이 높은 집단이다.
- 2) 남한과 북한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으로 비슷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 3) 남한과 북한은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주민정체감〉

- 1) 전반적으로 귀하는 북한 사람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니까?
- 2) 귀하는 북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 3) 귀하는 귀하가 북한 사람들과 한민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 4) 스스로 북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4개 정체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세 개의 요인구조가 확인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민족정체성과 남한정체성이 결합된 요인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은 민족정체성과 남한정체성을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요인을 남한민족정체감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은 북한주민정체감과 단일민족 신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우리 국민의 한민족의 구성원은 남한주민뿐이며, 이러한 인식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비교적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민족정체감과 남한정체감이 남한민족정체감으로 묶이는 결과는 민족정체감 속에 남한정체감이, 남한정체감 속에 민족정체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남한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해서 민족에 대한 애착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는 전술한 하위집단의 특성이 상위집단의 특성으로 투사되는 내집단투사모형의 예측

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의미에서 민족정체감은 북한과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믿음, 그리고 북한주민에 대한 정체감으로 표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남한민족정체감, 단일민족신념, 북한주민정체감의 평균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43>에 제시하였다. 남한민족정체감의 문항 간 내적신뢰도는 .93, 단일민족신념의 문항 간 내적신뢰도는 .89, 북한주민정체감의 문항 간 내적신뢰도는 .94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43> 정체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성
2) 귀하는 남한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0.84	0.13	-0.39	0.87
4) 귀하는 스스로 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0.84	0.17	-0.41	0.90
3) 귀하는 남한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 집니까?	0.83	0.15	-0.38	0.85
4) 스스로 한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0.82	0.35	-0.51	1.05
1) 전반적으로 귀하는 남한 국민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니까?	0.80	0.12	-0.39	0.81
3) 귀하는 한민족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 집니까?	0.80	0.35	-0.50	1.00
2) 귀하는 한민족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0.74	0.31	-0.47	0.86
2) 귀하는 북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0.19	0.93	-0.50	1.14
3) 귀하는 귀하가 북한 사람들과 한민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 집니까?	0.30	0.89	-0.58	1.21
1) 전반적으로 귀하는 북한 사람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니까?	0.20	0.87	-0.51	1.05
4) 스스로 북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0.27	0.86	-0.56	1.13
2) 남한과 북한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으로 비슷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0.42	0.54	-0.88	1.24
1) 남한과 북한은 단일민족으로서 유사성이 높은 집단이다.	0.43	0.53	-0.88	1.24
3) 남한과 북한은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0.49	0.44	-0.82	1.11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성
아이겐값	6.75	3.01	1.09	
설명변량	48.23	21.53	7.78	
누적변량	48.23	69.76	77.54	
요인명	남한 민족 정체성	북한 주민 정체감	단일 민족 신념	

남한민족정체감의 평균은 6.19, 단일민족신념의 평균은 5.77, 북한주민정체감의 평균은 4.58이었다. 2019년 대비 남한민족정체감(2019년: 5.92점)과 단일민족신념(2019년: 4.99점)은 상승한 반면 북한주민정체감(2019년: 4.58점)은 하락하였다. 전반적으로 한민족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과 북한과 단일민족이라는 인지적 인식은 높지만 북한주민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이 낮은 결과는 민족이라는 집단에 북한주민이 제외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남성과 여성의 남한민족정체감은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남한민족정체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20대에서 40대까지의 남한민족정체감과 50대 이상의 남한민족정체감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집단의 남한민족정체감이 가장 낮았으며 월 소득 300만 원~500만 원 미만,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남한민족정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보의 남한민족정체감이 중도와 보수의 남한민족정체감보다 높았다.

단일민족신념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북이 단일민족이라는 믿음은 강했다는 점에서 남한민족정체감의 비슷했다. 월 소득이 증가할수록 단일민족신념이 강했으며 보수와 중도에 비해 진보가 단일민족신념이 강했다.

〈표 II-44〉 정체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단위: 명, %, 점)		사례 수	민족정체감	남한정체감	남한민족정체감	단일민족신념	북한주민정체감
2019년		1,000	5.67(0.05)	6.17(0.05)	5.92(0.04)	4.99(0.03)	4.71(0.05)
전체(2020년)		1,600	5.92(0.03)	6.46(0.04)	6.19(0.03)	5.77(0.04)	4.58(0.04)
성별	남성	796	6.00(0.05)	6.39(0.05)	6.20(0.05)	5.95(0.06)	4.80(0.06)
	여성	804	5.84(0.05)	6.52(0.05)	6.18(0.04)	5.61(0.06)	4.37(0.06)
연령	20대	278	5.56(0.09)	6.08(0.09)	5.82(0.08)	5.51(0.10)	4.49(0.11)
	30대	253	5.59(0.08)	6.26(0.09)	5.92(0.08)	5.56(0.10)	4.51(0.12)
	40대	314	5.87(0.07)	6.32(0.08)	6.09(0.07)	5.76(0.09)	4.62(0.09)
	50대	323	6.18(0.07)	6.60(0.08)	6.39(0.07)	5.94(0.09)	4.76(0.09)
	60세+	432	6.20(0.06)	6.80(0.06)	6.50(0.06)	5.96(0.08)	4.53(0.09)
연령 by 성별	남성 20대	146	5.58(0.13)	5.96(0.13)	5.77(0.12)	5.60(0.13)	4.64(0.16)
	여성 20대	132	5.55(0.12)	6.21(0.14)	5.88(0.12)	5.41(0.14)	4.33(0.15)
	남성 30대	129	5.66(0.11)	6.05(0.12)	5.86(0.11)	5.71(0.14)	4.77(0.14)
	여성 30대	124	5.51(0.12)	6.48(0.13)	5.99(0.11)	5.40(0.15)	4.24(0.19)
	남성 40대	158	6.03(0.10)	6.32(0.10)	6.17(0.10)	5.93(0.13)	4.89(0.12)
	여성 40대	156	5.71(0.09)	6.32(0.11)	6.02(0.10)	5.57(0.11)	4.36(0.14)
	남성 50대	165	6.21(0.11)	6.52(0.11)	6.37(0.10)	6.07(0.13)	4.94(0.13)
	여성 50대	158	6.14(0.09)	6.67(0.11)	6.41(0.10)	5.80(0.13)	4.57(0.13)
남성 60대+	198	6.34(0.09)	6.87(0.09)	6.61(0.09)	6.25(0.13)	4.76(0.13)	
여성 60대+	234	6.08(0.09)	6.75(0.09)	6.41(0.08)	5.72(0.11)	4.33(0.12)	
월 소득	~300만 원	375	5.68(0.07)	6.25(0.08)	5.96(0.07)	5.49(0.09)	4.43(0.09)
	300~500만 원	567	5.90(0.06)	6.53(0.06)	6.22(0.06)	5.87(0.07)	4.53(0.08)
	500만 원~	658	6.09(0.06)	6.54(0.06)	6.32(0.05)	5.84(0.07)	4.69(0.08)
이념	보수	316	6.06(0.08)	6.64(0.08)	6.35(0.07)	5.44(0.10)	4.10(0.10)
	중도	743	5.69(0.05)	6.20(0.05)	5.94(0.05)	5.49(0.06)	4.40(0.06)
	진보	541	6.17(0.06)	6.69(0.06)	6.43(0.06)	6.36(0.07)	5.12(0.08)
합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5.30(0.06)	5.80(0.07)	5.55(0.06)	4.69(0.08)	3.83(0.08)
	중간	803	5.84(0.04)	6.39(0.04)	6.12(0.04)	5.76(0.05)	4.57(0.06)
	높음	390	6.73(0.07)	7.27(0.07)	7.00(0.07)	6.93(0.08)	5.40(0.10)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388	5.86(0.08)	6.57(0.08)	6.22(0.07)	5.98(0.09)	4.44(0.09)
	중간	826	5.75(0.04)	6.19(0.05)	5.97(0.04)	5.57(0.05)	4.58(0.05)
	높음	386	6.36(0.07)	6.90(0.07)	6.63(0.06)	6.00(0.10)	4.74(0.12)
통일지향	낮음	335	5.39(0.08)	6.14(0.09)	5.76(0.08)	4.70(0.10)	3.01(0.09)
	중간	936	5.78(0.04)	6.27(0.04)	6.02(0.04)	5.68(0.04)	4.69(0.05)
	높음	329	6.87(0.07)	7.32(0.07)	7.10(0.06)	7.14(0.08)	5.88(0.09)
분단지향	낮음	306	6.05(0.09)	6.49(0.09)	6.27(0.08)	6.02(0.10)	4.53(0.10)
	중간	869	5.84(0.04)	6.31(0.05)	6.07(0.04)	5.77(0.05)	4.72(0.05)
	높음	425	6.01(0.07)	6.73(0.07)	6.37(0.07)	5.60(0.09)	4.35(0.11)
관여정책	낮음	369	5.56(0.08)	6.16(0.09)	5.86(0.08)	4.71(0.10)	3.21(0.09)
	중간	858	5.75(0.04)	6.31(0.04)	6.03(0.04)	5.68(0.05)	4.51(0.05)
	높음	373	6.64(0.07)	7.05(0.07)	6.85(0.06)	6.88(0.08)	5.88(0.09)
입박정책	낮음	334	5.82(0.05)	6.25(0.05)	6.04(0.05)	5.83(0.06)	4.73(0.06)
	중간	908	5.89(0.05)	6.49(0.06)	6.19(0.05)	5.88(0.06)	4.77(0.07)
	높음	358	6.17(0.08)	6.83(0.08)	6.50(0.07)	5.50(0.11)	4.03(0.12)

남성의 북한주민정체감이 여성의 북한주민정체감에 비해 높았다. 연령과 월 소득에 따른 북한주민정체감의 차이는 없었다. 보수와 중도에 비해 진보의 북한주민정체감이 높았다.

정체감과 준거변수들과의 상관은 <표 II-45>에 제시하였다. 민족정체감과 남한정체감이 민족남한정체감으로 묶였지만 차별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각 상관분석에 포함시켰다. 민족정체감, 남한정체감, 민족남한정체감은 상관의 방향 및 크기의 측면에서 동일한 개념임을 재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민족남한정체감은 모든 준거변수들과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남한정체감은 상대적으로 협력을 통한 평화($r=0.41$), 통일지향성($r=0.37$)과 뚜렷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 군사력을 통한 평화($r=0.10$), 분단지향성($r=0.06$), 압박정책($r=0.13$)과는 약한 상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단일민족민음은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통일지향성, 관여정책과 뚜렷한 상관(각각 $r=0.53$, $r=0.53$, $r=0.49$)을 보인 반면 군사력을 통한 평화, 분단지향성, 그리고 압박정책과는 부적 상관 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족정체감에 기대하는 패턴과 부합한다. 또한 북한주민정체감 역시 단일민족민음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패턴은 민족남한정체감이 남한정체감에, 단일민족민음 및 북한주민정체감이 민족정체감에 부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II-45〉 정체감과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민족정체감	0.39**	0.12**	0.40**	0.01	0.31**	0.09**
남한정체감	0.37**	0.07**	0.29**	0.10**	0.24**	0.15**
민족남한정체감	0.41**	0.10**	0.37**	0.06*	0.29**	0.13**
단일민족민음	0.53**	-0.02	0.53**	-0.07**	0.49**	-0.10**
북한주민정체감	0.37**	0.03	0.57**	-0.03	0.56**	-0.15**

사. 자기 검열

고착화된 갈등의 문화는 자기 검열(self-censorship) 기제를 통해 평화 문화로의 전환을 어렵게 한다.⁸⁶⁾

〈표 II-46〉 자기검열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자기검열	구분	사례 수	자기검열	
2019년		1,000	3.51(0.03)	이념	보수	316	3.39(0.06)
전체(2020년)		1,600	3.45(0.03)		중도	743	3.47(0.04)
					진보	541	3.45(0.05)
성별	남성	796	3.48(0.04)	협력을 통한평화	낮음	407	3.32(0.05)
	여성	804	3.41(0.04)		중간	803	3.50(0.03)
연령	20대	278	3.64(0.06)		높음	390	3.47(0.07)
	30대	253	3.52(0.06)	군사력을 통한평화	낮음	388	3.02(0.05)
	40대	314	3.34(0.06)		중간	826	3.45(0.03)
	50대	323	3.41(0.06)		높음	386	3.87(0.06)
	60세+	432	3.38(0.05)				

86) Daniel Bar-Tal, Eran Halperin, and Ruthie Pliskin, "Why Is It So Difficult to Resolve Intractable Conflicts Peacefully? A Sociopsychological Explanation," in *Handbook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ed. Mauro Galluccio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5), pp. 73~92; 고착화된 갈등 사회에서 자기검열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박주화 외,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pp. 55~56을 참고하면 된다.

구분		사례 수	자기검열	구분		사례 수	자기검열
연령 by 성별	남성 20대	146	3.78(0.08)	통일지향	낮음	335	3.16(0.06)
	여성 20대	132	3.47(0.09)		중간	936	3.51(0.03)
	남성 30대	129	3.58(0.08)		높음	329	3.54(0.07)
	여성 30대	124	3.45(0.10)	분단지향	낮음	306	3.21(0.06)
	남성 40대	158	3.46(0.08)		중간	869	3.52(0.03)
	여성 40대	156	3.22(0.08)		높음	425	3.46(0.06)
	남성 50대	165	3.35(0.09)	관여정책	낮음	369	3.19(0.05)
	여성 50대	158	3.47(0.08)		중간	858	3.44(0.03)
	남성 60대+	198	3.31(0.08)		높음	373	3.70(0.07)
	여성 60대+	234	3.45(0.06)				
월 소득	~300만 원	375	3.40(0.05)	압박정책	낮음	334	3.15(0.05)
	300~500만 원	567	3.48(0.05)		중간	908	3.51(0.03)
	500만 원~	658	3.44(0.04)		높음	358	3.56(0.07)

자기 검열은 자기검열 척도(self-censorship orientation scale) 중 4개 문항을 선택 번역하여 측정하였다.⁸⁷⁾

- 1) 우리 집단, 또는 조직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내부 고발자들은 그 정보가 정확하더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 2) 우리 집단의 부정적인 측면을 노출시키는 사람들은 적들에게 놀아나는 것이다.
- 3)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집단과 조직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는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 4) 팩트에 부합하고 신뢰가 있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부합하지 않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87) Keren Sharvit et al., "Self-Censorship Orientation: Scale Development, Correlates and Outcomes," *Journal of Social and Political Psychology*, vol. 6, no. 2 (2018), p. 341.

문항 간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5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평균은 <표 II-46>에 제시하였다. 자기 검열을 묻는 4개 문항의 평균은 3.45로 2019년(3.51점)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기검열이 강했으며, 40대의 자기검열이 가장 낮았고, 20대의 자기검열이 가장 강했다. 연령·성별 교차분석 결과 20대 남성의 자기검열 수준이 가장 높았고, 40대 여성의 자기검열수준이 가장 높았다.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의 자기검열 차이가 가장 컸다. 월 소득과 이념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II-47> 자기검열과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자기검열	0.07**	0.29**	0.13**	0.08**	0.21**	0.13**

<표 II-47>에 제시된 것처럼 자기검열은 모든 준거변수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자기검열은 군사력을 통한 평화($r=0.29$)와 관여정책($r=0.21$)과 상대적으로 강한 상관을 보였다. 자기검열이 강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와 관여정책을 지지한다는 결과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아. 소결

이번 절에서는 주관적 안녕, 정치적 효능감, 불평등 인식, 정치경제이념, 사회이념, 집단의 본질, 갈등의 본질, 정체감, 자기 검열 등의 사회적 신념이 한반도 평화인식과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적 신념의 수준을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분석

하였고 사회적 신념과 5개 준거변수에 대한 상관을 분석하였다. 소결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신념이 개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48>에 제시하였다.

단순 상관분석에서는 협력을 통한 평화와 모든 사회적 신념 간 상관은 유의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주관적 안녕, 갈등변화신념, 그리고 자기검열을 제외한 사회적 신념이 협력을 통한 평화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그중 예측력이 가장 높은 사회적 신념은 정체감이었다. 남과 북이 단일민족이라는 믿음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beta=0.31$), 민족남한정체감($\beta=0.15$), 북한주민정체감($\beta=0.13$)이었다. 정체감 외에 협력을 통한 변수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식은 집단변화신념($\beta=0.13$)이었다. 집단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을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집단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전술한 대로 적대적 정책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북한이 긍정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유화적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억제효과에 기인한 통계적 착시이다. 집단변화신념이 관여정책($\beta=0.12$) 및 압박정책($\beta=0.10$) 모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두 번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집단변화신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는 북한주민정체감, 단일민족정체감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신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정치경제이념($r=0.40$), 사회이념($r=0.32$)과의 상관이 높았다. 사회적 신념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회적 신념은 정치경제

이념($\beta=0.21$)과 자기검열($\beta=0.20$)이었다. 정치·경제적으로 보수일수록,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보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선호하였다. 또한 사회이념이 보수적일수록($\beta=0.13$), 남과 북이 단일민족이라는 믿음이 약할수록($\beta=-0.12$)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선호하였다. 또한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갈등의 본질에 대한 믿음, 즉 갈등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을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선호하였다($\beta=0.13$).

통일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신념은 정체감이었다. 북한주민정체감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beta=0.40$), 단일민족신념($\beta=0.21$) 및 민족남한정체감($\beta=0.14$)도 통일지향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였다. 정치경제이념이 진보일수록 통일지향성이 높았다($\beta=-0.06$). 반면 사회이념은 보수일수록 통일지향성이 높았다($\beta=0.07$). 비록 영향력의 크기가 크지 않지만 정체경제이념과 사회이념이 통일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통일지향성에 북한주민정체감 및 단일민족신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본 분석은 민족통일담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통일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통일의 유일한 명분으로 민족국가 회복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본 연구 결과는 민족통일담론에 대한 비판이 민족정체성이 통일지향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과는 구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민족의 재결합이라는 명분 이외에 통일의 명분을 발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들이 민족정체성이 중요성을 폄하하는 작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민족정체성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신념이 분단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

석되는 가운데($R^2=0.07$), 정치경제이념($\beta=0.16$)과 단일민족믿음($\beta=-0.15$)이 분단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경제적으로 보수일수록 분단지향성이 강했으며 남과 북이 단일민족이라는 믿음이 강할수록 분단을 반대하는 태도가 강했다. 반면 사회이념은 보수적일수록 분단지향성이 약한($\beta=-0.07$) 결과는 통일지향성과는 반대의 패턴이다. 자기명명식 이념의 경우 진보적일수록 통일지향성이 높고($\beta=0.21$) 분단지향성과는 관련이 없었다. 자기명명식 이념과 이슈에 기반한 이념 간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추가적 결과이다.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는 정치경제이념 및 사회이념을 제외한 사회적 신념과 유의미한 상관을 맺고 있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관여정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신념은 민족정체감이었다. 북한주민에 대한 정체감이 강할수록($\beta=0.42$), 남과 북이 단일민족이라는 믿음이 강할수록($\beta=0.17$)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했다. 반면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에 주관적 안녕 및 정치효능감을 제외한 사회적 신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회적 신념은 정치경제이념($\beta=0.33$)이었다. 정치경제이념이 보수적일수록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했다.

사회적 신념이 한반도 평화인식과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정한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성, 그리고 관여정책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믿음과 북한 주민에 대한 정체감, 즉 민족정체감이었다. 반면 군사력을 통한 평화, 분단지향성 그리고 압박정책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정치경제이념이었다. 두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민족정체감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에 강력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 인식의 변화는 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민족정체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민족정체성 관련),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정치경제이념 관련)가 필요하다. 평화를 향상하는 접근과 국민들의 우려를 예방하는 접근이 균형 있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표 II-48〉 사회적 신념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입박정책
1단계						
성별	-.04	-.11***	-.18***	.09***	-.04	.00
연령	.11***	.03	.08***	-.01	.02	-.06*
학력	.07**	.00	.00	.00	.00	-.04
이념	.25***	-.18***	.21***	-.02	.25***	-.22***
소득	.06*	.04	.05	.08**	.06*	.02
2단계						
주관적연령	.01	-.04	-.06**	.10***	.03	-.02
정치효능감	.08***	.03	.04	.04	.05*	-.06*
불평등인식	.10***	.09***	.08***	.05*	.15***	.09***
정치경제이념	-.07**	.21***	-.06*	.16***	-.06*	.33***
사회이념	-.07**	.13***	.07**	-.07*	-.02	-.03
집단변화신념	.13***	.00	.02	.06	.12***	.10***
갈등변화신념	-.05	.13***	.00	-.02	-.03	.07*
민족남한정체감	.15***	.05*	.14***	.04	.02	.15***
단일민족의심	.31***	-.12***	.21***	-.15***	.17***	-.10***
북한주민정체감	.13***	.03	.40***	.00	.42***	-.10***
자기검열	-.03	.20***	-.03	.06*	.05**	.07**
비교						
1단계 설명량(R ²)	.08	.05	.07	.01	.06	.04
2단계 설명량(R ²)	.38	.26	.43	.07	.42	.25
Durbin-Watson	1.94	1.92	1.94	2.05	1.94	2.05

4. 분단의 마음이 평화인식 및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

가.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

전쟁에 대한 태도와 평화에 대한 태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된 4개 문항(9점 척도, 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9점: 전적으로 동의한다)을 사용해 왔다.⁸⁸⁾

[평화에 대한 태도]

- 1)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되어야 한다.
- 2) 남북 간 모든 갈등은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3)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 4) 남북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사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전쟁에 대한 태도]

- 1) 한반도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 전쟁이 필요할 수 있다.
- 2)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끔찍한 것이지만 유용한 측면도 있다.
- 3) 남북 간의 전쟁은 남북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 4)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

평화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6.15로 2019년 대비 0.3점 감소하였다(〈표 II-49〉). 전쟁에 대한 평균은 3.65점으로 2019년 대비 0.45점 감소하였다. 평화에 대한 태도의 문항 간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5, 전쟁에 대한 태도의 문항 간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4였다.

88) Boris Bizumic et al., "On the (In)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 677.

평화에 대한 태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화에 대한 태도가 높았다.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반면 전쟁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다시 말해 20대가 전쟁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와 평화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연령·성별 교차분석 결과 평화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은 20대 여성이었으며, 전쟁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은 20대 남성이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 역시 증가하였다. 전쟁에 대한 태도는 월 소득 차 이와 무관하였다. 진보가 보수와 중도에 비해 평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반면 전쟁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표 II-49〉 평화, 전쟁에 대한 태도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평화태도	전쟁태도	구분	사례 수	평화태도	전쟁태도	
2019년	1,000	6.45(0.05)	4.10(0.06)	이념	보수	316	5.97(0.09)	3.77(0.11)
전체(2020년)	1,600	6.15(0.04)	3.65(0.05)		중도	743	5.81(0.05)	3.79(0.07)
남성	796	6.36(0.06)	3.89(0.07)		진보	541	6.73(0.06)	3.37(0.09)
여성	804	5.95(0.05)	3.41(0.07)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4.87(0.07)	4.33(0.08)
20대	278	5.68(0.09)	4.02(0.11)		중간	803	6.10(0.04)	3.73(0.07)
30대	253	5.92(0.09)	3.91(0.12)		높음	390	7.60(0.06)	2.76(0.11)
40대	314	6.18(0.09)	3.66(0.11)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388	6.55(0.09)	1.89(0.06)
50대	323	6.45(0.08)	3.48(0.11)		중간	826	5.85(0.04)	3.89(0.06)
60세+	432	6.36(0.08)	3.37(0.09)		높음	386	6.41(0.09)	4.88(0.10)
남성 20대	146	5.75(0.13)	4.51(0.13)	통일지향	낮음	335	5.15(0.09)	3.37(0.10)
여성 20대	132	5.61(0.11)	3.47(0.17)		중간	936	6.05(0.04)	3.80(0.06)
남성 30대	129	6.06(0.12)	4.27(0.16)		높음	329	7.47(0.07)	3.50(0.12)
여성 30대	124	5.78(0.14)	3.52(0.19)	분단지향	낮음	306	6.36(0.10)	3.33(0.11)
남성 40대	158	6.41(0.13)	3.93(0.15)		중간	869	6.10(0.05)	3.81(0.06)
여성 40대	156	5.94(0.12)	3.40(0.15)		높음	425	6.11(0.08)	3.55(0.10)
남성 50대	165	6.65(0.12)	3.63(0.16)	관여정책	낮음	369	5.10(0.08)	3.89(0.10)
여성 50대	158	6.25(0.11)	3.31(0.16)		중간	858	6.13(0.04)	3.54(0.06)
남성 60대+	198	6.72(0.11)	3.36(0.15)		높음	373	7.25(0.07)	3.65(0.12)

구분	사례 수	평화태도	전쟁태도	구분	사례 수	평화태도	전쟁태도	
여성 60대+	234	6.05(0.10)	3.39(0.12)	압박정책	낮음	6.49(0.09)	2.98(0.10)	
~300만 원	375	5.85(0.08)	3.66(0.10)		중간	908	6.15(0.04)	3.64(0.06)
300~500만 원	567	6.18(0.06)	3.65(0.08)		높음	358	5.85(0.10)	4.30(0.11)
500만 원~	658	6.30(0.06)	3.64(0.08)					

평화에 대한 태도는 협력을 통한 평화($r=0.70$), 통일지향성($r=0.53$), 그리고 관여정책($r=0.53$)과 뚜렷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군사력을 통한 평화 및 압박정책과는 비교적 약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평화에 대한 태도는 분단지향성과는 상관이 없었다. 전쟁에 대한 태도는 군사력을 통한 평화($r=0.57$)와 뚜렷한 정적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와 뚜렷한 부적 상관($r=-0.31$)을 보였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는 압박정책과는 약한 수준의 정적 상관, 관여정책과는 매우 약한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전쟁에 대한 태도는 분단지향성 및 통일지향성과는 상관이 없었다.

〈표 II-50〉 평화 및 전쟁에 대한 태도와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평화에 대한 태도	0.70**	-0.06*	0.53**	-0.02	0.53**	-0.12**
전쟁에 대한 태도	-0.31**	0.57**	0.02	0.02	-0.06*	0.21**

나. 관계에 대한 인식

고착화된 갈등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첫째, 내 집단(한국)의 목표가 정당하다는 신념 둘째,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 안보에 대한 강조 셋째,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우월적 의식 넷째,

경쟁적 희생자 인식 다섯째, 외집단의 악마화 여섯째, 단결 일치를 강조 일곱째, 애국심의 강조, 마지막으로 평화에 대한 추상적 인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고착화된 갈등이 어느 정도 내재화되었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에 대한 인식, 상대에 대한 인식, 우리에게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남북관계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정도와 경쟁적 희생자 인식으로 살펴보았다.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인식은 4개 문항(6점 척도, 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6점: 전적으로 동의한다.)으로 측정하였으며,⁸⁹⁾ 문항 간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9였다. **경쟁적 희생자 인식**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4문항(6점 척도)을 사용하였다.⁹⁰⁾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남북관계를 제로섬을 보는 인식〉

- 1)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남한의 손해이다.
- 2) 남북관계는 테니스 경기와 같다. 한 쪽이 패배해야만 다른 쪽이 승리할 수 있다.
- 3) 남북관계에서 한 쪽이 다른 쪽을 배려한다면 그 쪽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89) Joanna Różycka-Tran, Paweł Boski, and Bogdan Wojciszke, "Belief in a Zero-Sum Game as a Social Axio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46, no. 4 (2015), p. 529.

90) Masi Noor, Rupert J. Brown, and Garry Prentice, "Precursors and Mediators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A New Model,"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7 (2008), p. 488; Noa Schori-Eyal, Eran Halperin, and Daniel Bar-Tal, "Three Layers of Collective Victimhood: Effects of Multileveled Victimhood on Intergroup Conflicts in the Israeli-Arab Contex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44, no. 12 (2014), p. 783; Nurit Shnabel, Samer Halabi, and Masi Noor, "Overcoming Competitive Victimhood and Facilitating Forgiveness through Re-Categorization into a Common Victim or Perpetrator Ident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9, no. 5 (2013), p. 869.

- 4) 남북관계에서 한국과 북한의 이해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충돌한다.

〈경쟁적 희생자 인식〉

- 1) 지난 70년의 분단 기간 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고통에 시달렸다.
- 2) 지난 70년의 분단 기간 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 3) 지난 70년의 분단 기간 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
- 4) 지난 70년의 분단을 돌아보면 북한은 가해자, 남한은 피해자의 역사였다.

제로섬 인식의 평균은 3.52, 경쟁적 희생자 인식의 평균은 3.53이었다. 제로섬 인식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경쟁적 희생자 인식은 2019년(3.40점) 대비 소폭 강화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준거변수별 평균은 <표 II-51>에 제시하였다.

〈표 II-51〉 제로섬 인식과 경쟁적 희생자 인식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제로섬인식	경쟁적 희생자 인식	구분	사례 수	제로섬인식	경쟁적 희생자 인식	
2019년	1,000	3.47(0.04)	3.40(0.03)	이념	보수	316	3.72(0.06)	3.69(0.06)
전체(2020년)	1,600	3.52(0.03)	3.53(0.03)		중도	743	3.60(0.03)	3.56(0.03)
남성	796	3.51(0.04)	3.56(0.04)		진보	541	3.31(0.05)	3.39(0.05)
여성	804	3.54(0.04)	3.50(0.04)	협력을 통한평화	낮음	407	3.86(0.04)	3.62(0.05)
20대	278	3.75(0.06)	3.59(0.06)		중간	803	3.57(0.03)	3.56(0.03)
30대	253	3.60(0.06)	3.50(0.06)		높음	390	3.09(0.07)	3.36(0.07)
40대	314	3.46(0.06)	3.46(0.05)	군사력을 통한평화	낮음	388	2.72(0.05)	2.89(0.05)
50대	323	3.41(0.06)	3.55(0.06)		중간	826	3.54(0.03)	3.52(0.03)
60세+	432	3.47(0.05)	3.54(0.05)		높음	386	4.30(0.05)	4.18(0.06)
남성 20대	146	3.94(0.08)	3.84(0.08)	통일지향	낮음	335	3.78(0.06)	3.58(0.06)
여성 20대	132	3.54(0.09)	3.30(0.09)		중간	936	3.50(0.03)	3.50(0.03)
남성 30대	129	3.61(0.09)	3.59(0.09)		높음	329	3.33(0.07)	3.56(0.07)

구분	사례 수	제로섬인식	경쟁적 희생자 인식	구분	사례 수	제로섬인식	경쟁적 희생자 인식	
여성 30대	124	3.60(0.09)	3.42(0.09)	분단지향	낮음	306	3.20(0.06)	3.36(0.06)
남성 40대	158	3.43(0.09)	3.44(0.08)		중간	869	3.54(0.03)	3.54(0.03)
여성 40대	156	3.49(0.08)	3.47(0.07)		높음	425	3.72(0.06)	3.63(0.06)
남성 50대	165	3.37(0.09)	3.56(0.08)	관여정책	낮음	369	3.83(0.05)	3.60(0.06)
여성 50대	158	3.45(0.08)	3.53(0.08)		중간	858	3.44(0.03)	3.48(0.03)
남성 60대+	198	3.30(0.08)	3.42(0.08)		높음	373	3.43(0.07)	3.57(0.07)
여성 60대+	234	3.61(0.06)	3.64(0.07)	압박정책	낮음	334	2.85(0.06)	3.02(0.05)
~300만 원	375	3.57(0.05)	3.47(0.05)		중간	908	3.48(0.03)	3.49(0.03)
300~500만 원	567	3.56(0.04)	3.56(0.04)		높음	358	4.26(0.05)	4.09(0.06)
500만 원~	658	3.47(0.04)	3.53(0.04)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정도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 반면 남성의 경쟁적 희생자 인식이 여성의 경쟁적 희생자 인식에 비해 높았다. 50대와 60대의 제로섬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20대와 30대의 제로섬 인식이 가장 높았다. 두 집단군의 제로섬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성별 교차분석 결과 제로섬 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대 남성이었고, 가장 낮은 집단은 50대 여성이었다. 경쟁적 희생자 인식에 있어 연령차는 관찰되지 않았다. 월 소득에 따른 남북관계에 대한 두 인식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진보가 보수와 중도에 비해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인식, 경쟁적 희생자 인식이 낮았다.

<표 II-52> 제로섬 인식 및 경쟁적 희생자 인식과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제로섬인식	-0.30**	0.56**	-0.16**	0.16**	-0.13**	0.47**
경쟁적희생자인식	-0.12**	0.49**	-0.03	0.10**	0	0.38**

남북관계를 제로섬관계로 인식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선호 역시 강했으며($r=0.56$),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강했다($r=0.47$). 또한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인식은 분단지향성과도 약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r=0.16$). 반면 제로섬인식은 협력을 통한 평화($r=-0.30$), 통일지향성($r=-0.16$), 그리고 관여정책($r=-0.13$)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경쟁적 희생자 인식과 준거변수들 간의 상관은 제로섬인식과 준거변수들 간의 상관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남한이 북한에 비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r=0.49$) 및 압박정책($r=0.38$)에 대한 지지가 뚜렷했으며 분단지향성($r=0.10$)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경쟁적 희생자 인식은 협력을 통한 평화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0.12$). 경쟁적 희생자인식은 통일지향성과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상대에 대한 인식

상대, 즉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을 악마화하는 정도와 북한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로 측정하였다. 북한 악마화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3문항,⁹¹⁾ 연구진이 추가한 한 문항을 합친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6점 척도, 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6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문항 간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평균은 <표 II-53>에 제시하였다.

91) Shira Kudish, Smadar Cohen-Chen, and Eran Halperin, "Increasing Support for Concession-Making in Intractable Conflicts: The Role of Conflict Uniqueness,"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21, no. 2 (2015), p. 251.

- 1) 북한은 악의 축이다.
- 2)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적화통일이다.
- 3) 북한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 4) 북한은 절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표 II-53〉 북한 악마화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악마화	구분			사례 수	악마화
2019년			1,000	3.74(0.04)	이념	보수	316	4.49(0.06)	
전체(2020년)			1,600	3.92(0.03)		중도	743	3.95(0.04)	
성별	남성	796	3.97(0.04)	진보		541	3.54(0.05)		
	여성	804	3.88(0.04)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4.22(0.05)		
연령	20대	278	3.77(0.07)		중간	803	3.95(0.03)		
	30대	253	3.82(0.07)		높음	390	3.56(0.07)		
	40대	314	3.84(0.06)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388	3.17(0.06)		
	50대	323	3.99(0.06)		중간	826	3.90(0.03)		
	60세+	432	4.08(0.06)		높음	386	4.71(0.05)		
연령 by 성별	남성 20대	146	4.14(0.09)	통일지향	낮음	335	4.33(0.07)		
	여성 20대	132	3.36(0.11)		중간	936	3.82(0.03)		
	남성 30대	129	3.84(0.09)		높음	329	3.78(0.07)		
	여성 30대	124	3.81(0.10)	분단지향	낮음	306	3.74(0.07)		
	남성 40대	158	3.85(0.09)		중간	869	3.86(0.03)		
	여성 40대	156	3.84(0.08)		높음	425	4.17(0.06)		
	남성 50대	165	3.93(0.09)	관여정책	낮음	369	4.43(0.06)		
	여성 50대	158	4.04(0.09)		중간	858	3.79(0.03)		
	남성 60대+	198	4.05(0.09)		높음	373	3.71(0.07)		
	여성 60대+	234	4.11(0.07)		압박정책	낮음	334	3.07(0.06)	
월 소득	~300만 원	375	3.90(0.06)	중간		908	3.84(0.03)		
300~500만 원	567	3.92(0.05)	높음	358		4.91(0.04)			
500만 원~	658	3.93(0.05)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 부정의 차원으로 측정하고 있다(11점 척도, 0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10점: 전적으로 동의한다.). 긍정 이미지는 북한을 협력의 대상,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정도의 평균, 부정 이미지는 북한을 경계의 대상, 적대의 대상으로 보는 정도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표 II-54〉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사례 수	긍정이미지	부정이미지	구분	사례 수	긍정이미지	부정이미지	
2019년	1,000	5.21(0.05)	6.00(0.05)	이념	보수	316	5.00(0.14)	6.86(0.12)
전체(2020년)	1,600	5.60(0.05)	6.09(0.05)		중도	743	5.27(0.07)	6.07(0.07)
					진보	541	6.39(0.08)	5.65(0.09)
남성	796	5.67(0.08)	6.21(0.08)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4.17(0.11)	6.37(0.11)
여성	804	5.52(0.07)	5.96(0.08)		중간	803	5.67(0.06)	6.10(0.07)
					높음	390	6.93(0.10)	5.77(0.13)
20대	278	5.49(0.13)	6.02(0.12)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388	6.06(0.11)	4.79(0.11)
30대	253	5.66(0.14)	5.97(0.13)		중간	826	5.45(0.06)	6.04(0.06)
40대	314	5.78(0.11)	5.90(0.12)		높음	386	5.44(0.14)	7.49(0.11)
50대	323	5.70(0.12)	6.21(0.12)	통일지향	낮음	335	4.04(0.13)	6.59(0.13)
60세+	432	5.42(0.11)	6.23(0.11)		중간	936	5.65(0.06)	5.89(0.06)
					높음	329	7.02(0.10)	6.11(0.14)
남성 20대	146	5.28(0.19)	6.44(0.17)	분단지향	낮음	306	5.71(0.14)	5.79(0.14)
여성 20대	132	5.73(0.16)	5.55(0.17)		중간	869	5.61(0.06)	5.91(0.07)
					높음	425	5.49(0.12)	6.65(0.11)
남성 30대	129	5.83(0.19)	6.04(0.16)	관여정책	낮음	369	3.72(0.14)	6.93(0.13)
여성 30대	124	5.48(0.21)	5.90(0.21)		중간	858	5.65(0.05)	5.84(0.06)
					높음	373	6.99(0.10)	6.00(0.13)
남성 40대	158	5.91(0.15)	6.08(0.16)	압박정책	낮음	334	5.93(0.07)	5.22(0.07)
여성 40대	156	5.64(0.16)	5.72(0.16)		중간	908	5.74(0.08)	6.29(0.08)
					높음	358	4.71(0.15)	7.58(0.11)
남성 50대	165	5.86(0.18)	6.25(0.17)					
여성 50대	158	5.53(0.17)	6.18(0.17)					
남성 60대+	198	5.51(0.16)	6.24(0.17)					
여성 60대+	234	5.34(0.14)	6.22(0.14)					
~300만 원	375	5.37(0.11)	5.91(0.11)					
300~500만 원	567	5.51(0.09)	6.15(0.09)					
500만 원~	658	5.82(0.09)	6.08(0.09)					

북한을 악마화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r=0.53$) 및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r=0.58$), 그리고 분단지향성($r=0.14$)이 강했다. 반면 북한을 악마화할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r=-0.25$), 통일지향성($r=-0.19$) 그리고 관여정책($r=-0.24$)에 대한 지지는 약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준거변수의 상관은 악마화와 준거변수의 상관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북한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긍정적이었으며($r=0.53$), 통일지향성($r=0.51$) 및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r=0.54$)가 강했다. 반면 북한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r=-0.13$) 및 압박정책($r=-0.22$)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분단지향성과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상관이 없었다.

〈표 II-55〉 북한 악마화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악마화	-0.25**	0.53**	-0.19**	0.14**	-0.24**	0.58**
긍정이미지	0.53**	-0.13**	0.51**	-0.01	0.54**	-0.22**
부정이미지	-0.13**	0.50**	-0.09**	0.16**	-0.15**	0.47**

라. 우리에게 대한 인식

분단의 맥락에서 우리, 즉 남한에 대한 인식을 세 차원에서⁹²⁾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우월감, 단결(unity)의 필요성, 내집단의 정당성을 측정하였다. 한국의 우월감, 단결의 필요성, 내집단의 정당성은 EOC 척도(Ethos Of Conflict scale, 6점 척도, 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6점: 전적으로 동의한다.)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우월감은 2개 문항, 단결의 필요성은 3개 문항(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 .85), 내집단의 정당성은 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92) Daniel Bar-Tal et al., "Ethos of Conflict: The Concept and Its Measurement,"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8, no. 1 (2012), p. 48.

[북한에 대한 한국의 우월감]

- 1) 남한사람들은 북한사람들에 비해 우수한 특징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 2) 남한은 북한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단결의 필요성]

- 1)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기 보다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 2) 북한이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국민들은 일치단결해야 한다.
- 3) 다양성은 좋은 것이지만 적어도 북한문제에 있어서 다양성은 해악이 더 크다.

[남한의 정당성]

- 1) 남한은 북한지역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이북을 점령한 불법집단이기 때문이다.
- 2) 국제사회는 남한을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남한우월성은 성별, 연령, 월 소득, 이념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남한사람이 북한사람에 비해 우월하며, 도덕적으로도 남한이 우월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결에 대한 필요성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강했으며 진보와 중도에 비해 보수가 남한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성별과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남한이 북한에 비해 더 정당한 국가라는 인식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강했으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강했다. 진보에 비해 중도가, 중도에 비해 보수가 남한이 북한에 비해 더 정당한 국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II-56〉 우리에 대한 인식과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우월감	0.03	0.31**	-0.04	0.10**	-0.02	0.34**
남한정당성	-0.13**	0.51**	0.07**	0.02	-0.06*	0.43**
단결	-0.05	0.43**	0.02	0.06*	-0.02	0.46**

한국이 북한에 대해 우월하다는 인식은 군사력을 통한 평화 ($r=0.31$)와 압박정책($r=0.34$)과는 뚜렷한 정적 상관, 분단지향성 ($r=0.10$)과는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한국의 우월감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성, 관여정책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북한에 비해 정당하다는 인식 및 단결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과 준거변수들과의 상관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우월감과 준거변수들과의 상관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표 II-57〉 남한에 대한 인식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남한의 우월성	남한의 정당성	단결의 필요성	구분	사례 수	남한의 우월성	남한의 정당성	단결의 필요성	
2019년	1,000	3.69(0.03)	3.53(0.04)	3.94(0.03)	이념	보수	316	4.07(0.06)	3.90(0.07)	4.36(0.05)
전체(2020년)	1,600	3.98(0.02)	3.59(0.03)	3.97(0.02)		중도	743	3.96(0.03)	3.64(0.04)	3.94(0.03)
남성	796	3.96(0.03)	3.66(0.04)	4.02(0.03)		진보	541	3.95(0.05)	3.36(0.05)	3.79(0.04)
여성	804	4.00(0.03)	3.53(0.04)	3.93(0.03)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3.90(0.05)	3.71(0.06)	4.01(0.05)
20대	278	4.03(0.06)	3.52(0.08)	3.78(0.06)		중간	803	3.98(0.03)	3.62(0.03)	3.94(0.03)
30대	253	3.93(0.06)	3.42(0.07)	3.85(0.06)		높음	390	4.05(0.06)	3.42(0.07)	4.01(0.06)
40대	314	3.96(0.05)	3.52(0.06)	3.87(0.05)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388	3.65(0.05)	2.84(0.05)	3.52(0.05)
50대	323	3.90(0.06)	3.67(0.06)	4.10(0.06)		중간	826	3.90(0.03)	3.59(0.03)	3.88(0.03)
60세+	432	4.04(0.05)	3.74(0.05)	4.15(0.04)		높음	386	4.46(0.05)	4.37(0.05)	4.63(0.05)
남성 20대	146	4.14(0.08)	3.80(0.10)	4.05(0.08)	통일지향	낮음	335	4.15(0.06)	3.53(0.07)	4.01(0.06)
여성 20대	132	3.92(0.09)	3.22(0.11)	3.49(0.10)		중간	936	3.88(0.03)	3.55(0.03)	3.90(0.03)
남성 30대	129	3.82(0.08)	3.48(0.09)	3.82(0.08)		높음	329	4.08(0.06)	3.79(0.07)	4.14(0.06)

구분	사례 수	남한의 우월성	남한의 정당성	단결의 필요성	구분	사례 수	남한의 우월성	남한의 정당성	단결의 필요성	
여성 30대	124	4.05(0.08)	3.35(0.10)	3.87(0.08)	분단지향	낮음	3.89(0.06)	3.51(0.07)	3.88(0.06)	
남성 40대	158	3.98(0.07)	3.55(0.09)	3.87(0.08)		중간	869	3.93(0.03)	3.60(0.03)	3.95(0.03)
여성 40대	156	3.93(0.07)	3.48(0.08)	3.86(0.06)		높음	425	4.15(0.05)	3.64(0.06)	4.08(0.05)
남성 50대	165	3.85(0.08)	3.65(0.09)	4.06(0.08)	관여정책	낮음	3.69	4.13(0.06)	3.80(0.06)	4.13(0.06)
여성 50대	158	3.96(0.08)	3.69(0.09)	4.14(0.08)		중간	858	3.89(0.03)	3.49(0.03)	3.85(0.03)
남성 60대+	198	3.99(0.07)	3.78(0.08)	4.20(0.07)		높음	373	4.06(0.06)	3.64(0.07)	4.10(0.06)
여성 60대+	234	4.08(0.07)	3.71(0.06)	4.11(0.06)	압박정책	낮음	334	3.68(0.03)	3.00(0.06)	3.42(0.06)
~300만 원	375	3.91(0.05)	3.46(0.06)	3.91(0.05)		중간	908	4.06(0.04)	3.53(0.03)	3.91(0.03)
300~500만 원	567	4.02(0.04)	3.65(0.05)	3.96(0.04)		높음	358	4.49(0.05)	4.33(0.06)	4.64(0.05)
500만 원~	658	3.98(0.04)	3.62(0.05)	4.02(0.04)						

추가적으로 분단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분단의 중심성은 분단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것으로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⁹³⁾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87이었다. 분단중심성의 평균은 역채점하여 계산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평균은 <표 II-58>에 제시하였다.

- 1)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분단경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 2)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분단경험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의 관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3) 나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 4) 분단의 역사와 과정은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 아니다.

93) Johanna Ray Vollhardt, “Victim Consciousness and Its Effects on Intergroup Relations - A Double-Edged Swor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2009, p. 191.

〈표 II-58〉 분단중심성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분단중심성	구분		사례 수	분단중심성
2019년		1,000	4.39(0.03)	이념	보수	316	3.53(0.05)
전체(2020년)		1,600	3.54(0.02)		중도	743	3.46(0.03)
					진보	541	3.65(0.04)
성별	남성	796	3.58(0.03)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3.43(0.04)
	여성	804	3.50(0.03)		중간	803	3.46(0.03)
연령	20대	278	3.37(0.06)		높음	390	3.82(0.06)
	30대	253	3.37(0.06)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388	3.94(0.05)
	40대	314	3.52(0.05)		중간	826	3.56(0.03)
	50대	323	3.68(0.05)		높음	386	3.09(0.05)
	60세+	432	3.66(0.04)	통일지향	낮음	335	3.35(0.06)
연령 by 성별	남성 20대	146	3.27(0.08)		중간	936	3.54(0.03)
	여성 20대	132	3.47(0.09)		높음	329	3.71(0.07)
	남성 30대	129	3.40(0.08)	분단지향	낮음	306	3.93(0.05)
	여성 30대	124	3.34(0.09)		중간	869	3.52(0.03)
	남성 40대	158	3.59(0.08)		높음	425	3.29(0.05)
	여성 40대	156	3.44(0.07)	관여정책	낮음	369	3.49(0.05)
	남성 50대	165	3.75(0.07)		중간	858	3.57(0.03)
	여성 50대	158	3.59(0.07)		높음	373	3.51(0.06)
남성 60대+	198	3.76(0.07)	압박정책	낮음	334	3.94(0.05)	
여성 60대+	234	3.57(0.06)		중간	908	3.54(0.03)	
월 소득	~300만 원	375		3.56(0.05)	높음	358	3.16(0.06)
	300~500만 원	567	3.48(0.04)				
	500만 원~	658	3.58(0.04)				

분단중심성의 평균은 3.54점으로 2019년 대비 0.85점 하락하였다. 성별과 월 소득 차이에 따른 분단중심성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분단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진보가 중도에 비해 분단중심성이 높았다. 보수는 진보, 그리고 중도와 차이가 없었다.

〈표 II-59〉 분단중심성과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분단중심성	0.16**	-0.35**	0.15**	-0.25**	0	-0.29**

분단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해 긍정적이며($r=0.16$), 통일지향성 역시 강했다($r=0.15$). 반면 분단지향성은 군사력을 통한 평화($r=-0.35$), 분단지향성($r=-0.25$), 그리고 압박정책($r=-0.29$)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단순 상관 분석 결과이지만 분단중심성과 준거변수들 간의 관계는 통일교육에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 통일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일 자체에 초점을 두는 방식 외에 현재 한반도의 상황, 즉 분단에 대한 논의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마. 북한에 대한 정서

북한에 대한 정서(Emotion)는 20개 문항, 6점 척도(1점: 전혀 경험하지 (느끼지) 않음, 6점: 전적으로 경험함)로 측정하였다.⁹⁴⁾ 각 정서별 평균은 <그림 II-9>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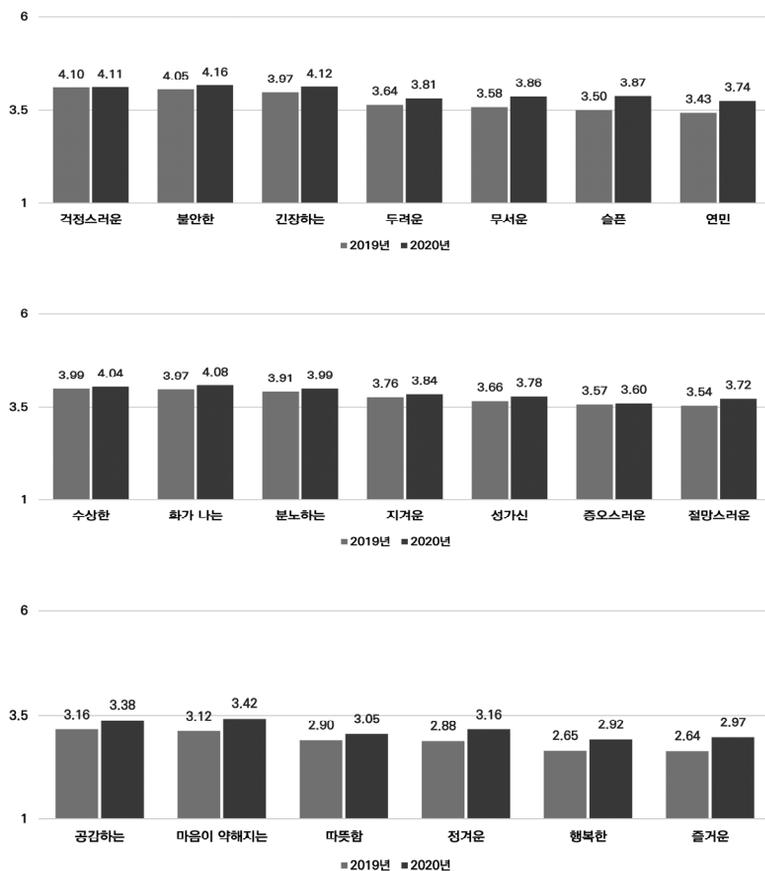
- | | | | |
|----------|-----------|---------|--------------|
| 1) 두려운 | 6) 증오스러운 | 11) 성가신 | 16) 마음이 약해지는 |
| 2) 무서운 | 7) 불안한 | 12) 지겨운 | 17) 공감하는 |
| 3) 긴장하는 | 8) 수상한 | 13) 즐거운 | 18) 연민 |
| 4) 분노하는 | 9) 걱정스러운 | 14) 정겨운 | 19) 슬픈 |
| 5) 화가 나는 | 10) 절망스러운 | 15) 행복한 | 20) 따뜻함 |

응답자들은 북한에 대해 생각할 때 ‘걱정스러운’ 정서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한’, ‘수상한’, ‘긴장하는’, ‘화가 나는’, ‘분노하는’, ‘지겨운’이 그 뒤를 따랐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정서가 우세한 가운데 따뜻한, 정겨운, 즐거운 등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94) Tania Tam et al., “The Impact of Intergroup Emotions on Forgiveness in Northern Ireland,”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vol. 10, no. 1 (2007), p. 124.

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모두 강도가 강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I-9〉 2019년과 2020년 북한에 대한 개별 정서의 평균



북한에 대한 정서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3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II-60〉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분노하는’, ‘증오스러운’, ‘화가 나는’, ‘성가신’, ‘지겨운’, ‘수상한’, ‘절망스러운’으로 이루어진 요인으로

공격정서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행복한’, ‘즐거움’, ‘따뜻함’, ‘정겨움’, ‘공감하는’, ‘마음이 약해지는’으로 이루어진 요인으로 방어정서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요인은 긍정정서로 명명하였다.

북한에 대한 세 정서 모두 성별, 연령,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념에 따른 차이만 관찰되었다. 중도와 진보에 비해 보수가 북한에 대한 공격정서가 강했다. 북한에 대한 방어정서의 경우 보수의 방어정서가 가장 강했고, 중도의 방어정서가 가장 약했다. 진보의 방어정서는 보수, 중도의 방어정서와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보수에 비해 중도가, 중도에 비해 진보가 북한에 대한 긍정정서가 강했다(〈표 II-61〉).

북한에 대한 정서와 준거변수들 간 상관을 예측한다면 긍정정서는 군사력을 통한 평화, 분단지향성 및 압박정책과 정적인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성 및 관여정책과는 부적의 상관을 가지고, 반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정반대의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일반적일 것이다. 북한에 대한 긍정정서와 준거변수 간 상관은 이러한 일반적인 직관과 일치하였다. 반면 북한에 대한 부정정서와 준거변수 간 상관은 일반적인 직관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패턴을 보였다(〈표 II-62〉).

먼저 북한에 대한 긍정정서는 관여정책($r=0.33$)과 통일지향성($r=0.31$)과 뚜렷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협력을 통한 평화와도 정적인 상관($r=0.19$)을 보였다. 반면 북한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느낄수록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는 낮아졌으며($r=-0.22$), 분단지향성도 약해졌다($r=-0.06$).

〈표 II-60〉 정서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성
4) 분노하는	0.75	-0.20	-0.39	0.75
6) 증오스러운	0.73	-0.16	-0.20	0.60
5) 화가 나는	0.69	-0.26	-0.36	0.67
11) 성가신	0.67	-0.17	-0.24	0.54
12) 지겨운	0.63	-0.15	-0.23	0.47
8) 수상한	0.59	-0.32	-0.32	0.54
10) 절망스러운	0.54	-0.08	-0.51	0.55
15) 행복한	-0.18	0.81	-0.05	0.69
13) 즐거운	-0.20	0.79	-0.06	0.67
20) 따뜻함	-0.21	0.79	-0.11	0.68
14) 정겨운	-0.26	0.77	-0.15	0.68
17) 공감하는	-0.16	0.66	-0.26	0.52
16) 마음이 약해지는	-0.10	0.58	-0.39	0.50
9) 걱정스러운	0.31	0.00	-0.60	0.46
7) 불안한	0.55	-0.17	-0.59	0.67
3) 긴장하는	0.46	-0.11	-0.56	0.54
1) 두려운	0.49	-0.02	-0.56	0.55
19) 슬픈	0.14	0.23	-0.54	0.36
2) 무서운	0.49	-0.08	-0.53	0.53
18) 연민	-0.07	0.39	-0.49	0.39
아이겐값	5.50	4.00	1.43	
설명변량	27.52	19.97	7.17	
누적변량	27.52	47.49	54.66	
요인명	공격정서	방어정서	긍정정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극정서는 일반적 기대와 일치하였다. 북한에 대해서 분노로 대표되는 부정적 적극정서를 강하게 느낄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r=0.31$)와 압박정책($r=0.34$)에 대한 지지가 강했다. 반면 북한에 대해 부정적극정서를 강하게 느낄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r=-0.14$), 통일지향성($r=-0.12$), 그리고 관여정책($r=-0.17$)에 대한 지지는 약화되었다.

흥미로운 부분은 두려움으로 대표되는 부정소극정서와 준거변수 간 상관이었다. 부정소극정서는 분단지향성을 제외한 5개 준거변수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성, 그리고 관여 정책과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정서와 유사하며, 군사력을 통한 평화 및 압박정책과 정적 상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극정서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소극정서가, “소극”이라는 명명이 상기하듯 유희적인 태도로 이어지며 강경한 정책을 회피하는 경향을 이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한반도 맥락에서 재확인시켜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⁹⁵⁾

〈표 II-61〉 북한에 대한 정서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공격정서	방어정서	긍정정서	구분	사례 수	공격정서	방어정서	긍정정서	
2019년	1,000	3.75(0.02)	3.75(0.02)	2.89(0.02)	이념	보수	316	4.15(0.05)	4.05(0.04)	2.87(0.06)
전체(2020년)	1,600	3.86(0.02)	3.95(0.02)	3.15(0.02)		중도	743	3.82(0.03)	3.90(0.03)	3.15(0.03)
남성	796	3.94(0.03)	3.95(0.02)	3.17(0.03)		진보	541	3.76(0.04)	3.97(0.03)	3.32(0.04)
여성	804	3.79(0.03)	3.95(0.03)	3.13(0.04)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4.02(0.04)	3.81(0.04)	2.93(0.05)
20대	278	3.74(0.06)	3.84(0.05)	3.21(0.06)		중간	803	3.83(0.03)	3.95(0.02)	3.19(0.03)
30대	253	3.84(0.05)	3.91(0.04)	3.31(0.06)		높음	390	3.77(0.05)	4.10(0.04)	3.31(0.05)
40대	314	3.87(0.05)	3.98(0.04)	3.12(0.05)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388	3.52(0.05)	3.88(0.04)	3.07(0.04)
50대	323	3.89(0.05)	4.01(0.04)	3.19(0.05)		중간	826	3.87(0.03)	3.93(0.02)	3.20(0.03)
60세+	432	3.93(0.04)	3.99(0.03)	3.01(0.05)		높음	386	4.19(0.05)	4.07(0.04)	3.13(0.06)
남성 20대	146	3.96(0.07)	3.84(0.07)	3.23(0.09)	통일지향	낮음	335	4.07(0.05)	3.86(0.04)	2.57(0.06)
여성 20대	132	3.50(0.08)	3.85(0.07)	3.19(0.08)		중간	936	3.80(0.03)	3.95(0.02)	3.28(0.03)
남성 30대	129	3.83(0.07)	3.90(0.05)	3.42(0.08)		높음	329	3.82(0.05)	4.04(0.04)	3.38(0.05)
여성 30대	124	3.85(0.08)	3.91(0.07)	3.20(0.10)	분단지향	낮음	306	3.82(0.05)	3.97(0.04)	3.10(0.05)
남성 40대	158	3.93(0.06)	3.98(0.05)	3.22(0.08)		중간	869	3.82(0.03)	3.95(0.02)	3.27(0.03)
여성 40대	156	3.82(0.07)	3.97(0.06)	3.03(0.08)		높음	425	3.99(0.04)	3.95(0.04)	2.94(0.05)

95) Eran Halperin and Ruthie Pliskin,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in Intractable Conflict: Studying Emotional Processes within a Unique Context,” *Political Psychology*, vol. 36, no. 1 (2015), p. 121; Jennifer S. Lerner and Dacher Keltner, “Fear, Anger, and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1, no. 1 (2001), pp. 146~147.

구분	사례 수	공격정서	방어정서	긍정정서	구분	사례 수	공격정서	방어정서	긍정정서	
남성 50대	165	4.00(0.06)	4.06(0.05)	3.16(0.07)	관여정책	낮음	369	4.19(0.05)	3.90(0.05)	2.66(0.06)
여성 50대	158	3.78(0.07)	3.96(0.06)	3.22(0.08)		중간	858	3.80(0.03)	3.93(0.02)	3.16(0.03)
남성 60대+	198	3.95(0.06)	3.96(0.05)	2.93(0.07)		높음	373	3.76(0.05)	4.04(0.04)	3.53(0.05)
여성 60대+	234	3.90(0.06)	4.00(0.05)	3.08(0.07)	압박정책	낮음	334	3.63(0.03)	3.87(0.02)	3.28(0.03)
~300만 원	375	3.83(0.05)	3.94(0.04)	3.14(0.05)		중간	908	3.85(0.03)	4.00(0.03)	3.24(0.04)
300~500만 원	567	3.86(0.03)	3.95(0.03)	3.15(0.04)		높음	358	4.37(0.05)	4.04(0.04)	2.77(0.06)
500만 원~	658	3.90(0.04)	3.99(0.03)	3.15(0.04)						

〈표 II-62〉 북한에 대한 정서와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부정소극정서	0.15**	0.09**	0.10**	0.01	0.08**	0.13**
부정적극정서	-0.14**	0.31**	-0.12**	0.08**	-0.17**	0.34**
긍정정서	0.19**	-0.01	0.31**	-0.06*	0.33**	-0.22**

바. 한국인과 북한주민에 대한 고정 관념

한국인과 북한주민에 특징을 28개 보기들 중 원하는 만큼 선택하였다.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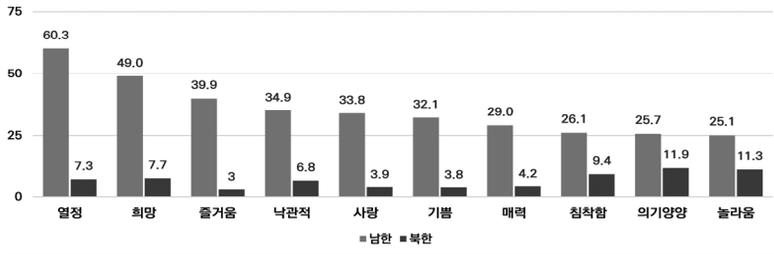
- | | | | |
|--------|------------|----------|---------|
| 1) 놀라움 | 8) 낙관적 | 15) 고통 | 22) 창피함 |
| 2) 침착함 | 9) 사랑 | 16) 두려움 | 23) 수치 |
| 3) 매력 | 10) 열정 | 17) 화남 | 24) 죄책감 |
| 4) 기쁨 | 11) 의기양양 | 18) 분노 | 25) 역겨움 |
| 5) 돌봄 | 12) 향수에 젖은 | 19) 허둥지둥 | 26) 우울함 |
| 6) 신남 | 13) 감탄 | 20) 섬뜩함 | 27) 암담함 |
| 7) 즐거움 | 14) 희망 | 21) 괴로움 | 28) 환멸 |

96) Tania Tam et al., "The Impact of Intergroup Emotions on Forgiveness in Northern Ireland," pp. 124~125.

〈그림 II-10〉에 한국인의 특징 중 가장 많이 선택된 10개 특성을, 〈그림 II-11〉은 북한 주민의 특징 중 가장 많이 선택된 10개 특성을 선택된 비율과 함께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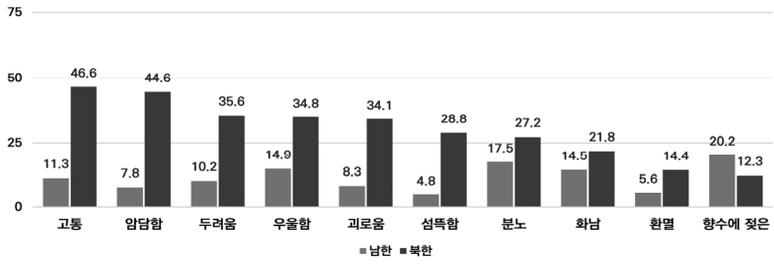
〈그림 II-10〉 한국인에 대한 상위 10개 고정관념과 선택된 비율

(단위: %)



〈그림 II-11〉 북한주민에 대한 상위 10개 고정관념과 선택된 비율

(단위: %)



〈그림 II-10〉, 〈그림 II-11〉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국민에 대한 고정관념은 북한주민은 보유하지 않은 긍정적인 특성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은 보유하지 않은 고정관념은 부정적이었으며 한국인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소결

이번 절에서는 분단의 심리, 특히 관계에 대한 인식, 상대에 대한 인식, 우리에게 대한 인식, 구체적으로 제로섬인식, 경쟁적 희생자인식, 방어정서, 공격정서, 긍정정서, 우월감, 악마화, 단결, 긍정이미지, 부정이미지, 남한정당성, 분단중심성이 한반도 평화인식과 통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결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단의 심리가 개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63>에 제시하였다. 평화에 대한 태도는 협력을 통한 평화와 강한 상관, 전쟁에 대한 태도는 군사력을 통한 평화와 강한 상관을 보였기 때문에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협력을 통한 평화와 분단의 심리의 단순 상관분석에서는 한국사회의 우월감 및 단결의 필요성을 제외한 모든 분단의 심리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분단의 심리 중 협력을 통한 평화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북한에 대한 긍정 이미지였다($\beta=0.43$). 두 번째로 강한 영향력을 가진 분단의 심리는 제로섬 인식이었다.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할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지지하는 정도가 약했다($\beta=-0.23$). 단순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 한국사회의 우월감 및 단결의 필요성이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은 억제효과로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긍정정서를 제외한 모든 분단의 심리와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과 상관은 유의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가장 영향력이 큰 분단의 심리는 제로섬 인식이었다. 남북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지지하였다($\beta=0.28$). 북한에 대한 부정 이미지가 강할수록($\beta=0.16$),

한국이 한반도에서 북한보다 정당성을 가진 국가로 생각할수록($\beta=0.15$),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지지하였다.

평화를 실현하는 두 유형의 방식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단의 심리는 제로섬 인식이었다.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인식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을 선호하는 반면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부정적이었다. 효과크기는 크지 않지만 북한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정서가 부정적이라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소극적 부정정서는 협력을 통한 평화에는 정적,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적극적 부정정서는 반대의 패턴이 관찰되었다. 공격적 부정정서는 ‘공격(fight)’ 반응을, 방어적 부정정서는 ‘도주(flight)’ 반응을 유도한다는 정서평가이론(emotion appraisal theory)의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이다.⁹⁷⁾

통일지향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였다. 북한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강하게 느낄수록 통일지향성이 강했다($\beta=0.42$). 같은 맥락에서 북한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느낄수록 통일지향성이 강했다($\beta=0.13$). 북한에 비해 한국이 더 정당한 국가라고 느낄수록 통일지향성이 강했고($\beta=0.21$), 단결이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통일지향성이 강했지만($\beta=0.12$), 단순상관 결과를 고려한다면(정당성: $r=-0.07$, 단결: $r=0.02$) 두 변수의 효과는 억제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분단지향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단의 심리는 분단중심성이었다. 분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분단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며, 분단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는 인식이 강할수록 분단이 지속되는 것에 부

97) Eran Halperin and Ruthie Pliskin,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in Intractable Conflict: Studying Emotional Processes within a Unique Context,” p. 124.

정적이었다($\beta=-0.24$). 분단에 대한 인식은 통일지향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분단 중심성이 높을수록 통일지향성이 강했다($\beta=0.12$). 결국 분단에 대한 사고, 분단에 대한 성찰이 분단 지속에 대해 부정적 인식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양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을 고려했음에도 분단에 대한 성찰이 통일지향성과 분단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분단중심성의 효과가 실제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관여정책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분단의 심리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beta=0.44$) 및 긍정 정서($\beta=0.11$)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악마화가 약할수록($\beta=-0.11$)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강했다. 경쟁적 희생자인식($\beta=0.08$), 우월감($\beta=0.05$), 단결($\beta=0.15$)은 모두 관여정책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단순상관 분석 결과를 고려한다면 억제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분단중심성은 관여정책에 대해서도 부적 영향을 미쳤다($\beta=-0.07$). 분단에 대한 성찰이 남과 북의 바람직한 미래상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압박정책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분단의 심리는 북한에 대한 악마화($\beta=0.26$)와 제로섬 인식($\beta=0.12$)이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통일지향성, 및 관여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단의 심리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및 압박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단의 심리는 제로섬 인식과 북한에 대한 악마화였다. 북한과 협력을 추동하는 태도가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기보다는 추상적인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에 대한 추상적 이미지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인식은 정책 개입의 내용과 방향 설정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태도가 제로섬 인식 및 북한에 대한 악마화 등 구체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결과와 대조된다. 물론 본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제3의 변수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성 및 관여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협력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태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북한에 대한 추상적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정책적 노력 역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

5. 화해의 마음이 평화인식 및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

가. 분단의 책임

분단의 책임은 분단의 지속을 북한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죄책감,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모두 분단의 희생자라는 인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의 책임을 묻는 세 문항,⁹⁸⁾ 죄책감을 묻는 네 문항,⁹⁹⁾ 그리고 공통 희생자 인식을 묻는 세 문항을 구성하였다.¹⁰⁰⁾ 모든 문항은 6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85, .74 그리고 .69였다. 북한의 책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죄책감, 포괄적 희생자 인식의 평균은 <표 II-64>에 제시하였다.

[북한의 책임]

- 1) 지금까지 남북한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북한의 책임이다.
- 2) 만일 북한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했다면 남북한의 갈등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
- 3) 북한은 평화로운 갈등해결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의 평화로운 갈등해결은 불가능하다.

98) Masi Noor, Rupert J. Brown, and Garry Prentice, "Precursors and Mediators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A New Model," p. 487.

99) Bertjan Doosje, Nyla R. Branscombe, Russell Spears, and Antony S. R. Manstead, "Guilty by Association: When One's Group Has a Negative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vol. 75, no. 4 (1998), pp. 875~876.

100) Johanna Ray Vollhardt, "Victim Consciousness and Its Effects on Intergroup Relations - A Double-Edged Sword?," p. 143.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죄책감]

- 1) 나는 우리 사회가 허위 간첩 사건과 같이 북한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나는 우리 사회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행한 행위들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나는 우리 사회가 북한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4) 나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때 죄책감이 든다.

[포괄적 희생자 인식]

- 1) 남한이 받은 분단의 고통과 북한이 받은 분단의 고통은 비슷하다.
- 2) 분단으로 인해 북한이 겪고 있는 불공정성과 불평등은 남한이 겪고 있는 불공정성과 불평등과 유사성이 높다.
- 3) 남한과 북한은 모두 분단의 피해자이다.

분단 지속이 북한의 책임인지 묻는 세 문항의 평균은 3.96으로 2019년의 평균(3.97)과 차이가 없었다. 성별, 연령, 소득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령과 성별의 교차분석 결과 20대 남성이 20대 여성보다 분단지속이 북한의 책임이라는 의견이 강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스스로를 보수로 생각하는 집단이 스스로를 진보와 중도로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분단 지속을 북한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강했다. 진보와 중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64〉 분단책임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북한책임	죄책감	공통희생자	구분	사례 수	북한책임	죄책감	공통희생자	
2019년	1,000	3.97(0.03)	3.58(0.03)	3.75(0.03)	이념	보수	316	4.22(0.06)	3.28(0.05)	3.46(0.05)
전체(2020년)	1,600	3.96(0.02)	3.59(0.02)	3.72(0.02)		중도	743	3.95(0.03)	3.52(0.03)	3.64(0.03)
남성	796	3.96(0.04)	3.64(0.03)	3.69(0.03)		진보	541	3.81(0.04)	3.87(0.04)	3.98(0.04)
여성	804	3.95(0.03)	3.55(0.03)	3.75(0.03)	합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4.05(0.05)	3.18(0.04)	3.29(0.05)
20대	278	3.93(0.06)	3.59(0.05)	3.83(0.06)		중간	803	3.96(0.03)	3.60(0.02)	3.76(0.03)
30대	253	3.96(0.06)	3.67(0.05)	3.76(0.05)		높음	390	3.86(0.06)	4.00(0.05)	4.08(0.05)
40대	314	3.89(0.05)	3.64(0.05)	3.73(0.05)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388	3.59(0.05)	3.66(0.04)	3.84(0.04)
50대	323	3.92(0.06)	3.65(0.04)	3.72(0.05)		중간	826	3.86(0.03)	3.54(0.02)	3.64(0.03)
60세+	432	4.05(0.05)	3.47(0.04)	3.60(0.05)		높음	386	4.54(0.05)	3.64(0.06)	3.77(0.06)
남성 20대	146	4.04(0.09)	3.59(0.08)	3.75(0.09)	통일지향	낮음	335	4.12(0.07)	3.02(0.05)	3.26(0.06)
여성 20대	132	3.81(0.08)	3.58(0.08)	3.93(0.08)		중간	936	3.87(0.03)	3.62(0.02)	3.72(0.02)
남성 30대	129	3.89(0.09)	3.73(0.07)	3.76(0.07)		높음	329	4.04(0.06)	4.10(0.05)	4.18(0.05)
여성 30대	124	4.04(0.08)	3.62(0.08)	3.76(0.07)	분단지향	낮음	306	3.71(0.06)	3.47(0.05)	3.54(0.06)
남성 40대	158	3.89(0.07)	3.72(0.06)	3.70(0.07)		중간	869	3.89(0.03)	3.65(0.03)	3.74(0.03)
여성 40대	156	3.89(0.08)	3.57(0.07)	3.76(0.07)		높음	425	4.27(0.05)	3.57(0.05)	3.80(0.05)
남성 50대	165	3.97(0.08)	3.66(0.06)	3.68(0.07)	관여정책	낮음	369	4.13(0.06)	2.92(0.04)	3.14(0.05)
여성 50대	158	3.87(0.08)	3.65(0.06)	3.76(0.06)		중간	858	3.88(0.03)	3.59(0.02)	3.71(0.02)
남성 60대+	198	4.02(0.07)	3.53(0.07)	3.60(0.06)		높음	373	3.98(0.06)	4.26(0.04)	4.30(0.05)
여성 60대+	234	4.09(0.06)	3.42(0.06)	3.61(0.06)	압박정책	낮음	334	3.27(0.05)	3.69(0.05)	3.75(0.05)
~300만 원	375	3.96(0.05)	3.44(0.04)	3.66(0.05)		중간	908	3.89(0.02)	3.65(0.02)	3.75(0.02)
300~500만 원	567	3.97(0.04)	3.64(0.03)	3.75(0.04)		높음	358	4.77(0.05)	3.34(0.06)	3.61(0.06)
500만 원~	658	3.94(0.04)	3.64(0.04)	3.72(0.04)						

북한 문제를 편향된 시각으로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한 역사에 대한 죄책감을 묻는 네 개 문항의 평균은 3.59로 2019년(3.58)과 다르지 않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죄책감의 평균이 높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월 소득 300만 원~500만 원 미만 집단 및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죄책감 평균이 월 소득수준이 300만 원 미만인 집단의 죄책감 평균에 비해 높았다. 이념에 따른 차이의 경우 보수에 비해 중도가, 중도에 비해 진보가 죄책감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한과 북한이 모두 분단의 희생자라는 포괄적 희생자 인식의 평

균은 3.72로 2019년 평균인 3.75와 차이가 없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포괄적 희생자 인식이 높았다. 20대가 남북이 모두 분단의 희생자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60대의 포괄적 희생자 인식이 가장 낮았다.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였다. 30대, 40대, 50대의 포괄적 희생자 인식은 20대 및 60대와 다르지 않았다. 20대 남성의 포괄적 희생자 인식은 20대 여성의 포괄적 희생자 인식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보수보다 중도, 중도보다 진보가 남북이 모두 분단의 희생자라는 인식이 높았다.

〈표 II-65〉 분단의 책임과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북한책임	-0.12**	0.37**	-0.05**	0.22**	-0.07**	0.55**
죄책감	0.42**	-0.04	0.47**	0.07**	0.61**	-0.15**
공통희생자인식	0.39**	-0.05*	0.38**	0.13**	0.54**	-0.04

북한의 책임, 죄책감, 및 공통 희생자 인식과 6개 준거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분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인식은 압박정책($r=0.55$) 및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r=0.37$)과 뚜렷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책임은 분단지향성과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0.22$). 반면 북한의 책임은 협력을 통한 평화($r=-0.12$), 통일지향성($r=-0.05$), 및 관여정책($r=-0.07$)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북한 및 남북관계 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고 남과 북이 모두 분단의 희생자라는 인식과 준거변수 간 상관

은 북한의 책임과 준거변수 간 상관과 반대의 패턴을 보였다. 북한 및 남북관계 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클수록 관여정책($r=0.61$)에 대한 지지, 통일지향성($r=0.47$) 및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r=0.42$)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죄책감은 분단지향성과도 약한 수준,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북한 및 남북관계 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강할수록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는 낮았으며($r=-0.15$), 군사력을 통한 평화와는 상관이 없었다. 남과 북이 모두 분단의 희생자라는 인식과 준거변수 간 상관은 죄책감과 준거변수의 상관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협력을 통한 평화($r=0.39$), 관여정책($r=0.54$), 통일지향성($r=0.38$)과는 뚜렷한 상관을, 분단지향성과는 약한 상관($r=0.13$)을 보였다.

나. 화해에 대한 기대

화해에 대한 기대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희망, 북한에 대한 신뢰, 북한에 대한 공감의 정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북한의 책임을 묻는 세 문항은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신뢰를 묻는 세 문항과¹⁰¹⁾ 북한에 대한 공감을 묻는 세 문항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구성하였다.¹⁰²⁾ 모든 문항은 6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91, .91 그리고 .80이었다. 각각의 평균은 <표 II-66>에 제시하였다.

101) Tania Tam et al., "Intergroup Trust in Northern Irelan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5, no. 1 (2009), pp. 47~48.

102) Masi Noor, Rupert J. Brown and Garry Prentice, "Precursors and Mediators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A New Model," p. 488.

[한반도 문제에 대한 희망]

- 1) 나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 2) 나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 3) 나는 남북 간의 평화 공존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신뢰]

- 1) 북한이 남한에 유감을 표시할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다.
- 2)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고 말할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다.
- 3)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할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공감]

- 1)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2)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었다.
- 3)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외부세계가 북한의 체제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 4) 조건이 맞는다면 북한은 비핵화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는 희망의 평균은 3.62로 2019년 평균인 3.41보다 상승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신뢰의 평균 역시 2019년 대비 .22 상승한 3.06이었다. 반면 북한에 대한 공감도는 2019년 대비 다소 하락한 3.43이었다. 북한에 대한 공감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희망과 북한을 신뢰하는 정도는 상승한 반면 북한의 핵 개발을 중심으로 한 공감도가 다소 하락한 본 조사 결과는 한반도 문제 진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여전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는 희망의 남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0대와 30대의 남북관계를 희망적으로 보는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60대가 가장 낮았다. 20대 및 30대의 남북관계 희망의 평균은 60대의 남북관계 희망의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40대와 50대의 평균은 다른 세 집단과 다르지 않았다.

북한을 신뢰하는 정도에 있어 남녀의 차이,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희망과 같이 북한에 대한 신뢰는 20대가 가장 높았으며 60대가 가장 낮았다. 특히 20대는 50대와 60대에 비해 북한을 신뢰하는 정도가 더 강했다. 보수보다 중도, 중도보다 진보가 북한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표 11-66〉 화해에 대한 기대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희망	신뢰	공감	구분	사례 수	희망	신뢰	공감	
2019년	1,000	3.41(0.04)	2.84(0.04)	3.49(0.03)	이념	보수	316	3.07(0.07)	2.53(0.07)	3.11(0.06)
전체(2020년)	1,600	3.62(0.03)	3.06(0.03)	3.43(0.03)		중도	743	3.51(0.04)	3.02(0.04)	3.32(0.04)
남성	796	3.65(0.04)	3.06(0.04)	3.50(0.04)		진보	541	4.07(0.04)	3.45(0.05)	3.75(0.04)
여성	804	3.58(0.04)	3.07(0.04)	3.35(0.04)	협력을 통한평화	낮음	407	3.01(0.05)	2.69(0.06)	2.98(0.05)
20대	278	3.74(0.06)	3.30(0.07)	3.41(0.07)		중간	803	3.59(0.03)	3.13(0.04)	3.44(0.03)
30대	253	3.77(0.06)	3.27(0.07)	3.58(0.07)		높음	390	4.31(0.05)	3.32(0.06)	3.87(0.05)
40대	314	3.67(0.06)	3.10(0.06)	3.49(0.05)	군사력을 통한평화	낮음	388	3.94(0.05)	3.10(0.05)	3.41(0.05)
50대	323	3.57(0.06)	2.99(0.07)	3.44(0.06)		중간	826	3.53(0.03)	3.06(0.03)	3.40(0.03)
60세+	432	3.44(0.06)	2.82(0.06)	3.29(0.05)		높음	386	3.48(0.07)	3.03(0.08)	3.50(0.07)
남성 20대	146	3.66(0.09)	3.23(0.10)	3.50(0.09)	통일지향	낮음	335	2.94(0.06)	2.32(0.06)	2.74(0.06)
여성 20대	132	3.83(0.09)	3.39(0.09)	3.30(0.10)		중간	936	3.63(0.03)	3.15(0.03)	3.49(0.03)
남성 30대	129	3.82(0.08)	3.24(0.10)	3.73(0.08)		높음	329	4.25(0.06)	3.59(0.07)	3.94(0.06)
여성 30대	124	3.72(0.09)	3.30(0.10)	3.43(0.10)	분단지향	낮음	306	3.46(0.07)	2.91(0.06)	3.29(0.06)
남성 40대	158	3.76(0.08)	3.20(0.08)	3.57(0.07)		중간	869	3.65(0.03)	3.18(0.04)	3.47(0.03)
여성 40대	156	3.58(0.08)	3.00(0.08)	3.42(0.08)		높음	425	3.66(0.06)	2.93(0.07)	3.44(0.06)
남성 50대	165	3.64(0.09)	2.96(0.09)	3.51(0.08)	관여정책	낮음	369	2.68(0.05)	2.25(0.06)	2.67(0.06)
여성 50대	158	3.51(0.08)	3.02(0.09)	3.36(0.08)		중간	858	3.65(0.03)	3.11(0.03)	3.43(0.03)
남성 60대+	198	3.46(0.08)	2.80(0.09)	3.30(0.07)		높음	373	4.46(0.05)	3.75(0.06)	4.18(0.05)
여성 60대+	234	3.41(0.07)	2.83(0.08)	3.28(0.07)	압박정책	낮음	334	3.88(0.06)	3.26(0.05)	3.51(0.06)
~300만 원	375	3.48(0.05)	3.00(0.06)	3.36(0.05)		중간	908	3.68(0.03)	3.16(0.03)	3.48(0.03)
300~500만 원	567	3.66(0.04)	3.06(0.05)	3.46(0.04)		높음	358	3.21(0.08)	2.63(0.08)	3.20(0.07)
500만 원~	658	3.65(0.04)	3.11(0.05)	3.44(0.04)						

북한을 신뢰하는 정도에 있어 남녀의 차이,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희망과 같이 북한에 대한 신뢰는 20대가 가장 높았으며 60대가 가장 낮았다. 특히 20대는 50대와 60대에 비해 북한을 신뢰하는 정도가 더 강했다. 보수보다 중도, 중도보다 진보가 북한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표 II-67〉 화해에 대한 기대와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희망	0.49**	-0.18**	0.45**	0.09**	0.62**	-0.21**
신뢰	0.26**	-0.04**	0.40**	0.02	0.51**	-0.21**
공감	0.36**	0.02**	0.42**	0.08**	0.57**	-0.10**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희망, 북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북한에 대한 공감으로 구성된 화해에 대한 기대는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성, 관여정책과는 뚜렷한 정적 상관, 분단지향성과는 약한 정적 상관 또는 무상관을 보였다. 반면 군사력을 통한 평화와 압박정책과는 부적상관 또는 무상관을 보였다. 구체적 상관의 크기는 〈표 II-6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화해의도

화해의도는 북한을 용서할 수 있는지, 북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볼 용의가 있는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 용서의의도와 새로운 정보 획득 의도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각각 네 문항과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연구진의 협

의로 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6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북한 용서의도의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69, 새로운 정보 획득의 의도의 문항 간 신뢰도는 .88이었다. 세 차원의 평균은 <표 II-68>에 제시하였다.

[북한 용서의도]¹⁰³⁾

- 1) 남과 북이 과거사를 종결하는 방식을 배우지 않는 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 2)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남북한 간 정치적 갈등은 해소될 수 있다.
- 3)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똑같이 복수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 4) 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새로운 정보 획득 의도]¹⁰⁴⁾

- 1)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뉴스를 볼 때, 나는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 2) 남북 간 갈등에 대해 남한의 견해와 다른 입장을 보이는 해외의 다른 뉴스를 받아볼 용의가 있다.
- 3) 남북 갈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영화나 책을 읽어볼 용의가 있다.
- 4) 북한의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103) Scott L. Moeschberger et al., "Forgiveness in Northern Ireland: A Model for Peace in the Midst of the "Troubles","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1, no. 2 (2005), pp. 205~206; Miles Hewstone et al., "Intergroup Contact, Forgiveness, and Experience of "the Troubles" in Northern Ireland,"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62, no. 1 (2006), pp. 103~104; Masi Noor, Rupert J. Brown, and Garry Prentice, "Precursors and Mediators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A New Model," p. 487.

104) Eran Halperin and Daniel Bar-Tal, "Socio-Psychological Barriers to Peace Making: An Empirical Examination within the Israeli Jewish Society,"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8, no. 5 (2011), p. 643.

게 보도하는지 읽어볼 용의가 있다.

- 5) 북한의 정부요인이 설명하는 남북갈등과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들어볼 용의가 있다.

[북한체제 인정]

한국의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1991년 남북 동시 UN 가입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맺어진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을 용서할 수 있는지 묻는 네 문항의 평균은 3.96으로 2019년 대비 .08 상승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의향을 묻는 다섯 문항의 평균은 2019년 대비 .10 상승한 3.67이었다. 북한에 대한 용서, 그리고 새로운 정보 획득 의도는 모두 중앙치인 3.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의 평균은 3.87로 역시 중앙치 3.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시 말해 북한과의 화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성별, 연령, 월 소득에 따른 북한 용서 의도의 차이는 없었다. 보수 및 중도에 비해 진보의 북한 용서 의도가 더 강했다. 보수와 중도의 차이는 없었다.

〈표 II-68〉 화해의도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용서의도	행동의도	체제인정	구분	사례 수	용서의도	행동의도	체제인정	
2019년	1,000	3.88(0.03)	3.57(0.03)	-	이념	보수	316	3.78(0.05)	3.38(0.05)	3.54(0.07)
전체(2020년)	1,600	3.96(0.02)	3.67(0.02)	3.87(0.03)		중도	743	3.87(0.03)	3.62(0.03)	3.76(0.04)
남성	796	3.95(0.03)	3.70(0.03)	3.88(0.04)		진보	541	4.20(0.03)	3.91(0.04)	4.19(0.04)
여성	804	3.97(0.03)	3.65(0.03)	3.85(0.04)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3.53(0.04)	3.22(0.04)	3.50(0.06)
20대	278	3.94(0.05)	3.79(0.06)	3.96(0.07)		중간	803	3.94(0.02)	3.71(0.02)	3.89(0.03)
30대	253	3.96(0.05)	3.69(0.05)	4.04(0.06)		높음	390	4.45(0.04)	4.08(0.05)	4.21(0.06)
40대	314	3.96(0.04)	3.67(0.05)	4.01(0.05)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388	4.16(0.04)	3.73(0.04)	3.97(0.05)
50대	323	3.99(0.04)	3.69(0.05)	3.78(0.06)		중간	826	3.85(0.02)	3.60(0.02)	3.83(0.03)
60세+	432	3.96(0.04)	3.58(0.04)	3.66(0.06)		높음	386	4.01(0.05)	3.77(0.06)	3.84(0.07)
남성 20대	146	3.85(0.06)	3.76(0.08)	3.88(0.10)	통일지향	낮음	335	3.60(0.05)	3.10(0.05)	3.53(0.07)
여성 20대	132	4.03(0.06)	3.83(0.08)	4.04(0.08)		중간	936	3.94(0.02)	3.71(0.02)	3.88(0.03)
남성 30대	129	3.97(0.07)	3.71(0.08)	4.04(0.08)		높음	329	4.40(0.04)	4.15(0.05)	4.19(0.06)
여성 30대	124	3.95(0.07)	3.67(0.08)	4.04(0.08)	분단지향	낮음	306	3.89(0.05)	3.56(0.05)	3.59(0.06)
남성 40대	158	3.98(0.07)	3.74(0.07)	3.98(0.07)		중간	869	3.95(0.02)	3.70(0.02)	3.90(0.03)
여성 40대	156	3.94(0.05)	3.60(0.06)	3.87(0.08)		높음	425	4.03(0.04)	3.69(0.05)	3.99(0.06)
남성 50대	165	4.00(0.06)	3.71(0.07)	3.69(0.09)	관여정책	낮음	369	3.46(0.04)	3.05(0.05)	3.22(0.07)
여성 50대	158	3.98(0.06)	3.66(0.06)	3.66(0.08)		중간	858	3.94(0.02)	3.70(0.02)	3.92(0.03)
남성 60대+	198	3.94(0.05)	3.60(0.06)	3.67(0.07)		높음	373	4.51(0.04)	4.24(0.05)	4.38(0.05)
여성 60대+	234	3.97(0.05)	3.57(0.06)	4.05(0.09)	압박정책	낮음	334	4.00(0.05)	3.69(0.05)	4.02(0.05)
~300만 원	375	3.83(0.04)	3.56(0.04)	3.77(0.06)		중간	908	4.00(0.02)	3.74(0.02)	3.94(0.03)
300~500만 원	567	3.98(0.03)	3.65(0.04)	3.86(0.05)		높음	358	3.83(0.05)	3.49(0.06)	3.55(0.08)
500만 원~	658	4.02(0.03)	3.76(0.03)	3.93(0.04)						

북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성별, 연령,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념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보수에 비해 중도가, 중도에 비해 진보가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더 개방적이었다.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긍정적일수록, 통일지향성이 높을수록,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북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정보 습득에 긍정적이었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긍정적

인 집단이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중립적인 집단에 비해 북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정보 습득에 긍정적이었다. 분단지향성 수준에 따른 북한 정보 획득 의도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압박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집단과 중립적인 집단의 북한 정보 획득 의도가 압박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집단의 북한 정보 획득 의도보다 강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다. 20대, 30대, 40대의 북한 국가 인정도가 60대의 북한 국가 인정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20대, 30대, 그리고 40대의 북한 국가 인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50대는 20대, 30대, 그리고 40대와 60대의 중간 수준이었다. 월 소득이 높을수록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며 보수에 비해 중도, 중도에 비해 진보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표 II-69〉 화해의도와 준거변수 간 상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압박정책
용서	0.50**	-0.10**	0.39**	0.09**	0.53**	-0.06**
새정보학습	0.43**	-0.01**	0.45**	0.09**	0.54**	-0.10**
북한 국가 지위 인정	0.28**	-0.07**	0.24**	0.18**	0.43**	-0.18**

용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의도, 그리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정도로 구성된 화해의도와 준거변수 간 상관은 전술한 화해에 대한 기대와 준거변수 간 상관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화해의도가 강할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지지, 통일지향성, 그리고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했다. 반면 화해의도가 강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와 압박정책에 부정적이었다. 화해의도와 분단 지향성 간에는 약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구체적 상관의 크기는 <표 II-6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소결

이번 절에서는 분단의 책임, 화해에 대한 기대와 의도로 구성된 화해의 심리가 한반도 평화인식과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책임, 죄책감, 공동희생자인식, 희망, 신뢰, 공감, 용서, 새정보학습, 북한 국가 지위 인정 등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별 차이와 준거변수들 간의 상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화해의 심리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II-70>에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 살펴본 9개 화해의 심리와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화해의 심리는 희망($\beta=0.27$)과 용서($\beta=0.25$)였다. 또한 남과 북이 모두 분단의 희생자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해 긍정적 인식도 증가하였다($\beta=0.12$). 북한에 대한 신뢰가 강할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지지가 약해지는 결과($\beta=-0.19$)는 두 변수 간 단순 상관($r=0.26$)을 고려한다면 억제 효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화해의 심리를 통제했을 때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영향력이 큰 화해의 심리는 북한의 책임과 희망이었다. 분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인식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지지가 강했으며($\beta=0.35$),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beta=-0.21$). 북한에 대한 공

감이 클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이 긍정적이라는 회귀분석 결과($\beta=0.12$)는 억제효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화해의 심리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른 준거변수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진 변수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북한에 대한 용서외도($\beta=0.12$), 북한과 통일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려는 의지($\beta=0.14$),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beta=0.10$),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죄책감($\beta=0.14$), 북한에 대한 신뢰($\beta=0.09$), 북한에 대한 공감($\beta=0.12$), 남과 북이 모두 분단의 희생자라는 인식($\beta=0.08$)이 통일 지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수록 통일 지향성이 강했다($\beta=-0.10$).

분단지향성에 영향력이 큰 변수는 북한책임과 북한인정이었다. 분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믿을수록($\beta=0.25$),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수록($\beta=0.21$) 분단지향성이 강했다. 북한의 국가인정 여부가 분단지향성과는 정적, 통일지향성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일은 흡수통일 또는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 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수록 통일보다는 분단의 고착을 원한다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러한 고민은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 북한의 실체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남북 간 합의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충돌에서도 관찰된다. 결국 북한을 인정하면서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평화담론이 요구된다.

관여정책에 영향력이 큰 화해의 심리는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 북한에 대한 용서외도,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죄책감, 북한에 대한 공감이었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희망

적일수록($\beta=0.23$), 북한을 용서할 의도가 강할수록($\beta=0.19$), 죄책감이 클수록($\beta=0.17$), 북한에 대한 공감이가 강할수록($\beta=0.17$) 관여 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했다.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분단이 북한의 책임이라는 인식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분단이 북한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했다($\beta=0.50$).

〈표 11-70〉 화해의 심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	분단지향	관여정책	입박정책
	-.04	-.11***	-.18***	.09***	-.04	.00
상별						
연령	.11***	.03	.08***	-.01	.02	-.06*
학력	.07**	.00	.00	.00	.00	-.04
이념	.25***	-.18***	.21***	-.02	.25***	-.22***
소득	.06*	.04	.05	.08**	.06*	.02
용서	.25***	-.09***	.12***	.01	.19***	.02
새정부합승	.09***	.10**	.14***	-.02	.04	.00
희망	.27***	-.21***	.10**	.12***	.23***	-.08*
지책감	.09**	.02	.14***	-.03	.17***	-.03
신뢰	-.19***	.10**	.09**	-.11**	.02	-.09**
복한책임	-.05**	.35***	.01	.25***	.03	.50***
공감	.04	.12***	.12***	-.01	.17***	.04
공동희생자인식	.12***	-.02	.08**	.08**	.13***	.11***
복한인정	.01	-.01	-.10***	.21***	.04	-.06*
1단계 설명량(R ²)	.08	.05	.07	.01	.06	.04
2단계 설명량(R ²)	.38	.20	.34	.11	.55	.34
Durbin-Watson	1.98	1.92	1.97	2.04	1.97	2.04

6. 통일에 대한 태도

가. 통일상(像)

통일이란 무엇인가?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체제통합’의 단계적 통일을 상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과정이자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의 과정은 통일로 볼 수 있는가? 통일을 결과, 사건으로만 바라볼 때 통일은 미래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된다. 반면 통일을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통일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국민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각 단계를 통일로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이 남북관계의 세 가지 상태가 통일인지 아닌지에 대해 5점 척도(1점: 전혀 통일이 아니다, 5점: 확실히 통일이다.)로 응답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71>에 제시하였다.

- 1)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된 상태
- 2)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남북공동평의회, 각료회의 등 남북연합 기구를 창설, 운영하는 상태
- 3) 통일헌법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단일정부, 단일 국회를 구성, 두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하는 상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교류협력보다 남북연합이, 남북연합보다 체제통합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강도가 강해지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이러한 예측을 지지하였다. 조사결과 남북연합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교류협력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보다 강했으며, 체제통합이 통일이라고 생각

하는 정도가 남북연합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보다 강했다. 구체적으로 교류협력의 통일이라고 응답한 평균은 3.0, 남북연합이 통일이라고 응답한 평균은 3.09, 체제통합의 통일이라고 응답한 평균은 3.53으로 2019년 결과와 유사하였다. 체제통합과 남북연합의 평균차이에 비해 남북연합과 교류협력의 평균차이가 크지 않다. 우리 국민은 통일을 체제통합이라는 결과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통일을 과정으로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을 결과 중심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패턴은 성별에 관계없이 관찰되었으며 20대, 40대, 60대에서도 관찰되었다. 30대와 50대는 통일을 결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다시 말해 30대와 50대에서는 교류협력을 통일로 생각하는 정도와 남북연합을 통일로 생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중도와 진보는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지만 보수집단은 통일을 결과로만 인식하였다.

〈표 II-71〉 통일상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교류협력	남북연합	체제통합	구분	사례 수	교류협력	남북연합	체제통합	
2019년	1,000	2.96(0.03)	3.01(0.03)	3.61(0.03)	이념	보수	316	2.84(0.05)	2.91(0.05)	3.52(0.06)
전체(2020년)	1,600	3.00(0.02)	3.09(0.02)	3.53(0.02)		중도	743	2.98(0.03)	3.06(0.03)	3.38(0.03)
남성	796	3.01(0.03)	3.10(0.03)	3.56(0.04)		진보	541	3.13(0.04)	3.24(0.04)	3.73(0.04)
여성	804	2.99(0.03)	3.08(0.03)	3.50(0.03)	협력을 통한 평화	낮음	407	2.80(0.04)	2.80(0.04)	3.15(0.05)
20대	278	2.96(0.06)	3.06(0.06)	3.40(0.06)		중간	803	3.00(0.03)	3.12(0.03)	3.51(0.03)
30대	253	3.02(0.06)	3.08(0.05)	3.51(0.06)		높음	390	3.21(0.05)	3.33(0.05)	3.94(0.05)
40대	314	2.95(0.05)	3.09(0.05)	3.57(0.05)	군사력을 통한 평화	낮음	388	2.94(0.05)	3.08(0.05)	3.76(0.05)
50대	323	3.11(0.05)	3.15(0.05)	3.59(0.05)		중간	826	2.97(0.03)	3.04(0.03)	3.39(0.03)
60세+	432	2.98(0.04)	3.07(0.04)	3.54(0.05)		높음	386	3.13(0.05)	3.22(0.05)	3.58(0.05)
남성 20대	146	2.94(0.08)	3.03(0.08)	3.27(0.09)	통일지향	낮음	335	2.71(0.05)	2.76(0.05)	3.21(0.06)
여성 20대	132	3.01(0.08)	3.09(0.08)	3.55(0.08)		중간	936	3.02(0.02)	3.12(0.02)	3.48(0.03)
남성 30대	129	2.98(0.07)	3.11(0.07)	3.65(0.07)		높음	329	3.25(0.06)	3.35(0.06)	3.98(0.05)
여성 30대	124	3.10(0.07)	3.18(0.07)	3.67(0.08)	분단지향	낮음	306	2.69(0.05)	2.70(0.05)	3.41(0.06)
남성 40대	158	3.02(0.07)	3.10(0.06)	3.60(0.07)		중간	869	3.01(0.03)	3.13(0.02)	3.44(0.03)
여성 40대	156	2.99(0.08)	3.10(0.08)	3.54(0.08)		높음	425	3.20(0.05)	3.30(0.05)	3.79(0.05)

구분	사례 수	교류협력	남북연합	체제통합	구분	사례 수	교류협력	남북연합	체제통합
남성 50대	165	3.02(0.08)	3.08(0.07)	3.47(0.08)	관여정책	낮음	2.66(0.05)	2.68(0.05)	3.23(0.06)
여성 50대	158	2.92(0.07)	3.06(0.06)	3.49(0.07)		중간	2.97(0.03)	3.09(0.03)	3.48(0.03)
남성 60대+	198	3.13(0.06)	3.13(0.06)	3.51(0.07)		높음	3.43(0.05)	3.50(0.05)	3.92(0.05)
여성 60대+	234	2.94(0.06)	3.04(0.06)	3.48(0.06)	압박정책	낮음	3.02(0.05)	3.12(0.05)	3.51(0.06)
~300만 원	375	2.85(0.04)	2.95(0.05)	3.41(0.05)		중간	3.02(0.03)	3.12(0.03)	3.50(0.03)
300~500만 원	567	3.05(0.04)	3.15(0.04)	3.51(0.04)		높음	2.95(0.06)	3.00(0.06)	3.60(0.06)
500만 원~	658	3.04(0.03)	3.12(0.04)	3.61(0.04)					

교류협력 상태를 통일로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 성별, 연령,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보수에 비해 중도가, 중도에 비해 진보가 교류협력 상태를 통일로 인식하는 강도가 강했다.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긍정적인수록, 통일지향성이 강할수록, 분단지향성이 강할수록, 그리고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할수록 교류협력 상태를 통일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했다. 압박정책의 지지수준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회의적인 집단 및 중립적인 집단에 비해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긍정적인 집단이 교류협력 상태를 통일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했다.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각에 강한 확신을 가진 집단은 교류협력 상태를 통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남북연합 상태를 통일로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는 교류협력 상태를 통일로 인식하는 정도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차이는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과 압박정책에서 관찰되었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긍정적인 집단이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회의적인 집단에 비해 남북연합을 통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중립적인 집단의 평균은 다른 두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압박정책의 경우, 지지수준이 중간인 집단의 평균이 지지수준이 높은 집

단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지지수준이 낮은 집단의 평균은 두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체제통합을 통일로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 성별, 연령,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보수 및 중도에 비해 진보가 체제통합을 통일로 보는 인식이 강했다. 보수와 중도의 평균은 차이가 없었다.

나. 통일상(像)의 필요성

지난 장에서 우리 국민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세 단계 중 체제통합을 통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강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세 단계가 얼마나 필요한지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은 다음 세 질문에 대해 5점 척도(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5점: 전적으로 동의함)로 응답하였다. 세 문항에 대한 평균은 <표 II-72>에 제시하였다.

- 1)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2)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지만 공동의 정부 기구를 창설하는 남북연합은 필요하다.
- 3)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평균은 3.52, 남북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23, 그리고 체제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평균은 3.26이었다. 남북연합 필요성의 평균과 체제통합 필요성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류협력보다 남북연합, 남북연합보다 체제통합이 우리 국민의 통일상에 부합하지만 각 단계의 필요성은 통일상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교류협력의

단계를 넘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합당한 해석일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교류협력 필요성, 남북연합 필요성, 그리고 체제통합 필요성의 전반적 패턴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남북연합 및 체제통합 필요성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은 공통적이었다. 차이가 관찰되는 지점은 남북연합 필요성과 체제통합의 필요성의 차이였다. 하나의 패턴은 체제통합 필요성이 남북연합 필요성보다 높은 V자 패턴이다. 이 패턴은 체제통합의 과정에서 남북연합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집단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패턴은 체제통합 필요성이 남북연합 필요성보다 낮은 패턴, ∩ 패턴이다. 이 패턴은 남북의 통합상태가 심화되는 것 자체에 회의적인 경향을 대변하는 패턴으로 볼 수 있다.

〈표 11-72〉 통일 필요성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교류협력	남북연합	체제통합	구분	사례 수	교류협력	남북연합	체제통합	
2019년	1,000	3.76(0.03)	3.30(0.03)	3.29(0.03)	이념	보수	316	3.51(0.05)	2.98(0.06)	3.19(0.06)
전체(2020년)	1,600	3.52(0.02)	3.23(0.02)	3.26(0.02)		중도	743	3.39(0.03)	3.14(0.03)	3.12(0.03)
남성	796	3.54(0.03)	3.21(0.03)	3.39(0.03)		진보	541	3.70(0.04)	3.49(0.04)	3.50(0.04)
여성	804	3.50(0.03)	3.24(0.03)	3.13(0.03)	협력을 통한평화	낮음	407	3.06(0.05)	2.74(0.05)	2.84(0.05)
20대	278	3.45(0.06)	3.21(0.06)	3.20(0.06)		중간	803	3.53(0.03)	3.28(0.03)	3.26(0.03)
30대	253	3.42(0.06)	3.22(0.06)	3.16(0.06)		높음	390	3.97(0.04)	3.62(0.05)	3.71(0.05)
40대	314	3.50(0.05)	3.26(0.05)	3.30(0.05)	군사력을 통한평화	낮음	388	3.72(0.05)	3.33(0.05)	3.35(0.05)
50대	323	3.60(0.05)	3.32(0.05)	3.33(0.05)		중간	826	3.40(0.03)	3.16(0.03)	3.19(0.03)
60세+	432	3.57(0.05)	3.13(0.05)	3.28(0.05)		높음	386	3.57(0.05)	3.26(0.06)	3.32(0.06)
남성 20대	146	3.41(0.08)	3.09(0.08)	3.23(0.08)	통일지향	낮음	335	3.19(0.06)	2.62(0.06)	2.19(0.05)
여성 20대	132	3.49(0.08)	3.35(0.08)	3.17(0.08)		중간	936	3.50(0.02)	3.27(0.02)	3.28(0.02)
남성 30대	129	3.40(0.08)	3.22(0.07)	3.33(0.08)		높음	329	3.91(0.05)	3.73(0.05)	4.31(0.03)
여성 30대	124	3.44(0.08)	3.22(0.08)	2.99(0.09)	분단지향	낮음	306	3.14(0.06)	2.89(0.06)	3.48(0.07)
남성 40대	158	3.51(0.07)	3.33(0.08)	3.47(0.07)		중간	869	3.47(0.03)	3.27(0.02)	3.28(0.02)
여성 40대	156	3.49(0.06)	3.20(0.06)	3.12(0.07)		높음	425	3.89(0.04)	3.36(0.05)	3.08(0.06)
남성 50대	165	3.62(0.07)	3.34(0.08)	3.47(0.07)	관여정책	낮음	369	3.07(0.06)	2.59(0.05)	2.77(0.05)
여성 50대	158	3.58(0.07)	3.30(0.06)	3.18(0.07)		중간	858	3.52(0.03)	3.26(0.02)	3.24(0.03)
남성 60대+	198	3.67(0.07)	3.09(0.07)	3.44(0.07)		높음	373	3.95(0.05)	3.78(0.05)	3.79(0.05)

구분	사례 수	교류협력	남북연합	체제통합	구분	사례 수	교류협력	남북연합	체제통합	
여성 60대+	234	3.49(0.06)	3.18(0.06)	3.15(0.06)	압박정책	낮음	334	3.48(0.06)	3.26(0.05)	3.28(0.06)
~300만 원	375	3.43(0.05)	3.09(0.05)	3.14(0.05)		중간	908	3.50(0.03)	3.27(0.03)	3.29(0.03)
300~500만 원	567	3.54(0.04)	3.22(0.04)	3.29(0.04)		높음	358	3.59(0.06)	3.09(0.06)	3.19(0.06)
500만 원~	658	3.55(0.04)	3.31(0.04)	3.31(0.04)						

성별로 보면 남성은 V자, 여성은 \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세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체제통합 필요성과 남북연합 필요성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60대 이상 세대에서는 체제통합 필요성이 남북연합 필요성보다 높은 V자 패턴이 관찰되었다.

연령과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패턴은 주로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에서만 관찰되었다. 반면 V패턴은 60대 이상 남성에서만 관찰되었다. 나머지 집단은 체제통합 필요성과 남북연합 필요성에 차이가 없었다. 보수에서는 남북연합 필요성이 체제통합 필요성보다 낮은 V자 패턴이 관찰되었지만 중도와 진보에서는 체제통합 필요성과 남북연합 필요성에 차이가 없었다.

다. 북한에 대한 지식

북한에 대한 지식은 아래 10개 문항, O, X 형식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 10개 문항에 응답한 후 자신이 10문항 중 몇 개를 맞히었는지 추측한 개수를 별도로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이 실제로 정답을 맞힌 개수의 평균, 자신이 맞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의 평균, 그리고 두 평균의 차이를 <표 II-73>에 제시하였다.

- 1) 북한의 공식 국명(國名)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83.9%).

- 2) 북한의 국가(國歌)는 애국가이다(15.1%).
- 3) 북한에서 국가의 최고 직책은 국무위원장이다(60.1%).
- 4) 북한교육과정에서 제1외국어는 영어이다(30.9%).
- 5) 북한에서 주택소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개인 간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66.6%).
- 6) 북한의 국화(國花)는 진달래이다(51.1%).
- 7) 북한에도 장마당 농민시장 등 시장이 있지만,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다(36.3%).
- 8) 북한에서 추석과 설날은 명절이지만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는 않는다(60.5%).
- 9) 김정은은 김정일의 첫째 아들이다(82.1%).
- 10) 북한은 상해임시정부가 아닌 블라디보스톡 대한광복군 정부의 법통을 인정하고 있다(47.2%).

귀하는 위 10문제 중 몇 개를 맞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II-73〉 북한지식의 평균과 표준오차

구분	사례 수	실제정답 수	예상정답 수	차이	구분	사례 수	실제정답 수	예상정답 수	차이	
전체(2020년)	1,600	5.34(0.03)	5.46(0.03)	0.12(0.02)	이념	보수	316	5.19(0.07)	5.91(0.07)	0.72(0.06)
남성	796	5.37(0.04)	5.79(0.04)	0.42(0.03)		중도	743	5.35(0.04)	5.23(0.04)	-0.13(0.03)
여성	804	5.31(0.04)	5.13(0.04)	-0.18(0.03)		진보	541	5.40(0.05)	5.52(0.05)	0.12(0.04)
20대	278	5.45(0.07)	4.88(0.07)	-0.56(0.05)	협력을 통한평화	낮음	407	5.18(0.06)	5.27(0.06)	0.08(0.05)
30대	253	5.33(0.07)	5.15(0.08)	-0.18(0.06)		중간	803	5.32(0.04)	5.37(0.03)	0.05(0.03)
40대	314	5.28(0.06)	5.53(0.06)	0.25(0.05)		높음	390	5.54(0.06)	5.85(0.06)	0.31(0.05)
50대	323	5.29(0.06)	5.78(0.06)	0.49(0.05)	군사력을 통한평화	낮음	388	5.44(0.06)	5.34(0.06)	-0.10(0.05)
60세+	432	5.35(0.06)	5.72(0.06)	0.38(0.05)		중간	826	5.35(0.03)	5.46(0.04)	0.11(0.03)
남성 20대	146	5.41(0.10)	5.14(0.10)	-0.27(0.08)		높음	386	5.22(0.07)	5.59(0.07)	0.37(0.05)
여성 20대	132	5.48(0.09)	4.59(0.09)	-0.89(0.07)	통일지향	낮음	335	5.27(0.06)	5.19(0.06)	-0.08(0.05)
남성 30대	129	5.42(0.10)	5.44(0.10)	0.02(0.08)		중간	936	5.32(0.03)	5.38(0.03)	0.06(0.03)
여성 30대	124	5.23(0.11)	4.85(0.12)	-0.39(0.09)		높음	329	5.46(0.05)	5.96(0.04)	0.50(0.06)
남성 40대	158	5.25(0.08)	5.97(0.08)	0.72(0.07)	분단지향	낮음	306	5.30(0.07)	5.71(0.07)	0.41(0.06)
여성 40대	156	5.31(0.09)	5.08(0.08)	-0.23(0.07)		중간	869	5.36(0.03)	5.34(0.03)	-0.02(0.03)
남성 50대	165	5.38(0.09)	6.13(0.09)	0.75(0.08)		높음	425	5.32(0.07)	5.53(0.07)	0.20(0.05)

구분	사례 수	실제정답 수	예상정답 수	차이	구분	사례 수	실제정답 수	예상정답 수	차이	
여성 50대	158	5.20(0.08)	5.41(0.08)	0.22(0.06)	관여정책	낮음	369	5.22(0.07)	5.43(0.07)	0.22(0.06)
남성 60대+	198	5.37(0.08)	6.07(0.08)	0.69(0.07)		중간	858	5.33(0.03)	5.38(0.03)	0.05(0.03)
여성 60대+	234	5.32(0.08)	5.44(0.08)	0.11(0.07)		높음	373	5.47(0.06)	5.69(0.05)	0.22(0.05)
~300만 원	375	5.23(0.06)	5.17(0.06)	-0.06(0.05)	입박정책	낮음	334	5.38(0.04)	5.46(0.04)	0.08(0.03)
300~500만 원	567	5.40(0.05)	5.39(0.05)	-0.01(0.04)		중간	908	5.37(0.04)	5.31(0.05)	-0.06(0.04)
500만 원~	658	5.35(0.05)	5.74(0.05)	0.39(0.04)		높음	358	5.21(0.08)	5.67(0.08)	0.46(0.06)

먼저 응답자들은 10개 문항 중 평균 5.46개를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응답자의 52.6% 10개 문항 중 4개, 5개, 또는 6개를 맞출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7개 이상 맞출 것이라고 예측한 비율은 29.3%였다(〈표 II-74〉). 남성의 예상 정답 수(5.79)가 여성의 예상 정답 수(5.13)보다 높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예상 정답 수 역시 상승하였다. 평균 기준, 20대는 4.88개, 30대는 5.15개, 40대는 5.53개, 50대는 5.78개, 60대 이상은 5.72개를 맞혔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중 20대 및 30대의 예상정답 수는 50대와 60대의 예상 정답수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적었다. 비율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대의 21%, 30대의 23.7%가 7개 이상 맞힐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50대는 35.3%, 60대는 33.8%가 7개 이상 맞출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월 소득이 증가할수록 예상 정답수도 역시 상승하였으며, 중도에 비해 진보가, 진보에 비해 보수가 예상정답수가 높았다.

응답자들이 보여준 자신의 지식수준에 대한 평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즉 여성보다 남성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며, 2030세대보다 기성세대가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II-74〉 자신의 정답 수 예측 비율

(단위: %)

예측	3개 이하	4~6개	7개 이상
전체	18.1	52.6	29.3
20대	28.0	51.1	21.0
30대	23.8	52.6	23.7
40대	14.7	56.3	29.0
50대	13.0	51.7	35.3
60대	14.6	51.6	33.8

그렇다면 10개 문항 중 실제로 응답자들이 정답을 맞힌 문항은 몇 개인가? 응답자들은 평균 5.34개를 맞췄다. 기대 수준인 5.46개보다 0.12개 낮았으며 오차범위 밖에서 낮은 수준이었다. 즉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자신의 지식수준에 대해 다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정답 수에 따른 비율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7개 이상 맞춘 응답자의 비율은 19.5%로 7개 이상 맞출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자의 비율 29.3%보다 약 10% 정도 낮았다.

〈표 II-75〉 실제 정답 수 비율

(단위: %)

예측	3개 이하	4~6개	7개 이상
전체	8.5	72.1	19.5
20대	10.4	65.8	23.7
30대	7.9	75.9	16.3
40대	10.9	71.1	18.1
50대	6.2	76.7	17.0
60대	7.7	71.0	21.2

흥미로운 점은 실제 정답 수의 평균은 우리 사회 통념과는 달리 성별, 연령, 월 소득, 이념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정답 수 비율에서는 10개 문항 중 7개 이상 맞춘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았다(〈표 II-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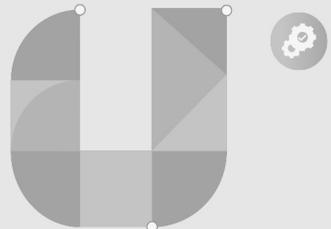
관심을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로 좁혀본다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고 예측하였지만 실제 지식수준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결과로 흥미로운 함의를 보여준다. 여성과 2030세대는 북한에 대한 자신의 지식수준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남성과 기성세대는 자신의 지식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표 II-73> 차이의 항목을 살펴보면 남성은 자신의 기대 정답 수보다 실제 정답 수가 0.42개가 작지만 여성은 .018개 많다. 즉 남성은 자신의 지식수준을 과대평가, 여성은 과소평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와 30대는 북한에 대한 자신의 지식수준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반면 40대 이상은 과대평가하고 있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에 대한 과대평가 경향이 강했다. 이념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었다. 중도는 과소평가, 진보와 보수는 과대평가 경향이 강했다. 보수가 진보에 비해 과대평가의 크기가 더 큰 것도 특징적이다.

정책은 통념이나 기대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분명한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정책적 논의들은 학교통일교육, 그리고 2030세대를 대상으로 교육에 집중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논의들이 과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사용된 10개의 문항이 북한에 대한 모든 지식을 포괄하거나 대표하지 않는다.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다. 기성세대는 자신들에 대한 과대평가를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으며 2030세대는 오히려 자신들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 말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누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보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아닌 현실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심층분석

Steven Sloman 미국 브라운대학교
Eran Halperin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Babak Hemmatian 미국 브라운대학교
Nimrod Nir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1. COVID-19가 한반도 갈등에서 집단 간 정서 및 태도에 미치는 이중적 영향

Eran Halperin and Nimrod Nir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가. 서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global pandemic)에 직면한 개인 및 집단의 생활 방식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갈등이 고착화된 상황, 특히 한반도에서 COVID-19 사태가 집단 간 정서 및 태도에 미치는 이중적인 영향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COVID-19 전후 시점에서 2차 웨이브 중단면 연구(two-wave cross sectional design)를 통해 심리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COVID-19 발생 이후 우리국민은 북한 주민에 대한 공포의 강도가 높아졌으며 그 결과 외집단,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의 지지도가 증가했음을 규명하였다.¹⁰⁵⁾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은 북한에 대한 높은 공감을 보임으로서 외집단과의 협력 및 외집단에 대한 지원 의지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염병의 대유행이 고착화된 갈등 상황에 처한 집단 간 정서에 미치는 이중적인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한다면 COVID-19 사태로 인한 위협이 집단 간 관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사회가 제한하고, 갈등에 처한 집단 간 관계를 개선하는 건설적인 결과를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경로를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05) 본 보고서에서 내집단(ingroup)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고 믿는 집단, 외집단(outgroup)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믿는 집단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될 것이다.

COVID-19 대유행은 인류의 건강과 안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그것이 세계에 미칠 파급효과는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COVID-19의 대유행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COVID-19는 고착화된 갈등에 처한 집단 간 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갈등의 당사자들은 폭력적이고 고질적인 분쟁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다양한 정신적, 심리적 위협을 이미 경험한 집단이다.¹⁰⁶⁾ 이와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 내 수준 및 집단 간 수준에서 그들의 안녕과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심리학적 구성개념, 편견, 태도 등을 형성한다.¹⁰⁷⁾ 이와 같은 심리적 태도의 변화는 개인이 집단 간 갈등의 위협적인 현실에 적응하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집단 간의 화해를 가로막는 막강한 장벽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¹⁰⁸⁾ 고착화된 갈등이 야기할 수 있는 비극적 결과가 갈등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갈등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고착화된 갈등 상황에서 새로운 위기가 집단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살펴보는 것은 집단 간의 증오를 완화하고 평화와 화해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자들에게 무엇보다 보람 있고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을 70년 동안 느끼고 살았던 한국인과 같이 기존 외집

106) Peter T. Coleman, "Characteristics of Protracted, Intractable Conflict: Toward the Development of a Metaframework-1,"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9, no. 1 (2003), pp. 1~37.

107)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Socio-Psychological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in *Intergroup Conflicts and Their Resolution: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Frontiers of Social Psychology)*, ed. Daniel Bar-Tal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1), p. 220.

108) Eran Halperin, *Emotions in Conflict: Inhibitors and Facilitators of Peace Making* (New York: Routledge, 2015), pp. 16~33.

단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은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실체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외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¹⁰⁹⁾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위협이 집단 간 관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기존 위협 상황을 중재할 수 있는 기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COVID-19가 집단 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한반도 갈등의 맥락에서 집단 간 갈등 고조 및 화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는 공포 및 공감과 같은 집단에 기반한 정서들이 COVID-19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집단을 겨냥한 적대적 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 그리고 북한과 협력하거나 또는 북한을 지원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의지에 집단 간 정서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COVID-19 사태 속에서의 집단 간 갈등

위협적인 사건에 직면한 개인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종의 보상반응(compensatory responses)을 일으킨다.¹¹⁰⁾ 보상 반응은 인지, 정서, 행동 등 개인의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진다.¹¹¹⁾ 이와 같은

109) Laura G. E. Smith and Stephen Gibson, "Social Psychological Theory and Research on the Novel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Introduction to the Rapid Response Special Section,"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9, no. 3 (2020), pp. 571~583.

110) Eva Jonas et al., "Threat and Defense: From Anxiety to Approach,"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ds. James M. Olson and Mark P. Zanna (San Diego, C.A.: Academic Press, 2014), pp. 219~286; Mark J. Brandt and Jarret T. Crawford, "Worldview Conflict and Prejudice,"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d. Bertram Gawronski (New York: Academic Press, 2020), pp. 1~66.

111) Steven J. Heine, Travis Proulx, and Kathleen D. Vohs, "The Meaning Maintenance Model: On the Coherence of Social Motiv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0, no. 2 (2006), pp. 88~110; Xiaowen Xu and Ian McGregor, "Motivation, Threat, and Defense: Perspective from

보상 반응은 개인에게 불안과 불확실성으로부터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주지만,¹¹²⁾ 동시에 외집단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저해할 수도 있다¹¹³⁾. 예를 들어,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 경우 개인들은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¹¹⁴⁾ 테러를 경험한 경우 위협 인식에 기인해 소수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상승한다.¹¹⁵⁾ 그러나 외부의 위협이 항상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집단적으로 위협이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소속감과 친밀감을 추구하면서 협력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연대(solidarity)가 COVID-19의 대유행에 대한 집단적 반응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¹¹⁶⁾

요컨대, COVID-19와 같은 위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관련된 사회심리학 이론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¹¹⁷⁾ 첫 번째 범주는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집단 간의 증오가 강화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sychological Inquiry*, vol. 29, no. 1 (2018), pp. 32~37.

112) Alberto Mirisola et al., “Societal Threat to Safety, Compensatory Control,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Political Psychology*, vol. 35, no. 6 (2014), pp. 795~812.

113) Jay J. Van Bavel et al., “Using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 to Support Covid-19 Pandemic Response,” *Nature Human Behaviour*, vol. 4 (2020), pp. 1~12.

114) Emanuele Castano et al., “Protecting the Ingroup Stereotype: Ingroup Identification and the Management of Deviant Ingroup Member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1, no. 3 (2002), pp. 365~385.

115) Daphna Canetti-Nisim et al., “A New Stress-Based Model of Political Extremism: Personal Exposure to Terrorism, Psychological Distress, and Exclusionist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3 (2009), pp. 363~389.

116) Galen V. Bodenhausen et al., “Affective Influences o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Relations,” in *Handbook of Affect and Social Cognition*, ed. Joseph P. Forga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0), pp. 319~343; Jais Adam-Troian, “The Pathogen Paradox: Evidence That Perceived Covid-19 Threat Is Associated with Both Pro-and Anti-Immigrant Attitudes,” (in preparation), pp. 1~35.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이 접근은 위협에 처한 사람들은 외집단에 대해 회피적이고 배타적인 행동을 강화한다고 보는 관점이다.¹¹⁸⁾ 다른 한 범주는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연대가 강화된다고 보는 접근이다. 이 접근은 위협에 처한 사람들은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의 동기가 강해진다고 주장한다.¹¹⁹⁾

앞서 언급한 두 접근은 COVID-19의 대유행 기간 동안 외집단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강조하지만 이들 모두 COVID-19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반응의 적응적 기능의 두 양상을 보여준다. 첫 번째 접근은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며, 두 번째 접근은 공동의 위협에 대한 집단 수준의 지원과 협력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¹²⁰⁾ 실제로 최근 터키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COVID-19 위협은 시리아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이민자에 대한 위협 인식)와 긍정적인 태도(같은 정체감을 공유한다는 자각)가 동시에 증가하였다.¹²¹⁾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들은 COVID-19와 같은 위협이 집단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기적 장벽 및 인지적 장벽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집단에 기반한 정서들이 COVID-19 사태의 파급효과를 증재하는 데 수행하는 역할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집단에 기반한 정서는 집단 간 갈등의 고조 및 화해

117) Tegan Cruwys et al., "Risk-Taking That Signals Trust Increases Social Identification," *Social Psychology*, vol. 51 (2020), pp. 319~333.

118) Jay J. Van Bavel et al., "Using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 to Support Covid-19 Pandemic Response," pp. 460~471.

119) Galen V. Bodenhausen et al., "Affective Influences o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Relations," pp. 321~343.

120) Laura G. E. Smith and Stephen Gibson, "Social Psychological Theory and Research on the Novel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Introduction to the Rapid Response Special Section," pp. 571~583.

121) Jais Adam-Troian, "The Pathogen Paradox: Evidence That Perceived Covid-19 Threat Is Associated with Both Pro- and Anti-Immigrant Attitudes," pp. 1~35.

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¹²²⁾ 또한 위협적인 사건은 강한 정서적 반응을 자동적으로 유발하며, 사고체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COVID-19 위협에 대한 집단에 기반한 정서의 영향력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집단 간 관계에 있어 COVID-19 대유행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해소하고 갈등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한반도 상황 속에서 COVID-19 두 가지 사회·심리적 영향을 설명하기 전에 고착화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의 화해를 가로막는 사회·심리적 장벽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2) 고착화된 갈등에서의 사회·심리학 장벽

Bar-Tal and Halperin은 폭력적 갈등이 적어도 한 세대 이상 지속되고 있는 고착화된 갈등이 촉발하는 위협적인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갈등 집단의 구성원들이 채택하는 네 가지 유형의 사회심리학적 장벽을 제시한 바 있다.¹²³⁾ 첫 번째 유형은 일반적인 세계관으로 내용 면에서는 갈등과 무관한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이 해당 갈등과 관련된 사건과 정보를 경험하고 해석할 때 필터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세계관은 두 번째 유형의 장벽인 갈등을 지지하는 사회·심리적 신념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¹²⁴⁾ 갈등을 지지하는 사회적 신념체계는 사회·심리적 장벽의 형

122) 박주화 외,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pp. 375~400.

123)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Socio-Psychological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pp. 217~240.

124) 사회·심리적 신념체계는 안보우선주의, 내집단 목표에 대한 정당성, 내집단의 우월성, 상대의 악마화, 내집단의 희생자화, 애국심의 강조, 단결과 일치, 집단의 목표로 평화를 강조하는 8개의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화 외,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pp. 46~48을 참고할 것.

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갈등을 지지하는 사회적 신념체계는 갈등이 지속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갈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갈등 상황에서 사고와 행동의 원칙으로 작동한다.¹²⁵⁾ 세 번째 유형은 Ross와 Ward가 제시한 일반적 인간의 인지적 편향과 동기적 편향들로 실제 협상 상황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¹²⁶⁾ 이러한 편향들은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나 정보를 왜곡함으로써 협상의 진전을 방해한다. 또한 개인들은 내집단, 외집단, 집단 간 관계에 대한 정보를 왜곡함으로써 화해를 위한 대중적 담론의 형성을 방해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네 번째 유형은 상대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들로 갈등을 지지하는 사회적 신념을 동결시켜 갈등을 지지하는 사회적 신념체계들을 더욱 완고하게 만든다.

외부의 위협은 전술한 네 유형의 장벽을 강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정보에 대한 열린 마음과 갈등을 지지하는 신념에 대한 재평가를 저해하는 심적 장벽을 높인다.¹²⁷⁾ 그러나 다른 유형의 장벽에 비해 갈등 상황에서 집단에 기반한 정서들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 위협 아래 집단 간 갈등의 정서적 장벽과 이들이 집단 간 증오 혹은 협력에 있어 수행할 잠재적 매개효과(mediating effect)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25) Roni Porat, Eran Halperin, and Daniel Bar-Tal, "The Effect of Socio-psychological Barriers on the Processing of New Information About Peace Opportunit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9, no. 1 (2015), pp. 93~119.

126) Lee Ross and Andrew Ward, "Psychological Barriers to Dispute Resolution,"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d. Mark P. Zanna (San Diego, C.A.: Academic Press, 1995), pp. 255~304.

127)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Socio-Psychological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pp. 217~240.

(3) 고착화된 갈등에서의 집단 기반 정서 (Group based emotion)

정서가 개인 수준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집단 간 정서 이론(intergroup emotion theory)은 방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그들의 집단을 대변하는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¹²⁸⁾ 예를 들어 집단의 구성원 자격이 분명한 경우 사람들은 집단 간 상황에 대한 실제적 경험이나 개인적 경험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그들이 속한 집단의 입장에 부합하는 정서를 느낀다.¹²⁹⁾ 사회적 정체감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및 자기 범주화 이론(self categorization theory)은¹³⁰⁾ 집단에 기반한 정서에 대한 초기 이론화작업에 학문적 기반을 제공했다.¹³¹⁾ 사회적 정체감 이론 및 자기 범주화 이론에 따르면 집단에 기반한 정서들은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개인의 소속(감)에 기반한 것으로서 집단 전체가 관련되어 있다고 믿는 사건에 대한 반응에서 유발된다.¹³²⁾

128) Diane M. Mackie, Thierry Devos, and Eliot R. Smith, "Intergroup Emotions: Explaining Offensive Action Tendencies in an Intergroup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9, no. 4 (2000), pp. 602~616;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in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s.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923~956.

129) Eliot R. Smith, Charles R. Seger, and Diane M. Mackie, "Can Emotions Be Truly Group Level? Evidence Regarding Four Conceptual Criter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3, no. 3 (2007), pp. 431~446.

130) Henri Tajfel and John C. Turner,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eds. William G. Austin and Stephen Worchel (Monterey, C.A.: Brooks/Cole, 1979), pp. 33~47.

131) Diane M. Mackie and Eliot R. Smith, "Intergroup Relations: Insights from a Theoretically Integrative Approach," *Psychological Review*, vol. 105, no. 3 (1998), pp. 499~529; Bertjan Doosje et al., "The Effect of Comparative Context on Central Tendency and Variability Judgements and the Evaluation of Group Characteristic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28, no. 2 (1998), pp. 173~184.

이와 같이 단기간의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촉발된 경험은 종종 만성적 정서(emotional sentiment)로 전환된다. 만성적 정서는 외집단 혹은 갈등 그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적인 정서로 적대적 집단의 특정 행위와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정서를 의미한다.¹³²⁾ 고착화된 갈등을 화해(conflict reconciliation)로 전환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개인 차원의 일시적인 집단 간 정서가 장기적인 정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사실 다양한 이론과 실증적 연구¹³⁴⁾가 사회 간, 국가 간 갈등을 촉발하고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부정적 정서를 지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서적 장벽은 집단 내, 그리고 집단 간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¹³⁵⁾ 파괴적인 집단 간 정책과 편향된 집단적 소속(감)을 촉발한다.¹³⁶⁾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갈등에 있어 집단에 기반한 정서가 호전적이거나 유화적인 집단 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이념¹³⁷⁾ 및 사회경제적 조건¹³⁸⁾과 같은 여타

132) Eliot R. Smith, Charles R. Seger, and Diane M. Mackie, "Can Emotions Be Truly Group Level? Evidence Regarding Four Conceptual Criteria," pp. 431~446; Daine M. Mackie, Thierry Devos, and Eliot R. Smith, "Intergroup Emotions: Explaining Offensive Action Tendencies in an Intergroup Context," pp. 602~616.

133) Eran Halperin and James J. Gross, "Emotion Regulation in Violent Conflict: Reappraisal, Hope, and Support for Humanitarian Aid to the Opponent in Wartime," *Cognition and Emotion*, vol. 25, no. 7 (2011), pp. 1228~1236.

134) Ifat Maoz and Clark McCauley, "Threat, Dehumanization, and Support for Retaliatory Aggressive Policies in Asymmetric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2, no. 1 (2008), pp. 93~116; Eran Halperin, "Emotion, Emotion Regul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Emotion Review*, vol. 6, no. 1 (2014), pp. 68~76.

135) Miles Hewstone, Mark Rubin, and Hazel Willis, "Intergroup Bia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3, no. 1 (2002), pp. 575~604; Walter G. Stephan and Cookie White Stephan, "Intergroup Anxiety,"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41, no. 3 (1985), pp. 157~175.

136) Shana Cole, Emily Balcetis, and David Dunning, "Affective Signals of Threat Increase Perceived Proximity," *Psychological Science*, vol. 24, no. 1 (2013), pp. 34~40.

주요 요인들의 영향력을 훨씬 초월한다.

한반도 갈등 맥락과 관련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진 집단에 기반한 증오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군사적 대응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를 예측하는 데 이념, 집단 정체감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훨씬 초월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북한이라는 외집단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예견하기 위한 범주형 예측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¹³⁹⁾ 정서는 심적 대비 상태이며¹⁴⁰⁾ 특정 동기를 구현하며, 특정 대상에 대한 행동을 촉발한다.¹⁴¹⁾ 따라서 위협적 사건을 대비하기 위한 동기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COVID-19 사태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집단 간 갈등 고조 및 협력 사이의 매개 요소로서의 정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집단에 기반 정서 중 집단 기반 공포와 집단 간 공감은 전염병의 대유행이 집단 간 갈등에 미치는 이중적 효과를 매개할 수 있는 요소이다. 왜냐하면 이 두 정서들이 COVID-19 사태가 집단 간 관계에 미치는 이중적 영향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공포는 위협의 산물로서 집단 간 증오를 유발하는 반면, 공감은 어느 정도의 관점

137) Eran Halperin et al., "Anger, Hatred, and the Quest for Peace: Anger Can Be Constructive in the Absence of Hatred,"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5, no. 2 (2011), pp. 274~291.

138) Ifat Maoz and Clark McCauley, "Threat, Dehumanization, and Support for Retaliatory Aggressive Policies in Asymmetric Conflict," pp. 93~116.

139) 박주화 외,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pp. 375~400.

140) Andrea Scarantino and Ronald de Sousa, "Emotion," i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Winter 2018 Edition), ed. Edward N. Zalta,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win2018/entries/emotion>> (Accessed August 14, 2020).

141) Richard P. Bagozzi, Mahesh Gopinath, and Prashanth U. Nyer, "The Role of Emotions in Marketing,"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27, no. 2 (1999), pp. 184~206.

취하기(perspective taking)와 집단 간의 동질성을 요구하며 집단 간 협력과 유화적 태도를 유발한다. COVID-19 사태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기반이 되는 이론들과 연구들을 먼저 제시한 후 두 가지 집단 수준의 정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4) 파괴적 경로: COVID-19 사태로 인해 심화된 집단 간 증오

다양한 이론과 연구들은 COVID-19와 같은 외부적 위협에 직면할 때 내집단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와 적대적 집단에 대한 증오가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예측한다.¹⁴²⁾ 진화심리학적 관점을 통해,¹⁴³⁾ 우리는 역사적으로 생태적 병원체의 유행(ecological pathogen prevalence)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심리적 대처기제를 형성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외집단에 대한 거리 두기는 감염을 막는 데 특히 효과적이었다. 이는 외집단 구성원은 내집단 구성원이 면역력을 확보하지 못한 병원체를 옮길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¹⁴⁴⁾ 따라서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전염병의 대유행에 직면한 개인들은 사회적 정체감을 공유하는 사람들, 즉 내집단 구성원들은 외집단 구성원에 비해 자신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적다고 판단하며, 결과적으로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는다.¹⁴⁵⁾

142) Tegan Cruwys et al., "Risk-Taking That Signals Trust Increases Social Identification," pp. 319~333.

143) Piotr Sorokowski et al., "Can Information About Pandemics Increase Negative Attitudes toward Foreign Groups? A Case of Covid-19 Outbreak," *Sustainability*, vol. 12, no. 12 (2020), p. 4912.

144) Damian R. Murray, Mark Schaller, and Peter Suedfeld, "Pathogens and Politics: Further Evidence That Parasite Prevalence Predicts Authoritarianism," *PLoS One*, vol. 8, no. 5 (2013), p. e62275.

145) Tegan Cruwys et al., "Risk-Taking That Signals Trust Increases Social Identification," pp. 319~333.

공포관리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죽음, 즉 자신의 삶이 갑자기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압도된다.¹⁴⁶⁾ 죽음의 불안, 즉 존재론적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개인은 방어 체계가 손상되고 다양한 위협에 취약해짐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공포관리이론은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서는 벗어나는 방법으로 문화에 주목하였다. 개인은 문화가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그들이 죽은 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고 믿는다. 사람들은 자신을 불멸하는 문화의 일부로 통합함으로써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문화가 존재하는 한 자신도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⁴⁷⁾

공포관리이론을 집단 간 관계에 적용한 연구에 따르면 본인의 죽음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특히 내집단의 문화적 기준을 위반한 사람들(예컨대 미국의 생활방식을 폄하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가혹한 판단을 내리며 자신들의 기준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⁸⁾ 다시 말해 위협(특히 그들의 건강과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처한 집단 구성원들은 그들의 실존적 불안을 감소시킬 수단으로 내집단(문화)에 대한 동일시를 강화하는 한편, 외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거리를

146) Jeff Greenberg, Tom Pyszczynski, and Sheldon Solom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 Need for Self-Esteem: A Terror Management Theory," in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ed. Roy F. Baumeister (New York: Springer, 1986), pp. 189~212.

147) Cathryn Van Kessel, Kent Den Heyer, and Jeff Schimel, "Terror Management Theory and the Educational Situation,"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52, no. 3 (2020), pp. 428~442.

148) Sheldon Solomon, Jeff Greenberg, and Tom Pyszczynski, "Pride and Prejudice: Fear of Death and Social Behavior,"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9, no. 6 (2000), pp. 200~204; Mark J. Landau et al., "Deliver Us from Evil: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and Reminders of 9/11 on Support for President George W. Bus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0, no. 9 (2004), pp. 1136~1150.

두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이론과 연구를 통해 개인들은 내집단과의 동일시를 강화하고 그들이 외집단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COVID-19 사태와 같은 외부적 위협에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고착화된 집단 간 갈등의 맥락에서 COVID-19 사태와 같은 외부 위협은 집단 간 화해를 가로막는 일부 사회심리학적 장벽을 강화할 수도 있다. 고질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지지하는 신념이나 태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COVID-19에 의한 인지적, 정신적 과부하는 앞서 언급한 갈등을 지지하는 신념 등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다.¹⁴⁹⁾ 특히 COVID-19와 이로 인해 증가된 집단 간 편향은 집단에 기반한 공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포는 그 본질 상 위협을 느낄 때 발생하며(Oxford Dictionary, “Fear” 2020), 집단 간 갈등(즉, 집단에 기반한 공포)은 내집단과의 동일시 경향이 강화되는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¹⁵⁰⁾ 이것은 COVID-19 위협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외집단에 대한 적대적이고 강경한 정책에 대한 지지 사이에서 강력한 매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포는 위협 또는 위협으로 인지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관적 정서 상태로 심리적 반응을 동반한다.¹⁵¹⁾ 종종 공포는 나약함에 대한 인지와 이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위협 사건에 대한 적은 협력 가능성을 수반한다.¹⁵²⁾ 공포는 또한 문화-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이

149)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pp. 923~956.

150) Vincent Yzerbyt et al., “I Feel for Us: The Impact of Categorization and Identification on Emotions and Action Tendenci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2, no. 4 (2003), pp. 533~549.

151) Eran Halperin, “Group-Based Hatred in Intractable Conflict in Israel,”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2, no. 5 (2008), pp. 713~736.

경험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되며 당사자의 개인적 지위, 사회적 지위, 이익, 정체감, 신념 등에 의해 유발된다.¹⁵³⁾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포 요인은 COVID-19의 경우에서와 같이 실존(physical existence)에 대한 위협이다.¹⁵⁴⁾ 공포는 한 개인이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하려는 육체적, 정신적 반응 속에서 발현된다. Linder에 따르면, 공포는 개인이 갈등에 대처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지지하도록 만든다.¹⁵⁵⁾

집단 수준의 경우, 사람들은 집단 간 갈등에서 높은 수준의 공포를 경험할 때 공격적인 행동이 역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되더라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¹⁵⁶⁾ 공포는 집단 내 결속을 강화하며,¹⁵⁷⁾ 극단적인 공포는 인지적 “정체(stagnation)”를 유발하여¹⁵⁸⁾ 심적 유연성을 저해하고 자동적인 방어 기제 및 인지적 경직 기제를

152) Ira J. Roseman, “Cognitive Determinants of Emotion: A Structural Theory,” *Review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 5 (1984), pp. 11~36.

153) Phillip Shaver et al.,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no. 6 (1987), pp. 1061~1086.

154) Maria Jarymowicz and Daniel Bar-Tal, “The Dominance of Fear over Hope in the Life of Individuals and Collectiv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6, no. 3 (2006), pp. 367~392.

155) Jennifer Ruh Linder and Andrew W. Collins, “Parent and Peer Predictors of Physical Aggression and Conflict Management in Romantic Relationships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9, no. 2 (2005), pp. 252~262.

156) Ifat Maoz and Clark McCauley, “Threat, Dehumanization, and Support for Retaliatory Aggressive Policies in Asymmetric Conflict,” pp. 93~116.

157) Michael J. A. Wohl, Nyla R. Branscombe, and Stephen Reysen, “Perceiving Your Group’s Future to Be in Jeopardy: Extinction Threat Induces Collective Angst and the Desire to Strengthen the Ingrou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6, no. 7 (2010), pp. 898~910.

158) Arie W. Kruglanski, “The Quest for the Gist: On Challenges of Going Abstract i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8, no. 2 (2004), pp. 156~163.

활성화시킨다.¹⁵⁹⁾ 또한 공포는 위협과 관련된 정보의 양극화를 조장하는데, 이는 공포와 관련된 지식의 선별적 검색, 새로운 사상에 대한 개방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¹⁶⁰⁾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지속적인 갈등에서 발생하는 집단 기반 공포의 경우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외집단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집단 구성원은 새로운 정보에 대해 보다 덜 개방적이고 (그러나 갈등을 지지하는 신념체계는 강화됨) 외집단 구성원들을 위협하다고 인식하는 한편, 집단 간 공격을 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¹⁶¹⁾

COVID-19에 의해 촉발된 위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단에 기반한 공포를 강화시킬 수 있다. COVID-19 사태에 의한 공포는 외집단에 대한 공포로 일반화될 수 있으며 COVID-19 대유행의 위협은 내집단의 취약성을 높이고 외집단에 의한 위협 의식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갈등과 관련하여 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은 COVID-19 발생 이후 전염병의 규모와 심각성에 대한 그 어떤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COVID-19에 대한 공포는 외집단에 대한 공포와 직접적으로 결부될 수 있다(즉, 북한 당

159) Samandar Cohen-Chen et al., "The Differential Effects of Hope and Fear on Information Processing in Intractable Conflict," *Journal of Social and Political Psychology*, vol. 2, no. 1 (2014), pp. 11~30.

160) Gerald L. Clore, Norbert Schwarz, and Michael Conway, "Affectiv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Basic Processes*, eds. Robert S. Wyer and Thomas K. Srull (Hillsdale, N.J.: Erlbaum, 1994), pp. 323~417.

161) Racheli Cohen, Ruthie Pliskin, and Eran Halperin, "How I Learned to Stop Fearing: Ideological Differences in Choice of Reappraisal Conten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9, no. 3 (2018), pp. 482~502. 그러나 정서는 정서에 대한 확신이나 정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고질적인 갈등 상황에서 공포는 유화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들 정책이 위협의 강도를 완화시켜 주거나 안정감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이 점이 집단에 기반한 공포가 집단에 기반한 증오와 다른 점이다. 후자의 목표는 갈등집단을 파괴하는 데 있다.

국이 전염병의 대유행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 결국 집단에 기반한 공포는 외집단에 대한 증오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건설적 경로: COVID-19 사태로 인해 초래된 공통 내집단 정체감

위협에 대한 반응 모델 중 상당수가 내집단의 사회적 결속 및 정체감(identification)의 강화를 예측하고 있으나 어떤 내집단이 표적이 되는지(예: 도시, 국적, 인종, 종교)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모델은 드물다. 예를 들어, 특정 도시 혹은 국가의 거주자로서의 정체감 강화를 통해 위협에 대응하는 경우 이와 같은 태도가 이민 경력이 있는 거주자에게 확대될 수 있다.¹⁶²⁾ 마지막으로 언급한 사례는 집단 간 태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전염병의 대유행과 관련된 집단 수준의 결합 필요성을 암시한다. 실제로 COVID-19는 자원의 재분배, 제한 및 우선순위의 재조정 등으로 인한 국가 내 집단 간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COVID-19가 국가 내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영향력을 넘어 국가 간 갈등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집단적인 위협이나 위협에 직면한 경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제후나 친밀감을 추구하거나 상호 협력 의사를 표명 혹은 협조적으로 행동한다.¹⁶³⁾ 이는 위협 아

162) Jais Adam-Troian, "The Pathogen Paradox: Evidence That Perceived Covid-19 Threat Is Associated with Both Pro- and Anti-Immigrant Attitudes," pp. 1~35.

163) Anthony R. Mawson, "Understanding Mass Panic and Other Collective Responses to Threat and Disaster,"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vol. 68, no. 2 (2005), pp. 95~113; María Alonso-Ferres et al., "Connecting Perceived Economic Threat and Prosocial Tendencies: The Explanatory Role of Empathic Concern," *PLoS One*, vol. 15, no. 5 (2020), p. e0232608; Jay J. Van Bavel et al., "Using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 to Support Covid-19 Pandemic Response," pp. 460~471.

래 전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집단적인 반응이 협력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 간 관계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개인이 가지는 집단 구성원의 정체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이들 사회 집단의 경계는 가변적이다.¹⁶⁴⁾ 사회정체성 이론가들(Social Identity Theorists)은 다양한 집단에 대한 심리학적 정체감이 어떻게 집단 간 편견과 태도를 규정하는 집단 경계의 개념을 형성하는지를 광범위하게 연구해 왔다. 이와 같은 연구가 밝혀낸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개인이 높은 수준의 자기 범주화를 통해 공통적인 내집단의 일부라는 정체감을 가질 때 기존의 내집단-외집단 간의 경계는 변화되며 집단 간 부정적인 태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¹⁶⁵⁾ 같은 맥락에서 공통 내집단 정체감 모델(Common In-group Identity Model)은 다른 집단의 개인들이 자신들이 동일한 목적과 운명을 공유한다고 인지하며, 집단을 초월한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강화될 때 자신들을 공통적인 상위 집단의 일원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상기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집단 간 편견은 강화되는 반면, 집단 간 관계는 더욱 조화롭게 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¹⁶⁶⁾

164) Alexander S. Haslam et al., "The Group as a Basis for Emergent Stereotype Consensu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8, no. 1 (1997), pp. 203~239.

165) 사회정체성 이론에 대한 개관은 다음 두 연구를 참고하면 된다. Henri Ed Tajfel,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London: Academic Press, 1978); Henri Ed Tajfel,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London: Academic Press, 1981).

166) Samuel L. Gaertner et al., "The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 Recategorization and the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4, no. 1 (1993), pp. 1~26.

결과적으로, 공통 내집단 정체감 모델에 따르면 외부의 위협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이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도 집단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은 강화된다. 결과적으로 집단 간 태도 및 행동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¹⁶⁷⁾ 결국 공통 내집단 정체감은 외집단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켜 줄 것으로 예측되며¹⁶⁸⁾ 외집단에 대한 평가절하 및 내집단에 대한 선호를 약화시키고 집단 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¹⁶⁹⁾

이와 같은 가설은 관찰, 실험, 종적 설계 등을 사용하여 진행된 수십 년 간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¹⁷⁰⁾ 자연재해, 전쟁, 전염병의 대유행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은 또한 정부 간 및 지역 간의 유화적인 조치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¹⁷¹⁾ 2012년 이탈리아 대지진 이후, 이탈리아 아동들이 인식한 지진에 대한 위협은 이탈리아 출신 아동 집단 및 이민자 출신 아동 집단 모두를 포함하는 공통 내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증가시켰으며 집단 간 보다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유발했다.¹⁷²⁾

167) John F. Dovidio, Samuel L. Gaertner, and Tamar Saguy, “Commonality and the Complexity of “We”: Social Attitudes and Social Change,”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3, no. 1 (2009), pp. 3~20.

168) Blake M. Riek, Eric W. Mania, and Samuel L. Gaertner, “Intergroup Threat and Outgroup Attitudes: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0, no. 4 (2006), pp. 336~353.

169) Mark Levine et al., “Identity and Emergency Intervention: How Social Group Membership and Inclusiveness of Group Boundaries Shape Helping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1, no. 4 (2005), pp. 443~453.

170) Samuel L. Gaertner et al., “A Common Ingroup Identity: Categorization,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in *Handbook of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Stereotyping*, ed. Todd D. Nelson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6), pp. 433~454.

171) Jay J. Van Bavel et al., “Using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 to Support Covid-19 Pandemic Response,” pp. 460~471.

172) Loris Vezzali et al., “Feeling Like a Group after a Natural Disaster: Common Ingroup Identity and Relations with Outgroup Victims among Majority and

또 다른 예로는 국가들이 잉여 물자, 의료 기술 및 장비를 상호 기부하는 국제 협력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유엔 경제사회국(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은 최근 COVID-19 사태를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지식과 과학의 공유를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변혁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UN/DESA 2020) 전염병의 대유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의 국제적 및 국가적 단합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의 이론적 연구들은 전염병의 대유행 시기에 형성된 집단적 소속감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 정체감을 중심으로 한 접근방식으로 COVID-19 사태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¹⁷³⁾

세계적 전염병이라는 본질을 고려할 때 COVID-19는 포용적인 공통 내집단과의 동일시를 촉발하는 전형적인 외부로부터의 위협 사례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 남북한 모두 동일한 민족, 언어,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COVID-19 위협은 동일한 민족 내집단(즉, “한민족”)으로서의 재범주화 사례로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러므로 공통 내집단 정체감 모델의 관점에서 COVID-19 사태가 촉발한 위협은 외집단과의 협력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COVID-19 대유행의 위협은 기존의 내집단과 외집단

Minority Young Childre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4, no. 3 (2015), pp. 519~538.

173) Tegan Cruwys, Mark Stevens, and Katharine H. Greenaway, “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on Covid-19: Health Risk Is Affected by Shared Group Membership,”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9 (2020), pp. 584~593; John Drury et al., “A Social Identity Model of Riot Diffusion: From Injustice to Empowerment in the 2011 London Rio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0, no. 3 (2020), pp. 646~661; Anne Templeton et al., “Inequalities and Identity Processes in Crises: Recommendations for Facilitating Safe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9, no. 3 (2020), pp. 674~685.

을 보다 높은 차원의 공통 내집단으로 통합하는 강력한 사회적 “재편(reshuffling)”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양측이 민족성을 공유하는 한반도 갈등의 맥락을 고려할 때 특히 큰 의미를 가진다.

COVID-19 위협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갈등집단을 공통된 내집단으로 재범주화 하는 현상은 기존의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촉발할 수 있다. 고착화된 집단 간 갈등은 공통점과 유사성 그리고 공유된 운명 혹은 목표를 바탕으로 다른 내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집단에 기반한 공감을 형성한다.¹⁷⁴⁾ COVID-19 위협과 그에 따른 폭넓은 사회적 반응, 즉 갈등집단과 공동의 운명, 목표를 공유하고 동일한 위협에 함께 직면해 있다는 반응은 과거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공감을 형성하여 내집단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in it together)”는 인식을 형성하며 결국 외집단과 협력하고 외집단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시킨다.¹⁷⁵⁾

공감은 복잡한 사회-정서적 반응으로서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한 인식 이후에 발생한다. 공감은 타인의 경험(experience)과 나의 반응(response)을 연결시켜 주는 일련의 정서적, 인지적 구조이다.¹⁷⁶⁾ 이와 같은 반응에는 타인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정서 경험, 그리고 타인의 관점을 인식하는 인지적 반응 및 행동적 반응 등이 포함된다.¹⁷⁷⁾ 공감은 고난 혹은 불행의 맥락에서

174) Stefan Stürmer et al., “Empathy-motivated Helping: The Moderating Role of Group Membershi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2, no. 7 (2006), pp. 943~956.

175) Daniel C. Batson and Nadia Y. Ahmad, “Using Empathy to Improve Intergroup Attitudes and Relation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vol. 3, no. 1 (2009), pp. 141~177; Bart De Vos et al., “The Communication of “Pure” Group-Based Anger Reduces Tendencies toward Intergroup Conflict Because It Increases Out-Group Empath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9, no. 8 (2013), pp. 1043~1052.

176) Mark H. Davis, Carol Luce, and Stephen J. Kraus, “The Heritability of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Disposi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vol. 62, no. 3 (1994), pp. 369~391.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정이나 연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동정과 연민의 정서를 느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¹⁷⁸⁾ 공감은 대인관계 및 집단 내에서 사회 친화적 협력을 유도하는데¹⁷⁹⁾ 이때 집단 혹은 타인과 공유된, 즉 “함께하는 느낌(feeling with)”을 반영한다.¹⁸⁰⁾ 우리는 타인의 슬픔, 공포를 인정하고 동일한 정서를 경험하며 타인의 고통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¹⁸¹⁾

이와 같이 공감은 지속되는 갈등 속에서 집단 간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공감은 외집단 구성원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의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고착화된 갈등에서 외집단에 대한 유화적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촉진한다.¹⁸²⁾ 예를 들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서 외집단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 공감의 정서가 높은 이스라엘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도 높았다.¹⁸³⁾ 또한 팔레스타

177) Jean Decety, “The Neural Pathways, Development and Functions of Empathy,”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vol. 3 (2015), pp. 1~6.

178) Daniel C. Batson and Laura L. Shaw, “Evidence for Altruism: Toward a Pluralism of Prosocial Motives,” *Psychological Inquiry*, vol. 2, no. 2 (1991), pp. 107~122.

179) Daniel C. Batson et al., “Empathy and Attitudes: Can Feeling for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Improve Feelings toward the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2, no. 1 (1997), pp. 105~118.

180) Tania Singer and Claus Lamm, “The Social Neuroscience of Empathy,”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 1156, no. 1 (2009), pp. 81~96.

181) Daniel C. Batson and Nadia Y. Ahmad, “Using Empathy to Improve Intergroup Attitudes and Relations,” pp. 141~177.

182) Sabrina J. Pagano and Yuen J. Huo, “The Role of Moral Emotions in Predicting Support for Political Actions in Post-War Iraq,” *Political Psychology*, vol. 28, no. 2 (2007), pp. 227~255.

183) Ruthie Pliskin et al., “Are Leftists More Emotion-Driven Than Rightists? The Interactive Influence of Ideology and Emotions on Support for Polic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40, no. 12 (2014), pp. 1681~1697.

인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 유대인의 공감에 협상에 대한 의지와 관련이 있었다.¹⁸⁴⁾ 또 다른 맥락에서 외집단에 대한 공감은 편견과 인종주의를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화적인 태도를 강화시킨다.¹⁸⁵⁾ 결국 공감은 갈등 상황 속에서 집단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특히 집단 간 협력과 지지를 촉진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외집단에 대한 공감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공감은 타인의 관점을 취하고 그의 내면을 파악하는 작업이므로 우리와 유사한 타자에 대한 공감이 더 용이하다. 따라서 내집단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타인에 비해 다른 집단(예: 인종적, 정치적 혹은 사회적 집단)에 속한 타인에 대한 공감의 강도가 더 떨어진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며¹⁸⁶⁾ 이와 같은 현상은 “집단 간 공감 편향(intergroup empathy bias)”이라고 불린다.¹⁸⁷⁾ 이와 같은 편향은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내집단의 안녕에 대한 외집단의 인지된 위협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¹⁸⁸⁾ 이와 같은 상

184) Ifat Maoz and Clark McCauley, “Threat, Dehumanization, and Support for Retaliatory Aggressive Policies in Asymmetric Conflict,” pp. 93~116.

185) Andrew R. Todd, Galen V. Bodenhausen, and Adam D. Galinsky, “Perspective Taking Combats the Denial of Intergroup Discrimin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8, no. 3 (2012), pp. 738~745.

186) Harvey A. Hornstein, “Empathic Distress and Altruism: Still Inseparable,” *Psychological Inquiry*, vol. 2, no. 2 (1991), pp. 133~135; Mark H. Davis, Carol Luce, and Stephen J. Kraus, “The Heritability of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Dispositional Empathy,” pp. 369~391; Daniel C. Batson and Nadia Y. Ahmad, “Using Empathy to Improve Intergroup Attitudes and Relations,” pp. 141~177.

187) Melike M. Fourie, Sivenesi Subramoney, and Pumla Gobodo-Madikizela, “A Less Attractive Feature of Empathy: Intergroup Empathy Bias,” in *Empathy: An Evidencebase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ed. Makiko Kondo (London: INTECH, 2017), pp. 45~61.

188) Nyla R. Branscombe et al., “The Context and Content of Social Identity Threat,” in *Social Identity: Context, Commitment, Content*, eds. Naomi

황에서 사람들은 심지어 외집단의 고난에 기쁨을 느끼거나 외집단의 성취에 불쾌감을 느낀다.¹⁸⁹⁾

그러나 모든 외집단에 대하여 집단 간 공감 편향이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편향은 명백하게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¹⁹⁰⁾ 집단 간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중 특히 본 연구와 관련된 것은 공통 내집단의 형성은 과거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공감을 강화시킨다는 결과이다.¹⁹¹⁾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보다 포용적인 사회범주화가 명백하게 이루어질 때 공감적인 행동이 과거 외집단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¹⁹²⁾ COVID-19 사태는 서로 다른 집단 구성원들이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유행이라는 공동의 위협을 공유하며 보다 포용적인 공통 내집단 동일시를 조장하기에 기존의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공감을 촉진하여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한다.

양측이 다양한 유사성과 공통된 특징(민족, 언어, 역사)을 공유하

Ellemers, Russell Spears, and Bertjan Doosje (New York: Wiley-Blackwell, 1999), pp. 35~58.

189) Richard H. Smith et al., "Exploring the When and Why of Schadenfreude,"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vol. 3, no. 4 (2009), pp. 530~546.

190) Jennifer N. Gutsell and Michael Inzlicht, "Empathy Constrained: Prejudice Predicts Reduced Mental Simulation of Actions During Observation of Outgrou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6, no. 5 (2010), pp. 841~845; Jennifer N. Gutsell and Michael Inzlicht, "Using EEG Mu-Suppression to Explore Group Biases in Motor Resonance," in *Neuroscience of Prejudice and Intergroup Relations*, eds. Belle Derks, Daan Scheepers, and Naomi Ellemers (London: Psychology Press, 2013), pp. 278~298.

191) John F. Dovidio et al., "Extending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Evaluations, Self-Disclosure, and Help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3, no. 4 (1997), pp. 401~420.

192) Mark Levine et al., "Identity and Emergency Intervention: How Social Group Membership and Inclusiveness of Group Boundaries Shape Helping Behavior," pp. 443~453.

고 있는 한반도 갈등 맥락에서 공통된 위협은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에 대해 보다 많은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으며,¹⁹³⁾ 집단 간 협력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킬 수 있다.

나. 연구 설계

다양한 이론과 최근 수행된 연구를 통해 COVID-19 위협이 집단 간 관계에 미치는 두 유형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다수-소수 집단 간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착화된 집단 간 갈등의 맥락(즉 교전 중인 국가, 폭력적인 종족주의적 분쟁)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거 집단 간 갈등 고조 혹은 화해와 같은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외부의 위협 및 내집단 경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서적 기제를 COVID-19가 집단 간 갈등 고조 및 협력에 미치는 영향의 잠재적 매개 요소로 보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집단의 범주 및 동일시는 집단에 기반한 정서와 그 강도를 형성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¹⁹⁴⁾ 위협 및 집단 간 공통점이 집단에 기반한 공포¹⁹⁵⁾ 및 공감¹⁹⁶⁾에 행사하는 독보적인 영향력 및 적대세력과 이미 공통의 내집단을 공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장기적인 갈등도 겪고 있는 한반도 갈등 맥락을 고려할 때¹⁹⁷⁾ 우리는 COVID-19의 대

193) Mina Cikara et al., "Their Pain Gives Us Pleasure: How Intergroup Dynamics Shape Empathic Failures and Counter-Empathic Respon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55 (2014), pp. 110~125.

194)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pp. 923~956.

195) Michael J. A. Wohl, Nyla R. Branscombe, and Stephen Reysen, "Perceiving Your Group's Future to Be in Jeopardy: Extinction Threat Induces Collective Angst and the Desire to Strengthen the Ingroup," pp. 898~910.

196) Nyla R. Branscombe et al., "The Context and Content of Social Identity Threat," pp. 35~58.

유행 사태가 한국인들의 국가 정체감을 강화하고(COVID-19 발생 1년 전 실시된 유사 표본조사와 비교했을 때) 집단에 기반한 공포를 확산시킴으로써 북한이라는 외집단에 대한 증오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우리는 한국의 참가자들이 한민족으로서 높은 민족 정체감을 보이며(COVID-19 발생 전 표본조사와 비교했을 때) 외집단에 대한 공감 역시 증가함으로써 북한 외집단과의 협력과 지원에 대한 지지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1) 참가자

이 표본은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한반도 갈등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메타-차원 분석(meta-dimensional analyses) 과정에서 수행한 2차 웨이브 종단면 연구에서 수집되었다. 상기 연구를 통해 우리는 COVID-19 위기 전후의 심리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표본은 2019년 3월 중 648명의 여성, 652명의 남성, 총 1,300명의 한국인 참가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으며($MAGE=46$, $SDAGE=13.7$),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미화 479 달러였다. 두 번째 표본은 2020년 4월 중 804명의 여성, 796명의 남성, 총 1,600명의 한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MAGE=46.5$, $SDAGE=13.7$)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미화 473달러였다. 이들 표본의 경우 성별, 이념, 교육, 종교에서 큰 차이는 없었으며 표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했다.

(2) 측정

민족정체감은 4개 문항(“전반적으로 귀하는 한민족 구성원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니까?”, “귀하는 한민족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197) 박주화 외,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pp. 375~400.

동일시하십니까?”, “귀하는 귀하가 한민족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스스로 한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9점 척도로 측정하였다(통합 표본: $METID=5.76$, $SDETID=1.41$, $\alpha=.89$), 남한정체감은 4개 문항(“전반적으로 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니까?”, “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귀하는 귀하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9점 척도로 측정하였다(통합 표본: $MSKID=6.27$, $SDSKID=1.5$, $\alpha=.91$). 또한 참가자들은 북한 주민에 대해 다양한 집단 기반 정서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공포(통합 표본 $MFEAR=3.71$, $SDFEAR=1.16$)와 북한에 대한 공감(통합 표본 $MEMPATHY=3.27$, $SDEMPATHY=1.22$) 등을 포함한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는 6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끝으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 선호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평가 문항 중에는 적대감(“적대감을 가져야 할 집단”, 통합 표본: $MHOSTILE=5.59$, $SDHOSTILE=2.45$), 집단 간 협력에 대한 적극적 의지(“협력해야 할 집단”, 통합 표본: $MCOOP=5.73$, $SDCOOP=2.43$), 북한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적극적 의지(“지원해야 할 집단”, 통합 표본: $MCOOP=5.08$, $SDCOOP=2.44$) 등이 포함되었다.

다. 결과

(1) 상관분석

앞서 언급한 두 표본 사이의 차이를 검토하기 전에 우리는 각각의 데이터 세트에서 관련 변인(relevant variable) 사이의 상관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했다. <표 III-1>에 제시된 것과 같이,

두 표본에서 민족정체감은 모두 양(+)¹의 값을 보였으며 남한정체감, 북한에 대한 공포, 북한에 대한 공감 및 협력 인식과 지원 인식 등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민족정체감과 북한에 대한 적대인식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공감은 민족정체감, 협력인식, 지원인식과는 양(+)¹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북한에 대한 공포와는 부(-)¹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북한에 대한 공감과 북한에 대한 공포 사이, 그리고 외집단에 대한 공감과 남한정체감 사이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남한정체감은 민족정체감, 북한에 대한 공포, 적대인식, 협력인식과 지원인식과 상당한 양(+)¹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공포는 외집단에 대한 북한에 대한 적대인식과는 상당한 양(+)¹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첫 번째 표본에서는 공포가 외집단과의 협력 및 외집단에 대한 지원과 상당한 부(-)¹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COVID-19 사태 발생 이후에 수집된 표본에서는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2) 두 시점 간 차이에 대한 검증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1차적 검증 차원에서 두 표본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두 표본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 시점(COVID-19 사태 발생 전후)을 독립 변인으로, 민족정체감, 남한정체감, 북한에 대한 공포 및 공감, 적대인식, 협력인식, 지원인식 등을 종속 변인으로 한 독립 표본 T-검정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COVID-19 발생 이전에 표본수집에 참여한 1,300명의 참가자에 비해(METID=5.56, SDETID=1.48; $t(2898)=-6.77, p=.015$) COVID-19 사태 발생 이후 시행한 표본수집에 참여한 1,600명의 참가자가 민족에 더 큰 동

일시를 보였다($METID=5.92$, $SDETID=1.33$). 2020년 참여자들은 남한에 대해서도 높은 동일시를 보였으며(이전: $MSKID=6.04$, $SDSKID=1.56$, 이후: $MSKID=6.45$, $SDSKID=1.43$; $t(2898)=-7.3$, $p=.082$), 북한에 대한 공포의 수준(이전: $MFEAR=3.52$, $SDFEAR=1.14$, 이후: $MFEAR=3.86$, $SDFEAR=1.15$; $t(2898)=-7.7$, $p=.065$), 외집단 공감(이전: $MEMPATY=3.14$, $SDEMPATY=1.22$, 이후: $MEMPATY=3.38$, $SDEMPATY=1.22$; $t(2898)=-5.1$, $p=.39$), 적대인식(이전: $MHOSTILE=5.48$, $SDHOSTILE=2.5$, 이후: $MHOSTILE=5.68$, $SDHOSTILE=2.41$; $t(2898)=-2.2$, $p=.32$), 협력인식(이전: $MCOOP=5.58$, $SDCOOP=2.40$, 이후: $MCOOP=5.85$, $SDCOOP=2.35$; $t(2898)=-2.8$, $p=.003$), 지원인식(이전: $MASSIST=4.76$, $SDASSIST=2.49$, 이후: $MASSIST=5.35$, $SDASSIST=2.37$; $t(2898)=-6.48$, $p=.005$)에서도 더 강한 반응을 보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중요성을 넘어서는 결과이다.

〈표 III-1〉 두 표본의 측정된 변인 간의 종간값, SD 및 영차 상관(zero-order correlation)

	COVID-19 사태 발생 이전(n=1,300)						COVID-19 사태 발생 이후(n=1,600)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1. 민족정체감	5.56	1.48	(.89)						5.92	1.33	(.89)					
2. 남한정체감	6.04	1.56	.73**						6.46	1.43	.75**					
3. 북한에 대한 공포	3.52	1.14	.09**	.12**	-				3.86	1.15	.11**	.11**	-			
4. 북한에 대한 공감	3.14	1.22	.19**	.04	.00	-			3.38	1.22	.14**	.02	.04	-		
5. 적대인식	5.48	2.50	-.01	.05*	.38**	-.2**	-		5.68	2.41	.04	.05*	.2**	-.14**		
6. 협력인식	5.58	2.52	.22**	.13**	-.14**	.33**	-.43**	-	5.85	3.35	.30**	.2**	-.04	.29**	-.28**	-
7. 지원인식	4.76	2.49	.23**	.15**	-.07*	.4**	-.31**	.63**	5.35	2.37	.26**	.14**	-.05	.33**	-.2**	.66**

표 좌측은 COVID-19 사태 발생 이전에 수집된 표본의 상관관계들, 우측은 COVID-19 사태 발생 이후에 수집된 표본의 상관관계들 나타낸다.

〈표 III-2〉 COVID-19 발생 전후 진행된 조사의 변수 평균 및 평균차이

	시점 1 (COVID-19 이전)	시점 2 (COVID-19 이후)	평균차이
1. 민족정체감	5.56	5.92	0.36***
2. 남한정체감	6.04	6.45	0.41***
3. 북한에 대한 공포	3.52	3.86	0.33***
4. 북한에 대한 공감	3.14	3.38	0.23***
5. 적대인식	5.48	5.68	0.2**
6. 협력인식	5.58	5.85	0.26***
7. 지원인식	4.76	5.35	0.59***

(3) 매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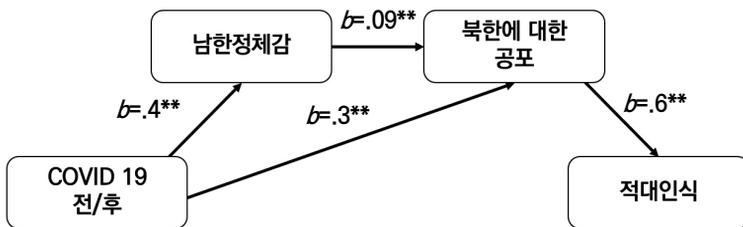
본 연구의 가설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부트스트래핑 프로세스(모델 6)을 적용하여 매개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정체감 및 집단에 기반한 정서를 통해 COVID-19 사태가 집단 간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각 경로에 대한 기제를 파악하였다.

(가) COVID-19 및 집단 간 증오에서의 집단에 기반한 공포의 매개 역할

표본 수집 시점(COVID-19 전후)을 독립 변인으로, 남한정체감을 1차 매개로, 북한에 대한 공포를 2차 매개로, 적대인식을 결과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그 결과 대유행 발생 이전에 수집된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COVID-19는 남한정체감을 강화하고($b=.40$, $SE=.05$, $t=7.32$, $p<.01$), 북한에 대한 공포를 높이는 한편($b=.3$, $SE=.04$, $t=6.9$, $p<.01$), 북한에 대한 적대인식을 강화하는 것($b=.2$, $SE=.09$, $t=2.2$, $p<.05$)으로 조사되었다. 남한정체감은 외집단에 대한 공포를 강화하고($b=.09$, $SE=.01$, $t=6.17$, $p<.01$), 이는 북한에 대한 적대

인식의 강도를 높였다($b=0.6$, $SE=.04$, $t=15.7$, $p<.01$). 그러나 시간 요인(COVID-19 전후)과 남한정체감이 각각 북한에 대한 적대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두 번째 매개(북한에 대한 공포)가 모델에 적용되는 순간 사라졌다(COVID-19 전후: $b=0.008$, $SE=.08$, $t=-1$, $p=.92$; $b=0.03$, $SE=.03$, $t=.93$, $p=.34$). 따라서 북한에 대한 공포를 통해 COVID-19와 남한정체감이 외집단에 대한 적대인식의 매개 효과가 드러난 것이다(직접적 효과: $b=-.009$, 95%, $CI=[-0.18, 0.16]$, $p=.92$, 간접적 효과: $b=.211$, 95%, $CI=[0.15, 0.28]$, $p<0.05$).

〈그림 III-1〉 COVID-19의 파괴적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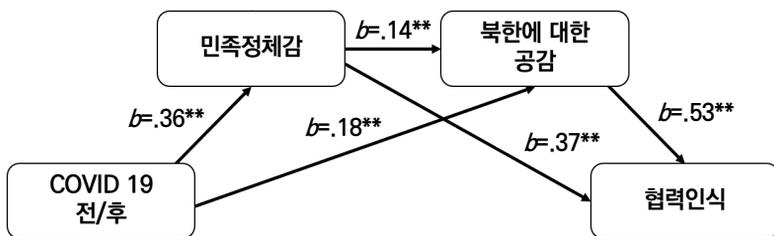


(나) COVID-19 사태가 집단 간 협력 및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집단에 기반한 공감의 매개 역할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 즉 COVID-19의 건설적 경로를 평가하기 위해 두 번째 다중 매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수집 시점(COVID-19 사태 발생 전후)을 독립 변인으로, 민족정체감을 1차 매개로, 북한에 대한 공감을 2차 매개로, 협력인식을 결과 변인으로 각각 상정하였다.

상기 분석을 통해 우리는 민족정체감과 외집단에 대한 공감을 통해 COVID-19가 북한과의 협력인식에 미치는 매개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COVID-19 대유행 발생 이전에 수집된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민족정체감의 강화($b=.36$, $SE=.05$, $t=6.7$, $p<.01$), 북한에 대한 공감 증가($b=.8$, $SE=.05$, $t=4.1$, $p<.01$), 북한과의 협력에 대한 지지 강화($b=.36$, $SE=.05$, $t=6.77$, $p<.05$) 등을 예측할 수 있게 했다. 민족정체감은 북한에 대한 공감의 강화($b=.14$, $SE=.01$, $t=8.77$, $p<.01$), 협력인식의 강화($b=.37$, $SE=.03$, $t=12.4$, $p<.01$)를 보여주었다. 수집 시점의 직접적 영향은 우리의 가설로서 제기된 매개 요소가 분석에 적용되는 순간 그 중요성이 급감하였으며 ($b=.00$, $SE=.08$, $t=0.00$, $p=.99$, $CI=[-0.16, 0.17]$) 이는 COVID-19 사태가 민족정체감($b=.13$, $SE=.02$, 95%, $CI=[0.09, 0.18]$)과 외집단 공감을 통해 집단 간 협력에 미치는 매개 효과를 보여준다($b=.1$, $SE=.02$, 95%, $CI=[0.05, 0.15]$).¹⁹⁸⁾

<그림 III-2> COVID-19의 건설적 경로(협력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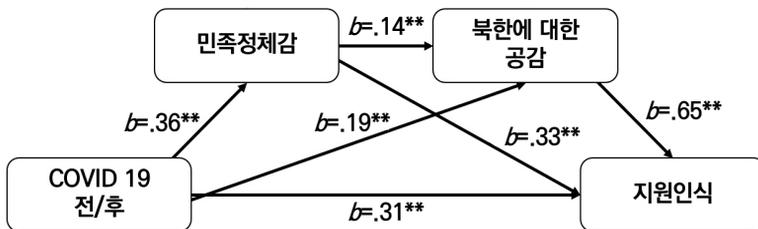


끝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인식을 결과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반복했다. 그 결과, 민족정체감과 북한에 대한 공감을 통해 COVID-19

198) 간접적인 효과의 총계: $b=.26$, 95%, $CI=[0.19, 0.33]$.

사태가 외집단에 대한 지원에 미치는 영향의 부분적 매개 모델이 파악되었다. (COVID-19 사태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COVID-19 발생 이후 설문조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민족정체감($b=.36$, $SE=.05$, $t=6.7$, $p<.01$)과 외집단에 대한 공감($b=.19$, $SE=.04$, $t=4.1$, $p<.01$),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에 대한 보다 높은 지지도($b=.33$, $SE=.03$, $t=11.2$, $p<.01$)를 보여주었다. 앞서 예측한 것과 같이, 북한에 대한 공감은 외집단에 대한 지원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였다($b=.65$, $SE=.03$, $t=19.1$, $p<.01$). 또한 직접적 영향($b=.31$, 95%, $CI=[0.15, 0.47]$) 및 간접적 영향($b=.27$, 95%, $CI=[0.19, 0.35]$)은 전체 모델에서 그 중요성을 유지했다.

〈그림 III-3〉 COVID-19의 건설적 경로(지원인식)



라. 논의 및 결론

COVID-19 대유행은 인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또 집단 구성원으로서 상호 교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한편, 낯설고 두려운 현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인지, 태도, 행동, 정서 등에 영향을 미친다. COVID-19 사태는 수백만 명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동시에 집단 간 관계에 있어 극적인 기회와 위기를 창출하기도 한다. 고착화된 집단갈등에 집단 구성원

들은 적대적 집단으로부터 장기적 위협을 인식하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심리학적 장벽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화해를 더욱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COVID-19 사태와 같은 추가적인 외부 위협은 이들 갈등의 본질과 역학에 파괴적이면서 동시에 건설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부의 위협은 내집단의 단결과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여 집단 간 갈등을 조장하여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갈등상태에 있는 집단이 함께 고통 받는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초래된 위협은 재범주화의 동인으로 작용하여 공통의 내집단을 새롭게 조성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COVID-19 사태를 갈등 관계에 있는 집단 간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갈등의 파괴적인 효과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보고, 이와 같은 이중적인 영향력의 기저에 존재하는 정서적 기제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염병의 대유행의 발생 전후(그러나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 중)에 수행된 2차 웨이브 중단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사회정체감, 집단에 기반한 정서, 한국 참가자들의 집단 간 태도 등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COVID-19 사태 발생이 집단 간 태도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염병의 대유행이 집단 간 적대감을 증가시키는 한편, 북한이라는 외집단과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기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회 정체감 이론¹⁹⁹⁾과 집단 간의 화해를 가로막는 사회심리학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결과²⁰⁰⁾를 종합적

199) Jeff Greenberg, Tom Pyszczynski, and Sheldon Solom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 Need for Self-Esteem: A Terror Management Theory," pp. 189~212; Galen V. Bodenhausen et al., "Affective Influences o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Relations," pp. 321~343; Tegan Cruwys et al., "Risk-Taking That Signals Trust Increases Social Identification," pp. 319~333.

200)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Socio-Psychological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pp. 217~240.

으로 검토하여 우리는 사회정체감과 집단에 기반한 정서를 매개로 COVID-19 사태가 집단 간 태도에 이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상정하였다.

COVID-19 사태 발생 이후 한국인들에게서는 남한정체감이 강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사회 정체감 이론에 부합하는 이러한 현상은 위협에 직면했을 때 집단 구성원들은 서로 단합함으로써 위협에 대해 내집단 결속을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단 간 갈등 상황속에서의 사회심리학적 장벽을 조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남한 정체감이 외집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포를 강화시키며 이는 다시 북한 주민에 대한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정책의 지지로 이어지는 경로가 파악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공통 내집단 이론 및 연구 결과와는 부합하게도, COVID-19 사태 발생 이후 한국인들의 민족적 집단(한민족)에 대한 정체감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민족정체감의 강화는 외집단에 대한 공감 수준을 높였으며 이는 다시 북한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켰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두 경로는 COVID-19 대유행과 같은 위협에 직면했을 때 인간이 취하는 방안을 대변한다. 즉 그들이 취하는 첫 번째 경로는 전염병의 확산에 대한 공포에 대처하기 위해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포용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COVID-19 사태가 집단 간 관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과정이 폭력적이고 장기적인 집단 간의 갈등 맥락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COVID-19 사태가 집단 간의 전쟁이나 평화의 가능성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집단에 기반한 정서가

COVID-19 사태로 인한 위협과 집단 간 갈등 내 긴장고조 혹은 협력에서의 극적인 매개 요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기제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집단 간 관계에서 긴장고조가 아닌 긍정적인 변화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었다.

COVID-19 사태가 조성한 위협 상황에서 사회학자들과 정치/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각종 단체들은 갈등집단 간의 공통점을 강조함으로써 갈등에 처한 집단 간 및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전염병의 대유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경계를 강조하고 전염병의 확산 위협을 국경 간의 문제로 볼 경우, 기존의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후자에 대한 최근 사례로 지난 7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탈북민 한 명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재입국한 후 북한에 첫 번째 COVID-19 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을 들 수 있다.²⁰¹⁾

다양한 개입 조치가 집단에 기반한 공포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²⁰²⁾ 집단에 기반한 공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²⁰³⁾ 이에 우리는 COVID-19 사태에 의해 촉발된 위협의 맥락 속에서 이러한 개입 조치를 적용하는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현행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COVID-19 사태로 인해 집단 간 지원 의지가 강화되는

201) "North Korea Declares Emergency After Suspected Covid-19 Case," *The New York Times*, July 25, 2020, <<https://www.nytimes.com/2020/07/25/world/asia/north-korea-coronavirus-kim-jong-un.html>> (Accessed August 21, 2020).

202) Eran Halperin, Keren Sharvit, and James J. Gross, "Emotion and Emotion Regulation in Intergroup Conflict: An Appraisal-Based Framework," in *Intergroup Conflicts Their Resolution: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Psychological Press, 2011), pp. 83~103.

203) Joshua Ronald Gubler, Eran Halperin, and Gilad Hirschberger, "Humanizing the Outgroup in Contexts of Protracted Intergroup Conflict," *Journal of Experimental Political Science*, vol. 2, no. 1 (2015), pp. 36~46.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다루는 데 있다. 집단에 기반한 공포가 COVID-19 사태에 따른 위협과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 사이의 완전 매개요인이었던 반면, 표본 수집 시점(COVID-19 사태 발생 전후) 이 외집단에 대한 지원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에 기반한 공감을 훨씬 초월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유화적 경로에 더 많은 기제가 내재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한반도 갈등은 적대세력을 연결하는 공유된 내집단(민족, 언어, 역사 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통 내집단에 대한 재범주화가 이와 같은 유사성을 공유하지 않는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집단 간 관계에 COVID-19가 미치는 이중 효과의 핵심 질문에 답하기 위한 후행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해 COVID-19 사태에 따른 위협은 (파괴적 경로를 통한) 집단 간 편향과 (건설적 경로를 통한) 공통 내집단에 대한 범주화를 동시에 촉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경로는 외집단에 대해 모순되는 행동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각 경로를 활성화하고 강도를 강화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즉 COVID-19 사태에 따른 위협이 집단 간 편향을 강화하고 동시에 공통된 내집단의 형성을 촉발하도록 하는 매개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위협이 공통 내집단을 형성하고 외집단에 대한 보다 강력한 공감을 유발하여 집단 간 협력과 지원을 실현하게 해주는 건설적인 경로는 한반도 갈등 상황과 같이 두 집단이 이미 특정한 공통점(즉, 동일한 민족 집단)을 공유하고 있으며 상호 의존적일 경우에만 발현된다. 이들 두 경로는 여타 고착화된 집단 간 갈등 상황 속에서 지금과 같은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통해 유발될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의 통로라 할 수 있다. 상기 두 가지 경로에 대한 연구와 이에 포

함될 수 있는 매개 요소 및 COVID-19 사태로 유발된 위협에서의 매개 요소에 대한 연구는 COVID-19 사태에 따른 사회심리학적 영향을 고착화된 갈등 상황에 직면한 집단 간 화해를 일으키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COVID-19 사태가 개인과 집단에 대해 파괴적이고 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에 처한 집단 구성원들이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현실을 뛰어넘어 통합된 ‘우리’를 형성하고 집단 간 화해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강력한 사회적 “재편”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2. I think they know, therefore I know: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태도에 대한 집단적 착각의 형성과정

Babak Hemmatian and Steven A. Sloman
(Brown University)

가. 서론

(1) 양극화된 태도

한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지난 70여 년간 해결되지 못한 정치·사회적 이슈이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것은 이슈 자체가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주요한 이유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동의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2018년 이후 매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설문조사에서는 약 70%의 응답자가 통일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2019년 설문조사에서는 같은 대답을 한 응답자의 비율이 61%로,²⁰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2020년 설문조사에서는 단 52.5%만이 통일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 수 년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비교했을 때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되면서 여론의 분열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통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에 최소한의 관심과 열의를 보이는 사람들의 비중은 더욱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통일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대중의 여론이 거의 절반, 양극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4) 박주화 외,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p.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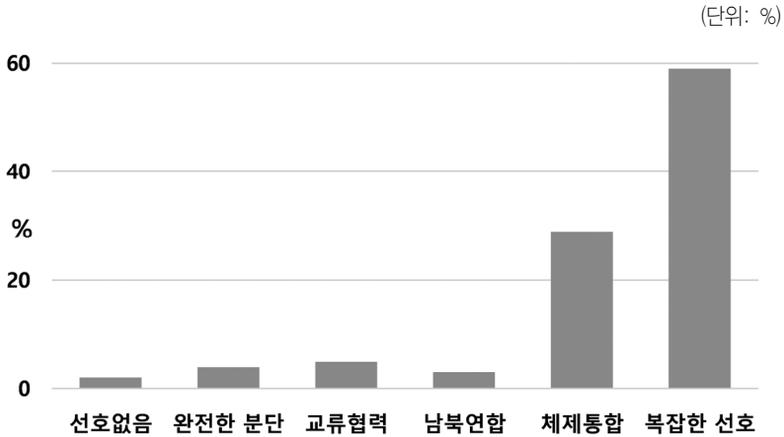
통일에 대한 양극화의 이유는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대중 간의 의사소통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양극화의 잠재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²⁰⁵⁾ 특히 통일에 대하여 찬성 아니면 반대라는 극단적인 태도는 그 자체로 불충분한 의사소통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장애물이다. 본 장에서 우리는 통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식, 통일관련 이슈에 대한 그들의 인식,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신념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양극화된 태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태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

(2) “통일에 대한 태도”의 정의

통일연구원의 2020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통일의 파급효과는 물론, 통일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응답자의 대부분이 통일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상이한 답변을 제시했다. 한편으로는 대다수 한국인들이 통일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지는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5) Jacob Jensen et al., “Political Polarization and the Dynamics of Political Language: Evidence from 130 Years of Partisan Speech,”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43 (2012), pp. 1~81.

〈그림 III-4〉 통일의 정의에 대한 상이한 응답 비율



통일의 정의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복잡한 인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는 본 장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다. 하지만 적어도 통일을 지향하는지, 또는 분단을 지향하는지를 통해 통일의 정의와 관련된 복잡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²⁰⁶⁾ 통일지향성과 분단 지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11개 문항(5점 척도, 1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 5점: 완전히 동의한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²⁰⁷⁾

차원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 기법(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²⁰⁸⁾을 통해 두 가지 독립적인 패턴이 도출되

206) 저자들은 통일에 대한 애착적 태도(attached attitude), 냉담한 태도(detached attitude)로 제시하였다. 연구책임자는 번역 감수 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애착적 태도는 통일지향성, 통일에 대한 냉담한 태도는 분단지향성으로 명명하는 것이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다른 절에서 사용한 통일지향성, 분단지향성과 통계적으로도 크게 차이하지 않은 것도 고려되었다.

207) 박주화 외,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pp. 351~352.

208) Hervé Abdi and Lynne J. William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mputational Statistics*, vol. 2, no. 4 (2010), pp. 433~459.

었다(〈표 III-3〉). 첫 번째 차원은 선형회귀적으로 6번, 7번 및 8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강한 동의를 보인다(피어슨 상관계수 평균 $r=0.73$). 전체 변량의 41%를 차지한 첫 번째 요인을 “통일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통일된 한반도는 바람직한 결과이며, 현재의 분단 상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수용할 수도 없다는 태도를 의미한다. 통일지향성 차원에서 양(+)의 값은 결과적으로 통일에 보다 강한 애착을 보여주며 음(-)의 값은 그 반대를 의미한다. 전체 변량의 약 20% 이상을 차지한 두 번째 요인은 “분단지향성”이다. 이 차원에서의 높은 평점은 현재의 상태를 선호하나(2번, 3번, 6번, 7번, 8번 문항; 평균 $r=0.67$), 완전한 통일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태도(1번, 4번, 5번, 9번, 11번 문항과 무관)를 대변한다. 이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한 응답자는 일반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지지하지만(예: 문화, 경제, 관광 차원의 협력 확대) 완전한 통일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태도를 보인다.

〈표 III-3〉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공통성
1)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0.81	-0.05	0.66
2)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0.39	0.49	0.38
3)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지만 공동의 정부 기구를 창설하는 남북연합은 필요하다.	0.51	0.36	0.38
4)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0.79	-0.09	0.63
5)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0.81	0.01	0.66
6)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해도 상관없다.	-0.10	0.70	0.51
7)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곧 단일국가를 만들 필요는 없다.	-0.20	0.68	0.50
8) 한국국민과 북한주민들이 두 개의 국가 상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0.03	0.71	0.50

문항	요인1	요인2	공통성
9) 남북한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단일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0.76	-0.08	0.59
10)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남한에게 이익이 된다.	0.70	0.01	0.48
11)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	0.76	-0.02	0.57
아이겐값	4.05	1.84	
설명변량	40.60	21.44	
누적변량	45.60	62.04	
요인명	통일 지향성	분단 지향성	

통일지향성과 분단지향성 간의 독특한 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분석 중 경우에 따라서는 통일지향성과 분단지향성 외에 단순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사용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설문조사 참가자들에게 남북한이 단일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귀하는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하였고 7점 척도(1점: 전적으로 반대 ~ 7점: 전적으로 찬성)로 측정하였다. 우리는 먼저 이 “통일에 관한 간편 질문(unification question)”을 통해 통일에 대해 지지, 무관심, 반대의 집단을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 본 절에서 언급하는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집단, 통일을 반대하는 집단은 “통일에 대한 간편 태도”의 응답을 기초로 구분되었다. 통일지향성은 통일에 대한 간편 태도와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61$). 그러나 분단지향성은 통일에 대한 간편 태도와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0.09$). 분단지향성과 통일에 대한 간편 태도 간 상관이 관찰되지 않은 결과는 통일연구원의 2019년 결과와 다르며, 분단지향성이 통일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²⁰⁹⁾

209) 박주화 외,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pp. 352~353.

특정 정치·사회적 사안에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도의 방향성(찬성 vs. 반대)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도의 강도, 즉 태도가 얼마나 극단적인가를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태도가 극단적일수록 태도를 바꾸는 것은 더 어렵고, 상반되는 두 입장의 차이가 클수록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물론 대화에 임할 가능성조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태도의 극단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통일에 대한 극단성은 통일에 관한 간편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점수가 중앙치인 4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여 산출했다. 분석결과 통일을 찬성하는 집단(이하 통일찬성집단, $n=840$)의 극단성과 통일을 반대(이하 통일반대집단, $n=298$)하는 사람들의 극단성은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찬성집단의 극단성 평균은 1.7(표준오차: 0.03), 통일반대집단의 극단성 평균은 1.78(표준오차: 0.05)이었다.

통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이 주로 거론되는데, 일례로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거나 남성일수록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²¹⁰⁾ 그러나 통일연구원의 2019년 설문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²¹¹⁾ 2020년 설문조사는 이와 같은 요인들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은 통일에 대한 간편 태도에서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다소 낮았으며($r=0.15$), 통일지향성 역시 다소 낮은 것($r=0.16$)으로 조사되었다. 성별과 우리가 이후 논의할 태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의 상관관계는 의미 있는 수준에 근접하지 못했다(상관계수의 평균 $r<0.12$). 연령과 민족 및 국가적 정체감과의 상관관계는, 향후 논의되겠지만 다소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상관계수의 평균 $r=0.19$), 통일에 대한 긍정적

210) 위의 책, p. 207.

211) 위의 책, pp. 175~182.

인 태도를 예측하는 변수로서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r < 0.16$). 연령과 성별은 태도의 변량 중 4% 정도를 설명하였다.

다른 인구통계학적 특징 중 종교의 경우, 예배와 같은 종교적 행사 참여 여부가 통일에 반대하는 경향에 약하게 기여하기는 하지만 ($p=0.01$), 선형회귀 분석에서 중요한 예측변수가 되지 못했다 ($p=0.05$). 반면, 교육 수준은 통일에 대한 태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0.008$). 종교의 유무 및 종교적 행사 참석 여부는 통일에 대한 태도의 변량 중 2%를 설명했다.

통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함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통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결정적 변수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그 변인이 무엇이든 통일과 그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나. 북한에 대한 지식 수준에 대한 착각과 통일에 대한 태도

(1) 나의 지식에 대한 착각

한반도의 역사, 북한의 현재 상황, 긴장과 화해의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수준이 통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식수준뿐만 아니라 통일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수준에 대한 평가의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의견 불일치 및 합의 도출의 실패는 크게 세 가지 이론적 틀에서 설명가능하다.²¹²⁾

212) Nathaniel Rabb, Philip M. Fernbach, and Steven A. Sloman, "Individual Representation in a Community of Knowledg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vol. 23, no. 10 (2019), pp. 891~902.

“결핍 모델(deficit model)”이라고 불리는 전통적 접근은 지식수준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결핍모델은 갈등 해결을 위한 합의의 실패는 사람들의 지식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한다. 인간은 합리적이며(rational) 합리적인 존재가 합의의 실패하는 유일한 조건은 적어도 갈등의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이다. 특히 지식과 정보가 부족할 때 합리적인 인간은 합의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결핍모델은 무지(ignorance)가 합의 도출(consensus-building)을 방해하는 기제를 제안한다. 먼저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지식이 다를 경우 사람들이 서로 다른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게 된다. 두 번째로 자신이 생각하는 관점 외에 대안적 관점을 제대로 구성,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합의도출에 실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견에 대한 맹목적 지지의 자신의 의견을 형성해 가는 과정 자체를 방해할 수 있다.²¹³⁾

결핍 모델은 무지와 태도 사이를 매개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이든 특정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보유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견이 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특정 상황에 대한 “팩트”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팩트들이 결합되는 경우 분명한 태도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팩트가 균등하게 양분되어 제시되어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이건, 특정 사안에 대해 팩트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제시되어 보다 분명한 시각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이건 팩트, 즉 지식은 합의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결핍 모델이 맞다면 교육 수준을 높이거나 관련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 등은 무지에 의해 유발된 분열을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결핍 모델을 통해 통일연구원의 2020년

213) 결핍모델에 대한 개관은 John R. Zaller,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을 참고하면 된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태도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일반 대중 사이에 통일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만일 사람들이 문제 자체를 다르게 표상한다면 같은 정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해결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는 냉정하고 분명한 사실과 이론에 입각한 결론이다. 사람들이 통일, 그리고 통일의 파급효과, 그리고 어떤 파급효과를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르게 표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통일과 관련된 합의도출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결핍 모델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북한과 관련한 지식을 측정하였다. 북한에 대한 지식은 아래 10개 문항, O, X 형식으로 측정하였으며 다른 정보를 참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답변하도록 했다.

- 1) 북한의 공식 국명(國名)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83.9%).²¹⁴⁾
- 2) 북한의 국가(國歌)는 애국가이다(15.1%).
- 3) 북한에서 국가의 최고 직책은 국무위원장이다(60.1%).
- 4) 북한교육과정에서 제 1외국어는 영어이다(30.9%).
- 5) 북한에서 주택소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개인 간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66.6%).
- 6) 북한의 국화(國花)는 진달래이다(51.1%).
- 7) 북한에도 장마당 농민시장 등 시장이 있지만,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다(36.3%).
- 8) 북한에서 추석과 설날은 명절이지만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는 않는다(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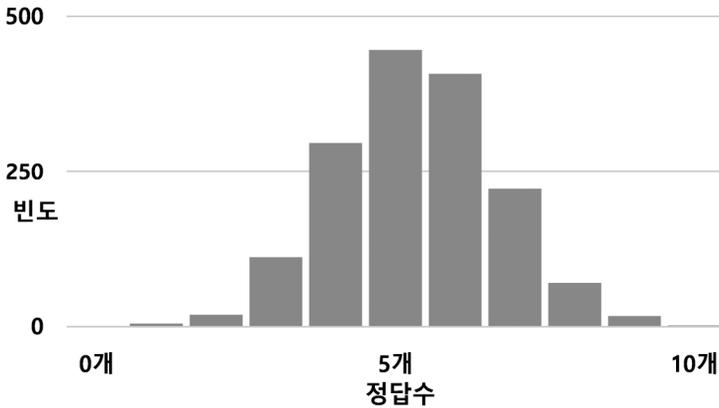
214) 문항 뒤 괄호의 수치는 정답률을 의미한다.

- 9) 김정은은 김정일의 첫째 아들이다(82.1%).
- 10) 북한은 상해임시정부가 아닌 블라디보스톡 대한광복군 정부의 법통을 인정하고 있다(47.2%).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문항의 절반 정도를 맞추었다.²¹⁵⁾ 앞서 언급한 지식 평가에서 응답자의 성적은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정상 분포)를 보였다(〈그림 III-5〉). 다시 말해 응답자들 중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응답자들 중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결핍모델의 핵심가정, 즉 지식수준이 태도와 관련이 있다면 북한에 대한 지식은 통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 즉 정답의 수와 응답자들의 통일에 대한 간편 태도 (즉, 통일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여부)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다($r < 0.04$). 다시 말해, 통일 태도의 강도는 그들의 실제 지식수준과 연계되지 않는다. 이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는 다른 근거에서 기인되거나 통일 관련 정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전문가들과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 어느 경우든 이와 같은 결과는 결핍 모델로는 설명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15) O,X 문제의 특성상 정답률 50%는 우연의 결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개별문항의 정답률을 고려하면 정답률 50%는 우연의 결과라기보다는 응답자의 지식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그림 III-5〉).

〈그림 III-5〉 10개 문항에 대한 정답을 맞힌 응답자 빈도분포



북한에 대한 실제적 지식과 통일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탈북민들과의 정기적인 접촉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남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잦을수록 통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라는 추정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1/4 정도는 적어도 한 번은 탈북자를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러한 경험의 효과를 실증하는 사례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탈북자와의 접촉의 빈도는 통일에 반대하는 응답자($p=0.09$) 혹은 찬성하는 응답자($p=0.15$)의 태도에 대하여 선형적인 예측변수가 되지 못했다. 요컨대, 응답자의 태도는 탈북민과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접촉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 역시 결핍 모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지식과 태도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태도를 변화시키고 보다 생산적인 대중적 담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정책이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 연

구와 부합한다.²¹⁶⁾ 사람들의 태도가 지식의 결과물이 아니라면 통일과 같은 복잡한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탈북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에 대해 다소 약한 예측변수인 것이 밝혀졌다($r=0.12$). 지금부터는 알고 있다는 느낌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의 지식에 대한 착각

결핍 모델에 대한 몇몇 대안적 메타(meta) 이론이 제시되었다. 그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수준을 과대평가한다는 현상에 주목한다. 태도의 극단성은 자신의 실제 지식수준이 아닌 과대평가된 지식수준, 즉 착각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 보유한 지식이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보다 과대평가된 지식수준에 의존함으로써 훨씬 강경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Dunning의 연구들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지식의 수준과 실제 지식 간의 차이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제공한다.²¹⁷⁾ 앞 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지식 혹은 전문기술에 대한 테스트에서 더닝과 동료들은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맞게 대답했다고 생각하는 질문의 개수를 예측하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해 무지한 사람일수록(그들의 실제 성적을 통해 증명되는 바) 그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지식수준과 실제 지식 간의 괴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보유한 정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의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216) Steven Miller,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at the Crossroad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vol. 10, no. 1 (2001), pp. 115~120.

217) David Dunning, “The Dunning-Kruger Effect: On Being Ignorant of One’s Own Ignorance,”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ds. James M. Olson and Mark P. Zanna (Amsterdam: Elsevier, 2011), pp. 247~296.

것이다. Dunning은 이러한 현상을 더닝-크루거 효과(Dunning-Krueger Effect)라 명명하였다. 정치·사회영역에서 이와 같은 지식에 대한 과대평가는 보다 극단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와 연관성을 보인다.²¹⁸⁾ 일부 서방 국가에서 GMO 식품에 대한 수용 여부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다.²¹⁹⁾

이와 같은 패턴이 관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닝은 실험을 통해 확보한 증거에 근거하여, 다음 두 가지 기제를 제시한다.²²⁰⁾ (1)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정도를 엄밀하게 평가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며 현안과 관련되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과소평가한다. (2) 무지한 사람들은 실수를 범할 때 그것을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다양한 사실의 상호 연관성을 인식함으로써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통일과 관련해서는 이와 다른 패턴이 드러난다. 한국에서 통일은 정치적 이슈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북한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근거 있는” 사실들이라 할지라도 상당수 정책 전문가들에게조차 베일에 가려진 상태이다. 다시 말해, 통일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낮은 정보 수준”이라는 범주에 속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일반 대중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인지하고 반응하게 된다.

통일연구원의 2020년 설문조사 참가자들이 더닝-크루거 효과를

218) Ian G. Anson, “Partisanship, Political Knowledge, and the Dunning-Krueger Effect,” *Political Psychology*, vol. 39, no. 5 (2018), pp. 1173~1192.

219) Philip M. Fernbach et al., “Extreme Opponent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Know the Least but Think They Know the Most,” *Nature Human Behaviour*, vol. 3, no. 3 (2019), pp. 251~256.

220) David Dunning, “The Dunning-Krueger Effect: On Being Ignorant of One’s Own Ignorance,” pp. 251~259.

보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북한 관련 문항에 대한 테스트 후 자신들이 옳게 대답했다고 생각하는 문항의 개수와 본인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했다. ‘자신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는 다음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세 문항은 요인 분석(주성분 분석법)결과 단일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 1) 나는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깊게 이해하고 있다.
- 2) 나에게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별로 복잡하지 않다.
- 3) 나에게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표 III-4〉 통일에 동의하는 한국인의 비중에 대한 추정의 오류값

	사례 수	실제 정답수	자신의 정답수 예측	평가오류 (예측-정답)	통일찬성태도의 극단성 ²²¹⁾
전체(2020년)	1,600	5.34	5.46	0.12	1.23
통일반대집단	298	5.34	5.13	-0.21	1.78
중립집단	462	5.25	5.04	0.21	0
통일찬성집단	840	5.29	5.81	0.42	1.71

먼저 응답자의 예상 정답 수에서 실제 맞춘 정답수를 뺀 수치와 실제 정답수의 상관관을 계산하였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부적인 상관관을 예상한다. 실제 정답수가 많을수록 자신의 정답치를 과소평가, 즉 예상정답수가 실제정답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분석 결과

221) 7점 척도의 중앙치인 4점에서 떨어진 정도를 고려해서 계산하였다. 1점은 3점, 2점은 2점, 3점은 1점, 4점은 0점, 5점은 1점, 6점은 2점, 7점은 3점으로 코딩하여 극단성을 계산하였다.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실제 지식의 수준과 지식에 대한 착각 간의 관계는 더닝-크루거 효과에 근거한 우리의 예측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²²²⁾ 북한에 대해 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테스트 결과를 “과소” 평가하였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통일찬성집단과 통일반대집단 모두에서 관찰되었으며 그 상관의 강도 역시 비슷했다(통일찬성집단: $r=-0.58$, 통일반대집단: $r=-0.61$).

통일반대집단의 경우 예상정답수와 실제정답수의 차이는 자신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 그리고 통일반대태도의 강도, 즉 태도의 극단성과 상관이 없었다.

〈표 III-5〉 통일반대집단의 북한지식과 북한지식에 대한 자기 평가의 상관

	2.	3.	4.
1. 예상정답수-실제정답수	-0.61**	0.08	0.00
2. 실제정답수(북한지식)	-	0.05	0.00
3. 자신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		-	0.03
4. 통일반대태도(간편태도)의 극단성			-

반면, 통일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자신의 지식에 대한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의 정도와 ‘자신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 및 통일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었다. 먼저 자신의 지식수준에 대한 과대평가의 정도가 클수록 한반도 문제 및 북핵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r=0.11$). 또한 한반도 문제 및 북핵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통일태도의 극단성도 강했다($r=0.15$). 북한에

222) David Dunning, “The Dunning-Kruger Effect: On Being Ignorant of One’s Own Ignorance,” pp. 251~259.

대한 지식수준, 즉 10개 문항 중 정답수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r=0.04$) ‘자신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착각이라 할 수 있다.

〈표 III-6〉 통일찬성집단의 북한지식과 북한지식에 대한 자기 평가의 상관

	2.	3.	4.
1. 예상정답수-실제정답수	-0.58**	0.10**	0.11**
2. 실제정답수(북한지식)	-	-0.04	0.04
3. 자신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		-	0.15**
4. 통일찬성태도(간편태도)의 극단성			-

겸손한 태도는 통일과 관련한 논쟁에서 필요하다. 상황판단이 빠른 사람이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공백이 많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통일의 파급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겸손함의 긍정적 영향력은 태도의 강경함으로 인해 무의미해진다. 북한에 대해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그러나 한반도 및 북핵문제에 대해 이해도가 깊다고 생각하는 통일 찬성론자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자신의 테스트 결과에 대한 과소평가에 반영된 박식한 참가자의 불필요한 겸손은 그로 인해 지식에 기반한 그들의 목소리가 보다 무지하지만 확신에 찬 사람들에 의해 묻혀버리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히려 겸손은 합의를 도출하는 대신 양극화를 강화할 수 있다. 착오와 관련된 패턴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든 이해에 대한 착각과 통일에 대한 상반된 태도 사이의 괴리는 당사자의 지식수준 혹은 그것에 대한 인식 이외의 무언가가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 집단과 나의 관계에 대한 착각과 통일에 대한 태도

(1) 의견 (불)일치 대한 착각과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

자신이 자기가 놓치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²²³⁾ 타인의 지식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전문 지식과 정보(예를 들어, 필요한 의사를 찾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과 같은 행동)탐색을 공동체에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정보들은 대중의 입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전문가가 보기에도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명백하게 환원적이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많은 경우 개인이 대중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은 경험적 정보 오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²²⁴⁾

특히 공동체 내에서의 의견 일치 혹은 불일치에 대한 주관적 느낌은 잠재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자신이 본인의 태도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잘못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 통일연구원의 2020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의지한 공동체는 무엇일까? 통일과 같이 매우 정치적인 사안의 경우 개인들은 그들의 정치적 커뮤니티로부터 정보를 구하는 경향이 높다.²²⁵⁾ 우리는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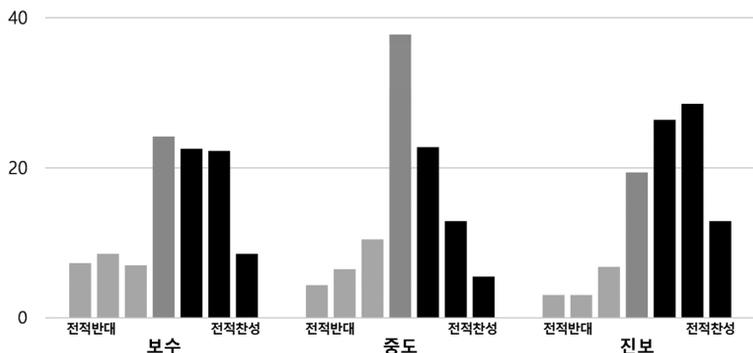
223) Babak Hemmatian and Steven A. Sloman, "Two Systems for Thinking with a Community: Outsourcing Versus Collaboration," in *Logic and Uncertainty in the Human Mind: A Tribute to David Over*, eds. Shira Elqayam et al. (New York: Routledge, 2020), pp. 102~115.

224) Babak Hemmatian and Steven A. Sloman, "Community Appeal: Explanation without In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vol. 147, no. 11 (2018), pp. 1677~1712.

문조사 참가자들을 자신이 밝힌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 그리고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림 III-6>은 각 집단별로 통일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집단은 확실히 더 양가적이면서 동시에 덜 극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진보는 통일에 극단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수는 찬성 쪽으로 기울기는 하지만 진보 집단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은 태도를 보였다.

<그림 III-6> 정치 성향에 따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이념에 따라 통일이 필요한지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착각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착각은 태도의 극단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²²⁶⁾ 예를 들어, GMO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225) Geoffrey L. Cohen, "Party Over Policy: The Dominating Impact of Group Influence on Political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5, no. 5 (2003), pp. 808~822.

226) Joachim Krueger and Russell W. Clement, "The Truly False Consensus Effect: An Ineradicable and Egocentric Bias in Social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4 (1994), pp. 596~610.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할 경우 이에 대해 극단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²²⁷⁾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는 GMO 문제에 대해 다른 시민들이 자신들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GMO 식품에 대해 보다 강한 입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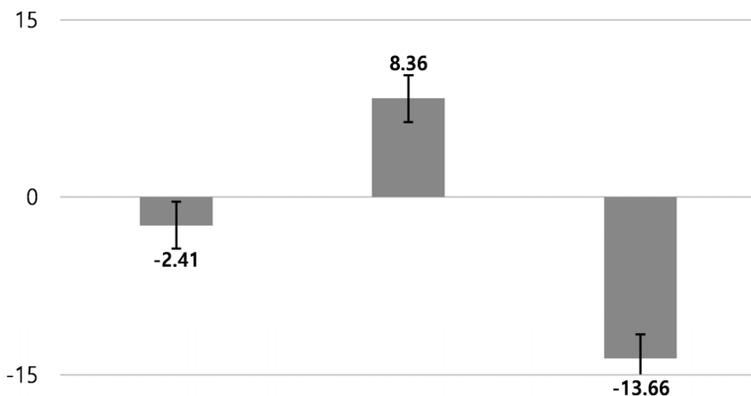
통일에 대해 한국인들 사이에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정도와 이러한 착각이 실제로 극단적인 태도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신들과 비슷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한국인들 중 통일을 찬성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측해 볼 것을 주문했다. 참가자들의 추정은 태도를 예측하게 해주는 강력한 예측변수였다 ($r=0.54$, 선형회귀에서의 변량 중 30% 설명). 자신과 이념이 비슷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지지한다고 믿을수록 자기 자신도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같은 이념 집단이 통일에 찬성할 것이라는 추정이 얼마나 정확할까? 다시 말해 합의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은 어느 정도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설문참가자들에게 자신과 이념이 비슷한 사람 중 통일에 찬성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도록 하였다(귀하와 이념이 비슷한 한국국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와 이념이 비슷한 사람들 중 몇 %가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에 찬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적으로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보수집단의 50.7%가 통일에 찬성하고 있다고 추정, 자신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중도집단 중 49.3%가 통일에 찬성하고 있다고 추정,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진보집단의 54.1%가 통일에 찬성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이념 집단별로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의 평균, 즉 각 이념 집단 중 실제로 통일을

227) Sheldon Krinsky, "An Illusory Consensus Behind GMO Health Assessment,"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vol. 40, no. 6 (2015), pp. 883~914.

찬성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그림 Ⅲ-6〉의 검은색 부분). 그 결과 보수의 53.2%, 중도의 41%, 진보의 67.8%도 통일에 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개인의 추정치에서 전술한 평균값을 뺀 값을 추정의 정확성으로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7〉에 제시하였다. 합의에 대한 착각을 다룬 연구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참가자들은 통일에 찬성하는 비중에 대해 일관되게 과대평가의 경향을 보여야 한다. 〈그림 Ⅲ-7〉에서 드러나듯, 참가자들은 자신과 같은 이념집단에서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틀리게 추정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예측과는 다르게 보수 및 진보 집단은 상기 응답자의 비중을 오히려 “과소” 평가했다. 과소평가의 수준은 특히 진보 집단에서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Ⅲ-7〉 통일에 동의하는 한국인의 비중에 대한 추정의 오류값



진보 집단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왜 그렇게 통일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과소평가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패턴에 대한 가능한 설명으로 통일에 반대하는 진영이 사회적 담론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거나 실제 이상으로 주목받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대 대표 되었거나 실생활과 관련된 인터넷 공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이와 같은 인터넷 환경은 실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반대한다는 착각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와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통일 지향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국민은 이념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념집단이 얼마나 통일을 찬성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 오류가 있음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과소평가, 중도는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예측오류의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의 논의에 보다 적절한 질문은 의견 불일치에 대한 착각이 개인 수준에서, 아울러 모든 이념집단에 걸쳐 태도의 양극화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우리는 예측오류의 정도, 즉 과소평가 정도와 과대평가 정도가 태도의 극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같은 이념집단의 통일찬성 정도를 과대평가할수록 태도의 극단성도 강해졌다. 이는 보수, 중도, 진보의 차이가 없었다. 태도의 예측오류와 간편통일태도의 상관은 각각 0.61(보수), 0.51(중도), 그리고 0.58(진보)이었다.

합의에 대한 예측오류가 통일에 대한 태도 극단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참가자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 자신의 지식에 대한 예측오류를 통제하더라도 모든 이념집단에서 유의하였다($p < 0.001$).

앞서 우리는 자기와 같은 이념을 가지는 사람이 통일에 대해 지지한다고 믿을수록 통일에 대한 태도가 극단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석을 통해 밝혔다. 더 나아가 집단의 통일찬성정도를 과대평가할수록 통일태

도의 극단성이 심해진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밝혔다. 팩트가 아닌 착각이 통일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2)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

자신의 태도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비슷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커뮤니티에 의존하는 경향은 맹목적 집착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식 커뮤니티(Community of Knowledge)”라고 하는 접근방법은 지식에 초점을 맞춰 이와 같은 의존성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공한다. 세계는 복잡하며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은 제한적이다.²²⁸⁾ 인지과학 전반에 걸쳐 이와 같은 개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커뮤니티 내의 타인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²²⁹⁾ 타인은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적절한” 이해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²³⁰⁾

각 진영 내의 극단적 태도를 실제지식과 지식에 대한 자신의 평가의 차이, 즉 자신의 지식에 대한 과소평가와 과대평가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을 평가한 결과 이념집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보수: $M=5.19$, $SE=0.08$; 중도: $M=5.35$, $SE=0.05$; 진보: $M=5.40$, $SE=0.05$). 이

228) Thomas K. Landauer, “How Much Do People Remember? Some Estimates of the Quantity of Learned Information in Long-Term Memory,” *Cognitive Science*, vol. 10, no. 4 (1986), pp. 477~493.

229) Steven A. Sloman and Philip Fernbach, *The Knowledge Illusion: Why We Never Think Alone* (New York: Riverhead Books, 2017), pp. 107~130.

230) Babak Hemmatian and Steven A. Sloman, “Two Systems for Thinking with a Community: Outsourcing Versus Collaboration,” pp. 102~115.

념에 따른 북한지식의 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또한 각 이념 집단 내에서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은 통일에 대한 태도의 극단성에 대한 예측변수가 되지 못했다.

정치적 신념에 따른 자신의 정답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다. 보수가 5.91개로 진보의 5.52개, 중도의 5.23개 보다 자신의 정답추정치가 높았다. 이념에 관계없이 자신의 정답추정치는 통일에 대한 태도의 극단성과 상관이 있었다. 자신이 정답을 많이 맞혔다고 생각할수록 태도가 극화되었다. 앞서 실제 지식수준이 통일에 대한 태도와 상관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통일에 대한 태도는 북한에 실제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닌 자기가 알고 있다고 믿는 정도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 Ⅲ-7〉 이념에 따른 북한지식 정답수, 예상 정답수, 통일찬반의 평균

	실제 정답수	자신의 정답수 예측	평가오류* (예측-정답)	통일찬성태도의 극단성 ²³¹⁾
보수	5.19	5.91	0.72	0.47
중도	5.35	5.23	-0.13	0.29
진보	5.40	5.52	0.12	1.01

* 양수는 과대평가, 음수는 과소평가를 의미

231) 7점 척도의 중앙치인 4점에서 떨어진 정도를 고려해서 계산하였다. 1점은 3점, 2점은 2점, 3점은 1점, 4점은 0점, 5점은 1점, 6점은 2점, 7점은 3점으로 코딩하여 극단성을 계산하였다.

〈표 Ⅲ-8〉 보수집단의 북한지식과 북한지식에 대한 자기 평가의 상관

	2.	3.	4.	5.
1. 실제정답수(북한지식)	0.05**	-0.54**	0.02**	0.05**
2. 자신의 정답수 예측	-	0.81**	0.12**	0.12**
3. 예상정답수-실제정답수		-	0.09**	0.06**
4. 자신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			-	0.27**
4. 통일찬성태도(간편태도)의 극단성				-

〈표 Ⅲ-9〉 중도집단의 북한지식과 북한지식에 대한 자기 평가의 상관

	2.	3.	4.	5.
1. 실제정답수(북한지식)	0.01**	-0.55**	-0.02**	0.03
2. 자신의 정답수 예측	-	0.82**	0.15**	0.12**
3. 예상정답수-실제정답수		-	0.13**	0.07**
4. 자신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			-	0.11**
4. 통일찬성태도(간편태도)의 극단성				-

〈표 Ⅲ-10〉 진보집단의 북한지식과 북한지식에 대한 자기 평가의 상관

	2.	3.	4.	5.
1. 실제정답수(북한지식)	0.01**	-0.58**	-0.02**	0.06
2. 자신의 정답수 예측	-	0.81**	0.10**	0.20**
3. 예상정답수-실제정답수		-	0.09**	0.13**
4. 자신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			-	0.18**
4. 통일찬성태도(간편태도)의 극단성				-

자신의 이해도를 얼마나 잘 추정하는지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이가 있을까? 보수 집단과 진보집단은 자신의 이해도를 과대평가했으며 중도 집단은 다소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예측지식과 실제 지식의 차이, 보수: $M=0.72$, $SE=0.14$; 중도: $M=-0.13$, $SE=0.09$; 진보: $M=-0.12$, $SE=0.10$). 진보와 중도의 경우 자신의 지식에 대한 평가의 오류가 클수록, 구체적으로 과대평가할수록 통일에 대한 태도가 극단적이었다. 반면 보수의 경우 통일태도의 극단성은 지식 수준에 대한 평가 오류와 별다른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평가의 오류, 즉 자신의 지식수준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오류는 개인의 자질이나 결함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의 지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지식수준을 잘못 평가할수록 비슷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타인의 지식수준 역시 잘못 평가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커뮤니티에서 제공된 지식에 의존하지만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가 보유한 지식의 실체에 직접 접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진행되는 대화 등과 같은 간접적이고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다.²³²⁾ 우리의 커뮤니티가 보유한 지식을 우리의 사고체계와 통합하려는 지속적인 시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지식과 커뮤니티가 보유한 지식 간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너무 자주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정보가 어디에서 끝나고 커뮤니티로부터 얻은 지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232) Steven A. Sloman and Philip Fernbach, *The Knowledge Illusion: Why We Never Think Alone*, pp. 171~194.

Slovan and Rabb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자연현상에 대해 완벽한 설명을 찾아냈다” 혹은 “과학자들은 아직 그것에 대한 설명을 찾아내지 못했다” 중 하나를 들었다. 양쪽 모두에 대하여 그 “설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험자들에게 그 현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게 했다. 과학자들이 그것을 규명했다는 사실이 해당 주제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험자들은 그와 같은 지식이 커뮤니티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 역시 높아졌다고 생각했다.²³³⁾ 우리는 타인의 정보와 자신의 정보를 혼동함으로써 자신의 이해도에 대한 착각 혹은 무지가 발생하는 현상을 “지식의 커뮤니티” 가설이라고 부를 것이다.²³⁴⁾

〈표 III-11〉 이념에 따른 지식커뮤니티의 북한 지식 정답수, 예상 정답수, 통일 찬반의 평균

	실제 정답수	지식커뮤니티에 정답수 예측	평가오류 (예측-정답)	통일찬성태도의 극단성 ²³⁵⁾
보수	5.19	5.70	0.51	0.47
중도	5.35	5.38	-0.03	0.29
진보	5.40	5.48	0.08	1.01

233) Steven A. Slovan and Nathaniel Rabb, “Your Understanding Is My Understanding: Evidence for a Community of Knowledge,” *Psychological Science*, vol. 27, no. 11 (2016), pp. 1451~1460.

234) Steven A. Slovan and Philip Fernbach, *The Knowledge Illusion: Why We Never Think Alone*, pp. 1~18.

235) 7점 척도의 중앙치인 4점에서 떨어진 정도를 고려해서 계산하였다. 1점은 3점, 2점은 2점, 3점은 1점, 4점은 0점, 5점은 1점, 6점은 2점, 7점은 3점으로 코딩하여 극단성을 계산하였다.

지식의 커뮤니티 가설이 적용가능한지 탐색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속한 이념집단의 지식수준을 예측하였다(자신과 유사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몇 개의 문항에 올바른 답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 예측치와 실제 각 이념집단의 정답수 간 차이를 같은 이념집단에 대한 평가오류로 볼 수 있다. 커뮤니티, 이념집단의 지식수준에 대한 평가오류와 자기 자신의 지식수준에 대한 평가오류 간의 상관관계는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r=0.43$), 이념집단 간 차이도 크지 않았다(보수: $r=0.49$, 중도: $r=0.35$, 진보: $r=0.45$). 다시 말해 지식 커뮤니티 지식수준에 대한 착각과 나의 지식수준에 대한 착각이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평가한 지식 중 적어도 일부는 참가자들 역시 통일의 과정과 파급효과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자신의 지식수준에 대한 평가와 커뮤니티의 지식수준에 대한 평가 사이의 인과관계는 양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특히 중요하다. 경험적 증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거로 하여 타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지만,²³⁶⁾ 동시에 그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을지에 대한 우리의 느낌 역시 우리의 지식수준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집단지식에 대한 평가오류는 통일에 대한 태도의 극단성과 상관이 있었다. 특히 보수($r=0.19$)와 진보($r=0.09$)에서 그 경향이 강했으며 중도의 경우는 유의미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 앞서 보고한 자신의 지식에 대한 판단오류의 결과와 종합해 보면 보수는 보수집단의 지식 판단에 대한 오류가 통일에 대한 태도 극단성에 영향을 미친 반면, 중도는 자신의 지식 판단에 대한 오류가 통일에 대한 태

236) Raymond S. Nickerson, "How We Know - and Sometimes Misjudge - What Others Know: Imputing One's Own Knowledge to Other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5, no. 6 (1999), pp. 737~759.

도 극단성에 영향을 미쳤다. 진보는 두 유형의 오류 모두 통일에 대한 태도 극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신의 지식수준 혹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의 지식수준에 대한 평가 오류의 근거가 무엇이든,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본 연구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태도와 태도의 극단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 지점에서 통일에 찬성하는 응답자와 통일에 반대하는 응답자 사이의 차이가 발생한다. 통일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경우 자기 자신의 지식수준에 대한 평가오류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의 지식수준에 대한 평가 오류가 모두 낮은 수준이지만 선형회귀 분석에서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독립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p < 0.001$, 각각 변동성의 3.5% 및 2.5% 설명). 참가자들은 그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커뮤니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자신의 태도에 대한 독립적인 근거로 삼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지식의 커뮤니티 가설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통일에 반대하는 응답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사실 역시 지식의 커뮤니티 가설을 입증한다. 여기서 해당 사안에 대한 타인의 이해도에 대한 느낌은 태도에 있어서의 변량 중 2%를 차지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예측변수로 밝혀졌다($p = 0.06$).

지식의 커뮤니티 가설이 합의에 대한 착각을 설명하는 방식은 합리성 이론의 논지와 유사하다. 그 이유는 커뮤니티 내 특정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는 그 사안에 대해 많은 증거가 있음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관점이 얼마나 보편적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람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대신 사람들은 합의를 제대로 평가하는 데 그리 정확하지 않은 개인적인 경험에 더 많이 의존한다.

지식의 커뮤니티 가설과는 달리 “문화적 인지(Cultural Cognition)” 이론은,²³⁷⁾ 착각에 대한 설명을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설명한다. 문화적 인지 이론은 하나의 커뮤니티가 공유하는 (혹은 공유한다고 인식되는) 가치와 규범, 그리고 태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동인으로서 특정 정치사회적 이슈에 있어 이들에 동조하고자 하는 충동에 초점을 맞춘다. 문화적 인지 이론과 지식의 커뮤니티 가설은 커뮤니티, 집단이 개인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특정 이슈에 대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의 지식수준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들만을 두고 보면, 지식의 커뮤니티 이론에서는 인식된 합의가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 반면, 문화적 인지 이론에서 강조하는 동조의 필요성은 사람들이 느끼는 자신의 지식수준과 자신과 정치적 신념을 공유하는 구성원의 지식수준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존재한다.

통일에 대한 합의가 자신의 지식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낀 하위집단의 태도에서는 모든 변량에 대하여 19%를 차지하였으나 통일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 하위집단에서는 14%만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통일연구원이 수행한 2020년 설문조사의 결과는 문화적 인지 이론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의 커뮤니티 이론 역시 자신과 타인의 이해도에 대한 느낌이 그 자체로 참가자들이 타인의 태도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그 유용성을 입증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 및 신념과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의 그것을 구별하

237) Dan M. Kahan and Donald Braman, “Cultural Cognition and Public Policy,” *Yale Law and Policy Review*, vol. 24 (2006), pp. 147~170.

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수준이 높다고 느낄수록 자신과 정치적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한 합의에 집착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양측 모두 $r=0.12$). 또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의 느낌이 커질수록 합의에 대한 착오와 태도 사이의 관계는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정보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집단의 상관계수 $r=0.44$, 정보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집단의 상관계수 $r=0.34$), 이는 우리가 정보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경우 정체성이 그 틈을 채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계는 동조에 대한 필요성과 지식의 커뮤니티 가설에 따른 신념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양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라. 착각과 가치의 관계

(1) 공유된 가치관과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

지금까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가 통일에 대해 특정한 관점을 지지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이 본인의 태도와 그 극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커뮤니티가 특정 태도를 조장하는 방법 중 하나는 특정 가치의 사회화이다. 우리는 통일연구원이 수행한 2020년 설문조사 참가자들에게 통일에 대해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후, “나의 도덕규범과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유발할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지켜야 할 도덕규범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했다. 통일에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상기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 즉 자신의 가치 지향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은 통일 찬반의 변량의

31%를 차지하였다. 이는 커뮤니티의 합의에 대한 인식이 통일 태도의 극단성을 예측하는 예측변수로 작동하는 정도와 비슷한 강도를 보였다. 통일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은 가치에 기반한 통일론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변량 설명 수준이 4%에 불과). 요컨대 가치기반통일론은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일지향성을 조장하는 반면($r=0.43$), 통일에 반대하지만 보다 유연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분단지향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0.2$).

〈표 III-12〉 통일찬반에 따른 북한지식획득의도와 통일의 이유

	통일지향성	분단지향성	북한지식 획득의도	통일이유- 가치	통일이유- 편익
통일찬성집단	3.19	3.36	3.67		
통일찬성집단	3.57	3.25	3.89	4.93	5.38
통일반대집단	2.32	3.65	3.18	4.22	4.89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가치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인들은 통일 찬반에 관계없이 그들의 관점이 통일의 결과, 즉 통일의 효용에 따른 것이라고 응답했다. 통일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찬성론자들은 통일지향성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56$), 반대론자들 역시 이와 같은 신념이 분단지향성에 신뢰할만한 예측변수로 작용했다($r=0.3$). 이 두 하위집단이 생각하는 통일의 결과는 전적으로 상반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두 집단이 동시에 옳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정책의 결과가 그들의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과에 대한 신념은 통일과 관련된 실제 지식이나 경험에 기반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른 단순한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

적어도 통일을 찬성하는 집단에서는 통일의 결과에 대해 희망적 사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치관을 중시하는 참가자일수록 자신과 타인의 테스트 성적을 잘못 예측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태도를 조장할 수 있는 이해에 대한 착각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규범적인 예측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며 북한에 대한 학습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다음 문항에 대한 참가자들의 대답에서도 관찰된다.

- 1)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뉴스를 볼 때, 나는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 2) 남북 간 갈등에 대해 남한의 견해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유럽국가의 관점을 담은 정보를 받아볼 용의가 있다.
- 3) 남북 갈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영화나 책을 읽어볼 용의가 있다.
- 4) 나는 북한의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읽어볼 용의가 있다.

이들 네 질문의 평균을 북한지식 획득의도로 명명하였다. 북한지식 획득 의도는 통일지향성 및 분단지향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다(통일지향성 $r=0.35$, 분단지향성 $r=0.28$). 북한지식 획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별개로 한국인들의 정보 환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가진 정보수집에 대한 기대가 정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과 관련한 정보의 접근성은 한국인들의 관심에 관계없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가치의 지향성에 기반한 통일태도의 영향력은 위계적 회귀 분석

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가치의 지향성은 북한지식 획득의도보다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가치의 지향성은 통일에 찬성하는 집단의 변량 중 10% 이상을 설명해준다. 가치지향성 자체가 특정 정책에 찬성 혹은 반대할 수 있는 논지로 사용될 수 있으나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언제나 함께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탈북민과 접촉한 경험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의 신뢰할만한 원천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가치관과 통일의 결과에 대한 신념 혹은 태도 간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전무하다. 통계적 분석 결과 가치관은 탈북민과의 접촉보다 훨씬 강력한 태도의 결정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이와 같은 경험을 가진 응답자 집단에서 태도와 가치관의 상관관계: $r=0.42$, 통일의 결과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 사이의 상관관계: $r=0.39$).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일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가치지향성보다 통일 편익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했지만($r=-0.21$), 한편으로는 가치지향성 역시 통일태도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r=0.2$). 통일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가진 두 집단 모두 가치관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은 각 집단이 초점을 맞춘 가치관 혹은 그 가치관에 대한 각각의 해석이 어느 정도 태도의 차이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어떤 가치가 통일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의 태도를 가장 잘 규명해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연구원이 시행한 2020년 설문조사 참가자들에게 10개의 기본 가치관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게 했다.²³⁸⁾ Schwartz의 “보편적 가치관(Universal Values)” 이론에 따르면, 세계사에 등장한 주요 문화권

238) Shalom H. Schwartz, “An Overview of the Schwartz Theory of Basic Values,”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vol. 2, no. 1 (2012), pp. 4~6.

은 보수, 자기 초월, 변화에 대한 개방성, 자기고양 등에 이르는 가치에 일정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통일에 찬성하는 집단의 경우 Schwartz의 거의 모든 가치와 통일에 대한 가치 지향성이 양의 상관관을 보였다(평균 $r=0.2$). 이 규칙에서의 유일한 예외가 쾌락주의였는데, 한국 문화에서 쾌락주의가 그리 강조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에 반대하는 집단의 경우 통일의 가치지향성과 슈윙츠의 자기 고양 및 안보의 가치관 사이에 유사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각각 $r=0.18$ 및 0.19). 이것은 적어도 Schwartz의 가치관 중 일부는 통일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관계없이 한국 대중들에게 공통적으로 수렴하는 해석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일에 반대하는 집단에서는 이와 같은 연관성이 신뢰할 수 있는 태도로 전환되지 않는다($r<0.1$). 이러한 관찰 결과는 이들 두 진영이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편, 동시에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가치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통일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집단 모두가 안보를 자신들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핵심 결정요인이라고 대답했으나 그 방향성은 정반대였다(통일에 반대하는 집단 및 통일에 찬성하는 집단의 상관계수는 각각 $r=-0.14$ 및 0.19). 양측의 견해에서 동일한 가치관이 어떻게 채택되는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통일을 통해 남북한 간의 전쟁을 예방하고 한국의 민주체제에 대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 양측의 안보 프레임을 대변한다. 사실 특정 문화와 문맥하에서 이와 같은 근본적 지표의 재정의 혹은 재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융통성은 이들의 적응력을 강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다. 상반된 가치 해석의 영향력은 앞서 언급한 표본 하위집단에서 통일을 찬성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수렴하는 가치관을 완전히 상쇄할 수 있다.

Schwartz의 10가지 차원을 선형회귀 모델에서 태도의 예측변수로 사용한 결과, 이는 태도의 변동성 중 20%를 차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Schwartz 이론이 한국인들이 통일을 찬성 혹은 반대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가치관에 의해 추동된 다양한 논쟁을 적절하게 설명하며 관련된 문맥에서 미묘한 의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chwartz가 가치관의 문화적 진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도덕적 추론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도덕적 규범의 범주에 초점을 맞추었다.²³⁹⁾ 도덕기반 모델은 5개 도덕적 규범의 범주 영역을 제시한다. 결속기반(binding foundation, 충성, 권위, 순수)은 구성원들이 속한 사회 집단의 단합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개별화 기반(individualizing foundation, 돌봄, 공정)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춘다.²⁴⁰⁾ 통일과 관련한 맥락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영역은 가치관의 방향성과 어떻게 관련성을 맺을까? 정치사회적 사안이 윤리적 문제로 변질될 경우 타협에 대한 저항과 극단적인 태도를 유발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²⁴¹⁾ 도덕적 기반에 대한 의존성과 태도의 극단성 사이에 유사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까?

통일에 찬성하는 집단의 경우 “권위”를 제외한 모든 도덕기반이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권위를 제외한 4개 도덕

239) Jesse Graham et al., “Mapping the Moral Domain,” pp. 366~385.

240) Jaime L. Napier and Jamie B. Luguri, “Moral Mind-Sets: Abstract Thinking Increases a Preference for “Individualizing” over “Binding” Moral Foundation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vol. 4, no. 6 (2013), pp. 754~759.

241) Kristin N. Garrett and Alexa Bankert, “The Moral Roots of Partisan Division: How Moral Conviction Heightens Affective Polariza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0, issue 2 (2018), pp. 1~20.

기반은 통일지향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평균 $r=0.2$). 그러나 앞서 언급한 문화적 가치에 비해서는 변량에 대한 설명 능력이 낮았다(6%). 도덕적 기반에 대한 중요성은 통일의 편익에 대한 태도와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평균 $r=0.15$). 이는 통일에 대한 태도가 구체적인 지식이나 경험보다 해당 사안을 윤리적 문제로 치환하여 생각하는 경향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매체에서 윤리적 문제로 치환된 언어와 관련한 연구 결과에도 부합하는 것이다.²⁴²⁾

반면, 통일에 반대하는 집단의 경우 개별화 기반(돌봄, 공정)은 분단지향성과 상관이 있었으며(평균 $r=0.16$) 결속기반이 통일지향성 및 분단지향성 모두와 상관을 보였다(평균 $r=0.18$). 하지만 도덕기반에 대한 개인적 중요성이 가치지향성 및 통일편익 인식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상기 두 집단 내부에서 통일에 대한 이슈에 있어 토대의 관련성에 대한 집단적 해석을 서로 다르게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통일에 반대하는 집단 역시 통일과 관련된 이슈를 윤리적 문제로 치환했지만 그 자체로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인이 전반적으로 동일한 도덕기반을 통일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근거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가치관과 도덕적 기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붕괴는 수십 년 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해왔다.²⁴³⁾ 서로 다른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보다 상대

242) Marlon Mooijman et al., "Moralization in Social Networks and the Emergence of Violence During Protests," *Nature Human Behaviour*, vol. 2, no. 6 (2018), pp. 389~396.

243) Scott Atran, Robert Axelrod, and Richard Davis, "Sacred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Science*, vol. 317, issue 5841 (2007), pp. 1039~1040.

방에게 일방적인 선포를 한다. 이런 경우에서조차 가치관에 근거한 의사소통의 함정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한국 사회가 통일과 관련된 이슈에서 더 심각하게 분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책에 대한 토의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로 치환된 언어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이는 상대 진영을 악으로 규정하게 만들며 합의 도출에 필요한 그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게 만든다.²⁴⁴⁾ 우리는 통일연구원이 2020년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통일에 찬성한 참가자들을 통해 이와 유사한 증거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참가자들의 논거가 윤리적 문제로 치환될수록 어느 한쪽 진영에 대한 지지의 강도와 타협을 거부할 가능성이 모두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경향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가치관을 따르겠다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불일치는 한국 내의 국가적 담론이 합의로 결실을 맺기 전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토론을 통해 직접적으로 밝혀내야 할 문제이다.

마. 결론

통일연구원이 수행한 2020년 설문조사에서 역사 및 맥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 역시 통일에 대한 지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맥락에서는 결핍 모델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부족은 입장 차이의 핵심적인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으며

244) Jesse Graham and Jonathan Haidt, “Sacred Values and Evil Adversaries: A Moral Foundations Approach,” in *The Social Psychology of Morality: Exploring the Causes of Good and Evil*, eds. Mario Mikulincer and Phillip R. Shave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pp. 11~31.

정보 확산을 위한 캠페인의 효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참가자 본인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는 태도 및 극단성에 대한 비교적 뛰어난 예측변수로 작용했다. 우리는 앞서 자신에 대한 평가오류가 어떻게 이해 혹은 오해의 착각으로 이어지는지, 아울러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다 극단적인 태도를 유발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착오가 단순히 개인의 무지 때문이라고 보는 기존의 더닝-크루거 효과와는 반대로 이들을 강화하는 몇몇 커뮤니티 관련 기제, 즉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착오 및 감정의 독립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후자는 또한 참가자와 정치적 신념이 일치하는 커뮤니티 내의 합의 수준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평가, 즉 평가오류는 가치관과 정체성에 대한 비타협적인 경향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통일연구원의 2020년 데이터 세트에서 태도에 대한 가장 뛰어난 예측변수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상호 강화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에서는 실제로 그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동반 작용과 그에 따른 건설적인 담론의 붕괴는 통일에 대한 합의가 갈수록 표류하는 최근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지식 테스트 문항을 작성한 북한 전문가들이 남북한 관계의 잘못된 측면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는 온전하고 신뢰할만한 가정으로 판단할 때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사상누각, 즉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와 직접적인 경험의 축소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생산된 아이디어들을 단순히 취합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 관찰된 것처럼 논의를 위한 구체적이고 합

의된 근거와의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 해당 주제의 성격과 관계없이 양극화가 발생한다.

한국 사회가 통일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남북관계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의 맥락과 발생할 파급효과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지식을 과신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하는데 그것이 통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착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 내부의 큰 목소리와 강경한 자세는 각 구성원이 가진 배경 지식의 수준과 상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식을 다른 시민들과 비교, 대조해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비슷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토론집단 등이 권유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평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정해진 표준에 따라 잘 출제된 테스트를 받은 후 자신의 성적과 한국의 대표적 표본 집단과의 성적을 비교해보는다면 자신의 보다 정확한 지식수준을 판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식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한 다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주장의 경중과 태도의 강약을 그에 맞게 조절한다면 보다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대표적인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 역시 합의에 대한 착각으로 인한 부작용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가 우리가 가진 정보의 한계를 넘어, 그리고 판단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고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책 보좌관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은 정보 확산을 목적으로 한 캠페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에 대한 논의에 있어 한국 대중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서로 다른 가치관을 파악하고 이와 같은 가치관의 차이를 숨기려고 시도하는 대신 이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가 중시하는 가치관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그리고 실제 상황을 통해 수십 년 간의 분쟁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된 집단들조차 앞서 언급한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할 경우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²⁴⁵⁾

논의 과정에서 가치관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희망적 관측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가치관을 논리적으로 따름으로써 유발되는 결과와 그렇지 않음으로써 유발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실제적 증거가 차이를 보이는 지점에 집중함으로써 이와 같은 경향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신의 정보 및 태도가 도출된 근거를 점검하고 자신과는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의 신중한 토의에 임함으로써 언급한 문제 중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책의 결과에 대한 희망적 관측과 마찬가지로 합의와 착각은 생각을 가다듬게 하는 토의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사실들은 정치사회학적 태도가 형성, 교섭, 교정, 전파되는 집단적 과정에 주목한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한국 대중 사이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담하고 당당하게 대중과 마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사안에 대한

245) Scott Atran, Robert Axelrod, and Richard Davis, "Sacred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pp. 1039~1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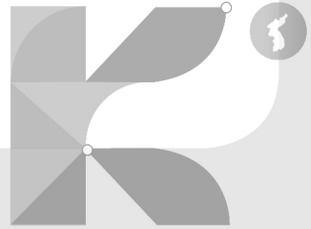
근본적인 대응으로서 모든 한국인들이 납득하고 공유할 수 있는 대안적 실재를 도출하고 이들을 합의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관계에 있으며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간의 활발한 접촉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양극화의 원심력을 합의 도출을 위한 구심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방법론에 대하여

일단 모든 구조가 파악되면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라 상호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연역적으로 예측되는 상관관계가 적절한 상관계수를 통해 검토되었다. 모든 상관계수는 본문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p < 0.01$ 의 조건에서 0으로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가설의 검증에 있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유사한 작성관례를 따랐다. 0.1 이하의 상관관계는 중요하지 않거나 표면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의미 값에 관계없이 본 연구의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IV.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박주화 통일연구원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보건 등 개인과 사회의 모든 영역과 영역 내 모든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개인의 삶과 사회, 국가의 역할에 대한 성찰과 근원적 질문에 대한 해답인 셈이다. 남북관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보건, 방역, 의료 등 당면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 속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남북관계 미래를 위한 질문은 무엇인가? 더 안전한 남북관계, 다 같이 잘사는 남북관계, 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한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의 적대적 남북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개인의 인식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구조는 어떻게 재조직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의 시작은 우리 자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단에 익숙해져버린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성찰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70년 이상 분단이 지속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에 대한 민감성 자체가 둔화되어 있다. 본 과제의 1년차 및 2년차에서 우리 국민은 평화를 비둘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평화를 생각할 때 비둘기를 떠올리는 사람이 다수인 사회에서 비둘기의 평화가 아닌 번영과 공존의 평화는 오히려 설자리를 잃게 된다.

고착화된 분단체제 속에서 코로나19는 분단체제 속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코로나19는 폭력적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3천 5백만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의 극복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은 개인과 사회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목표가 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는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종교 등 개인과 사회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는 개인과 사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항상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는 개인과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항상 고려되는 요소이며 가장 중요한 공동의 의제이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의 물리적, 심리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코로나19 시대 속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 6.25 전쟁, 분단이 본격화된 70여 년 전 한국의 사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분단은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했고 개인과 사회의 핵심적 어젠다였다. 남과 북은 전쟁과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방대한 규모의 물리적, 심리적 자원을 투입해 왔다. 남과 북은 승리를 목표로 삼았지만, 최소한 상대에게 지지 않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다. 분단 초기 가시적이었던 분단의 영향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사회에 녹아들어 체제화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19와 분단은 갈등의 외피는 다르지만, 갈등의 구조는 유사한 동형문제로 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를 통해 분단체제를 살펴볼 수 있고, 분단체제를 통해 코로나19의 사회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위기와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 역시 유사한 구조를 가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의 극복, 코로나19 이후 미래의 청사진이 분단체제의 해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평화와 전쟁, 그리고 통일의 사회적 표상을 단어 연상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단어 연상법은 사회적 표상 연구에서 가장 흔히 쓰는 조사법으로 ‘평

화’, ‘전쟁’과 같은 주제어를 보거나 듣고 떠오르는 단어를 통해 사회적 표상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평화”라는 단어를 듣고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는 ‘비둘기(24.4%)’이었으며, 이어서 ‘통일(21.4%)’, ‘전쟁(6.6%)’, ‘북한(4.3%)’, ‘자유(3.7%)’, ‘행복(2.8%)’의 순이었다. 2019년과 비교한다면 비둘기와 통일이 평화와 관련된 지배적 연상어라는 점은 변함이 없었지만 비둘기와 통일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여전히 한국인들은 평화를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상어는 ‘북한’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1,600명 중 20.8%가 ‘통일’이라는 단어를 보고 ‘북한’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응답하였다. ‘평화’, ‘분단’, ‘통합/화합’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이 ‘통일’을 ‘북한’, ‘평화’, ‘분단’, ‘통합/화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일에 대한 표상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이 통일을 “나” 또는 “우리”가 아닌 “상대”, 북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통일에 대한 표상은 과정과 비전, 가치가 아닌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순위 연상어와 전체 연상어를 모두 고려했을 때 가치지향적인 연상어는 ‘평화’, ‘통합/화합’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구체적 사건이 추상적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연상이 된다. 또한 통일이 미래에 발생할 가상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치나 과정, 비전보다 사건 중심으로 통일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표상은 중립적이다. 통일과 관련된 연상어들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통일에 대한 표상이 반드시 긍정적일 필요도 없으며 부정적이라고 해서 우려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통일과 관련된 표상,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는 것은 통일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가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3개의 태도,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 통일에 대한 태도, 대북·통일에 대한 태도를 각각 다시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도합 6개의 준거변수 -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성’, ‘분단지향성’,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 - 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6개 준거변수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수로 가치관, 사회관, 분단의 문화, 평화의 문화를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성, 분단지향성, 압박정책, 그리고 관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관, 사회적 신념, 분단의 심리 및 화해의 심리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각 선행변수의 개념을 간략히 제시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차이, 그리고 준거변수와의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본 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각 선행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의 평균은 6.20으로 2019년 6.28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이념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었다.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을 중도 또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협력을 통한 평화에 긍정적인이었다.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사회적 신념, 분단의 심리, 화해의 심리는 <표 IV-1>에 제시하였다.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영향력이 가장 큰 가치관은 사회지배경향, 그 중에서도 평등주의였다. 우리 사회의 목표가 평등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믿을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긍정적이었다. 또한 돌봄의 가치, 공

정의 가치, 충성의 가치를 도덕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할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도 특징적이었다. 사회적 신념 중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단일민족이라는 믿음, 북한 주민에 대한 정체감이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분단의 심리 중에서는 북한에 대한 긍정이미지, 화해의 심리 중에서는 남북 관계에 대한 희망이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표 IV-1〉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치관	사회적 신념	분단의 심리	화해의 심리
우익권위주의	주관적안녕	제로섬인식(-)	용서(+)
지배경향-지배경향(-)	정치효능감(+)	경쟁적희생자인식	새정보학습(+)
지배경향-평등주의(++)	불평등인식(+)	방어정서(+)	희망(++)
자기고양가치	정치경제이념(-)	공격정서(-)	죄책감(+)
자기초월가치	사회이념(-)	긍정정서	신뢰(-)
보수주의	집단변화신념(+)	우월감(+)	북한책임(-)
인지종결욕구	갈등변화신념	악마화	공감
불확실성회피	민족남한정체감(+)	단결(+)	공동희생자인식(+)
미래지향(+)	단일민족믿음(++)	긍정이미지(++)	북한인정
현재지향(+)	북한주민정체감(+)	부정이미지	
도덕기반_돌봄(+)	자기검열	남한정당성	
도덕기반_공정(+)		분단중심성	
도덕기반_충성(+)			
도덕기반_권위(-)			
도덕기반_순수			
개인주의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의 평균은 5.13으로 2019년 대비 0.11점 하락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긍정적이었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연령 교차 분석 결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가장 긍정적인 집단은 20대 남성, 가장 부정적인 집단은 20대 여성으로 나타나 20대의 성별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선호하였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가장 영향력이 큰 가치관은 사회지배 경향이였다. 사회의 위계가 확실해야 한다고 믿을수록, 그리고 평등보다는 위계적 사회구조가 이상적이라고 믿을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긍정적이였다. 사회적 신념 중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정치경제이념이였다. 분단의 심리에서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및 남한의 정당성, 화해의 심리에서는 분단이 북한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표 IV-2〉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치관	사회적 신념	분단의 심리	화해의 심리
우익권위주의(+)	주관적안녕	제로섬인식(+)	용서(-)
지배경향-지배경향(++)	정치효능감	경쟁적희생자인식(+)	새정부학습(+)
지배경향-평등주의(-)	불평등인식(+)	방어정서(-)	희망(-)
자기고양가치(+)	정치경제이념(++)	공격정서(+)	죄책감
자기초월가치(+)	사회이념(+)	긍정정서(+)	신뢰(+)
보수주의	집단변화신념	우월감	북한책임(++)
인지종결욕구	갈등변화신념(+)	악마화(+)	공감(+)
불확실성회피	민족남한정체감(+)	단결(+)	공동희생자인식
미래지향(+)	단일민족믿음(-)	긍정이미지	북한인정
현재지향(+)	북한주민정체감	부정이미지(++)	

가치관	사회적 신념	분단의 심리	화해의 심리
도덕기반_돌봄	자기검열(+)	남한정당성(++)	
도덕기반_공정(-)		분단중심성	
도덕기반_총성			
도덕기반_권위(+)			
도덕기반_순수			
개인주의(+)			

2020년 통일지향성의 평균은 3.19로 2019년 3.17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통일지향성이 강했으며, 연령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통일의 필요성에 있어 2030세대의 공감도가 약하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연령·성별 교차분석 결과 통일 지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었다. 이념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었다. 진보가 보수와 중도에 비해 통일지향성이 높았다.

〈표 IV-3〉 통일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치관	사회적 신념	분단의 심리	화해의 심리
우익권위주의	주관적안녕(-)	제로섬인식(-)	용서(+)
지배경향-지배경향(-)	정치효능감	경쟁적희생자인식	새정보학습(++)
지배경향-평등주의(+)	불평등인식(+)	방어정서	희망(+)
자기고양가치	정치경제이념(-)	공격정서	죄책감(++)
자기초월가치	사회이념(+)	긍정정서(+)	신뢰(+)
보수주의(+)	집단변화신념	우월감	복한책임
인지종결욕구(-)	갈등변화신념	악마화(-)	공감(+)
불확실성회피	민족남한정체감(+)	단결(+)	공동희생자인식(+)

가치관	사회적 신념	분단의 심리	화해의 심리
미래지향(++)	단일민족만음(+)	긍정이미지(++)	북한인정(-)
현재지향(+)	북한주민정체감(++)	부정이미지	
도덕기반_돌봄	자기검열	남한정당성(+)	
도덕기반_공정		분단중심성(+)	
도덕기반_충성(++)			
도덕기반_권위			
도덕기반_순수(-)			
개인주의			

통일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은 충성의 도덕기반이었다. 충성을 도덕적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할수록 통일지향성이 높은 결과에 대해 본 연구는 충성의 대상이 국가보다 민족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북한주민에 대한 애정, 즉 정체감이 다양한 사회적 신념 중 통일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북한에 대한 긍정이미지는 분단의 심리 중 통일지향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였다. 북한과 분단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의도 및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화해의 심리 중 통일지향성에 가장 영향력이 깊은 변수였다.

분단지향성의 평균은 3.36점으로 2019년 대비 0.13점 감소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분단지향성이 통일지향성보다 높았다. 통일지향성과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분단지향성이 다소 강했다. 연령, 이념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분단 상황이 지속되어도 좋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통일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이 충성의 도덕기반이었다면 분단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은 공정의 도

덕기반이었다. 공정의 가치를 옳고 그름의 판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분단을 원하는 정도가 강했다. 사회적 신념 중에서는 정치경제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분단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분단의 심리 중 분단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보인 변수는 분단중심성이었다. 분단에 대해 성찰하는 정도, 분단을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화해의 심리 중 분단지향성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분단이 북한의 책임이라는 인식이었다.

〈표 IV-4〉 분단지향성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치관	사회적 신념	분단의 심리	화해의 심리
우익권위주의	주관적안녕(+)	제로섬인식	용서
지배경향-지배경향(+)	정치효능감	경쟁적희생자인식	새정보학습
지배경향-평등주의	불평등인식(+)	방어정서	희망(+)
자기고양가치	정치경제이념(++)	공격정서	죄책감
자기초월가치	사회이념(-)	긍정정서(-)	신뢰(-)
보수주의	집단변화신념	우월감	북한책임(++)
인지종결욕구	갈등변화신념	악마화	공감
불확실성회피	민족남한정체감	단결	공통희생자인식(+)
미래지향	단일민족믿음(-)	긍정이미지(+)	북한인정(+)
현재지향(+)	북한주민정체감	부정이미지(+)	
도덕기반_돌봄	자기검열(+)	남한정당성(-)	
도덕기반_공정(++)		분단중심성(-)	
도덕기반_충성(-)			
도덕기반_권위			
도덕기반_순수			
개인주의			

관여정책의 평균은 3.80, 압박정책의 평균은 4.01로 압박정책을 지지하는 정도가 관여정책을 지지하는 정도보다 강했다. 관여정책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지지도가 높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스스로를 진보로 생각하는 집단의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스스로를 보수, 중도로 생각하는 집단의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 보다 강했다. 보수와 중도의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차이가 없었다.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은 사회 지배경향의 평등주의였으며,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믿음은 사회적 신념에서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분단의 심리 중에서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화해의 심리 중에서는 남북관계 미래에 대한 희망이 관여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관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치관	사회적 신념	분단의 심리	화해의 심리
우익권위주의	주관적안녕(+)	제로섬인식	용서(+)
지배경향-지배경향	정치효능감(+)	경쟁적희생자인식(+)	새정보하습
지배경향-평등주의(++)	불평등인식(-)	방어정서	희망(++)
자기고양가치	정치경제이념	공격정서(-)	죄책감(+)
자기초월가치	사회이념(+)	긍정정서(+)	신뢰
보수주의(+)	집단변화신념	우월감(+)	북한책임
인지종결욕구	갈등변화신념	악마화(-)	공감(+)
불확실성회피	민족남한정체감(+)	단결(+)	공동희생자인식(+)
미래지향(+)	단일민족믿음(++)	긍정이미지(++)	북한인정
현재지향(+)	북한주민정체감(+)	부정이미지	
도덕기반_돌봄(+)	자기검열	남한정당성	

가치관	사회적 신념	분단의 심리	화해의 심리
도덕기반_공정		분단중심성(-)	
도덕기반_총성(+)			
도덕기반_권위			
도덕기반_순수			
개인주의			

〈표 IV-6〉 압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치관	사회적 신념	분단의 심리	화해의 심리
우익권위주의(+)	주관적안녕	제로섬인식(+)	용서
지배경향-지배경향(+)	정치효능감(-)	경쟁적희생자인식	새정보학습
지배경향-평등주의(-)	불평등인식(+)	방어정서	희망(-)
자기고양가치	정치경제이념(++)	공격정서	죄책감
자기초월가치	사회이념	공정정서(-)	신뢰(-)
보수주의	집단변화신념(+)	우월감(+)	북한책임(+)
인지종결욕구(+)	갈등변화신념(+)	악마화(++)	공감
불확실성회피(+)	민족남한정체감(+)	단결(+)	공동희생자인식(+)
미래지향	단일민족민음(-)	공정이미지	북한인정(-)
현재지향(-)	북한주민정체감(-)	부정이미지(+)	
도덕기반_돌봄	자기검열(+)	남한정당성	
도덕기반_공정(+)		분단중심성	
도덕기반_총성(-)			
도덕기반_권위(++)			
도덕기반_순수			
개인주의			

압박정책의 경우 성별, 연령, 월 소득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념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는데, 보수는 중도에 비해서, 중도는 진보에 비해서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전통과 권위에 대한 존중을 중시하는 권위 도덕기반은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념 중에서는 정치경제이념, 즉 정치경제적 보수일수록 압박정책을 지지하였다. 분단의 심리에서는 북한에 대한 악마화, 화해의 심리에서는 북한의 책임이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분석에서는 전술한 코로나19의 경험이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는지 국민의 인식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 통일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사람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위협, 특히 자신의 삶이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직면할 때 ① 내집단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 그리고 ② 외집단에 대한 적의를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진화적, 적응적인 관점으로 볼 때, 외집단과의 거리두기는 감염을 막는 데 특히 효과적이었다.²⁴⁶⁾ 외집단은 내집단 구성원이 아직 면역력을 확보하지 못한 감염원을 옮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동일한 사회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내집단 구성원이 외집단의 구성원에 비해 자신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적다고 판단함으로써 내집단에 대한 선호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

내집단에 대한 선호와 외집단에 대한 배척은 코로나19와 같은 삶의 실존에 대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공포와 밀접한 관련이

246) Damian R. Murray, Mark Schaller, and Peter Suedfeld, "Pathogens and Politics: Further Evidence That Parasite Prevalence Predicts Authoritarianism," p. e62275.

있다. 공포는 개인이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발현되는 정서로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반응이다. 공포는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인식과 상대적인 피로와 관련이 있으며 개인이 갈등에 대처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존을 위해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가 커지고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이 강화될 때, 코로나19와 같은 위협이 야기하는 공포, 공포가 야기하는 적대감이 외집단에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설명들은 코로나19 시대의 남북관계 맥락에서 관찰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민들은 내집단에 대한 정체감, 즉 남한에 대한 동일시가 강화되었고, 남한 동일시는 북한에 대한 공포를 강화하였다. 예측대로 코로나19→남한정체감→공포의 경로가 확인된 것이다. 동시에 코로나19는 북한에 대한 공포를 직접적으로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공포는 북한에 대한 적대인식을 강화시켰다. 코로나19가 남북의 화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내집단 편향, 공포와 적대감을 넘어 갈등을 겪고 있는 집단 관계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집단이 동일한 운명을 공유한다고 인지할 때, 즉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의 위협에 직면한 순간 한 개인이 속한 내집단과 외집단이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집단을 공통적인 상위 집단의 일원으로 생각하게 된다. 한반도의 맥락에서는 민족정체감이 강화되는 것이다.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집단이 공통 상위 집단의 정체감이 현저해지고 강화된다면, 집단 간 협력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갈등하는 두 집단이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인식, 공동의 위협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가진다는 것은 타인의 경험과 나의 경험을 연결

시키는 ‘공감’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공감은 고난 혹은 불행의 맥락에서 타인의 감정적 상태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타인의 슬픔, 공포를 인정하고 자신이 동일한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타인의 고통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감이 협력의 기반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집단이 공감을 통해 협력을 이루는 경우는 흔치 않다. 오히려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또는 샤펜프로이데를 위해 상대방의 입장을 분석한다. 과연 70년 적대적 갈등을 지속해온 남북관계에서 건설적 경로는 가능할 것인가?

코로나19의 건설적 경로 역시 남북관계 맥락에서 관찰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민의 민족정체감은 강화되었고, 이는 북한에 대한 공감의 강화로 이어졌다. 또한 코로나19의 경험이 북한에 대한 공감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경로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족정체감 및 북한에 대한 공감은 북한에 대한 협력인식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역사 및 맥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북한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 역시 통일에 대한 지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맥락에서는 결핍 모델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부족은 입장 차이의 핵심적인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으며 정보 확산을 위한 캠페인의 효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참가자 본인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는 태도 및 극단성에 대한 비교적 뛰어난 예측변수로 작용했다. 우리는 앞서 자신에 대한 평가오류가 어떻게 이해 혹은 오해의 착각으로 이어지는지, 아울러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다 극단적인 태도를 유발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착오가 단순히 개인의 무지 때문이라고 보는 기존의

더닝-크루거 효과와는 반대로 이들을 강화하는 몇몇 커뮤니티 관련 기제, 즉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착오 및 감정의 독립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후자는 또한 참가자와 정치적 신념이 일치하는 커뮤니티 내의 합의 수준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평가, 즉 평가오류는 가치관과 정체성에 대한 비타협적인 경향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통일연구원의 2020년 데이터 세트에서 태도에 대한 가장 뛰어난 예측변수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상호 강화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에서는 실제로 그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동반 작용과 그에 따른 건설적인 담론의 붕괴는 통일에 대한 합의가 갈수록 표류하는 최근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지식 테스트 문항을 작성한 북한 전문가들이 남북한 관계의 잘못된 측면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신뢰할만한 가정으로 판단할 때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사상누각, 즉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와 직접적인 경험의 축소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생산된 아이디어들을 단순히 취합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 관찰된 것처럼 논의를 위한 구체적이고 합의된 근거와의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 해당 주제의 성격과 관계없이 양극화가 발생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 표상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통일공감대가 아닌 통일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통일상(像)은 ‘북한과 하나가 되는 사건’일 뿐이다. ‘가족’을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또는 ‘정치’와 ‘경제’를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와 비교한다면 우리 사회의 통일상이 매우 메말라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빈약한 통일상은 우리 사회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통일을 전제한 통일공감대 확보에 두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평화·통일교육은 북한과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가 되는 과정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와 토론이 아닌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마치 역사수업에서 역사의 내용이 아닌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통일에 대해 ‘필요하다 vs. 필요 없다’, ‘편의가 있다 vs. 편의가 없다’를 이야기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둘째, 북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북한주민의 일상적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통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북한이라면 그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에 있어 북한은 이중적이며 모순적인 대상이다.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에 따르면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이다.²⁴⁷⁾ 이러한 모순적 북한관은 전쟁 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인식이다. 그럼에도 경계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이라는 관점은 상대를 적 또는 아군으로 보는 이분법적 세계관, 정치·군사적 관점으로 이 인식들 간 균형적 인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순을 인정하는 것과 경계와 협력의 균형은 다른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정보와 담론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정치군사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247) 통일부 통일교육원,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서울: 통일교육원, 2018), p. 13.

다. 같은 조사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통’, ‘암담’, ‘두려움’, ‘우울’, ‘괴로움’, ‘섬뜩’, ‘분노’, ‘환멸’ 등 부정적인 인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이 정도로 비인간화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고통 속에서 암담하며 섬뜩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통일상에 있다. 평화의 시작은 ‘적대적 대상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의 변화이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는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북한에서의 삶,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의 일상적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통일과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분단이 일상화된 정치·사회적 환경, 분단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경제적 환경에서 통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럼에도 통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다. 통일에 대한 의문이 반통일, 분단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근본적 이유일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의문에 던지는 불편한 시선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어 평화·통일 교육 장면에서 교사들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학생들이 제기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그 순간 교사는 합리적 통일반대 논리를 어떻게든 돌려놓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논리를 인정하고 토론을 해야 할지 갈등에 놓이게 된다. 통일반대 논리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순간 교사는 동료, 학부모, 또는 사회로부터 반통일 수업을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지 두려움을 느낀다.²⁴⁸⁾

248) 교사들의 43% 이상은 평화·통일교육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교사들의 5% 정도는 동료교사와 학부모와의 갈등을 염려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서울: 통일교육원, 2019), p. 162.).

통일교육지원법의 고발조항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을 믿어야 한다. 의문과 질문이 불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의문과 질문은 확신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통일에 대한 의문과 질문, 다시 말해 통일상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통일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창의성 역시 의문과 질문에서 시작된다. 남북문제의 교착이 지속되고 분단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창의적 해법이 부족한 것은 질문과 의문을 허용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분위기 탓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통해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개입, 또는 평화·통일교육의 지향점을 밝혔다. 예를 들어 사회지배경향은 협력을 통한 평화, 군사력을 통한 평화, 통일 지향성, 분단지향성, 압박정책, 그리고 관여정책 등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대한 포괄적 지표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회지배경향은 준거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강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신념, 분단의 심리, 화해의 심리 등 모든 변수 수준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을 경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심리적 요인을 발굴,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예를 들어 도덕기반판단은 사회지배경향과 더불어 6개 준거변수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행동과 생각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영향을 경험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도덕판단이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

적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민족정체감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사회적 인식이 한반도 평화인식과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정한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지향성, 그리고 관여정책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믿음과 북한 주민에 대한 정체감, 즉 민족정체감이었다. 반면 군사력을 통한 평화, 분단지향성 그리고 압박정책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정치경제이념이었다. 이는 민족정체감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에 강력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향후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대한 공감대 확장을 위한 과제도 제시하였다.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통일지향성 및 관여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단의 심리는 북한에 대한 긍정 이미지,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및 압박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단의 심리는 제로섬 인식과 북한에 대한 악마화였다. 북한과 협력을 추동하는 태도가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기보다는 추상적인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추상적 이미지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인식은 정책 개입의 내용과 방향 설정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태도가 제로섬 인식 및 북한에 대한 악마화 등 구체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결과와 대조된다. 북한에 대한 협력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태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북한에 대한 추상적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정책적 노력 역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치관, 사회적 인식, 분단의 심리, 화해의 심리의 관계를 명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 사회적

인식, 분단의 심리, 화해의 심리 각각의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구체화하여 소위 한반도 평화와 화해 인식의 DNA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문화체육관광부. 『2019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2019.
- 박주화 외.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박주화·이민규·최훈석·권영미·Steven Sloman·Eran Halperin.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9.
-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 비평, 1998.
- 제이슨 생커 지음. 박성현 옮김. 『코로나 이후의 세계』. 고양: 다빈치 하우스-미디어숲, 2020.
- 조지 레이코프 지음. 유나영 옮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서울: 삼인, 2006.
- 최재천 외. 『코로나 사피엔스』. 서울: 인플루엔셜, 2020.
- 토마스 프랭크 지음. 김병순 옮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서울: 갈라파고스, 2012.
- 통일부 통일교육원.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서울: 통일교육원, 2018.
- _____. 『2019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통일교육원, 2019.
- 해리스 M. 이언 · 메리 L. 모리슨 지음. 박정원 옮김. 『평화교육(미래를 위한 교육, 세계를 위한 비전)』. 서울: 오름, 2011.
- Campbell, Angus, Gerald Gurin, and Warren Edward Miller. *The Voter Decides*. Evanston: Row, Peterson, 1954.

- Halperin, Eran. *Emotions in Conflict: Inhibitors and Facilitators of Peace Making*. New York: Routledge, 2015.
- Hofstede, Geert.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1.
- Slooman, Steven A. and Philip Fernbach. *The Knowledge Illusion: Why We Never Think Alone*. New York: Riverhead Books, 2017.
- Tajfel, Henri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 London: Academic Press, 1978.
- _____.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London: Academic Press, 1981.
- Zaller, John R..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2. 논문

- 강수영. “정치적 자기효능감 척도(Pses) 제작 및 타당화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7권 3호, 2013.
- 김순희.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불안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연신·최한나.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1호, 2009.
- 김현정·박상희·박영옥. “유권자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에 관한 경로모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9권 4호, 2015.

- 김혜숙.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6권 1호, 2002.
- 박주언·심수진·이희길. “주관적 웰빙 측정 방안.” 통계청 통계개발원 역음. 『2012년 상반기 연구결과보고서』.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2.
- 양계민.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4호, 2009.
- 윤광일.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의 개인 성향과 가치 기반.” 『국방연구』. 제62권 4호, 2019.
- 이상신.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결정요인 연구: 우파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사회연구』. 제8권 2호, 2015.
- 이 슬. “한국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 이진안·최승혁·허태균. “정치적 판단에서 심리적 요인의 역할-변화 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6권 2호, 2012.
- 장승진·송진미. “허위합의(False Consensus) 효과와 쟁점투표.” 『한국 정당학회보』. 제16권 3호, 2017.
- 최정원·이영호. “개정된 가치묘사질문지(Pvq-R) 한국판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3권 3호, 2014.
- 최훈석·용정순. “한국 청소년과 성인의 게임에 관한 사회적 표상.”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2호, 2010.
- 하상웅·이보미.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의 심리적 결정 요인들.” 『한국정당학회보』. 제16권 1호, 2017.
- 한덕웅·표승연. “정서 경험에 따른 주관안녕, 건강지각 및 신체질병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7권 3호, 2002.

한정훈.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4호, 2016.

홍기원·이종택. “한국 성인의 이념적 지형과 심리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4권 2호, 2010.

Abdi, Hervé and Lynne J. William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mputational Statistics*, vol. 2, no. 4, 2010.

Adam-Troian, Jais. “The Pathogen Paradox: Evidence That Perceived Covid-19 Threat Is Associated with Both Pro- and Anti-Immigrant Attitudes.” in preparation.

Alonso-Ferres, María, Ginés Navarro-Carrillo, Marta Garrido-Macías, Eva Moreno-Bella, and Inmaculada Valor-Segura. “Connecting Perceived Economic Threat and Prosocial Tendencies: The Explanatory Role of Empathic Concern.” *PloS One*, vol. 15, no. 5, 2020.

Anson, Ian G.. “Partisanship, Political Knowledge, and the Dunning-Kruger Effect.” *Political Psychology*, vol. 39, no. 5, 2018.

Atran, Scott, Robert Axelrod, and Richard Davis. “Sacred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Science*, vol. 317, issue 5841, 2007.

Bagozzi, Richard P., Mahesh Gopinath, and Prashanth U. Nyer. “The Role of Emotions in Marketing.”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27, no. 2, 1999.

Bar-Tal, Daniel and Eran Halperin. “Socio-Psychological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In *Intergroup Conflicts*

Their Resolution: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Frontier of Social Psychology), edited by Daniel Bar-Tal.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1.

-
- _____.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In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ited by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Bar-Tal, Daniel, Eran Halperin, and Ruthie Pliskin. "Why Is It So Difficult to Resolve Intractable Conflicts Peacefully? A Sociopsychological Explanation." In *Handbook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edited by Mauro Galluccio.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5.
- Bar-Tal, Daniel, Keren Sharvit, Eran Halperin, and Anat Zafran. "Ethos of Conflict: The Concept and Its Measurement."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8, no. 1, 2012.
- Batson, Daniel C. and Laura L. Shaw. "Evidence for Altruism: Toward a Pluralism of Prosocial Motives." *Psychological Inquiry*, vol. 2, no. 2, 1991.
- Batson, Daniel C. and Nadia Y. Ahmad. "Using Empathy to Improve Intergroup Attitudes and Relation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vol. 3, no. 1, 2009.
- Batson, Daniel C. et al.. "Empathy and Attitudes: Can Feeling for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Improve Feelings toward the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2, no. 1, 1997.

- Bizumic, Boris, Rune Stubager, Scott Mellon, Nicolas Van der Linden, Ravi Iyer, and Benjamin M. Jones. "On the (In)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5, 2013.
- Bodenhausen, Galen V., Thomas Mussweiler, Shira Gabriel, and Kristen N. Moreno. "Affective Influences o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Relations." In *Handbook of Affect and Social Cognition*, edited by Joseph P. Forga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0.
- Brandt, Mark J. and Jarret T. Crawford. "Worldview Conflict and Prejudice."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dited by Bertram Gawronski. New York: Academic Press, 2020.
- Branscombe, Nyla R., Naomi Ellemers, Russell Spears, and Bertjan Doosje. "The Context and Content of Social Identity Threat." In *Social Identity: Context, Commitment, Content*, edited by Naomi Ellemers, Russell Spears, and Bertjan Doosje. New York: Wiley-Blackwell, 1999.
- Budner, Stanley. "Intolerance of a Ambiguity as a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vol. 30, no. 1, 1962.
- Buhr, Kristine and Michael J. Dugas.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glish Ver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vol. 40, no. 8, 2002.
- Canetti-Nisim, Daphna, Eran Halperin, Keren Sharvit, and Stevan E. Hobfoll. "A New Stress-Based Model of Political Extremism: Personal Exposure to Terrorism, Psychological Distress, and Exclusionist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3, 2009.

- Carleton, Nicholas R., M. A. Peter J. Norton, and Gordon J. G. Asmundson. "Fearing the Unknown: A Short Version of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vol. 21, no. 1, 2007.
- Castano, Emanuele, Maria -Paola Paladino, Alastair Coull, and Vincent Y. Yzerbyt. "Protecting the Ingroup Stereotype: Ingroup Identification and the Management of Deviant Ingroup Member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1, no. 3, 2002.
- Cikara, Mina, Emile Bruneau, Jay J. Van Bavel, and Rebecca Saxe. "Their Pain Gives Us Pleasure: How Intergroup Dynamics Shape Empathic Failures and Counter - Empathic Respon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55, 2014.
- Clore, Gerald L., Norbert Schwarz, and Michael Conway. "Affectiv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Basic Processes*, edited by Robert S. Wyer and Thomas K. Srull. Hillsdale, N.J.: Erlbaum, 1994.
- Cohen - Chen, Smadar, Eran Halperin, Richard J. Crisp, and James J. Gross. "Hope in the Middle East: Malleability Beliefs, Hope, and the Willingness to Compromise for Peace." *Social Psychological Personality Science*. vol. 5, no. 1, 2014.
- Cohen - Chen, Smadar, Eran Halperin, Roni Porat, and Daniel Bar - Tal. "The Differential Effects of Hope and Fear on Information Processing in Intractable Conflict." *Journal of Social and Political Psychology*. vol. 2, no. 1, 2014.

- Cohen, Geoffrey L., “Party over Policy: The Dominating Impact of Group Influence on Political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5, no. 5, 2003.
- Cohen, Racheli, Ruthie Pliskin, and Eran Halperin. “How I Learned to Stop Fearing: Ideological Differences in Choice of Reappraisal Conten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9, no. 3, 2018.
- Cohrs, Christopher J., Barbara Moschner, Jurgen Maes, and Sven Kielmann. “Personal Values and Attitudes toward War.”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1, no. 3, 2005.
- Cole, Shana, Emily Balcetis, and David Dunning. “Affective Signals of Threat Increase Perceived Proximity.” *Psychological Science*. vol. 24, no. 1, 2013.
- Coleman, Peter T., “Characteristics of Protracted, Intractable Conflict: Toward the Development of a Metaframework - I.”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9, no. 1, 2003.
- Cruwys, Tegan, Mark Stevens, and Katharine H. Greenaway. “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on Covid-19: Health Risk Is Affected by Shared Group Membership.”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9, 2020.
- Cruwys, Tegan, Mark Stevens, Michael J. Platow, John Drury, Elyse Williams, Ashleigh J. Kelly, and Margarita Weekes. “Risk-Taking That Signals Trust Increases Social Identification.” *Social Psychology*. vol. 51, 2020.
- Davis, Mark H., Carol Luce, and Stephen J. Kraus. “The Heritability of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 Disposi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vol. 62, no. 3, 1994.
- De Vos, Bart, Martijn van Zomeren, Ernestine H. Gordijn, and Tom Postmes. “The Communication of “Pure” Group-Based Anger Reduces Tendencies toward Intergroup Conflict Because It Increases Out-Group Empath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9, no. 8, 2013.
- Decety, Jean. “The Neural Pathways, Development and Functions of Empathy.”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vol. 3, 2015.
- Doosje, Bertjan, Nyla R. Branscombe, Russell Spears, and Antony S. R. Manstead. “Guilty by Association: When One’s Group Has a Negative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vol. 75, no. 4, 1998.
- Doosje, Bertjan, S. Alexander Haslam, Russell Spears, Penelope J. Oakes, and Willem Koomen. “The Effect of Comparative Context on Central Tendency and Variability Judgements and the Evaluation of Group Characteristic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28, no. 2, 1998.
- Dovidio, John F., Samuel L. Gaertner, Ana Validzic, Kimberly Matoka, Brenda Johnson, and Stacy Frazier. “Extending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Evaluations, Self-Disclosure, and Help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3, no. 4, 1997.
- Dovidio, John F., Samuel L. Gaertner, and Tamar Saguy. “Commonality and the Complexity of “We”: Social Attitudes and Social Change.”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3, no. 1, 2009.

- Drury, John et al., “A Social Identity Model of Riot Diffusion: From Injustice to Empowerment in the 2011 London Rio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0, no. 3, 2020.
- Dunning, David, “The Dunning-Kruger Effect: On Being Ignorant of One’s Own Ignorance.”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dited by James M. Olson and Mark P. Zanna. Amsterdam: Elsevier, 2011.
- Emler, Nicholas, “Morality and Political Orientations: An Analysis of Their Relationship.”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3, no. 1, 2003.
- Fernbach, Philip M., Nicholas Light, Sydney E. Scott, Yoel Inbar, and Paul Rozin, “Extreme Opponent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Know the Least but Think They Know the Most.” *Nature Human Behaviour*, vol. 3, no. 3, 2019.
- Fourie, Melike M., Sivenesi Subramoney, and Pumla Gobodo-Madikizela, “A Less Attractive Feature of Empathy: Intergroup Empathy Bias.” In *Empathy: An Evidencebase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edited by Makiko Kondo. London: INTECH, 2017.
- Frenkel-Brunswick, Else,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n Emotional and Perceptual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vol. 18, 1949.
- _____. “Social Tensions and the Inhibition of Thought.” *Social Problems*, vol. 2, 1954.
- Gaertner, Samuel L., John F. Dovidio, Phyllis A. Anastasio, Betty A. Bachman, and Mary C. Rust, “The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 Recategorization and the

-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4, no. 1, 1993.
- Gaertner, Samuel L., John F. Dovidio, Rita Guerra, Eric Hehman, and Tamar Saguy. “A Common Ingroup Identity: Categorization,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In *Handbook of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Stereotyping*, edited by Todd D. Nelson.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6.
- Garrett, Kristin N. and Alexa Bankert. “The Moral Roots of Partisan Division: How Moral Conviction Heightens Affective Polariza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0, issue 2, 2018.
- Golec de Zavala, Agnieszka and Agnieszka Van Bergh. “Need for Cognitive Closure and Conservative Political Beliefs: Differential Mediation by Personal Worldviews.” *Political Psychology*. vol. 28, no. 5, 2007.
- Graham, Jesse and Jonathan Haidt. “Sacred Values and Evil Adversaries: A Moral Foundations Approach.” In *The Social Psychology of Morality: Exploring the Causes of Good and Evil*, edited by Mario Mikulincer and Phillip R. Shave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 Graham, Jesse, Brian A. Nosek, Jonathan Haidt, Ravi Iyer, Spassena Koleva, and Peter H. Ditto. “Mapping the Mor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1, no. 2, 2011.
- Graham, Jesse, Jonathan Haidt, and Brian A. Nosek.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6, no. 5, 2009.
- Greenberg, Jeff, Tom Pyszczynski, and Sheldon Solom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 Need for Self-Esteem: A Terror Management Theory.” In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edited by Roy F. Baumeister. New York: Springer, 1986.
- Gubler, Joshua Ronald, Eran Halperin, and Gilad Hirschberger. “Humanizing the Outgroup in Contexts of Protracted Intergroup Conflict.” *Journal of Experimental Political Science*, vol. 2, no. 1, 2015.
- Gutsell, Jennifer N. and Michael Inzlicht. “Empathy Constrained: Prejudice Predicts Reduced Mental Simulation of Actions During Observation of Outgrou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6, no. 5, 2010.
-
- _____ . “Using EEG Mu-Suppression to Explore Group Biases in Motor Resonance.” In *Neuroscience of Prejudice and Intergroup Relations*, edited by Belle Derks, Daan Scheepers, and Naomi Ellemers. London: Psychology Press, 2013.
- Haidt, Jonathan and Jesse Graham. “When Morality Opposes Justice: Conservatives Have Moral Intuitions That Liberals May Not Recognize.” *Social Justice Research*, vol. 20, no. 1, 2007.
- Halperin, Eran and Daniel Bar-Tal. “Socio-Psychological Barriers to Peace Making: An Empirical Examination within the Israeli Jewish Society.”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8, no. 5, 2011.

- Halperin, Eran and James J. Gross. "Emotion Regulation in Violent Conflict: Reappraisal, Hope, and Support for Humanitarian Aid to the Opponent in Wartime." *Cognition and Emotion*, vol. 25, no. 7, 2011.
- Halperin, Eran and Ruthie Pliskin.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in Intractable Conflict: Studying Emotional Processes within a Unique Context." *Political Psychology*, vol. 36, no. 1, 2015.
- Halperin, Eran, Alexandra G. Russell, Carol S. Dweck, and James Gross. "Anger, Hatred, and the Quest for Peace: Anger Can Be Constructive in the Absence of Hatred."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5, no. 2, 2011.
- Halperin, Eran, Alexandra G. Russell, Kali H. Trzesniewski, James Gross, and Carol S. Dweck. "Promoting the Middle East Peace Process by Changing Beliefs About Group Malleability." *Science*, vol. 333, no. 6050, 2011.
- Halperin, Eran, Keren Sharvit, and James J. Gross. "Emotion and Emotion Regulation in Intergroup Conflict: An Appraisal-Based Framework." In *Intergroup Conflicts Their Resolution: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Psychological Press, 2011.
- Halperin, Eran. "Group-Based Hatred in Intractable Conflict in Israel."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2, no. 5, 2008.
- _____. "Emotion, Emotion Regul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Emotion Review*, vol. 6, no. 1, 2014.
- Haslam, Alexander S., John C. Turner, Penelope J. Oakes, Craig McGarty, and Katherine J. Reynolds. "The Group as a

- Basis for Emergent Stereotype Consensu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8, no. 1, 1997.
- Heine, Steven J., Travis Proulx, and Kathleen D. Vohs. “The Meaning Maintenance Model: On the Coherence of Social Motiv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0, no. 2, 2006.
- Hemmatian, Babak and Steven A. Sloman. “Community Appeal: Explanation without In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vol. 147, no. 11, 2018.
-
- _____ . “Two Systems for Thinking with a Community: Outsourcing Versus Collaboration.” In *Logic and Uncertainty in the Human Mind: A Tribute to David Over*. edited by Shira Elqayam, Igo Douven, Jonathan St. B. T. Evans, and Nicole Cruz. New York: Routledge, 2020.
- Hewstone, Miles, Ed Cairns, Alberto Voci, Juergen Hamberger, and Ulrike Niens. “Intergroup Contact, Forgiveness, and Experience of “the Troubles” in Northern Ireland.”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62, no. 1, 2006.
- Hewstone, Miles, Mark Rubin, and Hazel Willis. “Intergroup Bia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3, no. 1, 2002.
- Hodson, Gordon and Mark R. Hoffarth.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In *Encyclopedia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edited by Virgil Zeigler - Hill and Todd K. Shackelford.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7.
- Hodson, Gordon and Richard M. Sorrentino. “Uncertainty Orientation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Structure.”

-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33, no. 2, 1999.
- Hornstein, Harvey A.. "Empathic Distress and Altruism: Still Inseparable." *Psychological Inquiry*. vol. 2, no. 2, 1991.
- Horstmanshof, Louise and Craig Zimitat. "Future Time Orientation Predicts Academic Engagement among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7, no. 3, 2007.
- Houghton, David C. and Rajdeep Grewal. "Please, let's get an answer - any answer: Need for consumer cognitive closure." *Psychology & Marketing*. vol. 17, no. 11, 2000.
- Jarymowicz, Maria and Daniel Bar-Tal. "The Dominance of Fear over Hope in the Life of Individuals and Collectiv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6, no. 3, 2006.
- Jensen, Jacob et al.. "Political Polarization and the Dynamics of Political Language: Evidence from 130 Years of Partisan Speech."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43, 2012.
- Johnson, Melissa Jean. "Attitudes toward Achieving Peace: A Measure of "Peace through Strength" and "Peace through Cooperation" and the Relationship of These Attitudes with Affective, Coping, Personality, and Gender Correlat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90.
- Joireman, Jeff, Monte J. Shaffer, Daniel Balliet, and Alan Strathman. "Promotion Orientation Explains Why Future-Oriented People Exercise and Eat Healthy: Evidence

- from the Two-Factor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 14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8, no. 10, 2012.
- Jonas, Eva et al., “Threat and Defense: From Anxiety to Approach.”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dited by James M. Olson and Mark P. Zanna. San Diego, C.A.: Academic Press, 2014.
- Jost, John T., Christopher M. Federico, and Jaime L. Napier,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0, 2009.
- Jost, John T., Jack Glaser, Arie W. Kruglanski, and Frank J. Sulloway,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9, no. 3, 2003.
- Jost, John T., Jaime L. Napier, Hulda Thorisdottir, Samuel D. Gosling, Tibor P. Palfai, and Brian Ostafin, “Are Needs to Manage Uncertainty and Threat Associated with Political Conservatism or Ideological Extrem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3, no. 7, 2007.
- Jung, Jae Min and James J. Kellaris,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Proneness to Scarcity Effects: The Moderating Roles of Familiarity, Uncertainty Avoidance, and Need for Cognitive Closure.” *Psychology & Marketing*, vol. 21, no. 9, 2004.
- Kahan, Dan M. and Donald Braman, “Cultural Cognition and Public Policy.” *Yale Law and Policy Review*, vol. 24, 2006.

- Krimsky, Sheldon. "An Illusory Consensus Behind GMO Health Assessment."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vol. 40, no. 6, 2015.
- Krueger, Joachim and Russell W. Clement. "The Truly False Consensus Effect: An Ineradicable and Egocentric Bias in Social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4, 1994.
- Kruglanski, Arie W. and Donna M. Webster. "Motivated Closing of the Mind: "Seizing" and "Freezing"." *Psychological Review*. vol. 103, no. 2, 1996.
- Kruglanski, Arie W.. "The Quest for the Gist: On Challenges of Going Abstract i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8, no. 2, 2004.
- Kruglanski, Arie W., Donna M. Webster, and Adena Klem. "Motivated Resistance and Openness to Persuasion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ior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5, no. 5, 1993.
- Kudish, Shira, Smadar Cohen-Chen, and Eran Halperin. "Increasing Support for Concession-Making in Intractable Conflicts: The Role of Conflict Uniqueness."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21, no. 2, 2015.
- Landau, Mark J. et al.. "Deliver Us from Evil: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and Reminders of 9/11 on Support for President George W. Bus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0, no. 9, 2004.

- Landauer, Thomas K., “How Much Do People Remember? Some Estimates of the Quantity of Learned Information in Long-Term Memory.” *Cognitive Science*, vol. 10, no. 4, 1986.
- Leong, Chan-Hoong and Colleen Ward. “Cultural Values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Multiculturalism: The Case of the Eurobarometer Survey on Racism and Xenophob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30, no. 6, 2006.
- Lerner, Jennifer S., Roxana M. Gonzalez, Deborah A. Small, and Baruch Fischhoff. “Effects of Fear and Anger on Perceived Risks of Terrorism: A National Field Experiment.” *Psychological Science*, vol. 14, no. 2, 2003.
- Lerner, Jennifer S. and Dacher Keltner. “Fear, Anger, and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1, no. 1, 2001.
- Levine, Mark, Amy Prosser, David Evans, and Stephen Reicher. “Identity and Emergency Intervention: How Social Group Membership and Inclusiveness of Group Boundaries Shape Helping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1, no. 4, 2005.
- Lindeman, Marjaana and Markku Verkasalo. “Measuring Values with the Short Schwartz’s Value Surve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85, no. 2, 2005.
- Linder, Jennifer Ruh and Andrew W. Collins. “Parent and Peer Predictors of Physical Aggression and Conflict Management in Romantic Relationships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9, no. 2, 2005.

- Mackie, Diane M. and Eliot R. Smith. "Intergroup Relations: Insights from a Theoretically Integrative Approach." *Psychological Review*, vol. 105, no. 3, 1998.
- Mackie, Diane M., Thierry Devos, and Eliot R. Smith. "Intergroup Emotions: Explaining Offensive Action Tendencies in an Intergroup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9, no. 4, 2000.
- Maoz, Ifat and Clark McCauley. "Threat, Dehumanization, and Support for Retaliatory Aggressive Policies in Asymmetric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2, no. 1, 2008.
- Mawson, Anthony R.. "Understanding Mass Panic and Other Collective Responses to Threat and Disaster."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vol. 68, no. 2, 2005.
- McKeown, Shelley and Daniel J. Christie. "Social Psychology and Peace." In *The Palgrave Handbook of Disciplinary and Regional Approaches to Peace*, edited by Oliver Richmond, Sandra Pogodda, and Jasmin Ramovic.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6.
- Miller, Steven.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at the Crossroad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vol. 10, no. 1, 2001.
- Mirisola, Alberto, Michele Roccato, Silvia Russo, Giulia Spagna, and Alessio Vieno. "Societal Threat to Safety, Compensatory Control, and Right - Wing Authoritarianism." *Political Psychology*, vol. 35, no. 6, 2014.

- Moeschberger, Scott L., David N. Dixon, Ulrike Niens, and Ed Cairns. "Forgiveness in Northern Ireland: A Model for Peace in the Midst of the "Troubles"."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1, no. 2, 2005.
- Mooijman, Marlon, Joe Hoover, Ying Lin, Heng Ji, and Morteza Dehghani. "Moralization in Social Networks and the Emergence of Violence During Protests." *Nature Human Behaviour*. vol. 2, no. 6, 2018.
- Moscovici, Serge. "The Phenomenon of Social Representations." In *Social Representations*, edited by Robert M. Farr and Serge Moscovici.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Murray, Damian R., Mark Schaller, and Peter Suedfeld. "Pathogens and Politics: Further Evidence That Parasite Prevalence Predicts Authoritarianism." *PloS One*. vol. 8, no. 5, 2013.
- Napier, Jaime L. and Jamie B. Luguri. "Moral Mind-Sets: Abstract Thinking Increases a Preference for "Individualizing" over "Binding" Moral Foundation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vol. 4, no. 6, 2013.
- Nickerson, Raymond S.. "How We Know - and Sometimes Misjudge - What Others Know: Imputing One's Own Knowledge to Other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5, no. 6, 1999.
- Noor, Masi, Rupert J. Brown, and Garry Prentice. "Precursors and Mediators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A New Model."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7, 2008.

- Oyserman, Daphna, Heather M. Coon, and Markus Kimmelmeier.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8, no. 1, 2002.
- Pagano, Sabrina J. and Yuen J. Huo. "The Role of Moral Emotions in Predicting Support for Political Actions in Post-War Iraq." *Political Psychology*, vol. 28, no. 2, 2007.
- Paulhus, Delroy L., Richard W. Robins, Kali H. Trzesniewski, and Jessica L. Tracy. "Two Replicable Suppressor Situations in Personality Resear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39, no. 2, 2004.
- Pliskin, Ruthie, Daniel Bar-Tal, Gal Sheppes, and Eran Halperin. "Are Leftists More Emotion-Driven Than Rightists? The Interactive Influence of Ideology and Emotions on Support for Polic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40, no. 12, 2014.
- Porat, Roni, Eran Halperin, and Daniel Bar-Tal. "The Effect of Sociopsychological Barriers on the Processing of New Information About Peace Opportunit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9, no. 1, 2015.
- Pratto, Felicia, Jim Sidanius, Lisa M. Stallworth, and Bertram F. Malle.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4, 1994.
- Rabb, Nathaniel, Philip M. Fernbach, and Steven A. Sloman. "Individual Representation in a Community of Knowledg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vol. 23, no. 10, 2019.

- Riek, Blake M., Eric W. Mania, and Samuel L. Gaertner. "Intergroup Threat and Outgroup Attitudes: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0, no. 4, 2006.
- Roets, Arne and Alain Van Hiel. "Item Selection and Validation of a Brief, 15-Item Version of the Need for Closure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50, no. 1, 2011.
- Roseman, Ira J.. "Cognitive Determinants of Emotion: A Structural Theory." *Review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 5, 1984.
- Ross, Lee and Andrew Ward. "Psychological Barriers to Dispute Resolution."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dited by Mark P. Zanna. San Diego, C.A.: Academic Press, 1995.
- Różycka-Tran, Joanna, Paweł Boski, and Bogdan Wojciszke. "Belief in a Zero-Sum Game as a Social Axio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46, no. 4, 2015.
- Schori-Eyal, Noa, Eran Halperin, and Daniel Bar-Tal. "Three Layers of Collective Victimhood: Effects of Multileveled Victimhood on Intergroup Conflicts in the Israeli-Arab Contex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44, no. 12, 2014.
- Schwartz, Shalom H. and Wolfgang Bilsky.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3, no. 3, 1987.
- Schwartz, Shalom H. et al.. "Refining the Theory of Basic Individu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vol. 103, no. 4, 2012.

- Schwartz, Shalom H..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dited by Mark P. Zanna. Orlando, F.L.: Academic Press, 1992.
- _____. "An Overview of the Schwartz Theory of Basic Values."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vol. 2, no. 1, 2012.
- Sharvit, Keren, Daniel Bar-Tal, Boaz Hameiri, Anat Zafran, Eldad Shahrar, and Amiram Raviv. "Self-Censorship Orientation: Scale Development, Correlates and Outcomes." *Journal of Social and Political Psychology*. vol. 6, no. 2, 2018.
- Shaver, Phillip, Judith Schwartz, Donald Kirson, and Cary O'connor.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no. 6, 1987.
- Shnabel, Nurit, Samer Halabi, and Masi Noor. "Overcoming Competitive Victimhood and Facilitating Forgiveness through Re-Categorization into a Common Victim or Perpetrator Ident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9, no. 5, 2013.
- Shook, Natalie J. and Russell H. Fazio. "Political Ideology, Exploration of Novel Stimuli, and Attitude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5, no. 4, 2009.
- Singer, Tania and Claus Lamm. "The Social Neuroscience of Empathy."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 1156, no. 1, 2009.

- Sloman, Steven A. and Nathaniel Rabb. "Your Understanding Is My Understanding: Evidence for a Community of Knowledge." *Psychological Science*. vol. 27, no. 11, 2016.
- Smith, Eliot R., Charles R. Seger, and Diane M. Mackie. "Can Emotions Be Truly Group Level? Evidence Regarding Four Conceptual Criter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3, no. 3, 2007.
- Smith, Laura G. E. and Stephen Gibson. "Social Psychological Theory and Research on the Novel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Introduction to the Rapid Response Special Section."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9, no. 3, 2020.
- Smith, Richard H., Caitlin A. J. Powell, David J. Y. Combs, and David Ryan Schurtz. "Exploring the When and Why of Schadenfreude."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vol. 3, no. 4, 2009.
- Solomon, Sheldon, Jeff Greenberg, and Tom Pyszczynski. "Pride and Prejudice: Fear of Death and Social Behavior."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9, no. 6, 2000.
- Sorokowski, Piotr et al.. "Can Information About Pandemics Increase Negative Attitudes toward Foreign Groups? A Case of Covid-19 Outbreak." *Sustainability*. vol. 12, no. 12, 2020.
- Steinberg, Laurence, Sandra Graham, Lia O'Brien, Jennifer Woolard, Elizabeth Cauffman, and Marie Banich. "Age Differences in Future Orientation and Delay Discounting." *Child Development*. vol. 80, no. 1, 2009.

- Stephan, Walter G. and Cookie White Stephan. "Intergroup Anxiety."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41, no. 3, 1985.
- Stürmer, Stefan, Mark Snyder, Alexandra Kropp, and Birte Siem. "Empathy - motivated Helping: The Moderating Role of Group Membershi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2, no. 7, 2006.
- Tajfel, Henri and John C. Turner.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edited by William G. Austin and Stephen Worchel. Monterey, C.A.: Brooks/Cole, 1979.
- Tam, Tania, Miles Hewstone, Ed Cairns, Nicole Tausch, Greg Maio, and Jared Kenworthy. "The Impact of Intergroup Emotions on Forgiveness in Northern Ireland."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vol. 10, no. 1, 2007.
- Tam, Tania, Miles Hewstone, Jared Kenworthy, and Ed Cairns. "Intergroup Trust in Northern Irelan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5, no. 1, 2009.
- Templeton, Anne et al. "Inequalities and Identity Processes in Crises: Recommendations for Facilitating Safe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9, no. 3, 2020.
- Todd, Andrew R., Galen V. Bodenhausen, and Adam D. Galinsky. "Perspective Taking Combats the Denial of Intergroup Discrimin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8, no. 3, 2012.
- Vail, Kenneth E. and Matt Motyl. "Support for Diplomacy: Peacemaking and Militarism as a Unidimensional Correlate of Social, Environmental, and Political Attitudes." *Peace and Conflict*. vol. 16, no. 1, 2010.

- Van Bavel, Jay J. et al.. “Using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 to Support Covid-19 Pandemic Response.” *Nature Human Behaviour*. vol. 4, 2020.
- Van Kessel, Cathryn, Kent Den Heyer, and Jeff Schimel. “Terror Management Theory and the Educational Situation.”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52, no. 3, 2020.
- Vezzali, Loris, Alessia Cadamuro, Annalisa Versari, Dino Giovannini, and Elena Trifiletti. “Feeling Like a Group after a Natural Disaster: Common Ingroup Identity and Relations with Outgroup Victims among Majority and Minority Young Childre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4, no. 3, 2015.
- Vollhardt, Johanna Ray. “Victim Consciousness and Its Effects on Intergroup Relations – A Double-Edged Swor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2009.
- Webster, Donna M. and Arie W. Kruglanski. “Individual Differences in Need for Cognitive 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6, 1994.
- Wenzel, Michael, Amélie Mummendey, and Sven Waldzus. “Superordinate Identities and Intergroup Conflict: The Ingroup Projection Model.”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8, no. 1, 2008.
- Wilson, Glenn D.. “A Dynamic Theory of Conservatism.” In *The Psychology of Conservatism*, edited by Glenn D. Wilson. London: Academic Press, 1973.
- Wohl, Michael J. A., Nyla R. Branscombe, and Stephen Reysen. “Perceiving Your Group’s Future to Be in Jeopardy:

- Extinction Threat Induces Collective Angst and the Desire to Strengthen the Ingrou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6, no. 7, 2010.
- Xu, Xiaowen and Ian McGregor. “Motivation, Threat, and Defense: Perspective from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sychological Inquiry*, vol. 29, no. 1, 2018.
- Yzerbyt, Vincent, Muriel Dumont, Daniel Wigboldus, and Ernestine Gordijn. “I Feel for Us: The Impact of Categorization and Identification on Emotions and Action Tendenci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2, no. 4, 2003.
- Zakrisson, Ingrid. “Construc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Right - 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9, no. 5, 2005.
- Zimbardo, Philip G. and John N. Boyd.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 - Differences Metr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7, no. 6, 1999.
- Zimbardo, Philip G., Kelli A. Keough, and John N. Boyd. “Present Time Perspective as a Predictor of Risky Driving.” *Personality Individual Differences*, vol. 23, no. 6, 1997.

3. 기타 자료

『YTN』.

Financial Times.

The New York Times.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http://kgss.skku.edu/>>.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 <<https://coronaboard.kr/>>.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plato.stanford.edu/>>.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18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현상백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외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외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이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옥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운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19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홍 민 외	20,5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중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중호 외	12,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	----------------------	-------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2018-0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나용우 외

〈Study Series〉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2019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욱,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중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 민 외	10,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정은이 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장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Study Series>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Baek, Sangme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Park, Juhwa

2020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0-01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20-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 문선혜	10,000원
2020-03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김수암 외	9,000원
2020-04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홍석훈 외	11,000원
2020-05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현승수 외	11,500원
2020-06	한반도 평화번영과 북일관계 연구	이기태 외	8,000원
2020-0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외	8,500원
2020-08	남북기본합정 체결방향과 과제	도경옥 외	9,000원
2020-09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이무철 외	11,000원
2020-10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김갑식 외	13,000원
2020-11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박주화 외	12,500원
2020-1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성윤 외	15,500원
2020-1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은이 외	11,000원
2020-1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나용우 외	14,500원
2020-15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나용우 외	17,500원
2020-16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4,500원
2020-16-01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6,500원
2020-16-02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6,500원
2020-1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주화 외	12,500원
2020-18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보혁 외	20,000원
2020-19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조한범 외	11,500원
2020-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홍 민 외	18,000원
2020-21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중호 외	23,000원
2020-2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외	14,000원
2020-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최장호 외	7,000원
2020-24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조정아 외	13,000원
2020-25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이상신 외	24,500원
2020-26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오경섭 외	14,500원
2020-27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2	홍 민 외	13,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20-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이규창 외
2020-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외

〈Study Series〉

- 2020-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Do, Kyung-ok·Ahn, Jun-hyeong
- 2020-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Opening'
Park, Young-Ja·Jeong, Eun Mee·Han, Ki Bum
- 2020-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Yee, Ji Sun·Yi, Hee Young
- 2020-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KINU Insight

-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 2020-03 미국의 對적성국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북한인권백서

-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 북한인권백서 2020 이규창 외 21,500원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이규창 외 27,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0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10,000원

기타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2020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김범수 외	
2020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정근식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inu.or.kr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값 14,500원



9 791165 890322
ISBN 979-11-6589-032-2
ISBN 979-11-6589-031-5 (세트)